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99-160014-01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 모음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제출한 중앙당의 10대 정책을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각 정당들의 지속적인 정책개발 활동을 촉진하여 정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당의 정책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Contents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정당별 10대 정책

☞새누리당.....	1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당.....	71
☞정의당.....	103
☞기독교자유당.....	147
☞민주당.....	161
☞가자코리아.....	175
☞개혁국민신당.....	199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239
☞공화당.....	255
☞그린불교연합당.....	269
☞기독교민주당.....	281
☞노동당.....	295
☞녹색당.....	319
☞민중연합당.....	347
☞복지국가당.....	369
☞진리대한당.....	401
☞친반국민대통합.....	421
☞친반통일당.....	435
☞친반평화통일당.....	451
☞통일한국당.....	467
☞한국국민당.....	481
☞한나라당.....	50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정책

10대 과제	상세 실천과제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턴 경제특구 설치</li> <li>○ 관광산업 활성화</li> <li>○ 해양관광 활성화</li> </ul>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li> <li>○ 2,000억 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amp;D 사업 신설</li> <li>○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li> <li>○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li> </ul>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li> <li>○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li> <li>○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li> </ul>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li> <li>○ 취약계층(장애인·치매어르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li> <li>○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li> </ul>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li> <li>○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li> <li>○ EBS-2TV 본방송 조기실시</li> <li>○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li> </ul>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li> <li>○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조성</li> <li>○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li> <li>○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li> </ul>
7.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li> <li>○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li> </ul>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li> <li>○ 임금체불 원천봉쇄</li> <li>○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li> <li>○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li> <li>○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li> </ul>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li> </ul>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li> </ul>



## 정책 1

내수산업 활성화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정책 1-1 U턴 경제특구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기업의 해외투자는 매년 200~300억 달러 규모로 증가, 해외법인은 매년 2천여 개씩 증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총 고용인원은 약 281만 명('14년) 규모
  -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시 내수 부진, 일자리 감소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 우려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적극적인 자국 기업 U턴 정책 추진 중
- 최근 차이나 아웃 가속화는 제조업 U턴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해외 현지법인들이 국내로 U턴할 경우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상당한 효과 예상

#### 목표

- U턴 경제특구 설치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10% 유턴 시 매년 일자리 약 50만 개 창출)

#### 이행방법 및 기간

##### [ U턴 전 편안한 국내 정착 유도 ]

- 전국의 주요 산단 내에 U턴 경제특구 설치
-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 (세제지원) 철수방식(완전 철수 또는 부분 철수)에 상관없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법인세·설비수입 관세감면 허용 등의 세제 지원 확대
    - 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현행 1~2억 원) 2배 확대
    - 향후 대기업이 해외에서 부분 철수 시에도, 중소기업과 동반 U턴 시 지원 확대
  - (공장입지) 2~3년 무상임대 계약방식과 임대기간 종료 시 국내 고용성과 및 지방세 납부실적 등으로 재연장 검토

##### [ U턴 후 성공적 국내 정착 ]

- 유턴 경제구역을 한시적으로 최저 규제지역으로 운영

- 유탄기업 안정화 기간 동안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근로 허용

**[ U턴 경제구역을 혁신의 구심점으로 육성 ]**

- ◎ 전용 산단에 공동 연구개발이 가능한 R&D 센터 설치
- ◎ 취업 희망자 직업훈련 및 재직자 기술 교육을 지원하는 고급인력 양성센터 설치

**㉸ 자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정책 1-2 관광산업 활성화**

**㉸ 현황 및 문제점**

- ◎ 2015년 관광수지는 메르스 영향 등으로 적자가 60억 9,460만 달러
- ◎ K-Pop 등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 매우 열악(1만 명 이상 수용 가능 전문공연장 전무)
- ◎ 국토의 64%가 산지이고 이중 77%가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산지로 구성, 산림보호 등의 이유로 산지를 관광자원화하지 못하는 상황
- ◎ 외국인 관광이 서울과 제주에 편중되어 지역 간 관광산업 불균형 심화
- ◎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시스템 미흡
- ◎ 관광콘텐츠 부족으로 방한관광객의 주요 활동이 쇼핑에 집중
- ◎ 세계경제포럼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1개국 중 29위 차지, 자연자원과 관광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미흡 및 값비싼 관광비용

**㉸ 목표**

- ◎ 관광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 이행방법 및 기간**

- ◎ 한국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체험관광 인프라 조성 지원

### [ K-POP 아레나 조성 지원 ]

-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K-POP 본 고장의 명성에 걸맞은 대형 K-POP 아레나 공연장 조성
- 수준 높은 전문공연장에서 정기적인 K-Pop 공연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 장기적으로 대도시에 전문공연장 확보하여 지방관광 활성화

### [ K-Culture Valley 조성 지원 ]

- 융복합 미디어 콘텐츠와 쇼핑·문화를 아우르는 한류 콘텐츠를 집적하여 한국관광의 랜드마크 구축
- 쇼핑, 음식, 영화, 음악, 패션 등 윈스톱 플랫폼 구축

### ◎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진흥

-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규제를 합리화 및 자연친화적 산악관광 추진 근거 마련
- 국립공원과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을 제외하여 산림훼손 최소화
- 임도를 활용하여 트래킹 코스, 산악자전거길 조성
-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여 스포츠파크, 힐링파크, 친환경농축산 테마체험시설 조성

### ◎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구축

- (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철도와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통패스를 도입하고, 관광지 이용과 숙박·음식점 할인 등으로 확대
- (K 트래블 버스 확대) 서울과 지방을 잇는 'K 트래블 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지방관광을 위한 교통편의 제고
- (외국인 전용 관광 앱(App) 제작) 교통정보, 실시간 통역기, 관광지 지도 기능 탑재

### ◎ 기타

- (웰니스 의료관광 전략적 육성) 치료를 위한 환자 유치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 검진, 한방, K-뷰티, 스파, 찜질방 등) 중심의 관광객 유치
- (특화된 벤처 여행사 육성) 웰니스 의료관광, 유적지 관광, K-Pop 공연 전문 등 특성화

## ⊗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1-3 해양관광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 해양레저·관광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여가휴양시설 부족
- 해양레저체험 인프라, 체험·교육프로그램 부족으로 해양관광산업 발전 지체
-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마리나 관광수요도 커지고 있으나 시설 미비와 산업기반 취약

### ㉸ 목표

- 동북아 해양관광의 메카로 육성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로 내수진작 및 일자리 창출

### ㉸ 이행방법 및 기간

#### [ 권역별 종합해양관광지구 및 해양관광 바닷길 조성 ]

- 권역별 주요 해양관광도시에 요트, 수중관광, 해양레포츠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및 종합해양레포츠 센터 건립, 나아가 해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해양관광리조트로 개발
- 주요 도시의 마리나 시설, 수상레저체험장, 해안누리길 등을 연계하여 요트, 카누·카약 등을 연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바닷길(가칭)’ 조성
  - ※ 요트를 이용한 국토대장정, 해안누리길 종주 이벤트, 해양레저스포츠 철인 3종대회(요트, 카누, 바다수영) 등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 해양자원 활용한 해양치유(해양헬스케어) 관광산업 육성 ]

- 해양치유 산업화 기반 마련 위한 기초연구 및 해양헬스케어산업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 개발
- 재활·치유 및 레저관광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양헬스케어 시범센터 건립 및 대학 등과 연계하여 해양치유 전문지도사 등 전문 인력 양성 지원

#### [ 크루즈 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선박확보, 크루즈부두, 국제여객터미널) 확충 ]

- 국적선사가 고가 크루즈선 매입 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크루즈 펀드 도입 추진
- ‘20년까지 크루즈 전용부두 및 국제여객터미널을 확충하여 크루즈 관광객 수용 여건 대폭 개선

**[ 마리나 인프라 확충 및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추진 ]**

- 거점마리나, 어촌마리나 등 마리나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마리나산업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창업 촉진
- 레저선박 전문인력 교육센터, 중고선박 오픈마켓 등을 갖춘 해양레저선박 클러스터 조성

**[ 수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중레저법」제정 및 업종 신설, 지역별 수중레저 포인트 발굴 및 수중레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수중레저거점 기반조성 추진 ]**

**㉸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별첨) 42p 참조

## 정책 2

미래성장동력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정책 2-1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및 개인 발굴·포상

#### 현황 및 문제점

-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 및 개인들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문화확산 등 창조경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창조경제대상을 포상 중
- 그러나 창조경제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많은 기업, 개인들이 창조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 목표

- 창조경제 활성화 유도로 미래성장동력 육성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 ‘대한민국 창조경제대상’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 창조경제 활성화 및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창조경제 대상의 범위 확대, 훈격 상향 조정, 인센티브 강화 등 추진
  - (훈격 상향) 현재 최고 훈격인 대통령상을 훈·포장으로까지 상향 조정, 11점인 시상 개수대폭 확대
  - (인센티브) 창조기업에게는 고용창출우수기업 우대지원에 준하는 세액공제, 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우선구매 제도 적용, 창조경제인에게는 APEC 기업인 카드에 준하는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출입국 우대 조치 등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인 제공
  - (네트워킹) 창조경제 기업과 개인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조성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2-2 2,000억원 규모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 ◎ '14년 말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2,979개이며 85.7만 명 고용 중
- ◎ 전체 수출 감소( $\Delta 8.0\%$ )에도 중견기업의 수출은 오히려 3.2% 증가하였으나 중견기업의 저조한 R&D는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
- ◎ 현재 중소기업 전용의 정부 R&D 지원 사업은 운용('16, 8,532억 원)하고 있으나 중견기업 전용의 R&D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이며, 정부 R&D중 중견기업비중이 3.1%로 중소기업(13.7%) 및 대기업(3.9%) 보다 상대적으로 취약

### 목표

- ◎ 중견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글로벌 기업화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 ◎ 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용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우선 R&D 수요조사('16년) → 예비타당성 조사('17년) 등을 거쳐 '18년에 1,000억 원 규모로 중견기업 전용 R&D 신설
  - 사업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단계적 확대

###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2-3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증가는 우리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금 부족·전문 인력 부재·정보의 불평형 등으로 지식재산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
- 특허소송 등 지식재산 분쟁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가중, 막대한 경영 차질 초래
- 과거의 특허분쟁은 글로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분쟁대응력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도 특허소송에 노출되어 대책 마련 시급

### 목표

-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기간

-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허소송 이외에도 해외 지재권 출원·특허전략 수립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
  - 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평상시에는 소액의 월별부금을 납입하고, 특허소송·심판·해외출원 등 지식재산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비용을 先지원해 주고 10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
  - 「발명진흥법」에 법적근거를 마련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2-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 조항 폐지

### ㉸ 현황 및 문제점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은 '97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07년에 10년 연장하였으며, '17년 말 일몰 도래 예정
- ◎ 그동안 「벤처기업법」을 기반으로 벤처기업 3만 개, 매출 천억 벤처출신기업 460개(1조 원 이상은 6개)로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은 고성장기업의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
- ◎ 한시적인 「벤처기업법」으로는 벤처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모처럼 맞이한 벤처 재도약의 분위기를 냉각시킬 우려가 있어 「벤처기업법」의 한시조항을 없애고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이 필요

### ㉸ 목표

- ◎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구적 법적 기반 마련

### ㉸ 이행방법 및 기간

- ◎ '17년 12월 31일까지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몰 조항 폐지
- ◎ 시장친화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 개편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벤처캐피탈 등 민간주도로 재설계 등

### ㉸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정책 3**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3-1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청년의 구직 애로는 제한된 정보, 경험 부족, 금전적인 부담 순으로 나타나, 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 멘토링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청년희망재단에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운영,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서울 지역에만 설립되어 상대적으로 지역 청년들이 소외됨

㉸ **목표**

- 대학 졸업자부터 만34세까지 청년들의 확실한 취업 보장을 위한 청년희망아카데미의 전국 확대로 일자리 연계, 교육, 창직 원스톱 등 지원

㉸ **이행방법 및 기간**

-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여, 지역 청년들에게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과 기업 간 일자리 매칭 추진  
(※청년희망펀드 활용방안 검토)



- 청년희망아카데미 내 미래역량교육프로그램(FCP)\*, 엔지니어링아카데미프로그램(E.A.P)\*\*, K-JOB 프로그램\*\*\* 신규 도입으로 맞춤형 일자리 확대

\*FCP : 신산업 관심 청년 및 우수 중견기업 교육생 대상 미래 역량 교육 실시 및 취업 연계

\*\*E.A.P : 이공계 미취업자 대상, 네트워크 內 기업 요청 특화 교육 등 진행 및 취업 연계

\*\*\*K-JOB : 창직 교육, 창직을 기반으로 한 창업 전환 시 스타트업 지원 등

## ㉞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3-2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기회 확대

### ㉞ 현황 및 문제점

- 새일센터('15년 147개소)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재취업한 여성 중 40~50대 여성이 70%를 차지)
  - 30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및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필요

### ㉞ 목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확대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 ㉞ 이행방법 및 기간

- 경력 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 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운영
-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 취업여성의 재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3-3 어르신 일자리 대폭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 증가율('17년 14% → '25년 20%)과 노인 빈곤율('14.4분기 44%) 등을 고려할 때 어르신의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

### ㉸ 목표

- 어르신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 ㉸ 이행방법 및 기간

- '17년~'20년까지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매년 10만 개씩 확대 공급 → ('20년) 78.7만개
  - 고령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 매년 6만 개씩 확대, 어르신 민간취업 일자리 매년 3만개씩 확대
  - 어르신의 재능나눔은 매년 1만 개씩 확대, 활동 지원기간 연장(현행 6개월→9개월)
- 어르신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 17개 시도에 취업교육센터('15년 6개소 → '16년 8개소, 개소당 50백만 원)를 지정하여 맞춤형 직무설계 및 직무 교육 실시
- 모든 시군구에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을 확대 설치하고, 어르신 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사회복지사 수준으로 개선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4

가계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

### 정책 4-1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2000년에 직장과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건강보험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아직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 존재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과부담,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등 개선 필요

#### 목표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신고소득으로 바꾸고 서민의 자동차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여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완화 및 건보료 형평성을 꾀함

#### 이행방법 및 기간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신고된 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자동차, 재산, 가족의 경제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은 제외
- 평가소득을 없애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없게 되므로 이러한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 제도를 도입(세대 당 평균 1만원 내외 인하효과 예상)
- 자동차의 경우 일부 고가의 자동차는 제외하고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계획(세대 당 약 1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효과)
- 서민층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 노력
- 월급 이외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능력에 맞게 보험료 부과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4-2 취약계층(장애인 · 치매어르신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 ㉸ **현황 및 문제점**

- 일상생활에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과의 정보격차 심화

### ㉸ **목표**

- 취약계층에 대한 전용단말기 보급으로 통신이용 격차를 해소하고, 특화서비스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

### ㉸ **이행방법 및 기간**

- 전국 17개 광역시 · 도 치매어르신, 장애인 등 2만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착용이 간편한 안심팔찌와 특화서비스(위치확인서비스 등)를 지원
  - 치매어르신이 길을 잃었을 때 단말기에 내장된 위치확인시스템을 통해 치매어르신 위치 확인
  - 안심존(Zone)을 설정하여 치매어르신이 지정된 지역을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줌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4-3 경력단절 주부 및 청년 취 · 창업자 등 1인 1국민연금 체계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나, 현재 저소득 근로자, 청년창업가 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고, 특히 직장을 그만둔 주부 등 446만 명이 아직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 ㉟ 목표

- 경력단절 전업주부, 청년 취·창업자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가입기간 5년 밖에 되지 않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5년치 보험료를 추납하면 5,7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추납을 통한 노령연금 예상수령액〉

구분		종전 가입기간	추납 기간	보험료 총액		연금수령액(20년)
				종전	추납	
소득	100만원	5년	5년	540만원	540만원	4,293만원
	200만원	5년	5년	1,080만원	1,080만원	5,703만원

## ㉟ 이행방법 및 기간

- 경력단절 주부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업주부의 추납을 허용, 446만 명에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더 확대할 예정
- 청년 대상 두루누리 사회보험(창업크레딧/취업크레딧 등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 (창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창업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20% 추가 지원(4.4만 명)
  - (취업 크레딧) 18~34세 청년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 시 연금보험료 10% 추가 지원(30만 명)

## ㉟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정책 5**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정책 5-1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14년 총 사교육비는 18.2조 원, 사교육 참여율은 68.6%로 지속적 감소 추세에 있으나, 1인당 사교육비는 24.2만 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5.2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0.3만 원, 0.5만 원 상승
- 사교육은 점수위주의 암기식 학습태도를 조장하여 공교육 창의인재 양성에 큰 걸림돌로 작용

**목표**

-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기반 구축

**이행방법 및 기간**

-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에 집중 대응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에서 흡수할 계획
-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
-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대상으로 수학·영어·예체능 과목 등에 대한 한국 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5-2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K-MOOC에 개설 중인 강좌(27개)의 분야와 수가 적어 다양한 배경과 관심 분야를 가진 학습자의 수요 부응을 위해 개설 강좌 확대 필요
- ◎ K-MOOC 강좌 이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 부족으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강 유인에 한계가 있음

### ※ MOOC란

- (개념) 수강 인원의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수강 가능하며, 웹 기반으로 미리 정의된 학습목표를 위해 구성된 강좌
- (특징) 교수-학생간 질의·응답, 토론, 퀴즈, 과제 피드백 등의 학습관리, 학습 커뮤니티 운영 등 교수-학습자간, 학습자-학습자간 양방향 학습 가능

### ㉸ 목표

- ◎ 대학의 우수 강의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고등교육기회 균형 실현

### ㉸ 이행방법 및 기간

- ◎ K-MOOC 개설 강좌를 확대하여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
  - 개설 강좌수 '15년 현재 10개 대학\*에서 27개 → '16년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 ※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포항공과대,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 ◎ 다양한 이수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유인 제공
  -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K-MOOC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용\* 형태 확산
  - ※ 온-오프라인혼합수업(Blended Learning), 거꾸로수업(flipped learning), 학습부진·부적응학생 대상 반복학습 등
  - 대학별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따라 학점인정 시범운영으로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하고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 경감
  - 개인 학습자의 자기계발 활용 외에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직원 재교육 시, K-MOOC 강좌 활용 확대

※ 재직자가 K-MOOC 강좌 이수 시, 소속 기관의 교육훈련 시간으로 인정받는 방안 추진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별첨) 42p 참조

## 정책 5-3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 ㉸ 현황 및 문제점

- 무료 지상파채널인 EBS-TV(교육방송)는 교양,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90%이상 편성하고 있어 정작 서민층의 초·중등 교과목 및 영어교육에 대한 사교육비를 완화할 학습 프로그램이 부족

### ㉸ 목표

- 서민층 사교육비 연간 약1,800억 원 절감 효과 기대

### ㉸ 이행방법 및 기간

-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TV(교육방송)의 채널을 한 개 더 추가하여
  - 서민층의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간 1,800억 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 신규채널(EBS-2TV)의 조기 방송을 위해 방송법령을 개정하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해 정부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 EBS-2TV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 '16년 20억(시범사업용), '17년 40억, '18년 60억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별첨) 42p 참조

## 정책 5-4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영재교육에 대하여 소외자 없이 개개인이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
  -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과학고·영재학교 등에서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선발하여 학비 및 캠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배려한 맞춤형 정책 부족

### 목표

- 소외계층 영재가 창의적이고 큰 인재로 성장할 기회 확대

### 이행방법 및 기간

-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 ※ 영재교육 소외자 수혜율 : 2.46%('12)→3.81%('15)→5.5%('16)
  - 영재교육 소외자 유형별(저소득층, 다문화,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 영재 발굴을 위한 맞춤형 선발도구 개발 및 보급
- 표준화된 검사(창의성 검사 등) 선발방식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 내실화
  - 체크리스트, 수행관찰 도구 등을 활용한 선발방법 정교화 및 다양한 선발도구의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한 신뢰성 강화
    - ※ 관찰·추천 실시기관 비율 : 81.2%('13) → 83.0%('14) → 90.0%('16) → 100%('17)
-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및 과도기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 과학고 사회적 배려자 입학생 학력신장 등을 위한 Bridge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분야별 영재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영재교육 지원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정책 6**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정책 6-1** **빈집 리모델링으로 1~2인 가구 임대주택 지원**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정비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심(洞지역)내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범죄 유발, 주거환경 악화 등 사회적인 문제 발생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부족 해소를 위해 유휴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주거 확산 필요
  - 인구 감소로 점차 증가하는 빈집·빈방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축 없이도 잉여 공간 공유를 통해 저렴한 주거 공급 가능
  - 쇠퇴하고 있는 도심 공동체 회복 및 계층 간 교류 확대 효과

**목표**

- 빈집을 리모델링 후,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구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제공

**이행방법 및 기간**

- 「도시 빈집 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빈집 정비 기본계획 수립, 활용사업 지원, 빈집 관리 정보체계 구축, 토지수용권 등 제도 마련
- 빈집을 철거 후 공공시설로 활용하거나, 기금 지원을 통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활용 사업 발굴
- 매년 600호 수준의 정비사업 추진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6-2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및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공공 실버주택단지 조성**

### ㉸ 현황 및 문제점

- 결혼·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 확대 필요
-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홀몸어르신 등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필요
  - 홀몸어르신 등의 경우 고독사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

### ㉸ 목표

- 신혼부부 및 저소득·홀몸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

### ㉸ 이행방법 및 기간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전국 확대
  -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를 '17년까지 최대 10개 조성
  - '17년까지 행복주택 건설물량 중, 신혼부부용 투룸을 대폭 확충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등 자녀양육을 위한 편의시설도 함께 도입하는 등 신혼부부 지원을 강화
- 어르신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16년~'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 공급
    - ※ '16년~'17년 재정과 민간기부금을 공동활용하여 공공실버주택 16개동 공급('16년 11개동 선정하여 추진 중)
  -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6-3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 ㉸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민자치단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한 관리사무소가 부과 및 관리
  - 관리비 적정집행 유도를 위해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과 지자체 감사 등을 운용 중이나 투명성제고에 한계
- 인건비가 제외된 기형적 입찰방식으로 관리비리 증가
  - 공동주택 단지별로 청소, 경비, 경리 등 관리사무소 직원 수가 달라 적정한 관리인력 기준 필요
- 현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위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의무관리대상(30세대 이상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국토부의 「주택법」 일부 규정 이외에 주로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아 관리가 이원화된 상태
- 세부적이지 않은 「집합건물법」 규정으로 대부분 자율적인 운영체제에 머물고 있어 불투명한 관리비 운영 및 입주민 분쟁과 불만 초래

### ㉸ 목표

- 관리비 산정을 투명하게 하고,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다른 유사단지의 관리비 수준과 비교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관리비 분쟁해소 및 인하 유도
-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소규모 아파트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관리비 분쟁 감축

### ㉸ 이행방법 및 기간

- 입찰 시 산출내역서에 인건비 등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인건비 지급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유도
- 공동주택 관리비 빅데이터를 이용, 관리비의 적정부과 및 관리여부를 검증하여 적정집행을 유도하고 투명한 집행으로 비리요인 사전 차단
  - '17년부터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관리비의 적정 집행과 투명성 확보
- 비의무관리대상(약 360만 세대, 전국 1,210만 세대 중 약 30%)에 대해서도 의무관리 대상에 적용하고 있는 규정 중
  - 관리비 내역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신고, 동대표 교육이수 등을 의무화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도모

- 관리사무소 의무설치 기준과 주택관리사 인정 관리실적 기준인 50세대 이상에 대하여는 관리비 내역고지 및 공개 의무화(30세대 이상은 권고)
-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비의 관리 및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여 관리비 공개 항목 수 등 결정

## ㉸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6-4 대학 연합기숙사 확충

### ㉸ 현황 및 문제점

- 대학 기숙사의 수용규모는 전체 학생수의 19.4%에 불과하며('15.4월 기준), 대학가 주변의 원룸, 하숙집 등도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수준으로 대학생들의 주거여건은 여전히 열악
- 국·공유지 부지에 공공기금(주택도시기금, 사학진흥기금) 또는 민간기부금을 통해 행복(연합)기숙사 사업 추진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
- ※ 4개 사업(서울2, 경기1, 부산1) 3,766명 수용규모

### ㉸ 목표

-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로 저렴한 비용의 기숙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 이행방법 및 기간

- 국·공유지 등을 기숙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여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건립 확대
- 대학 기숙사가 부족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2개소씩 건립 추진(지역별 기숙사 수요 분석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전국 확대)
- 공공기금 또는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건립비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숙사를 제공

※ 건립비 전액 국고 지원 시, 국립대 기숙사비 수준인 월 15만원(2인실 1인당)으로  
공급 가능

→ 공공기금으로 건립하는 기숙사(월24만원) 대비 약 60% 수준이며, 사립대 민자기숙사  
(월31만 원) 대비 약 50% 수준

## ㉞ 자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 별첨) 42p 참조

**정책 7-1 자영업자 세제 혜택 및 폐업 후 재창업자 지원 강화****현황 및 문제점**

- ◎ '15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2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2,614만 명 중 21.5%에 달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 자영업자 평균 월매출은 '10년 990만 원에서 '13년 877만 원 수준으로 하락, 최근까지도 유사한 양상
- ◎ 전반적인 경기하락과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연령층의 자영업 진입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경영여건이 악화
- ◎ 지난해 76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등 큰 어려움 존재

**목표**

-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폐업자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중산·서민층의 생활 안정화

**이행방법 및 기간**

- ◎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세무조사 면제 기준도 완화
  - 현재 자영업자 대상 소득세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더해, 7년 이상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인상 적용
    -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재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로 5~30% 차등 감면을 적용)
  - 현재 국세청에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대비 110% 이상 신고한 소규모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에 더해, 장수 자영업자에 대해 면제기준을 완화
- ◎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해 징수·체납처분(압류 등)이 유예되는 기준 대폭 완화

- 현재 재창업자금을 융자받고, 체납횟수, 매출액, 체납액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재기 중 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있는 바, 적용대상이 늘어나도록 매출액기준(10억원 미만→30억원 미만) 및 체납액기준(3천만원 미만→1억원 미만)을 완화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현재 연 3회 미만 체납, 매출 10억원 미만, 체납액 3천만원 미만자 적용)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7-2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없는 환경 조성

### ㉸ 현황 및 문제점

- 대형유통점의 골목상권 진입, 구도심 상권 침체 등에 따른 서민상권 쇠퇴로 영세소상공인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상황
  - 상인들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건물주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로 상권 활성화에 공헌한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
- 구도심 상권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상권활성화 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부재

### ㉸ 목표

-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와 도심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 이행방법 및 기간

- 「자율상권법」재정을 통해 상권의 주체(임대인·상인 등)들이 자율적인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관리기구를 조직, 상권을 관리·육성하도록 하고
  -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기 위한 상가임대차계약 특례조항

(계약갱신요구 5년→10년)을 마련하여 상인 영업권 보호

- ◎ 상권회복 요구가 절실하고 자구노력이 확고한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선별, 정부·지자체·민간이 협력하여 '20년까지 자율상권 선도구역 40곳 육성

## ㉞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정책 8**

공정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정책 8-1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재직자 국비유학 기회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상대적으로 해외유학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국비유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수혜인원 확대 및 해외유학 비용 증가에 따른 장학금액 현실화 필요
-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 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국비유학 및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격 충족 적격자 부족과 CEO의 추천 저조로 실적 저조

**목표**

-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유학 기회 확대로 사회적 기회균등 실현

**이행방법 및 기간**

- 예산 추가확보(100억),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 조정을 통해 학업성적과 수학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학생 및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국비유학생 선발기회 확대
- 석·박사 취득 기간 동안 약 2, 3년 학비 및 생활비 지원
  - 저소득층 국비유학생 '16년 8명 선발 → '17년 50명 선발
- 현실적 제약이 다소 많은 장기 유학 지원과 병행하여 단일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 단기 국비유학 과정을 개설하여 수요 활성화 견인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별첨) 42p 참조

## 정책 8-2 임금체불 원천 봉쇄

### 현황 및 문제점

- ◎ 2010년 이후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 2~3천억원 발생, 체불 근로자는 약 27~29만명 수준  
(단위 : 천명, 억 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근로자수	276	279	285	267	293	293 (+1.1%)
금 액	11,630	10,874	11,772	11,930	13,195	12,993 (-1.5%)

- ◎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많이 발생하며 규모로는 100인 미만 (1,241억, 269천명)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이 87.5%

(단위 : 억 원)

구 분	전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 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 및사업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
2014	1,319	4,047	3,031	1,603	1,422	1,290	1,802
2015	1,299 (▽1.5)	4,750 (△17.4)	2,488 (▽17.9)	1,740 (△8.6)	1,286 (▽9.6)	1,078 (▽16.5)	1,651 (▽8.4)

- ◎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습이자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
- ◎ 특히, 100인 미만 제조업,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

### 목표

- ◎ 임금체불 원천 봉쇄로 근로약자 보호

### 이행방법 및 기간

-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처리
  - ※ 근로기준법 : 부가금제(법원 판결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액 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 지연 이자제 확대(퇴직+재직근로자),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 부여 등 추진
  - ※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위반 시, 형사처벌 대신 즉시 과태료 부과(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 → 2천만 이하 과태료)

◎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확대 추진

- 노무관리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장이 법위반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

㉞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정책 8-3 인사청탁자 명단 공개**

㉞ **현황 및 문제점**

◎ (사례) 감사원이 2015년 1~7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公)기관 47곳을 감사한 결과, 14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됨

- 부산○○공사 : 채용공고를 하지 않고, 사내외 청탁을 받아 7급 계약직 3명을 특별채용한 뒤 1년 후 정규직 등으로 전환시킴
- 한국○○○○진흥원 :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채용공고 후 지원자 65명을 전원 불합격
- ○○○공사 : 직원을 통해 입사신청 받은 뒤 '12~'14년 504명을 면접만으로 특채

-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근절 필요

㉞ **목표**

◎ 인사청탁 근절로 기회의 균등 및 공정성 실현

㉞ **이행방법 및 기간**

◎ 해당 기관 메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에 청탁자 정보(이름, 직책 등) 및 위반 내용 공개

- 관련 법 개정으로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등

##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정책 8-4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지자체·지방공기업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수요물자 등의 구매에 따른 계약업무를 집행하고 있음
  -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만 「국가계약법」 의무적용 및 조달청 의무위탁대상으로 한 결과, 자체발주 계약의 경우 자의적 집행에 따른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 제기

\* 「국가계약법」 의무적용대상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자산1,000억원 이상이며 예산 500억원 이상, 현재 200개중 65개만 해당)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 (국가) 물품·용역 1억원 이상, 공사 30억원 이상 계약, (지자체) 물품 단가계약, (공공기관) 2.1억원 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자체, 지방공기업은 '06년 1월, 개별 지자체 특성 반영을 위해 「지방계약법」 제정

### ㉸ 목표

-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계약법」 적용 확대, 조달청 의무위탁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발주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 이행방법 및 기간

- 자의적인 계약 집행소지가 없도록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 자산 1,000억원 이상이면서 예산 500억원 이상(65개) → 예산 250억원 이상(123개)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

◎ 공공기관에 대한 조달청 의무위탁대상 확대

- 공공기관의 사업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형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의무 위탁 하도록 하여 유착관계 등을 이용한 계약비리 차단(의무위탁대상 : 2.1억원이상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단가계약\*\*등 추가)

\* 조달사업법시행령 개정

\*\* 단가계약 :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정형화된 물품(예: 컴퓨터, 차량, 복사기 등)에 대해 조달청이 조건에 맞는 업체를 지정하고 단가에 관한 계약을 하면, 수요기관이 지정 업체에 구매물량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하는 계약방식

㉞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정책 8-5 가맹점 대상 불공정 행위 근절**

㉞ **현황 및 문제점**

◎ 서민경제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0여만 개로 골목상권을 형성. 그동안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가맹점주 권리보호 대책 등 법 집행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거래 관행 및 불공정행위 개선 등 현장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

〈 가맹사업법관련 사건접수 및 조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사건접수	경고이상 조치
2013년	263	74
2014년	267	70
2015년	367	117

## ㉟ 목표

- ◎ 가맹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법 위반 예방효과와 실질적 피해 구제를 위한 법 집행체계의 추가적 개선 조치

## ㉟ 이행방법 및 기간

-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부당하게 거래중단 또는 거절하는 행위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책임
  - 징벌적 배상금액의 상한은 현행 「하도급법」 규정 고려, 3배 이내 규정
- ※ 현재 「하도급법」(기술유용, 부당 단가인하 등), 「대리점법」 도입(2015년)

## ㉟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별첨) 42p 참조

**정책 9**

서민 금융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책 9-1 사금융 대출금리 완화**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시장금리가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에는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 (특히 민간 금융회사별로 개인신용 대출금리가 양극화되는 현상 지속)
-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서민금융지원으로 금융수요자인 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원하는 종합적 금융서비스(대출, 채무조정, 취업알선 등) 지원체계가 미비
- 국내경기부진으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의 대출이자 상환부담 상승,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목표**

- 서민대상 저금리 상품 출시, 원스톱 금융서비스로 서민의 금융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이행방법 및 기간**

- 인터넷 전문은행(한국카카오은행, 케이뱅크)이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등으로 기존 금융권 이용이 원활치 못했던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10%대 중금리 대출상품을 출시
  - 향후 3년간 1.4조원대의 10%대 중금리 상품 공급
- 자금지원, 금융·취업상담, 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을 위한 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기존의 휴면예금재단,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통합)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강화
  - 채무자의 최소생활비 보장을 위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급여액을 최소 18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확대
  - 연체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대출만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은행권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16년 상반기 중 실시)
  - 신복위 워크아웃 추진 시 상각채권 원금감면율을 최대 50→60%로 확대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율을 최대 70→90%로

확대('16년 상반기 중 실시)

- 신속하고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하여 대부업체 등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참여 확대
-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을 설치하고 파산절차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과 연계 강화

## ㉟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 별첨) 42p 참조

**정책 10**

아동이 기댈 수 있는 세상, 새누리가 만들겠습니다!

**정책 10-1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아동학대 신고는 '12년 10,943건 → '13년 13,076건 → '14년 17,791건 → '15년 18,979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 우리나라의 '1천명당 피해아동 발견율'은 1.1명 수준으로 미국(9.1명), 호주(17.6명)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
- 아동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이웃과 학교의 무관심, 병원·경찰 등 관계기관의 전문성 부족 등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아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

**목 표**

-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아동복지진흥원 설립
-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학교 중심의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및 아동치료병원 지정·운영
- 예비부부부터 출산, 학부모까지 단계별 학부모 교육 체계적 지원
-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선진국 수준 확보(총예산 대비 0.0047% → 0.1% 수준)
-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행방법 및 기간**

- (아동복지진흥원) 응급전화응대, 외부기관협력, 아동학대 관련 연구진행 등 체계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고 현장 컨트롤타워 기능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옹호 전담부서를 보건복지 산하 기구로 설립
  -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활동 및 관련 정책 수립
-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기존에 설치된 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역 내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신속 연계
  - 교사의 학대의심 및 아동 정신건강 등에 대한 상담

- 지역 내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및 학대트라우마에 대한 교육
- 학대트라우마 치료 및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 및 매뉴얼 개발 등
- ◎ (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규인력 충원을 통해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과 통합하여 ‘학대 전담경찰관’(APO)으로 운영하면서 가정폭력 업무와 함께 향후 아동·노인·장애인 업무 까지 전담
  - ‘17년까지 여성청소년업무 중심을 ①SPO(학교전담경찰관), ②APO(학대전담경찰관) 양대 전담체계와 ③여성청소년수사팀 3각 체제로 정립,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효율적 대응
- ◎ (아동치료병원 지정·운영) 기존 국립대학병원 인프라 활용 통해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를 중심으로 한 아동 친화적 환경 속에서 같이 거주하며 중장기적 집중 심리치료 및 학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 지정·운영
- ◎ (단계별 학부모 교육) 예비부부, 출생신고 및 출산 전후, 자녀 연령의 단계별 부모교육이 실시되어 점진적으로 부모 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 ◎ (법제·개정) 「피해아동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등 개정
  - (아동학대예방 관련)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 학대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신고의무자 교육 등
  -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 관련 피해아동 취학지원, 법률상담 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입·퇴소 절차,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
  - (아동학대 대응 관련) 학대후유증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 정서지원을 위한 명령 추가, 법원이 부모 또는 가족, 보호자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필요 시, 심리 정서 치료를 명하는 명령 추가 등의 개정 필요

## ㉟ 재원조달방안

-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42p 참조

※ 별첨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자원 조달 방안

### ㉞ 소요예산 및 기본방향

- 새누리당의 주요 공약 소요예산은 4년간('17~'20) 4.3조원으로,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총선공약 소요자원 흡수

### ㉞ 자원충당 방안

- 연도별 예산증가분 활용 : 4.4조원 (연 1.1조원)
  - 연평균 예산증가규모가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상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
  - 이 중 약 10%인 1.1조원 활용

※ 중기 재정지출 계획

(단위 : 조원,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재정지출	355.8	375.4	384.7	386.7	396.7	406.2	416.0	2.6
(증가율)	(4.0)	(5.5)	(8.1)	(3.0)	(2.6)	(2.6)	(2.6)	
(증가분)					10	9.5	9.8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더불어민주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차등 없이 드리겠습니다.
2	청년을 위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	경제민주화로 경제질서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6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7	‘777플랜(쓰리세븐플랜)’으로 양극화 해소
8	‘국민연금 혜택’ 국민께 ‘더’ 돌려드리겠습니다.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현황과 문제점**

-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들어 노인빈곤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연도별 노인빈곤률(단위 :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빈곤률	0.446	0.455	0.47	0.472	0.486	0.485	0.496

자료 : OECD

- 노인빈곤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빈곤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사회여가활동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건강관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원만한 가족관계를 저해하고 심리적 위축도 빈곤과 밀접히 연관됨
- 심각한 노인빈곤은 OECD 최저수준의 노인복지에서 기인함.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28% 수준에 불과함. 최저수준의 복지로 인해 복지를 통한 빈곤 개선 효과가 대단히 미미함

우리나라 노인복지 지출 수준 (단위 GDP 대비 %)

	현금급여	현물급여	현금+현물 합계
한국	2.3	0.1	2.4
OECD 평균	7.9	0.6	8.5

자료 : OECD(2011년 기준 비교)

복지를 통한 노인빈곤 완화 효과(2012년 기준)

	65세 이상시장 빈곤률(A)	65세 이상 가처분소득 빈곤률(B)	빈곤 개선률{(A-B)/A}x100
한국	0.597	0.485	18.80%
OECD 평균	0.701	0.112	84.00%

자료 : OECD(2012년 기준 비교)

## ㉸ 목표

- ◎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국민연금 A값의 10% → 15%)으로 인상
- ◎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소득지원 확대임. 현재 기초연금액(20만원)은 1인 최저생계비(2016년 약 64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함. 그나마 각종 명목으로 연금액이 삭감되어 20만원 전액을 수령 받는 분이 10명 중 4명 미만임

## ㉸ 이행방법

- ◎ 현재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10~20만원 차등지급 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2016년 20만원 균등지급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
- ◎ 2016년 기초연금법 개정 추진

## ㉸ 이행기간

- ◎ 2016년 ~ 2018년 단계적 이행

## ㉸ 자원조달방안

- ◎ 기초연금 공약이 완성되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8.7조원 자원 필요. 현 제도를 유지할 때에 비해 6.4조원 추가 소요
- ◎ 필요한 자원은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마련
- ◎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
- ◎ 세입면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 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

## 정책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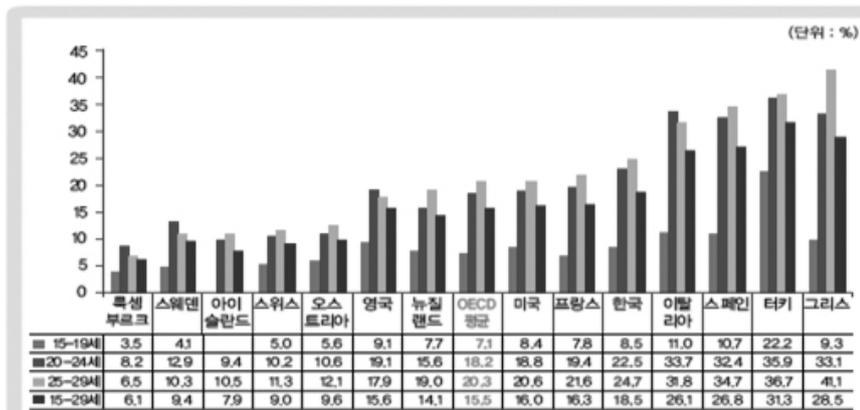
“더 좋은” 청년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청년일자리정책이 실패하면서 청년고용상황은 악화일로

- 통계청고용동향을 보면 청년실업률이 16년만에 최악의 수준인 9.5%에 이르고 있음.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감안하면 잠재적 실업자는 150만명을 넘어섰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은 28%에 이름. 이는 경기적 요인과 상관없이 악화되었고, 또, 정부 정책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기업·노동자의 결단과 양보 희생 등 범국가적 노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추세를 보면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 노력은 활발해졌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비구직 니트(Neither in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또한 증가
- 청년들은 고비용 생활구조에서 현재소득 부족으로 미래가 없는 단기일자리로 내몰리거나 일찌감치 빛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빈곤의 덫에 갇히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생활 지지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

OECD 주요 국가의 청년 NEET 비율: 연령별 2013년 기준



## ㉞ 목표

-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정부의 출선수법) 경찰·소방 등 안전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에너지 등 지속가능분야 공공부문에서 34만8천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 (정부의 결단+기업의 양보) 현행 공공부문에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청년고용의무할당제의 할당률을 상향(3%→5%)시키고, 민간대기업에 도입(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3%~5%)하면, 25만2천개(3년, 매년 8만4천개)의 청년일자리 창출
  - (기업의 양보+노동자의 희생) 실노동시간 단축(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포괄임금제 금지, 출퇴근시간기록 보전의무제 도입, 공휴일 대체휴일제 민간기업 적용 등)을 통해 11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취업활동지원+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구축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미취업 청년들(NEET포함, 18~34세 적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고용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증빙하는 경우 취업활동지원(일명 “해리포터지원금”, 최대6개월 × 60만원)지급
  - 정부의 “청년내일찾기패키지” 확대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통합운영방식으로 원스톱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제공
- 청년창업환경 개선
  -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 지원 확대
  - 모태펀드의 출자분야에 청년계정 신설(모태펀드를 통한 창업자금지원)
  - 한국형 팹랩(Fab-Lab) 조성, 공공특허 활용, 대학창업 지원 강화 등
  - 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의 시제품 제작 부담 완화
  - 우수 기술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
  - 청년기업 창업·기술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판로 지원 강화
  - 성실실패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재기교육, 재창업 펀드 확대
  - 창업보육센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 주기적 창업 보육 체계 내실화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앱, SW, 콘텐츠 등)

## ㉟ 이행방법

- ◎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공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개정 및 예산조정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근로기준법」 개정
- ◎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및 청년취업지원 예산 개편
- ◎ 청년창업환경 개선 : 예산반영

## ㉟ 이행기간

- ◎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2022년 한
- ◎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 : 2022년 한
- ◎ 청년창업환경 개선 : 2020년 한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 “더 좋은”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
  - 공공부문 : 연간 1조 1700억 소요
- ◎ 청년구직활동 보장을 위한 청년안전망 구축
  - 청년취업지원 : 연인원 10만명 기준 2,500억원 소요
  - 패키지형 공공고용서비스 : 기존 편성 예산 재편
- ◎ 청년창업환경 개선 : 예산범위 내

**정책 3**

더불어 행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초저출산현상 장기화
  -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현상(합계출산율 1.3 미만) 지속
- 불평등한 여성일자리 환경
  - 한국 여성고용률 54.9%(15~64세, 2014년), OECD국가 평균 58.0%에 비해 낮고 여성 고위직 진출 가로막는 '유리천장'도 견고
  - 남녀임금격차도 OECD 주요회원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여성대통령시대에 오히려 심화된 성별 불평등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양성평등 지수는 0.651로 145개 조사대상국 중 115위에 불과함

**㉸ 목표**

-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
  - 「양성평등기본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성평등 정책 실효성 제고
  - 「성차별·성희롱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정
  - 여성대표성 제고
  -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
  - 남녀동행을 위한 남녀동수 실현 법제화 추진
-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임금 격차 해소
  -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사근로자(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 및 기능 확충

- 창업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확대
-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 ◎ 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3개월 유급휴가)
  - ‘칼퇴근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 개선
  -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 여성폭력 근절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성매매 유입된 아동·청소년 ‘피해자’ 규정,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 굴욕적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철회 및 재협상
  -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 ◎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가족지원기본법」 마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지원

## ⊗ 이행방법

- ◎ 관련 법 개정 및 예산 확대

## ⊗ 이행기간

- ◎ 20대 국회내

## 정책 4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제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 개선이 추진되었으나 여전히 크게 미흡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방향 전환없이 재벌과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음
-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으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자영업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동네 자영업자들에게 맡겨야 할 사업영역에까지 문어발식으로 진출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생존 토대가 위협받고 있음
-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재벌·대기업들이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부당하게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잘못된 경영 관행은 시장 경제질서의 정상화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함

### ㉸ 목표

- 재벌·대기업이 경제력을 남용하여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이 서로 상생하며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함
- 재벌·대기업이 약자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함
- 대기업 등에 의한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경제질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함
- 소수의 지분을 가진 재벌총수 일가가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과 부당한 행위로 기업의 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도 방지함
- 기업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 ㉟ 이행방법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 ㉟ 이행기간

-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추진 및 정부에 대하여 적정한 조사·감독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제도 개선 및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으로서 상시적인 예산 이외에 특별한 재정소요 없음

## 정책 5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5년 말 현재 1,207조원으로 지난 8년간 사상최대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으며, 2008년 144.3% 수준이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0%를 육박하고 있음
  -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복하고 있지만, 이미 가계부채는 내수와 성장의 걸림돌로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로 보아 앞으로 국민 개인의 파산을 넘어 사회적 위기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큼
- 금융연구원이 지난 2013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채무연체 취약계층(금융채무불이행자+채무조정관련자+장기연체 소외자)이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중 장기연체 소외자 30.9만명, 고령층 연체자 67.4만명, 기초수급대상자 중 고령층이 아닌 협의의 연체자 15.7만명 등 총 114만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대출채권의 권리행사 기간이 종료(소멸시효 완성)된 경우에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있어서, 빚 독촉이 불가능한 채권이나 사실상 회수 실익이 없는 채권도 추심 중에 있음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2015년 8월)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매각가 120억원)하였다고 하며,
  -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입한 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소액변제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상황임
- 햇살론 등 현재의 서민금융지원 방식은 특혜적 금융지원 방식, 즉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한적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채무자는 말할 권리가 없는, 지나치게 채권자 주도로 이뤄지는 채무재조정 시스템에 불과함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국민행복기금(2013.3.29. 출범)은 ‘320만명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그 10% 수준의 실적에 머물고 있고,
  - 당초 18조원 규모의 법정기구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7000억원의 금융기관 출자금

으로 만들어진 상법상 주식회사로 쪼그라들었고, ‘금융기관을 위한 채권 추심기구’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음

## ☞ 목표

- ◎ 한계상황에 직면한 저소득·저신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3단계 가계부채 대책 마련
  - 제1단계 :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부채탕감
    - 국민행복기금 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즉시 일괄 소각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 채권 중 저소득·저신용 서민\* 114만명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추가 매입 후 일괄 소각
  - 제2단계 :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에 대한 관리 강화로 금융소비자 보호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과 추심을 금지
    -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액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소제기 금지 및 매각 제한
  - 제3단계 : 개인채무조정 합리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정비
    - 신용채무만 존재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기간을 3년으로 단축
    - 「금융소비자분쟁조정기구」설치로 소액 금융분쟁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조정전치 주의, 편면적 구속력 등 금융기관 남용 방지 장치 도입
- ◎ 가계부채가 사회적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 신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위한 DTI·LTV 규제 개선
  - 저소득 계층의 “가계소득” 제고 및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비 절감” 대책 등을 통해 신규 대출수요 억제 추진
- ◎ 금융회사 등의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불공정한 대출행위 등에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추진
  - 불법 사금융과 고금리에 대한 단속 강화
  - 불법채권 추심 등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강화
  -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금지
  - 대출연체나 부실채권화에 대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TV·IPTV·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인터넷 등에서의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
- ◎ 대부업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특례제도 폐지로 이자부담 완화 추진

## ㉸ 이행방법

- ◎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관련 법률의 개정
- ◎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

## ㉸ 이행기간

- ◎ 2016년부터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
- ◎ 법률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에 즉각 추진

## ㉸ 재원조달방안 등

- ◎ 별도의 소요재원 없음

**㉸ 현황과 문제점**

- ◎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로서 OECD 평균(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우리나라 GDP는 1조 4,495억달러로 OECD국가 중 13위인데, 복지수준은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OECD 28개국 중 꼴찌임. 경제수준과 복지수준 사이에 괴리가 매우 큼
- ◎ 이처럼 낮은 복지 수준은 사회불평등을 고착화시키고 저성장과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저부담-저복지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시장소득 빈곤률은 16.5%로서 OECD 평균(28.4%)에 비해 양호함. 그러나 소득재분배 이후의 가처분소득 빈곤률은 14.6%로서 OECD 평균(11.5%)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OECD 국가들이 복지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크게 완화시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재분배 기능이 극히 미미한 수준임. OECD 국가 평균 빈곤개선률이 59.5%인데 비해 우리나라 빈곤개선률은 11.5%에 불과함
- ◎ 이러한 저복지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성장동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의 존립마저 위협함
- ◎ 복지지출과 동전의 양면이라 할 수 있는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역시 2013년 기준 24.3%로서 OECD국가(평균 34.1%) 중 최하위권임
  - 최저복지수준도 뒷받침할 수 없는 세입구조로 인해 2008년 이후 9년 연속 재정이 적자이고 누적적자가 233조원에 이룸. 금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40% (총 645조)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 목표**

- ◎ 우리나라 여건과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
  - 세계에는 북구형모델, 유럽대륙형모델, 영미모델 등 여러 가지 복지모델이 있으나 우리사회가 통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회복하려면 우리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의나 국민감정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등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모델이 필요함

- ◎ 한국형복지는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Selective Universalism)이며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임
  -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보장(선별주의)을 하고,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요소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임
  - 선택적 보편주의는 보편주의가 갖는 과다한 재원소요의 문제와, 선택적 복지가 갖는 사후적 교정의 한계를 보완하여 양 모델의 장점만을 취한 것임
- ◎ 우리 사회의 최대 당면과제인 불평등과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복지규모를 적정화해야 함

### ㉸ 이행방법

- ◎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그룹 등이 참여하여 우리나라가 목표로 해야 할 적정 복지-적정부담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범국가차원의 논의기구 구성 추진

### ㉸ 이행기간

- ◎ 복지수준을 현재 OECD 평균(GDP의 21.6%)의 절반수준에서 2020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적정화해 나가야 함

### ㉸ 재원조달방안

- ◎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 등 3대개혁을 통해 재원마련
  -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개혁을 선행
  - 세입면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을 혁신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
- ◎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수준에서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2017년 19.6%)까지 2%p만 올려도, 연간 30조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어 갈 수 있음

### ㉞ 현황과 문제점

-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임. 특히 이명박·박근혜정부 8년 동안 소득계층간 양극화와 가계와 기업간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크게 약화되었음
- 기업소득은 늘고, 가계소득은 감소
  -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이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하락한 반면, 기업소득은 같은 기간 17%에서 23%로 증가
  - 낙수효과(trickle-down)에 근간한 재벌·대기업 위주의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소득은 늘어난 반면, 가계 소득 비중은 오히려 감소
- 증가한 기업소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게 집중
  -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코스피, 코스닥 상장 1,835개사 공시자료 전수조사 결과, 사내유보금이 7년간 519조원(‘08년 326조→’14년 845조원) 급증하여 158% 증가, 당기순이익은 115% 증가
  - 30대 기업은 같은 기간 206조원에서 551조원으로 166.5% 폭증하였으며, 30대 기업이 상장사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2014년 기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증가 추세
  - IMF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음
  -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5~299인)간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2002년 각 262만원과 177만원으로 그 격차가 85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482만원과 300만원으로 그 격차가 182만원으로 확대
- 반면, 임금노동자 비중은 증가하는데 전체 국민소득 중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피용자 보수 비율인 노동소득 분배율은 오히려 정체 또는 하락
  -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월소득(평균) 소득 격차가 1990년 8.5배 였으나 2014년 11.9배로 보다 증가
- 이런 불평등을 시정해야 할 우리나라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OECD 국가(26개 평균)의 경우 지니계수가 소득재분배 전에 0.467이던 것이 재분배 후에 0.298로 0.169정도 감소하여 조정률이 36.2%에 이룸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기준 소득재분배 전 0.341이던 지니계수가 재분배 후 0.310으로 0.031% 감소하여 9.1%에 불과

### ㉟ 목표(양극화 해소의 목표치로 '777플랜 (쓰리 세븐 플랜)'제안)

- 국민총소득(GNI)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14년 61.9%에서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림 (2011년 기준 OECD 평균 68.8%)
- 노동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을 2012년 68.1%에서 70%대로 제고 (2012년 기준 OECD 평균 71%)
- 중산층 비중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1995, 73.5%)로 복원

### ㉟ 이행방법

-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 해소위원회' 설치
  -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을 총괄·조정
  -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777플랜'을 최우선국정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
- 한국경제의 틀을 재벌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체제'에서 중산층㉟서민, 중소기업과 '더불어 성장체제'로 구조개혁
-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배분시스템 개선
  - 과도한 대기업의 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 기업소득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마련
    -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선순환 시키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 유보금 과세)에서 임금증가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도록 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의 완화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시행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성과공유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 소득계층 간 소득 배분구조 개선

- 노동자간 임금 격차 완화

-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를 위해 지자체 주도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관련 민간기업 노동자까지 적용 유도
- 이명박정부 이후 평균 6% 수준밖에 인상되지 않은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연평균 13.5%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 일정비율 이상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최대 1,200만원(1인) 확대, 1년 미만 근속자들에 퇴직급여 적용 등을 통해 현행 비정규직 규모를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11.8%)으로 감축
- 3同원칙(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법제화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 재벌총수 일가의 「꼼수 연봉 공개」 방지를 위해 보수 공시제도 개선 추진(현행은 등기 임원중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공개)

◎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 소득계층 간 격차완화를 위하여, 중산층·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예: 소득 3,600만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 장기적으로는 소득하위 계층에 대하여 장학금 제도와 별개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 이행기간

- ◎ 2016~2020년

## ㉸ 재원조달방안 등

- ◎ 계층간 교육기회격차완화를 위한 교육비 소득세 환급정책의 경우 대략 0.65조 소요
  - ↳ 재정개혁과 조세개혁으로 재원조달

## 정책 8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국민께 '더' 혜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90%가 채권, 주식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어 있음. 과도한 금융투자로 국민들이 조성한 막대한 공공기금이 실물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금융시장의 거품을 떠받치는데 사용되고 있는 양상임. 연기금은 현재 GDP의 33% 수준이며 향후 GDP의 50% 수준까지 증가하는 막대한 규모로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
- ◎ 과도한 금융중심 투자로 인해 연기금 자산 가치 폭락과 금융시장 붕괴(market melt down)가 발생할 수도 있음
  - 2015년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주식시장의 6.4%, 채권시장의 13.2%를 잠식하고 있음. 기금은 2043년 현재의 5배인 2,500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연금 지급으로 급속히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과정에서 주식·채권 시장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게 되면 연기금의 주식·채권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음. 따라서 연기금 투자를 다변화해야 함

### ㉸ 목표

- ◎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함으로써
  - 출산율을 높여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 실물 경기를 부양하고 대규모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며,
  - 양질의 생활 인프라(주택, 보육시설 등)를 저렴하게 국민께 공급
- ◎ 향후 10년 동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을 85만호 확충하여 임대주택 재고량을 현재의 5.2%에서 13.0%로 확충. 향후 10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5,600개 확충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 수용율을 현재 10.6%에서 30%로 제고

## ㉟ 이행방법

-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
  - ‘①국가가 공공투자용 국채 발행(가칭 ‘국민안심채권’) → ②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 매입 → ③채권을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 확충 사업 시행 → ④연기금 원금 및 약정 이자 상환’ 방식으로 진행
  -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4가량이 국채에 투자되어 있음. 임대주택 등의 확충용 채권도 국채로서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분의 일부를 투입하여 매입하므로 국민연금기금 국채 투자 총량은 변화하지 않음
- 임대주택 등의 확충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 정부가 파이낸싱 등 사업 전 과정을 총괄 하되, 실제 사업 시행은 LH공사나 지자체 소속 공사에 위탁(지자체의 재정 매칭을 통한 사업규모 확대 가능).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지자체에 귀속
- 일반 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임대주택을 짓되, 토지비용과 이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양질의 주택을 시중 임대료 대비 10~20% 저렴하게 공급하면서도 연금기금은 국채 금리 이상의 수익 달성 가능
  - 획일적 임대주택이 아닌 가구 규모 및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학부모 수요가 높은 공공보육시설을 전체시설의 30% 수준까지 확충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비용 인상을 억제

## ㉟ 이행기간

- 향후 10년간 투자를 통해 목표 달성
  - 매년 10조원, 총 1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에서 국채매입
  - 매년 공공임대주택 8.5만호 건설
  -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60개 확충

## ㉟ 재원조달방안

- 국민연금기금 외 별도 재원 필요 없음

**정책 9**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부과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적 불만을 야기해 온 것은 복잡하고 불합리한 부과체제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평한 보험료 문제.
-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였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부자들 눈치보기’로 인해 결국 백지화.
- ◎ 현재의 불공평한 부과체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보료 부과 불형평성으로 인해 국민적 불신과 불만 더욱 증가.

**목표**

- ◎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건강보험료 부과 상한선’을 폐지하여 보험료 부담 형평성과 소득재분배 효과 강화
- ◎ 소득창출 효과 없는 재산에 보험료 부과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가 폭등하는 문제 방지
- ◎ 성별·연령·자동차 기준과 같은 불합리한 기준들은 폐지하고, 양도·상속·증여 등 모든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각자의 부담능력에 맞도록 형평성 도모
-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 강화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 해결
- ◎ ‘정부 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와 재정 안정 도모

**이행방법**

- ◎ 예산
  - 예산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운용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부과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그에 따른 보험료 부담 규모가 정해질 수 있음.

◎ 입법

-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정부 부담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제를 도입함으로써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이행기간

- ◎ 2016년에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확정, 국가책임 강화와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 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 가능 (정부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자료 근거)
  -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폐지한 연간 1,300억원의 추가재원 확보
  -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여 3조 8,300억원 규모의 재정 증가
  - 사후정산제 도입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재정 확보
- ◎ 추가 확보된 보험재정은 불합리한 부과기준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했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하와 생계형 미납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재원으로 활용

## 정책 10

‘광복 100년, 부강한 통일한국’ 건설을 위한 담대한 제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

### ㉞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 긴장 고조
- 북한의 핵개발 지속과 선제공격 언급 등 군사적 긴장 행위 지속
-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남북관계 전면 단절
- 5.24조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면 차단

### ㉞ 목표

-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환황해· 환동해 경제발전 전략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현하여 한국경제 신성장 모델 창출
-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을 포함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
- 남북 인도주의 문제 대타협

### ㉞ 이행방법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 남북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추진
  - 남북국회회담 추진 : 통일대비 법·제도 정비
  - 남북대화 정례화·상설화를 위한 남북 간 ‘회담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남북합의 이행 특별위원회’ 설치
-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고조되고 있는 남북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등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 ◎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남북, 북미회담과 6자회담 개최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개성공단 재가동 후 안정화·국제화 실현
  -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
  - 3통 문제 해결과 3만명 규모의 근로자 제1기숙사 건립
  - 뷰티, 건강 분야 등의 외국기업 유치
  - 2, 3단계 확대 추진
- ◎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 남남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 통일정책 추진
  - 서독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준용한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적 합의 방안 도출.
- ◎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으로 북방대륙 진출
  - 환동해 : 부산 통일물류·해양 거점, 속초 천연 에너지, 금강산-설악산 국제관광지대, 동해 남북 어업협력, 울산 자동차, 포항 철강, 남북한 동해 북부선 연결 등
  - 환황해 : 개성공단, 인천 물류, 새만금 산업단지특구, 목포 조선·해양, 순천 철강, 광양 석유, 전북 자원순환형 농축산 복합단지, 전남 친환경 유기농 복합단지, 평택 해양 물류 등
  - U 자형, X 자형 산업 벨트 구축 방안 모색
- ◎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
  - 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 북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설립
- ◎ 남북 접경지역 4대 상생특구 설치
  - 남북 접경지역에 인천·파주 산업경제 특구, 연천·포천 농업교류 특구, 철원 역사문화 특구, 고성·속초 관광산업 특구 설치 협의
  - 민통선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 ◎ 남북 자원협력 전담기구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설치
  - 광산물 수입 물량의 10%를 북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측은 연간 17억 달러 이상의 수입 비용 절감
- ◎ 평양·백두산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 남북 관광협력을 통해 상호 경제적 이익 달성

- 남북 주민 접촉 확대를 통한 동질성 회복
- ◎ 남북 지자체 교류협력 확대
  - 남북 지자체 대북 교류 사업 본격 추진 : 경평축구, 경남 통일 딸기, 제주감귤지원 등
  -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협력 사업 추진
- ◎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 북에 대한 병원 건립 등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통해 생존한 이산가족 약 66,000명 전원에 대해 10년 이내 전면 상봉을 추진
  - 국군포로·납북자 귀환 방안 마련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상시 운영
- ◎ 남북 인권협력 추진
  - 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한 북한주민 실질적 인권개선 추진
- ◎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진로·취업 상담 강화와 공무원 채용 확대
  - 정서 심리 치료 강화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 ◎ 광역 지자체별 '통일센터' 설치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산가족 화상상봉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센터 건립·설치
  - 통일교육 선도대학 시행, 향후 통일교육 거점대학 지정 방안 검토
- ◎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제정 추진
  - 남북경협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정경분리 원칙 준수: 경제사회문화교류에 대해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안정성·다양성 확보

## ⊗ 이행기간

- ◎ 2016~2020년

## ⊗ 재원조달방안 등

- ◎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조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국민의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2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3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4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5	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6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7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8	성평등과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당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	농림수산축산업 :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10	안전 : 안전한 먹거리, 물, 환경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 정책 1

경제 /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꾸고 미래형 신성장산업을 육성하여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정책 1-1 공정과 혁신으로 중소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 현황과 문제점

- ◎ 독과점 경제 및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경영간섭) 등 불공정한 시장은 대한민국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으로 중소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음

#### ㉸ 목표

- ◎ 중소기업제품 제값받기, 대기업의 갑질방지, 혁신과 패자부활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고 '매출 1,000억원 벤처 1,000개 육성'을 목표로 함.

#### ㉸ 이행방법

- ◎ 납품단가 연동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재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납품단가에 연동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도록 함.
- ◎ 중소기업 기술·제품 우선구매제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기업이 공동(컨소시엄, 규모화된 협업)으로 개발한 제품, 중소기업의 상용화 이전단계의 기술·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제품의 판로 확보와 성장기반을 마련.
- ◎ 이익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기업 이익을 협력업체와 배분하여 공동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도입기업 세제혜택 제공.
- ◎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를 확대하며,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 및 의무고발요청제도를 개선
- ◎ 패자부활 기회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창업초기 단계 벤처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함.

- 국가특허 및 대기업 기술 활용 제고 : 국가 R&D 예산 중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비율을 13.7%(2014년)에서 20%로 확대하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한 특허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경우, 상업화 후 이익 발생 단계에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함(미국의 Bayh-Dole 법 벤치마킹).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핀란드 기술청의 ‘노키아 테크노폴리스 이노베이션 밀’을 한국형으로 도입하여 우수 기술 및 인력의 활용도를 높임
- 선순환 창업생태계 구축 : 현재 벤처·창업 지원 부처가 6개 부처로 분산되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으로 하여금 벤처업무를 총괄하게 하여 벤처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 이행기간

-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이 크지 않음

## 정책 1-2 개미투자자와 소비자 보호

### ⊗ 현황과 문제점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이 각종 불법 및 편법 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여전히 만연함.

### ⊗ 목표

- 부당한 행위로 이득을 얻더라도, 손해배상, 세금, 처벌 등으로 더 큰 손실을 부담하게 하여 정도경영을 촉진하고 기업범죄를 예방함

## ㉟ 이행방법

- ◎ 주주 대표소송 제도 개선 및 다중대표소송 도입 : 「상법」을 개정하여, 자회사의 불법행위를 한 경영진에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대표소송의 소제기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감면 제도를 폐지함.
- ◎ 투자자 및 소비자 집단소송 활성화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현행 협소한 소송 사유 (분식회계, 주가조작,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허위공시)에 수시공시사항 허위공시와 공개매수신고서 허위 기재 등을 포함함. 또한, 「소비자 기본법」을 개정하여, 독과점행위 및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 집단피해가 있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함.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기업 및 독과점기업의 배상책임을 강화하여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과 시장경쟁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함
-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여, 증권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중 원금보장형 상품에 대해서는 증권회사 파산 시 투자자를 보호함. 또한, 금융기관의 파산 시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고, 분쟁조정절차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금(재원은 금융기관 출연)을 마련함
- ◎ 일감몰아주기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을 판단하는 지분요건을 간접지분을 포함하여 20%(현행: 직접지분으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로 통일하고, 규제 효과를 무력화하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를 재정비하며, 공정위가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세금없는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방지함.
- ◎ 법 앞의 평등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사면법」을 개정하여 거액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기업 총수일가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형량 경감, 사면 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함. 또한 불법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다시 회사 경영을 맡는 것을 금지함.

## ㉟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추가 재원 없음

## 정책 1-3 기업집단 규제 합리화

### ㉸ 현황과 문제점

-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제규모와 기업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개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01년	2002년~2008년	2009년 이후
기준	상위 30개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30개	2002년 : 43개 2009년 : 48개	2008년 : 79개 2015년 : 61개

- 규제대상 기업집단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금지사항 및 의무가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기업집단에 적용되어 과도한 기업 규제가 되고 있음.

### ㉸ 목표

- 대규모기업집단을 규모별로 2개 범주로 구분하여, 각 규모별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함.

### ㉸ 이행방법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의 단일기준(61개그룹)에서, 자산 10조원 이상의 집단(36개그룹)과 자산 5조원~10조원의 집단(25개그룹)으로 구분하고, 두 범주에 규제를 차등 적용하여, 후자의 집단의 규제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 이행기간

- 2016년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 정책 1-4 미래형 신성장산업 육성

### ㉸ 현황과 문제점

- ◎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던 IT산업이 성장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미래형 신성장 산업의 발굴이 요구되는 상황임.

### ㉸ 목표

- ◎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과 융합의 산업기반을 구축함.

### ㉸ 이행방법

- ◎ ICT와 생명과학, 에너지, 신소재산업 등 미래형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집중투자
- ◎ 국가 R&D 투자조정을 통한 혁신과 융합기술 개발 기반 구축
- ◎ 신성장산업센터 설립, 기금조성 및 벤처 투자환경 개선

### ㉸ 이행기간

- ◎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집중 추진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 추가 재원은 정부 재정 및 민간 수혜자 부담으로 함

## 정책 2

정치 / 국민과 함께 바른 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 정책 2-1 정치인 낙하산 (정피아) 방지

#### 현황과 문제점

-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 취업제한조항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하고 있으나, 정치권 인사에 대한 취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 공기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저해되는 정치권 보은성 인사가 만연하고 있음

#### 목표

- 정치권 인사의 보은성 인사를 금지하여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고 공기업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

#### 이행방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정당의 지역위원장, 공직선거공천신청자 및 낙선거, 국회 2급 이상 정당 당직자는 사임 후 3년 이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함

#### 이행기간

- 2016년 2월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대 국회에서 계속적으로 입법 추진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 정책 2-2 국민이 법을 만들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면시킬 수 있게 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헌법은 제1조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직접민주제의 요소는 국회 차원에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 차원에서만 주민발안제와 주민소환제가 실시 중임.

### 목표

- 국회와 중앙정치 차원에서도 국민발안제와 국민파면(소환)제를 도입하여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함

### 이행방법

- 「국회법」을 개정하여, 유권자 2만 명 이상이 제안하는 법안의 경우, 국회는 해당 상임위의 법안으로 성립시키고, 6개월 안에 반드시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의 가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국민발안 국회심의제’를 도입함.
- 「국회법」 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소환은 당해 지역구 유권자의 15%가 찬성하면 소환투표에 회부하고, 1/3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회의원을 국민에 의해 파면토록 함

### 이행기간

-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재원조달방안 등

- 국회의원 파면에 대한 주민투표가 시행될 경우,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재정으로 충당함.

## 정책 2-3 테러위험대비와 인권침해 최소화의 방향으로 테러방지법 개정

### ㉸ 현황과 문제점

-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나, 19대 국회 말에 통과되었음.

### ㉸ 목표

- 정부의 테러대비능력 강화와 국민 사생활 및 인권 보호의 두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개정.

### ㉸ 이행방법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
  - 테러위험인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
    -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트 등의 조직에서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집행 역할을 담당하게 함
    -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은 월권이므로 삭제함.
    - 국정원에 부여된 대테러 조사권은 조사참여권으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향 파악권으로 축소.
    - 영장없이 전화감청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원상복구하고,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함.

### ㉸ 이행기간

-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 재원 필요 없음

## 정책 2-4 고위공직자 임금상한제와 투명한 정치자금

### 현황과 문제점

-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사이에 소득격차가 불합리하게 과도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의 고액 연봉과 지나친 혜택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또한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는 정치자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

### 목표

- 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임원의 임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인상률을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로 깨끗한 정치문화를 형성함

### 이행방법

-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국회의원·장관·공공기관임원의 최고임금을 4인가족 중위소득인의 2배로 제한함. 2016년의 경우 중위소득이 월 439만원이므로 고위공직자 최고임금은 월 878만원(연간 1억5백만원)으로 설정됨.
- 주요 선거시 한도 2배까지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조항 삭제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 감사를 받게 함
- 정당 및 국회의원의 회계보고(후원금 사용내역)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회계처리 위반 시 국고보조금 삭감 등 벌칙조항을 강화함

### 이행기간

-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재원조달방안 등

- 추가적인 재원 필요 없고, 오히려 고위공직자 임금상한 효과로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효과 있음

## 정책 3

복지 / 국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특히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소비지출 감소 등 국가성장 잠재력이 잠식되어 대한민국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

### ㉸ 목표

- 사회보험·공공부조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인구 5천만 프로젝트를 통한 복지투자

### ㉸ 이행방법

-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 :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나, 실손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가입자보호는 취약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손보험의 공익적 측면을 강화함
-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기준이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불공정 시비가 계속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제로 혁신하여 불공정을 해소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제도 확대 :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통합서비스 조기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모형을 개발함
- 공공 보건의료 확충 :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 보건의료기관 비중은 기관수 기준 5.6%,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함. 공공 보건의료 시설과 서비스를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설치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
- 한국형 사회보장카드 도입 검토 : 분산관리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통합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 사회보장정보원, 고용정보원 및 국민연금공단 등의 정보 공유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여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함

- ◎ 1소득자 1연금 시스템 도입 :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제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가구 1연금 시스템을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구조개혁함.
- ◎ 국민연금 양육크레딧 도입 및 크레딧 제도 확대 : 현재 출산과 군복무 등 2개영역에서만 국민연금 크레딧이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음.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출산 크레딧을 양육 크레딧으로 확대하여 첫째 아이부터 적용되게 하고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의 인정기간을 확대하며 실업크레딧을 도입함.
- ◎ 두루누리 대상자 2배 확대로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두루누리 사업 대상자를 신규가입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확대적용함.
-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구축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및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산모 전담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아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시 부모요금을 무료로 제공함
- ◎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을 원칙으로 확충하고, 보육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며,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함.

## ㉞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㉞ 재원조달방안 등

- ◎ 총액 연간 5천억원 추가 소요되고 이는 세출조정으로 조달함

## 정책 4

청년 /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을 보장합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청년은 대학에 합격하면 천문학적 입학금과 등록금에 힘들어 하고, 학비마련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에 힘겨워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상황임. 청년은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꿈, 희망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칠포세대라고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목표

- 청년 세대를 위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함

### 이행방법

- 학자금 대출 금리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은 2015년 10조원을 넘어서서 학생 1인당 빚이 704만원에 이르러, 많은 청년들이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환될 위기에 놓여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2.7%에서 1.5%로 낮춰 이자부담을 완화함
- 국가장학금 제도 사각지대 개선 : 기계적 소득분위 산정으로 현실상 어려운 가정의 학생이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제신청제도를 운영하고, 교내외 장학금 제도 변경 시 정보 공개 및 사전고지하게 함.
- 대학 입학금 폐지 : 대학은 입학전형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이 불명확한 입학금을 별도로 징수하고 있음. 「고등교육법」을 개정하여, 대학입학금을 폐지함.
- 청년고용보험 도입 :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인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 청년들에게 6개월 간 50만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는 취업 후 4년에 걸쳐 할증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함
- 청년스타트업 제도개선 : 청년창업기업들의 소규모, 판로확보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구매제도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제품 우선구

매제도를 도입하고 창업지원 심사단에 청년기업가의 참여를 확대함.

- ◎ 청년구직자 인권 강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인권보장 관련 조항(채용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수집 금지, 전형일정 사전공지 등)을 신설하고,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고용주의 갑질을 방지함.
- ◎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근절과 최저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대학현장실습생 및 직업체험형 인턴 등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으로 하고, 근로감독관이 위반사례 적발시 합의를 유도하되 체불임금을 일정기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도록 함
- ◎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 의무화 :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여,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여, 청년정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함 (현재 정당 국고보조금의 30%는 정책연구, 10%는 여성정치발전, 10%는 시도 지역 정치발전에 쓰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년정치에 대한 규정은 없음)
- ◎ 원큐(One-Q) 청년사회안전망 구축 : 「미래세대발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미래세대 특위를 설치하고, 청년의 학습권, 능력개발, 고용확대, 부채경감, 주거안정 등 권익 증진 위해 일자리, 주거 등 청년 문제를 한 번에 접근 해결할 수 있는 ‘원큐 청년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 청년 연령기준 조정으로 청년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지만, 사회진입 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각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연령의 상한을 34세로 상향 조정함.

## ⊗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 후납형 청년고용보험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향후 4년간 4,600억 원 정도 소요되며, 정부출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며 학자금대출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장학재단이 연 1,200억 원 정도 이자수의 감소가 발생함

## 정책 5

노동·일자리 / 양질의 일자리와 임금격차 해소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좋은 일자리 대신 나쁜 일자리만 양산되고, 비정규직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늪에 빠져 있음.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좌절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음

### 목표

- 일자리와 임금격차해소로 사회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

### 이행방법

- 노동회의소 설립 검토 : 「노동회의소법」을 제정하여 비조직화된 90%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를 설립함. 노동회의소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대변, 교육, 입법청원 등의 기능을 수행함. 특히 비정규직 차별 시정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업주부담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300인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부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조정하고,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민간사업장에 확대 적용.
- 기간제 근로자 사용 휴지기 도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후 동일업무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대체인력을 6개월간 채용 금지함. 이를 통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억제함
- 불법 파견·사내하청 근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청업체가 실질적으로 인사와 노무관리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으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 적용.
- 파견사업자 수수료 인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파견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은 최소의 행정비용만으로 파견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도록 하여 파견근로자 수수료 인하 유도.

- ◎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 「근로복지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전체 취업자의 약 22%에 달하는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함. 세부방안은 블랙컨슈머 리스트 공유,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산재인정 범위 확대 등
- ◎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사업자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함.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함
- ◎ 「공정임금법」 제정 : 성별 등에 따른 차이로 인한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근로자 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 임금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권을 갖으며, 임금차별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시정을 요구하고, 임금차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고, 정부 발주공사에 명시된 공임 단가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 육아휴직 급여 10% 인상 등과 관련하여 800억 정도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은 고용보험기금과 정부예산으로 충당

## 정책 6

어르신 /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현재의 노년층은 가족문화의 변화와 어르신 복지의 취약으로 인하여 OECD 최고의 어르신 빈곤율과 어르신 자살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함.

### ㉸ 목표

- 어르신들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삶이 편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개척함

### ㉸ 이행방법

- 고령자 빈곤 제로 시대 :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38만명과 국민연금수급자 28만명에 대한 감액(8,600억원)을 폐지하여 어르신의 생계를 보장. 또한 최저임금 수준의 준고령자·고령자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지원하여 노인일자리확대를 유도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2배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와 통합함. 또한 가처분소득에 기초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여 본인부담을 대폭 감소함
-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 및 수당확대·기간연장 : 공익활동형 기준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2016년 29만 8천개에서 2020년까지 60만개로 단계적 확대하고, 어르신 일자리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며, 일자리 기간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법 제정을 통하여, 어르신 일자리 개발 및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하고, 어르신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선도 기업을 지원하고, 노인생산품 인증,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를 유도함.
-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 확대 : 전국 경로당 대상으로 운동교실을 보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 4천 곳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어르신을 위해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영양, 식습관 등 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 제공함.
-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 슈퍼 고령지역(65세 이상 30% 초과) 20곳을 선정

- 하여,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종합 복지인프라를 구축하며, 의료, 영양, 재가서비스 통합제공함.
-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 전체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공공시설의 부족(2.2%)으로 서비스의 질 관리에 한계가 발생하여, 공공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대기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기반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함.
  - ◎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쉼어 하우스 :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홀몸 노인'이 약 137만9000명이며 이중 약 60만명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악화에 경제난까지 겪는 도움이 필요한 홀몸어르신들임. 전국에 운영 중인 3만 6000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하여 공동숙소로 탈바꿈하고,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 ◎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 어르신의 취업에는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나 주로 보여주기식 단발성 교육에 그치고 있고, 청년은 장기적인 실업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세대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청년-어르신 경험주고받기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학생과 고교생(실업계)이 강사가 되어 어르신의 외국어, 컴퓨터, 식품과 영양, 안전과 건강관리 등 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청년에게 일자리 경력을 쌓아주고, 어르신은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함

## ㉟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어르신 복지 사업에 연간 1조원 추가 재원 필요하며, 이는 세출조정으로 조달함.

## 정책 7

교육 / 사교육비와 학업스트레스를 줄이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해집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사교육비는 지난해 학생 1인당 24만4천원(월)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 또한 학업과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학생이 2015년 83.5%로 2012년 73.2%에 비해 10%p 이상 증가하여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남.

### 목표

- 공교육 정상화와 사회약자에 대한 기회부여, 창의교육 및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통해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임.

### 이행방법

- 입시제도 단순화 : 대학의 수시전형 모집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었고,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 방법으로 인해, 사교육이 비대해지고 전형 컨설턴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전형 모집을 대폭 축소하고, 입시사설학원의 선행교육 축소를 유도함
- 의무교육 내실화 : 정부의 초·중학교 과정 완전 의무교육 실시 선언 이후에도 의무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중학교는 수업료 이외에도 학교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등 일체를 지원함
-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차별과 교육양극화 심화의 방지 및 스펙 중심의 입시제도를 막기 위해 기회균등 선발을 20% 수준으로 확대 하여 지역균형선발, 계층균형선발을 강화하고, 내신 상위 10% 학생에게 해당 시·도 국·공립고, 국·공립대 무시험 진학 기회를 보장함
-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4년간 동결 :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대학등록금 비중이 OECD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국공립대부터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함
- 진로·진학·취업 종합포털“Life Mentor Studio” 구축 : 청소년기 진로모색과 향후 직업 선택은 청소년들의 교육방향 및 인생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Life Mentor Studio”

를 구축하여, 직업별 현황, 학습체계, 훈련기관, 관련대학, 채용기관, 준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

- ◎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창의 기반형 학교가 필요하나, 민간 대안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임. 공립형 창의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 형태의 대안학교체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초·중·고 공립 대안학교를 17개 시·도별로 시범도입하여 운영하고, 자체 교육과정 개발 허용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함.
- ◎ 학교폭력·따돌림 방지 :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고, 학습 분위기 저해와 교사들의 의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함
- ◎ 학교 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 방과후 교장제 도입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교 시설을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확대 개방하고, 학교 내에 구역별 평생교육 및 문화센터 설치, 학습동아리·강사양성·재능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복합사회활동 공간 확보와 지역공동체 복원 도모.
- ◎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도입 :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여교사 편중이 높아지고 있음. 교원 배치 시 학교별 남녀교사 최저 성비를 30%로 규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이행기간

- ◎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 매년 5천억 원의 재원을 세출조정으로 조달함.

## 정책 8

성평등 및 사회적 약자 / 평등한 대한민국, 모두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정책 8-1 성평등과 여성행복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성격차지수가 가장 높아 사회에 갇힌 청년여성 취업부터 고위직 여성까지 모든 단계에서 유무형의 차별을 받고 있음. 또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도 사회적으로 적절히 예방되고, 치유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목표

-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고,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권리를 보장함

#### 이행방법

- 여성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 전체 취업자의 약 22%에 달하는 감정노동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이들의 인권 및 건강권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임.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블랙킨슈머 리스트 공유, 근로자 감정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산재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여성 감정노동자 근로환경을 개선함.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전후 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채용을 의무화하고, 대체인력 사용에 따른 민간기업의 추가비용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함
-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창업 등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기회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같은 전달체계 사업을 강화하고 내실화 함.
- 성평등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 : 여성친화적 노동환경 구축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일·가정 양립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여성친화적 기업 현실화를 위한 법정노동시간 준수제를 강화함

- ◎ 가정폭력 예방 강화 : 가족관계 내의 물리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에 대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함.
- ◎ 성범죄 피해자 보호 :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고소율도 높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 이력에 대한 무차별적 폭로 등 가해자 변호인 등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임.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미국 등 인권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피해자 증인심문 절차 개선 제도(rape shield laws)를 도입함.
- ◎ 몰래카메라 범죄 처벌 강화 :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성관계 몰래카메라 등의 촬영,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몰래카메라 촬영, 유포 및 협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사이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 및 지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 등을 활용하여 원스톱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산모 전담간호사가 서비스를 제공.
- ◎ 한부모 양육비 안정성 제고 :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이나,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경우가 83%에 이르고 있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양육비 지급 미이행 시 이행강제조항을 강화하고, 공익 기금을 통해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방안을 검토함.

## ⊗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 재원조달방안 등

- ◎ 산모전담간호사제 등의 사업 등에 소규모 재정 소요

## 정책 8-2 장애인 이 자립하고 존중받는 사회

### 현황과 문제점

- 장애인은 각종 의료비, 교통비, 재활치료비 등의 부담이 큰 반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39.6%로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평균임금도 162만원으로 전체 임금 평균의 73% 수준임. 또한 교육, 이동권 등 각종 영역에서도 동일한 기본권을 획득하고 있지 못함

### 목표

-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자립을 추진하고, 인권 차별에서 벗어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

### 이행방법

- 장애인 소득 보장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은 현행 2.7%에서 3%로, 정부기관은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의무고용율에서 절반 이상은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정상화를 검토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취업 시 자격 1년 유지하게 함.
- 염전노예방지법 추진 :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가니사건 및 신안 염전노예 사건 등에서 나타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보호시스템을 구축함
- 차별없는 교육 : 일반교사와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의 역할을 설정하여 협력교수방법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통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
- 장애인 이동권 :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을 대체하거나 신규 도입 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함

### 이행기간

- 2016년 하반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재원조달방안 등

- 대규모 재원조달이 필요치 않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장애인연금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

**㉸ 현황과 문제점**

- 농어민 소득이 하락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상태이고, 양극화의 진행으로 빈곤 농어촌 가구가 증가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농가 비중이 높은 상황임.

**㉸ 목표**

- 농어민 소득 증대로 빈곤농가를 줄이고, 농가 경영안정으로 지속적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

**㉸ 이행방법**

- 쌀지키기 : 쌀생산량 증가와 소비부족으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농가 고통이 심화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고 있음. 고급미 개발 지원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쌀의 해외원조, 쌀가공식품수출, 정부공공비축 합리화 등을 추진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인하 :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 금리가 2.5%대로 제공되면서 금리하락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위해 정책금리를 1.5%로 인하하는 것을 추진함
- 5대 민감품목 지역생산 할당제 : 5대 노지채소(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는 기상, 수급,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가격이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여, 농가 소득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역별로 생산면적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는 생산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함.
- 무역이득 공유제 도입 : FTA 체결이 확대되면서, 농업·축산업·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법적근거없이 무역이득공유기금 조성 등 일시적 미봉책으로 대처하고 있음.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하여, 농어촌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축산업·수산업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도록 함
- 수산직불제 개선 : 2014년 기준 수산직불제 총액은 200억원 수준으로 농업직불제 총액(1조5천억원)에 대비하여 1.34%에 불과하고 수산직불제 대상도 피해보전, 폐업지원, 조건불리에 국한되어 있음. 수산업종사자들의 안정적 수익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양식 직불

제, 경영이양 직불제, 어민 소득 보장형 보험 등을 도입하고, 조건불리 직불금 단가를 현행 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함.

- ◎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 확대 : 어선원 보험 의무가입제도가 현행 4톤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소형어선 선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 대상을 3톤이상 어선으로 확대하여 소형 영세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권익을 향상시킴.
- ◎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 대다수 결혼이민자들이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다문화가정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한 지원책이 부족한 상황임. 시·군·구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민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착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복지사 전담제를 도입함.

## ⊗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 자원조달방안 등

- ◎ 정부재정과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하여 구성된 재원을 종합적으로 농어촌 발전에 사용함.

**㉸ 현황과 문제점**

- 한국경제는 지난 개발연대에 고속 압축 성장하였으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 환경 등의 영역에서 안전이 무시되어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음

**㉸ 목표**

- 먹거리, 물, 환경의 총체적 안전사회 구축

**㉸ 이행방법**

- 식품구제위원회 설치 및 기금 도입 : 식품으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분쟁 해결에 오랜 기간이 소요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피해구제위원회 및 식품피해구조기금을 도입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 「식품위생법」 강화 :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해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재발 업체는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타인의 명의를 빌릴 경우 처벌을 강화하며, 단속기관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안전한 수돗물 공급 : 전국평균 수돗물 음용율은 5.4%로 OECD국가 중 가장 낮고, 생수용 페트병 생산 등을 위해 많은 자원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수장 이후 구역별 '재정수처리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을 강화하며,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비용 지원을 확대함.
- 수산물 이력제 의무실시 : 중국산 수산물과 방사능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는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불법유통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때문에 안전한 먹거리인 국내수산물까지 피해를 입고 국내수산업이 침체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자율참여제로 9%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를 단계적으로 의무제로 변경함.

- ◎ 화상 경마·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폐지 : 장외 발매소 운영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여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으며, 시설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심각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음.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을 개정하여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불편을 해소함
-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보호소 확대 : 현재 10만마리가 넘는 유기견과 유기고양이를 전담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93.2%에 해당하는 343개소가 단기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관리가 매우 부실한 상황임. 유기동물보호소의 지방자치단체 직영을 확대하고, 민간위탁기관의 경우에도 지원 및 관리를 동시에 강화함
- ◎ 일상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역공동체 복원 : 맞벌이가구·1인가구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대리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생활에 대한 비밀유지, 범죄 예방을 위한 외부인 출입제한, 안전을 위한 주택단지 내 차량운행 금지 등의 사유로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택배·심부름·장난감대여·일시보육·안전에스코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 ◎ 미세먼지관리 : 미세먼지의 중국으로부터의 유입과 국내 발생을 막기 위해 서해안남부지역, 휴전선지역, 백령도지역 등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유입되는 경로에 초미세먼지(PM2.5미만)을 관측할 수 있는 별도의 관측망을 신규 확충하고, 한-중간 대기분야 환경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지원함.
- ◎ 환경피해구제 강화 : 현행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는 가스유출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의한 환경피해만 구제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동차,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기존 환경오염피해 배상 절차에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환경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함
- ◎ 택시 연비개선을 통한 환경보호 : 휘발유 및 경유차량의 연비는 대폭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LPG차량의 연비 개선은 미미하여 자원의 낭비 및 택시비 인상요인이 되고 있음. LPG엔진 튜닝 및 엔진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LPG하이브리드로 대체를 추진함

## ㉞ 이행기간

- ◎ 2016년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년까지 입법 완료함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 식품피해구조기금 및 환경피해구조기금 초기 조성시 재정 지원이 소요되나, 기금이 지출될 경우 상당부분을 구상권 행사하여 회복함.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순차적으로 연 2,000억원 예산 범위에서 사업 수행함. 택시연비사업은 택시사업자 자체부담으로 수행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의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3	재벌개혁과 '을' 살리는 경제민주화 실현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5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6	농촌과 지방이 잘 살아야 진짜 선진국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
8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9	인권사회(여성·다문화·빈민·성소수자)와 언론문화사회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 정책 1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 정책 1-1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 현황과 문제점

- 재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더 이상 없음. 이윤주도 성장 체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22만명에 달하며, 해고는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음.
- 특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4%이나, 1인당 피용자 보수총액 인상률은 1.4%에 그치고 있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실질임금 인상률은 실질생산성 증가율만큼 올라가지 않았음.
- 전체 노동자 중에서 중간 이하는 2005년에 751만6천명(50.2%)에서 2010년에 884만 4천명(51.9%)이 된 뒤 2015년에 1091만2천명(56.5%)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특히 평균 임금 이상 받는 노동자들은 지난 10년간 임금이 108만원 인상되었으나 저임금이하 계층은 25만원 인상되는데 그쳐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 목표

- 2020년까지 국민 평균월급 300만원 실현

[국민월급 300만원 공약에 따른 4년 후 임금구간별 변화]

현재 (2015년 기준)			4년 후 (2020년 기준)		
구분	인원	2015년	2020년	총인상액	연평균인상률
저임금 이하	492만명	85만원	155만원	70만원	16.20%
전일제	288만명	106만원	176만원	70만원	13.50%
시간제	204만명	57만원	127만원	70만원	22.20%
저임금~중위	599만명	171만원	241만원	70만원	8.90%
중위~평균	73만명	216만원	286만원	70만원	7.30%
평균 이상	767만명	369만원	439만원	70만원	4.40%
합계/ 전체평균	1,931만명	230만원	300만원	70만원	6.90%

## ㉸ 이행방법

-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과 실질적인 적용 확대(☞정책2 참조)
-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한 '좋은 일자리' 보장(☞순위2 참조)
- 공기업과 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정책2 참조)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정책3 참조)
-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정책4 참조)

## ㉸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1-2 최저임금 1만원으로, CEO 등 고위임원 임금상한제

### ㉸ 현황과 문제점

- 201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월 환산 1,260,270원)으로 2013년 미혼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약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2014년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5인 이상 사업체 상시고용 노동자 정액급여 대비 41.1%, 임금총액 대비 32.7%에 불과함.
- 2013년 최저임금은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35%, 중위임금 대비 43%에 불과해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중 각각 20위, 21위로 하위권. 2015년 8월 기준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는 182만명이고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 명(전체 노동자의 11.5%)으로 이들은 모두 취약계층 노동자였음.
- 2014년 10대 재벌 등기이사 1인당 평균연봉은 16억 81백만원이며, 전체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은 35백만원, 최저임금은 13백만원임. 2014년 8월 기준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부가조사에서 전체 노동자 평균연봉은 2,676만원(월 223만원)으로 188명의 등기이사 평균연봉과 62.8배 차이임.
- 2014년 기준 4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총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 총 8조 9,351억 원.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4억 초과분은 4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또한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한 곳은 총 130곳임.

## ㉟ 목표 및 이행방법

- ◎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혁
  - 최저임금법 개정(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함.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공익위원을 선출하고, 회의 공개 등 결정 절차 개선함)
- ◎ 공기업/대기업 CEO와 고위임원은 최저임금 연동 임금상한제 도입
  - 최고임금법 제정
    - 대기업 고위임원은 최저임금의 30배(약 4억5천만원)로 상한제 실시
    - 공기업 이사장 등은 최저임금의 10배(약 1억5천만원)로 상한제 실시
    - 국회의원과 장관 등은 최저임금의 5배(약 7천500만원)로 상한제 실시

## ㉟ 이행기간

- ◎ 20대 국회내 2019년까지

## 정책 1-3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

### ㉟ 현황과 문제점

-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율과 매출액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누리고 있는 초과이익은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거나 비용절감 등을 위한 협력기업의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 대기업-하청·협력업체간 수익성 격차가 늘면서 기업간 임금 및 노동조건 격차도 확대. 자동차 대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에 비해 1차 부품협력업체들의 월급은 절반, 3차 협력업체는 1/3 수준. 전자, IT업종 역시 대기업은 평균 월급이 493만원이나 1차 협력업체는 263만원, 2차 협력업체는 253만원, 3차 협력업체는 172만원 (2013년 한국노동연구원)
- ◎ 2013년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 보다 중졸이하는 12.1% 높고, 고졸은 8.4%, 대졸은 17.4% 낮은 수준. 고학력 여성은 자녀출산과 양육 등 경력단절로 인해 취업을 포기하고, 저학력 여성은 생계를 위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에 취업.

- ◎ 2013년 우리나라의 남녀간 임금격차는 36.6%로 남자가 100만원 받을 때 여성은 63만원의 임금 수준. 반면 OECD에서 조사한 11개국의 남녀간 임금 격차는 평균 15.5% 수준임.

## ㉟ 목표 및 이행방법

- ◎ 원하청 초과이익공유제 실시와 초과이익 공유시 세제 지원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 ◎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고용 개선으로 여성 일자리 개선
  -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
  - 공기업·대기업에 5% 청년의무고용 시 30% 이상 여성할당 병행
  - 임신휴직 도입, 파파쿼터제 도입, 육아휴직 급여 확대

## ㉟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1-4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 ㉟ 현황과 문제점

- ◎ 현재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거나 전무한 상황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임.
- ◎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 비중이 매우 낮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이마저도 감소한 상황임. 특히 시간제의 사회보험 가입 비중은 국민연금 13.3%, 건강보험 17.5%, 고용보험 18.8%에 그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㉟ 목표 및 이행방법

-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업 II 도입
  - 특수고용노동자(1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가입자로 전환
  - 자발적 이직의 경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실업상태일 경우 구직급여 지급
  - 실업급여 기간 확대 : 최대 1년
- ◎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없는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등
  - 최저임금액의 80%, 최대 1년 지원 (※ 청년실업자의 경우 ‘청년디딤돌급여’로 별도 지원)

## ㉟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㉟ 이행기간

- ◎ 두루누리 II 도입
  - 1인 자영업자고용보험료 지원 2016년 24억 → 2020년까지 258억원
  - 국민연금료 지역가입자 지원 연 5천억원
  -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추가 재정 소요 : 연 3조원
  - 재원조달방안 : 고용보험료 인상
- ◎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도입
  - 추가 재정 소요 : 연 2조원
  - 재원조달방안 : 사회복지세 도입 등 증세

**정책 2**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

**정책 2-1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현황과 문제점**

- ◎ 2015년 8월 통계청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정규직 868만명(전체 노동자의 45.0%). 그러나 사내하청노동자는 정규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
- ◎ 2014년 8월 임시직 비율은 21.7%로 OECD 평균 임시직 비율인 11.1%의 2배

**목표 및 이행방법**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 파견법 3단계 폐지: 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 하도급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정책 2-2 공공부문 · 대기업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절반 감축****현황과 문제점**

- ◎ 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33만명, 2015년 3월 현재 300인 이상 대기업 비정규직 182만명, 10대 재벌기업 비정규직은 49만명.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었으나 유인효과는 제한적임.

### ㉸ 목표 및 이행방법

- ◎ 2020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비정규직 감축
  - 2015년 현재 863만명인 비정규직을 매년 107.8만명씩 정규직으로 전환해 4년내 절반인 431만명으로 축소
- ◎ 공공기관 간접고용 상한제, 간접고용 현황 공시제 도입. 상시·지속적 일자리면 간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 원칙
- ◎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 ㉸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2-3 5시 칼퇴근법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

### ㉸ 현황과 문제점

- ◎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14년 연 2,240시간으로 OECD 중 멕시코에 이어 2위. OECD 평균(1,770시간)에 비해 354시간, 가장 짧은 독일(1,302시간)보다 930시간 더 일하는 상황.
- ◎ 법정 초과근로한도(주52시간)로 제한하면 최대 62만개 일자리 창출. 유럽연합 지침대로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일소하면 일자리 105만개 창출 가능.

### ㉸ 목표 및 이행방법

- ◎ 주당 최장 6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탈법적 행정해석 시정
- ◎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실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 독소조항 개정
- ◎ 근로기준법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5시 칼퇴근법(9to5) 도입
- ◎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관련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창출 지원법」 제정
- ◎ 하루에 한시간 씩 더 일하고 주 4일만 근무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 도입

## ㉸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2-4 선진국형 연차휴가 한달 도입으로 휴식이 있는 삶

#### ㉸ 현황과 문제점

- ◎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 유급휴가 제공. 반면, ILO 관련 협약에 따르면 선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1년 근속기간에 대해 3주 이상 휴가 부여 및 2주간 최소 휴가기간 명시. 유럽연합은 1년에 최소한 4주의 휴가 제공. 독일은 6개월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18일의 연차 제공.

#### ㉸ 목표 및 이행방법

- ◎ 모든 노동자에게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휴일/국경일 유급휴일화
- ◎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재직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 ◎ 입사 첫해부터 여름휴가 1주일 의무제 실시, 최소 2주 휴가제 도입
-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공휴일제도 도입

## ㉸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2-5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감정노동자 보호

#### ㉸ 현황과 문제점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년)에 따르면, 직장인의 86.6%가 괴롭힘을 당한 적 있음.

- ◎ 이미 스웨덴은 1993년 ‘직장괴롭힘 조례’ 채택,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장 괴롭힘과 기타 부적절 행동에 관한 특별조항’ 추가. 국제노동기구는 직장내 괴롭힘을 직장내 폭력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 ◎ 고객대면 노동자가 7~900만 명임. 병원, 사무금융 등 서비스직 노동자들은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자살에 이르기도 함. 게다가 오히려 사업주들이 “미스터리 쇼퍼” 등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고객의 인격적 모독을 방치하고 있음.
-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기준 역시 정비되어 있지 않음.

### ㉟ 목표 및 이행방법

-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 직장내 폭언·폭행을 포함한 지속적인 괴롭힘 처벌 및 산업재해 인정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 감정노동 보호 관련 법제화
  -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의무화
  -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산재인정 법제화
  - 고객에 의한 성희롱 방지 법제화

### ㉟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2-6 공기업·대기업 청년고용할당제와 기회균형채용

### ㉟ 현황과 문제점

- ◎ 2015년 9월 청년(15~29세) 실업률 8.5%, 청년 실질실업률 작년 상반기 22.4%
- ◎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3% 고용의무 부과 중.

## ㉸ 목표 및 이행방법

-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에 매년 정원의 5%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 2014년 공공부문 정원 30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1.5만개 일자리
  - 2014년 300인 이상 대기업 노동자 459만명 기준 5% 할당 시 약 23만개 일자리
- 청년고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고졸 이하, 전문대 및 지방대 졸업자 등에게 할당하고, 여성 비율도 30% 이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채용제도 병행

## ㉸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2-7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으로 구직활동 지원

### ㉸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청년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반면, 재작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청년은 29.3만명에 불과. 고용노동부의 '청년성공패키지'는 신청자가 6만 7천명에 불과. 80만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공식적인 실업안전망 밖에 있음.

### ㉸ 목표 및 이행방법

- 15-34세 미취업자 중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청년디딤돌급여 지급
  -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을 제공하는 청년급여는 청년세대의 위기에 특성화된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임.
  - 민간위탁 학원 중심의 정부 정책과 달리 공공 위주의 내실 있는 직업훈련과 연계
- 자발적 이직자와 아르바이트 재학생,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 1년 미만 퇴직자에게도 퇴직금 보장

### ㉸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정책 3-1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금산분리 강화****㉸ 현황과 문제점**

- ◎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순환출자가 상당수 감소하였으나 순환출자 해소가 재벌의 소유구조의 개선을 가져왔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61개 대기업집단 중 순환출자가 있는 경우는 8개 그룹, 이 중 순환출자가 총수의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산업개발 등 3곳에 불과
- ◎ 비지배주주의 감시기능 강화 관련 소액주주 등이 독립적으로 사회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재계 반발로 제도화되고 있지 못한 상황
- ◎ 금산분리 강화 관련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은 진척이 없으며,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금융개혁을 빌미로 관련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하였으나, 당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비판 제기

**㉸ 목표 및 이행방법**

- ◎ 3년 내 기존 계열사간 순환출자 해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소액주주/근로자 대표 추천 이사 선임
  - 상법 개정
- ◎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상법 및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 ◎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

-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제재방안 강화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

## ⊗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3-2 재벌 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 현황과 문제점

- 불공정한 갑을관계의 대표적인 6대 갑질은 ①대리점업계의 밀어내기 판매 강요 행위, ②가맹점업계의 고가 인테리어 강요 행위, ③제조하도급에서 부당한 원가산정 요구와 납품 단가 후려치기, ④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⑤대형유통점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반품 행위, ⑥기술설명회 등을 빙자한 기술 편취와 탈취 행위 등
- 이와 관련 입법화는 △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은 부분적 반영,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질,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법에만 일부 적용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미처리, △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는 미처리 등의 문제

### ⊗ 목표 및 이행방법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 징벌적 조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손배 적용범위 확대 및 한도 증액)
- 공익적 시민단체 고발권 부여 및 집단소송제 도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당사자 권리 강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불공정거래 피해자 해당행위 금지 청구제)
  - 소비자기본법 개정(소비자보호기금설립 및 피해규제 명령제)

## ⊗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3-3 재벌 일가의 특혜와 기득권 근절

## ⊗ 현황과 문제점

- ◎ 재벌의 사익편취 행위는 이사 또는 총수일가가 지배권을 이용하여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로, 부당주식 거래와 회사기회 유용 일감몰아주기가 대표적임. 특히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재벌 일가의 '편법 증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임. 2015년 경제개혁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회사기회 유용으로 인한 부당이익이 13조 8,088억원으로 추정됨. 그럼에도 2015년 기준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내부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계열사가 112개에 달하고 있음.
-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은 분식회계, 탈세, 횡령, 배임, 위법 배당 등 7939억원 규모의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올해 1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한화 김승연 회장은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201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최종 선고 받음. 이재현 CJ 회장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 받음. SK 최태원 회장은 계열사 자금 465억을 횡령함 혐의로 2014년 징역 4년을 최종 선고 받았으나, 2015년 생애 두 번째 사면을 받아 형기 중에 풀려남. 또한 재벌 일가는 형기 중에도 일반 국민과 달리 황제면회에 이어 형집행 정지나 가석방 또는 특별사면을 받고 있음.

## ⊗ 목표 및 이행방법

- ◎ 재벌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 근절
  - 상속·증여세법 개정(정상거래비율, 한계지분을 차감 없이 전체 적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규제대상 지분 요건 20%로 하향)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업무상 배임·횡령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용)

- 조세포탈, 횡령, 배임 행위 형량 강화 등 유전무죄 근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50억 이상 배임 횡령죄 집행유예 불가)
  - 재벌 일가 황제면회/황제노역 금지, 형집행정지와 가석방 및 사면 제한
  - 상법 개정(특가법 상 징역형 이상 선고 받은 자 기업체 임원 등록 제한)

## ㉞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3-4 재벌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 지원과 육성

### ㉞ 현황과 문제점

- 수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전략이 지속되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외환 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성장 둔화와 기술개발 투자여력 약화, 계층적인 하도급 분업생산 구조의 최말단에 위치한 영세 소기업의 퇴출, 제조업의 창업률 저하 현상이 고착화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대표적 원인인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제도는 ①협력사업 성공시 혁신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고 협력기업은 기본이익만 제공, ②협력기업의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보상 미흡 및 투자유인 부족, ③원자재 가격 인상분에 대한 낮은 납품가격 반영률, ④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단가 인하로 하청업체의 수익성 악화, 투자위축
- 중소기업협동조합 수는 901개이고 조합원 업체 수는 6만5,558개로 전체 산업조직화율은 2.1%, 이 가운데 제조업 조직화율은 9.5%에 불과. 일본은 조합수가 4만7,207개이고 조직화율이 70.5%.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조직률이 낮은 것은 중소기업이 단체에 가입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는 것이 원인
- 「공정거래법」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 규정이 있으나, 까다로운 사전인가절차 등으로 중소기업들이 실제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 하지만,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판매 및 공동연구개발이 필요
- 일본과 대만이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조합 단위로 공동 납품·공동해외진출·공동기술개발 등을 허용했기 때문. 독일의 하도급거래 관련법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행위를 카르텔 적용에서 제외하여 허용

## ㉟ 목표 및 이행방법

- ◎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갑질(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대리점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
- ◎ 중소기업인 보호를 위해 재벌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규제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강제 조정권)
  - 국토계획법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대형마트 허가제 및 영업 제한)
- ◎ 대기업의 초과이익, 혁신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운영방안)
- ◎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단체 집단적 교섭권 보장
  - 공정거래법, 대리점공정화법 개정
- ◎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이익공유제 실시
  - 대리점공정화법과 하도급법 개정
- ◎ 중소기업인 카드수수료 인하 및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신용카드 1% 이하, 체크카드 0%)
- ◎ 소상공인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소상공인보호및지원법 개정(보험료 50% 지원)

## ㉟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4

정의로운 조세개혁으로 서민 복지재정 확충

## 정책 4-1 튼튼 재정으로 복지 확대, 공평과세로 격차 해소

## ㉸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GDP대비 24.7%에 불과해 OECD 평균 34.1%(2014년)에 비해 무려 9.4%나 부족. 2015년 GDP인 1,546조원에 적용하면 OECD 평균에 비해 약 145조원이나 부족, 이는 작년 중앙정부 복지지출 예산 120조원 보다 더 많은 자원. 이는 재벌과 부유층이 소득만큼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과 부동산 투기, 고소득 전문직 탈루, 편법 증여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 MB정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를 인하함. 법인세 인하 이후 사내 유보금은 30대 재벌 기업만 710조원이 쌓임(2015.3 기준)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 비해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현행 소득세의 세율 구간간 격차가 불규칙하고 복잡함. 특히 OECD 대부분 국가의 소득세 최고 세율은 40~50% 수준인데 우리의 최고세율은 38%에 불과함
- 부동산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비해 평균 65%에 불과, 과세표준도 공시가격의 60~70%에 불과해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아짐.
- 2015년 현대차 정몽구 부자는 현대글로벌비스 주식 팔아 1조 5000억원의 소득을 얻었으나 세금은 20%만 부담함. 이자배당소득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원으로 너무 높음.

## ㉸ 목표 및 이행방법

- 안정적인 사회복지 재정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세 신설
  - 사회복지세법 제정(소득·법인·상속증여세 세액 등에 10~20% 부과)
- 법인세 최고세율 MB정부 감세 이전인 25%로 환원
  - 법인세법 개정(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5%로 개정)
- 기형적인 소득세 세율 체계 전면개편, 누진세율 강화
  - 소득세법 개정(소득세율 체계 [5-15-25-35-45%]로 개편)

- ◎ 부동산 보유세 과세 체계 전면 개편 및 과세강화
- ◎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현행 평균 65%에서 80%로 상향
- ◎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종부세로 단일화. 합산 과세 및 최고 세율은 2008년 종부세 수준으로 상향함
  - 종합부동산세법 폐지, 지방세법 개정
- ◎ 금융소득에 대한 특혜성 세율적용 폐지
  - 소득세법 개정(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적용,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천만원으로 인하)

## ⊗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4-2 경제민주화 지원, 부의 대물림 억제

### ⊗ 현황과 문제점

- ◎ 2012~2014년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세전이익율은 4.4~4.7%과 3.0~4.0% 인데 비해 중소기업은 3.1~3.2%, 2.4~2.7%으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이익을 초과해서 달성한 이익은 협력기업의 기여도에 따라 함께 나누는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이 필요
- ◎ 법인세 감세 이후 기업의 사내유보금 급증했지만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업무와 무관한 투자 자산 증가로 이어짐. 비업무용 자산에 따른 이자 및 배당수익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 한미약품의 사주가 지난 2012년 미취학 아동인 손주 7명에게 각각 증여한 25억원 상당의 주식 가액이 최근 신약개발에 따라 주가가 폭등한 1천억대로 급증, 금수저 논란 가중시킴. 최근 5년간 18세 미만 미성년자 3,717명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조 4254억 원. 2014년 기준 10세 이하 임대사업자는 817명이고, 10세~20세 임대사업자는 2,288명
- ◎ 2013년 전체 피상속인수 282,232명 중 실제 상속세를 납부한 피상속인은 6,275명, 2.2%에 불과. 과도한 상속공제로 인해 상속재산이 수십억이 넘는 경우에도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

## ㉸ 목표 및 이행방법

- 대·중소기업 공유이익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청·협력업체와 공유한 초과이익에 대해 30%의 세액공제 적용)
-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도입
  - 법인세법 개정(사내유보금의 이자·배당·임대료 수익 등에 10% 할증 과세)
- 거액 편법 증여에 대한 증여세 재계산제도 확대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증여 재산 폭등시 재계산제 강화, 세대생략 상속·증여의 경우 할증과세를 일괄 50%로 강화)
- 상속공제 5억으로 축소, 고액상속 과세 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상속공제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하향)

## ㉸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4-3 청년 기 살리고 서민 지갑 채우는 조세감면

### ㉸ 현황과 문제점

- 취업 이후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지만 현행 소득세는 미혼 가구에 대한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미흡한 실정
- 사실상의 생활필수품인 승용차, 특히 사치품이라 할 수 없는 중소형 승용차에 일종의 사치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 현재 전월세 부담에 대한 세제지원은 월세 지출액에 대한 10% 세액공제가 전부이다시피 한 상황
-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19대 국회의 노력으로 정규직 전환 1인당 세액공제액이 일부 확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기업들에 대한 유인 효과는 제한적임

## ㉟ 목표 및 이행방법

- ◎ 생애 최초 소득자에 대한 “파이팅”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생애최초 소득자에 1백만원까지 세액공제)
- ◎ 중소형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폐지
  - 개별소비세법 개정(배기량 2천CC 미만의 중소형 승용차 폐지)
- ◎ 세입자 전월세 세액공제 확대 및 이사비 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월세 세액공제율 15%로 확대, 전월세 이사비용 적용)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현행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세액공제 확대)

## ㉟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책 4-4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물망식 탈세·예산낭비 방지대책 수립

### ㉟ 현황과 문제점

- ◎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재정현안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과 예산낭비 논란이 반복됨.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과 일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나 일회적인 공청회 등에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
- ◎ 2015년 고액·상습 체납자(5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는 2,226명으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3조7832억원(1인당 평균 17억원)에 달함. 또한 2014년도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27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1인당 평균 9억 7천만원(소득적출률 32.9%)의 소득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남
- ◎ 예산심의 때마다 이른바 쪽지예산 카톡예산 논란이 되풀이 되면서 국회 예산심의가 밀실에서 몇몇 힘 있는 실세 의원들과 정부 간의 줄다리로 결정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음.

## ㉟ 목표 및 이행방법

- 대규모 예산 사업 등에 전국민 참여예산제 실시
  - 국가재정법 개정(연말정산 시 재정 현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내용 포함)
- 탈세 및 부정당입찰에 대한 처벌 강화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계약법 등 개정
- 예산실명제 도입, 쪽지예산 카톡예산 근절
  -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증액예산은 의원 실명과 함께 증액 필요성을 서면으로만 제출)

## ㉟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 [정의당 조세개혁[안] 세수 증감액 추계]

	세목	주요 내용	세수 증감
증액 세목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액에 10~20% 부과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	8조원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등	2조원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8.5조원
	상속· 증여세	공제 5억 제한 등 실효세율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세대생략 할증	추계 미정
	증액 세수 합계		
감액 세목	조세특례 제한법	생애최초 소득자 백만원 세액공제	추계 미정
		월세 세입자 주거비 세액공제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확대	
	개별소비세법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0.5조원
감액 세수 합계			-0.5조원
전체 증액 세수			49조원

**정책 5-1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가 행복한 평생복지****㉸ 현황과 문제점**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은 불행하고, 청·장년의 고용은 불안하고 노인은 빈곤한 대한민국.

◎ 태아·영유아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증가,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남성 4.5%)
-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이용률이 10.6%에 불과하고 90%가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
-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2012년 기준 월 평균 임금 155만원)

◎ 아동·청소년

- 6~18세 건강보험보장률 53.9%에 불과하고 아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의료관리시스템 부재
- 늘어나는 아동학대,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 및 인력부족 (2014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51개소, 상담원 364명에 불과)
- 2013년 기준 근로청소년은 22만명으로 중고생 1/3이 알바를 경험하고 있으나 근로 계약서 작성율은 25%에 불과, 임금체불, 초과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처우 경험이 31.9%

◎ 청년

- 청년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이나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은 29.3만명에 불과
-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사립대학 고액 등록금으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 증가
- 청년의 14.7%는 주거빈곤 상태이나 임대료는 비싸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은 5%에 불과
- 2015년 현재 청년실질실업률 22.4%, 고졸취업자 월평균임금 145만원(대졸의 77.3%) 수준

◎ 중장년

- 2011~2015년 은행권 매각 부실채권은 총34.2조원이나 이중 2.7조(8%)만 공적자산 관리회사에 매각, 90% 이상이 민간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재매각되면서 악성부실채권으로 변질
- 소득에 비해 과도한 4대 가계비 부담. OECD 국가 중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4년째 1위,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 상승 가속화, 가계의 연간 보건의료비 증가(2008년 157만원→2014년 205만원), 가계 통신비는 OECD 3위.

#### ◎ 노년

- 노인 빈곤률 OECD 1위(2013년 49.6%)이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공적연금 미비, 부양의무자 기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으로 노인빈곤층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 평균수명(2014년 82.4세) 증가, 독거노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버주택 부재,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부족 등 노후정책은 미흡

### ㉸ 목표

- ◎ 생애주기별 복지지원책으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 ㉸ 이행방법

#### ◎ 태아·영유아

- 산모·영유아 방문간호사제 도입, 핀란드형 마더박스 제공
- 육아휴직급여 인상 및 파파쿼터제 도입, 출산전후휴가 확대,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민간 어린이집 교사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 ◎ 아동·청소년

-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및 자녀담당의사 도입
- 아동학대 신고시스템 정비, 학교사회복지사 및 전문상담교사 확충 등
- 초중고학교 10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 안심알바신고센터 확대 등 알바 권리 보장

#### ◎ 청년

- 미취업 청년에게 디딤돌 급여 지급
-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진짜 반값 등록금 실현
- 반값임대 공정주택 건설, 만19세 이상 안심대출제도 도입, 주거급여 확대
- 공기업·대기업 5% 청년고용할당제, 여성·고졸·지방 기회균형채용 제도 도입

#### ◎ 중장년

- 저소득층 부채탕감과 악성 부실채권 규제
- 4대 가계비(통신·주거·교육·의료) 절감

◎ 노년

- 부양의무제 폐지, 공적연금 하나로 OECD 수준 노후소득 보장
- 공공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공실버주택 확대

## ㉞ 이행기간

-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 정책 5-2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전 국민 기초복지

### ㉞ 현황과 문제점

의료, 주거, 교육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는 대한민국

◎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60% 수준, 국민 74.3%가 민간의료보험 가입(2012년) 등 의료비 부담 증가
- 열악한 공공의료체계, 3차 병원 쏠림 현상 심각, 계속되는 의료영리화 정책

◎ 주거

- 높은 집값,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증가(RIR 29%)
-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거품을 방조

◎ 교육

-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불이행, 국고지원 거부로 누리과정 보육대란 초래
- 경남의 무상급식 중단, 고등학교 학부모 납입금 부담, 반값등록금 공약 불이행

◎ 장애

- 장애인을 천편일률적 등급화하고 있는 장애인등급제, 수용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
- 유명무실한 장애인 의무고용제, 최저임금법 적용제외로 노동조건 열악

◎ 복지인프라

- 사회서비스 분야 과도한 민간의존. 종사자 처우 심각 등 질 문제 발생 및 지역간 공급 격차
- 복지공무원 부족으로 1인당 담당인구 3,919명(2005년 기준 영국 284명, 호주 806명)

## ㉞ 목표

- 기초복지 강화로 향후 10년 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 달성

## ㉞ 이행방법

-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전국민건강 담당의사 도입, OECD 수준 보건의료 인력 확충
  -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공공병원 확충
- 주거
  - 주거비지원 확대 및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연간 15만호 공급(OECD 평균 12% 목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로 도입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초등학교 2배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 장애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 복지인프라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두루누리II 도입(지역가입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 복지공무원 대폭 확대로 찾아가는 국민복지 실현
  - 질 좋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로 복지강국 진입

## ㉞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 ㉞ 재원조달 방안

- [정책순위 4번] 조세개혁방안으로 복지증세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3년 기준 23.6%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자급농정을 위해서는 적정규모의 농지를 유지, 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졌으며 농지가 전체 국토 면적의 17%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음.
- 농촌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상태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39%에 달하며 후계농업인이 없는 농가는 90%에 이르고 있음.
- 농가소득은 1991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97.4% 수준에서 2013년 62.5%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심각한 상황으로 그동안 시행되어온 지역발전정책은 중앙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유사한 특구를 남발 하면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였음.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기반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일률적인 대학구조조정 정책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음.

**㉸ 목표**

- 식량주권 확보
-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농민의 삶의 질 개선
-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실현
- 농민의 농정참여 확대로 민주농정 실현
-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내발적 지역발전
- 일자리-교육-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살맛나는 지역 실현

## ⌘ 이행방법

- ◎ 식량자급률 50% + 적정농지 확보 법제화
  -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부활로 농산물 가격 지지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적정가격보장제로 가격 안정
  - 무역이득부담금제 도입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보전
- ◎ 농가소득 보장과 교육복지 투자로 살기좋은 농촌
  - 목표소득 직불제로 소득증대, 청년취업농지원제도 도입
  -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1마을 1그룹홈 등 복지농촌
  - 농부증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농업노동재해 보상 확대
- ◎ 전국적 차원에서 미래산업과 뿌리산업의 전략적 배치
  - 중앙-지방정부의 상호협업, 민관협력을 통해 선택과 집중
  - 지역 과학기술 역량에 따라 공공 R&D 투자 확대 등 지원
  - 지역별 제조업 첨단연구소 설립과 혁신클러스터 구축
- ◎ GDP 10% 수준을 목표로 풀뿌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시도별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
  -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활성화로 복지확대 + 일자리 창출
  - 광역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 추진
- ◎ 지방대 균형발전, 공공병원 확충 등 생활격차 해소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대학 육성
  - 정부책임형 대학 구조개혁으로 대학 양극화 해소
    - 혁신형 공공병원 확충 및 기존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전환

## ⌘ 이행기간

-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 ㉞ 현황과 문제점

- 거꾸로 가는 고위험·고갈등·고탄소 에너지 정책
  - 체르노빌 사고 이후 세계는 안전성·경제성·수용성 문제로 원전을 줄여가는 추세이며, 2000년 이후 세계적으로 원전의 설비용량은 20기가와트 증가한 반면, 태양광은 원전의 9배, 풍력은 18배가량 설비용량이 증가하였음.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최대 41기의 원전을 확대를 결정하였으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29년까지 신규원전 13기, 석탄 화력발전소 20기를 확대해 고탄소·고위험·고갈등 전력시스템이 유지될 전망이다.
-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방치와 산으로 간 제2의 4대강 사업 추진
  - 4대강사업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한 설계·시공으로 인한 보의 안전성문제, 감사원 감사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 의해 하천의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녹조발생 외에도 자연 환경 훼손과 주민피해, 건설공사의 비리담합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지만 방치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보호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에 대해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산지관광특구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률 제·개정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으로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사업이 확산될 전망이다.
- 암 발생의 증가와 환경유해인자·환경취약계층·환경취약지역·환경피해국민에 대한 시각 지대 발생
  - 1990년부터 2011년까지 OECD 국가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한 국가는 한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슬로베니아 4대국에 불과하며, 직업 및 환경 위험 요인으로 인한 발암물질 노출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발암요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미세먼지·방사능·전자파 등 환경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됨에 따라 국민건강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취약계층 및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나아가 환경피해로 인한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2차·3차 피해 발생

## ㉸ 목표

- 한국탈핵 :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2040년 완전폐쇄하고 전환수단으로 OECD·독일 수준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국토보호 : 4대강복원을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강화
- 안전사회 : 발암물질과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강화하고 환경피해에 대한 사후구제를 확대해 국민안전과 국민건강 증진

## ㉸ 이행방법

-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 에너지법제개편 : 탈핵에너지전환법, 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 등 에너지법제에 탈핵에너지전환 원칙 반영
  - 에너지계획수정 :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 원칙 반영
  - 선진국수준의 수요관리 : OECD·독일수준의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에너지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산정위원회 신설 및 기후정의세 도입
  - 재생에너지의 확대 : 소규모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의 경우 공급 의무비율을 확대하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체는 소비의무제도 도입
  - 핵재처리 금지 :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 하지 않고 직접처분을 원칙하고 고준위핵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 4대강 복원과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국토환경보호
  - 4대강 복원과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 인공구조물의 해체와 4대강 및 하천습지복원여부를 결정하는 4대강복원위원회 설치, 친수구역활용특별법 폐지
  - 지속가능한 물 관리시스템 구축 : 물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적·체계적·참여적인 유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순환법 제정을 통해 물순환사회 실현
  - 국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보호강화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끌어 난개발을 방지
  - 노후하고 위험한 댐의 철거와 댐건설 계획시 사용기한 및 철거계획을 수립토록하고, 댐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정비법 등 개정

- ◎ 발암물질 관리 강화와 환경유해인자의 사전예방원칙에 따른 관리, 환경피해구제수단 강화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 제정 : 대통령 직속 국가암예방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암예방연구센터 설치, 암예방평가지표개발과 암예방정책추진을 위해 중장기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관리
  - 방사능과 전자파를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해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른 관리 강화
  -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관리 및 사후구제조치 강화를 위해 환경피해자구제에 대한 요건 완화와 환경피해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에 대한 노출규제 및 건강보호 강화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고, 위해성 관리 강화

## ㉞ 이행절차 및 기간

- ◎ 한국탈핵2040은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녹색성장기본법·에너지법·전기사업법 개정, ▲수요관리는 기후정의세법 제정, 전기사업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하는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할 예정이며, 2018년 이내 모두 발의할 예정임.
- ◎ 4대강복원특별법은 2016년에 발의할 예정이며, 물기본법·물순환 기본법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법제화할 예정이며,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와 민관공동조사를 이끌어낼 예정임
- ◎ 발암물질 등의 관리 및 암 예방법은 2017년 이내 제정할 예정이며, 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법제화할 예정이며, 기타 환경보건 관련 법제도 함께 병행할 예정임

## ㉞ 재원조달방안

- ◎ 대부분의 사업은 정책 및 행정 변화 수단으로 특별히 소요되는 예산이 없으며,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70원을 기준으로 하면 1408억, 100원을 기준으로 하면 2011억, 150원 기준 시 3014억 비용이 소요되며, 인입비용 지원의 경우 연간 3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8

## ‘중견·평화·가교국가’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 ㉞ 현황과 문제점

## ◎ ‘가짜 안보’의 파탄

- 안보를 앞장 세웠으나 총체적 안보위기의 현실. 균형외교 실종과 강대국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 ‘소외’ 외교, 구타·관심병사-무기조달 비리·비효율성에 의해 기능 부전과 불신에 빠진 국방, ‘개성공단 폐쇄’로 대표되는 대북 지렛대 약화와 완충지대(및 부문) 소멸의 남북관계 등.
- 특히 북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증강되었으나, 정부여당은 즉자적 강경 대응으로 일관 : 정부의 대책은 즉자적이고 실효성을 전혀 담보 못함. 대북 확장기 방송 재개, 사드 배치 추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강력하지 않고 강경할 따름인’ 대북 압박과 제재 추진, 거기에 ‘북한붕괴 추진’ 속내의 노골화, ‘핵무장론’ 등 폭주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 통일대박’을 내세우나 정작 남북관계는 쪽박 상황이 되고 외교·안보 모두 위태로워진 것은 북한붕괴-흡수통일에 대한 집착, 정권안보와 대통령 심기경호 추구의 파멸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 화해협력정책 위기의 한 축, 무능한 야당

- 박 대통령은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마치 화해협력정책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의 원인이 된 것처럼 호도하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합리화하고, ‘북한 붕괴’ 등을 거론하며,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이야기 함. 이는 비단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만이 아니라,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후의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화해협력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지금의 위기가 더 심각한 것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 대안적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합의가 크지 않은 점. 이것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무능과 혼선에 크게 기인함. 그들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여당의 논리와 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는 등 혼선을 빚음.
- 그들은 대중의 안보불안 심리에 편승해 ‘안보는 보수적으로’라는 기치를 들고 있음.

그들이 경협 등 교류협력과 안보를 분리시키는 것은 안보위기가 심화되는 국면에서는 경협 등 교류협력의 필요성 및 그것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약화시키게 됨.

## ㉸ 목표

- ◎ 평화공존과 접근을 통한 변화의 원칙을 견지해 남북관계 개선, 위기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를 되살려 가능한 한 조기에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비전으로서 ‘중견 · 평화 · 가교 국가’ 대한민국을 제시함.
- ◎ 중견국가 : 한반도 정세 주도,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정학적 이익의 조화를 꾀하도록 선도, 세계적 차원 불평등 해소 및 비핵화-군축에 기여
- ◎ 평화국가 :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변, 동북아에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만드는 다자안보협력 주도, 군복 입은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적 군대와 인간안보 구현
- ◎ 가교국가 :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상과 교통의 중심, 다양한 문명과 가치가 교류하고 융합의 꽃을 피우는 가교, 북한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 수행

## ㉸ 이행방법

- ◎ 평화 환경 조성 중견국 외교
  - 미 · 일 · 중 · 러 간 균형외교, 이익의 조화외교
  - 동아시아 차원 전통적 · 비전통적 다자안보협력 증진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SOFA 전면개정 등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과거사 철저 반성 기초한 평화로운 미래 구축의 신한일관계 정립
  - 제3세계발전 기여외교, 세계의 비핵화 · 평화군축 이바지 평화외교
-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 북한 핵 · 미사일 동결과 공격적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북미수교 지원 등 포괄적 타결 실행
  - 남북 핫라인 재구축과 협의기구 운영
  - 중장기 군비통제 회담 실시
- ◎ 정예강군 목표 강력한 국방개혁
  - 적정병력 40만명으로 군 병력 감축
  - 유사 모병제 실시 : 4개월 의무복무 + 의무복무 이행 자원에서 직업군인 지원과 선발

- 예비전력 현대화 : 군 전력의 40%를 예비군화
- 부대 구조 단순화 : 부대 통폐합으로 경쾌하고 단순한 지휘구조
-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등 국방 문민화
- 방산비리 척결과 무기획득체계 개선
- ◎ 군복 입은 시민의 권리 보장
  - 군 입대 대기기간 제로화
  - 적정 급여 50만원, 보급품 완전 지급으로 빈부격차 없는 병영
  - 군 의료와 민간위탁 의료 완전 무상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병영
  - 그린캠프 · 관심병사 제도 폐지
  - 군 움부즈맨 도입 등 군인 인권 관련 법 개정
- ◎ 남북 경협 등 교류협력의 활성화 · 제도화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 상설화
  -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제공동체 형성의 제도적 뒷받침
  - 유라시아대륙 경제시대 구축으로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의 가교화
  - 특사 파견 혹은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국회 · 지자체 · 민간의 교류 재개 →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회의의 정례화

## ㉞ 이행절차 및 기간

- ◎ 2016년 총선 직후 개성공단 재가동과 5·24조치 철회 등 남북교류 · 협력 복원 등을 위한 국회 결의, 남북관계 역진 방지를 위해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 개정
- ◎ 경협의 이전 수준 복원과 함께,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로 경협의 제도화 뒷받침, 개성공단의 2,3단계 확충, 남북 철도 · 도로 연결 등 인프라 투자,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해당 안보리 제재 해제 필요), 북한의 특구와 연계된 제2 · 제3 개성공단 건설 등 경협의 단계적 활성화
- ◎ 당국회담의 조기 재개, 특사 파견 등으로 최악의 남북관계 타개. 이후 고위급 당국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것과 함께, 정상회담 추진. 정상회담 성사 후에는 정상회의 등 각급 당국 간 회의의 정례화
- ◎ 비핵화-평화체제 과제 달성을 위해서는 우선은 핵동결과 공격적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등을 교환하며 대화 재개. 적절한 시점에 비핵화 6자회담-

## ㉞ 재원조달방안

- ◎ 대부분의 사업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 개정 등이므로 특별히 재원을 소요치 않음.
- ◎ 다만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및 대륙의 북방 및 남방 교통로와 연결, 남북러 가스관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 등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 동 재정 마련을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국 주도 AIIB를 적극 활용할 필요. 그리고 북한의 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험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기금 재원 확충,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민간의 대북투자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등 병행.
- ◎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몇 년간 계획 대비 집행이 1/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2015년에는 기금 자체가 전년에 비해 4.8% 줄어듦. 우선은 현 협력기금을 충분히 소회할 수 있을 정도로 교류협력을 활성화. 추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력기금도 확충.
- ◎ 사병임금 50만원으로 인상에는 현재 병력 기준 연 1조 9천억원 가량 소요 예상됨. 적정 병력 40만명여의 감군과 병력 수 대비 비대한 장군과 고위장교 수 감축 등을 통한 인건비 감축, 방산비리 척결 등을 통해서 충분히 조달 가능. 유사모병제는 인구절벽에 처한 우리나라에서는 병력 조달과 적정 병력의 정예화를 위해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소요예산은 (간부 제외)사병 20만명에게 100만원 정도의 추가 월급이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연 2조 4천억원이 필요함. 그 정도는 2016년 현재 국방예산이 약 39조원이므로 방만한 무기획득체계의 개선 등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함.

## 정책 9

## 차별없는 인권사회(여성, 다문화, 빈민, 성소수자)와 다양한 언론문화사회

## ㉞ 현황과 문제점

UN 인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차별금지 관련 법률 제정 권고함에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 과제에는 포함시켰으나, 정부안은 미제출하는 등 전반적인 인권정책의 후퇴를 보여줌

## ◎ 여성분야

-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에 따른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를 보면 조사 대상 145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15위로 하위권에 있음. 정책결정 및 관리자 직위에서 여성의 낮은 비율을 보이며, 여성 노동자가 많은 사회서비스업은 처우가 열악하며 감정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피해도 심각함. 질 낮은 일자리와 여성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최근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온라인 폭력의 급증이 이뤄지는 등 여성인권의 후퇴가 이뤄짐.

## ◎ 빈민분야(노점 중심)

- 도시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점은 도시 빈민과 서민의 주요한 생계수단이자 전통적인 생계형 자영업의 일종이며, 노점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는 가운데 지자체는 여전히 단속 위주의 행정으로 일관함.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노점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점상의 생존권과 주민의 권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

## ◎ 이주민과 이주아동 분야

-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자발적인 사업장 이동 불가능 등 이주노동자는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결혼이주여성들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 시에도 체류권 보장이 어려우며,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경제적 취약계층임. 또한 부득이하게 체류 자격을 상실해 보육, 교육 등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2만명으로 추산됨(법무부, 2013.2) 현행법에서는 외국인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경우 이들의 자녀를 배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족 결합권 보장 등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 규정이 없어 이주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소수자 분야

- 차별금지법안이 제19대 국회에서 3개 발의되었으나, 보수 단체의 극렬한 반대로 2개 법안이 철회되어 사실상 제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제정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현재 이성간의 혼인 외에 동성커플, 비혼 동거커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전혀 없음. 성소수자는 최근에서야 인권위 차원에서 실태조사가 이뤄졌으며, 고용영역에서는 응답자의 44.8%가 정체성 때문에 차별이나 따돌림, 성희롱 등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차별과 폭력의 현실에 놓임(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5)

◎ 언론 분야

- 정부는 인터넷에서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인터넷에서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누르고 언론을 획일화하기 위한 포털의 손목 비틀기 및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심의 강화 등 법제도 개악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짐.

⊗ 목표

- ◎ 차별없는 인권선진국 달성
- ◎ 다양한 문화와 소수자가 존중되는 사회

⊗ 이행방법

◎ 여성분야

-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 인상과 좋은 일자리 보장
  - ※ 감정노동보호 및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 일·가정 양립 정착으로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소
  -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 방문건강관리 등
  - ※ 3대(임신,육아,돌봄) 휴가제 확대 : 임신 초기 휴가지원 등
-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 직장내 성희롱예방 강화
- 데이트폭력, 스토킹, 온라인폭력 등 3대 폭력 대응
  - ※ 한국형 클레어법(영국의 가정폭력전과 공개제도) 도입
  - ※ 스토킹 처벌 강화, 온라인 인권교육본부 설립

-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및 과장광고 규제 강화
  - ※ 성형수술시 의료진의 설명의무 준수, 외모지상주의 조장 개선
- ◎ 빈민분야(노점 중심)
  - 노점상과 지역이 상생하는 노점기본법 추진
    - ※ 노점단체, 시민단체가 노점실태조사 및 기본정책 마련
    - ※ 국회에 지자체의 상상대책을 뒷받침하는 위원회 구성
  - 식품위생법, 행정대집행법 개정 및 과태료 남용 금지
    - ※ 노점의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와 위생기준 마련
    - ※ 노점에 대한 과도한 행정대집행 최소화, 집행절차 규제
    - ※ 지자체의 과태료 남용 제한, 전통시장 내 노점상 보호
- ◎ 이주민과 이주아동 분야
  - 이주여성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 ※ 제도적 기본권 침해 구제
    - ※ 국제결혼 중개 과정에서의 국적취득 및 체류권의 문제 해소
    - ※ 이주여성 위기개입시스템과 구축 강화
  -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의 권리보장 강화
    - ※ 출입국관리법 개정
- ◎ 소수자 인권 분야
  - 파트너십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 혐오표현·혐오범죄 처벌 법제화,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인권교육기본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내 인권교육원 설치
  - 차별금지법 제정
- ◎ 언론분야
  - 권력기관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 MB 악법으로 실종된 언론독립과 시민주권 회복
  - 디지털시대에 맞는 방송통신의 시민권리 실현
  - 지역미디어센터, 공동체라디오·TV 등 공동체미디어 활성화

## ㉟ 이행기간

-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 ㉟ 재원조달방안

- ◎ 대부분 정치적 결단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사항으로 특별한 재정이 소요되지 않음

## 정책 10

국민을 닮은 국회, 잃어버린 민주주의 회복

## 정책 10-1 정치기득권 해체로 국민을 닮은 국회

## ㉸ 현황과 문제점

- 정치인의 부정부패, 과도한 특권으로 국민의 정치불신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기존 양당은 선거 때마다 공천혁신, 특권폐지를 약속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음.
- 근본적인 정치혁신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임. 하지만 선거법 개정은 비례대표 의석만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는 정치개약으로 끝남.
- 현재 원내 의석 20석 이상을 기준으로 한 교섭단체 제도는 철저하게 다수당 중심의 국회 운영으로 소수당의 참여를 봉쇄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사의 반영을 막고 있음.
-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규제완화와 느장대응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국가적 차원의 재난관리대책 구축과 관피아 척결 등의 과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 ㉸ 목표

- 정치혁신과 기득권 해체로 국민의 정치불신 해소
- 정부혁신과 관피아 척결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

## ㉸ 이행방법

- 돈/금수저/부정축재/무자격/부도덕 5대 불량정치 퇴출
  - 불량정치인에 대한 20대 총선 공천 배제 등 ‘국민눈높이 공천’
  - 재보궐 원인제공 정당의 공천 포기과 선거비용 50% 부담 등 ‘공천 무한책임제’
- 국회의원 세비와 고위공직자 보수의 최저임금 연동제 도입
  - 국회의원과 장차관급 위상 고위공직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
  - 의원 세비는 현재 연봉 1억 4천만원에서 7,562만원으로 삭감
  - 의원 수당 중 목적과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폐지 등 세비삭감으로 절감한 187억원은 국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입법지원 강화에 사용
  - 국회의원 세비의 투명한 공개 및 독립적인 민간심사기구에서 세비 산정

- ◎ 국민을 위한 선거개혁으로 양당독점체제 타파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민 의사를 반영한 국회
  -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 (피)선거연령 인하, 노동자 투표권 보장 등 정치 참여 확대
- ◎ 국민을 닮은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
  - 교섭단체제도 개혁으로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정치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상설화,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
- ◎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책임지는 정부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과 고위공직자 관피아 방지
  - 김영란법 재개정으로 부정청탁 방지, 문지마 특수활동비 축소
  - 무분별한 규제완화 반대,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성 회복

## ⊗ 이행기간

- ◎ 2016년 국회법, 공직선거법,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김영란법 등 개정안 발의

## ⊗ 재원조달방안

- ◎ 국회의원 세비 삭감으로 연 187억원 예산 절감 효과

## 정책 10-2 박근혜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 회복

### ⊗ 현황과 문제점

- ◎ 국정원의 2012년 대선개입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NLL 관련 남북정상 회담 대화록 무단공개 등 정치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함
- ◎ 국정원 외에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도·감청과 SNS 등으로 인한 국민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반면, 고(故) 성완종 리스트,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청탁 논란 등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 목표

- ⊙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후퇴한 민주주의의 복원

## ⌘ 이행방법

- ⊙ 테러방지법 폐지,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전면개혁하고, 국내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
- ⊙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찰과 도감청 방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신제한조치 요건강화, 긴급통신제한조치 남용방지 등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
- ⊙ 검찰 개혁과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 특별검사를 상설기구로 운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구성
- ⊙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기독교자유당

## 8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독교자유당 8대 정책

NO.	7대 정책
1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교차할당제
2	세금의 영광을 돌려주라!
3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정의사회 구현
4	안정된 국방으로 자유민주주의 구현
5	한민족교민청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
6	세계를 향한 지도적인 외교력 향상
7	교육제도 변경을 통한 자기 성취도 향상
8	반기독교 악법 저지

## 기독교자유당의 핵심 정책

오늘날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험에 빠져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제 특단의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회복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이다.

OECD국가 중 자살률 세계1위, 이혼율 세계2위, 교통사고 세계1위, 양주소비량 세계1위, 청소년 흡연율(여학생)세계1위, 유네스코 통계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 말을 가장 잘 안 듣는 세계1위, 형사 소송률 일본의 10배, 무숙인 80만, 니트족 70만, 저출산율 세계1위로 인하여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으며, 중북 좌파세력이 일어나 대한민국은 역사에서 없었어야 될 나라라고 하고, 주한미군이 침략군으로 왔다고 하며 6.25가 북침이며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낸 간첩인 이승만을 통하여 세워진 나라라고 주장하는 중북 좌파들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장발전의 핵심 세력이었던 기독교가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참여를 외면하고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공신력을 잃고 있고 교세가 계속 줄고 있다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역사는 기독교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독교가 정치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인의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기독교인 자신의 정치의식을 개선하고 다음으로는 국민 전체의 기독교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기독교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기독교와 국가의 동반 성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제 돌아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건국을 새로 한다는 정신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의 위기 때마다 현명한 결단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왔던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려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자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들이 일어나 기독교자유당을 창당하고 다음과 같은 정강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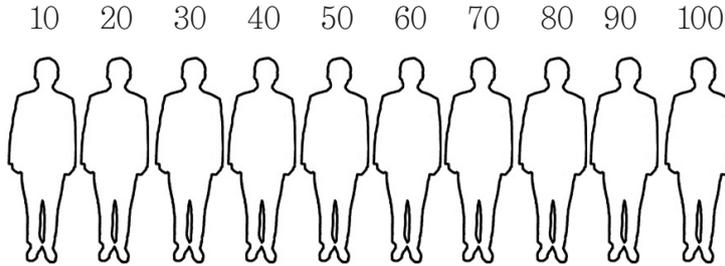
- ◎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10위권을 이룩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을 뿐 아니라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스포츠계의 불가능으로 보였던 종목에서 김연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야구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는 등, 각계각층의 중심이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정치, 문화만큼은 지구촌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주의 정치문화이다.
  
- ◎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는 또 하나의 휴전선이 있다. 그것은 지리산을 가운데 둔 경상도와 전라도의 대립문화이다. 가장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될 선거 개표 순간이 되면 지리산을 가운데 두고 서로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현실은 참으로 비극이다.
  
- ◎ 국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지역대립문화로 인하여 갈등이 심각할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은 1년 국가예산과 맞먹는 400조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다.

### ㉞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전국구 후보의석중 상대방지역에 교차 할당하므로 최소한 10석 이상을 상대당의 강세 지역에 배정하여 지역갈등 정치문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정책 2**

세금의 영광을 돌려주라!



- ◎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갖는 경제적 능력은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백만원, 어떤 사람은 이백만원, 어떤 사람은 삼백만원으로부터 시작하여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천 만원의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1번부터 7번까지의 총 수입은 8번, 9번, 10번 세 사람의 수입과 비슷하지만 개별적으로 계산하면 따라갈 수 없다.
- ◎ 그러므로, 1번에서 7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집단적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왜!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같은 시대를 살면서 나는 한달에 백만 원밖에 벌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만원을 버는가? 이것은 인간의 평등원칙이 아니다 하여 법을 만들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의 것을 공평히 나눠가지자 할 수 있다.
- ◎ 이것이 소위 말하는 좌파적 개념이다.  
이 말은 평등원칙으로 보면 맞는 말 같으나, 한 사회와 시대를 망칠 수 있다. 그러나 1번과 7번의 주장대로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 공평히 나눠가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 해는 빼앗길 줄 몰라도 그 다음해가서 8번, 9번, 10번이 일을 하겠는가? 이제 8번, 9번, 10번은 일해 봤자 빼앗기므로 50%의 능력에 맞춰서 일할 것이다.

- 그렇게 되면 한 사회와 시대가 발전돼가는 것이 아니라 패망할 것이다. 한 시대나

사회가 발전돼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돼가는 것이 아니라 8번, 9번, 10번에 의해서 사회는 발전하는 것이다. 8번, 9번, 10번이 소극적인 자세와 피동적 자세를 가지면 결국, 그 사회는 몰락할 것이다.

### 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대로 그대로 두고 극빈자는 극빈자대로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세금제도이다.
- ◎ 많은 수입을 가진 자는 세금을 많이 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 가진 자들의 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분배를 통하여 옮길 때에 경제적 약자들이 분배라고 하는 법의 칼을 만들어 가진 자들의 것을 강제로 뺏어 분배한다면 이것은 곧, 좌파적 개념이다.
- ◎ 그러나, 경제적 소외자들이 가진 자들을 향하여 영광을 돌려주고 그 혜택으로 물질적 도움을 받는다면, 가진 자들은 물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대신 영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음 해에 가서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 ◎ 그러므로, 가진 자들의 것을 경제적 약자들에게 분배할 때에 약자들로 인하여 만들어진 강제적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로 향하여 영광을 돌려주고 물질적 도움을 받자고 하는 것이다.
- ◎ 먼저 그 시작을 경제적 약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 놀 때에 당신들은 열심히 했고 우리들은 게으를 때 당신들은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더니 결국 잘 살게 되었군요...그러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주면, 가진 자들은 아! 그 때 열심히 일하지? 공부할 때 공부 좀 하지? 그렇게 말해도 안하더니 결국 어렵게 사는구나... 알았다.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하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얻게 하면 기득권자들은 더 열심히 일 할 것이다.

### 정책 3

####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정의사회 구현

- ◎ 위의 경제적 논리로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재미로 세상을 살게 된다면 사회의 모든 문제는 다 일시에 해결할 수 있어서 국가예산이 사회정책을 다 쓰고도 남아서 외국까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넉넉히 생기는 최첨단 복지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 정당 창당의 목적은 정권을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기독교자유당은 정권의 창출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정의사회를 구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 ◎ 정의사회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지속시키고 부정과 부패, 거짓과 위선, 퇴폐 문화를 배격하고 양심적이고 맑고 깨끗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여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윤리와 도덕의 가치를 중시하고 전국적으로 필요한 부서에 윤리 강령을 제정하여 윤리와 도덕이 살아 숨 쉬는 사회를 이룩한다.

- ◎ 대한민국은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의 논문에서 제시하였듯이 한국은 역사적, 지정학적 중국, 소련, 일본의 틈에서 끝없는 외침 속에서 살아왔다.
- ◎ 어느 한편과 가까워지면 다른 한편에게는 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한편과 동맹을 하면 다른 한편은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이다. 그러므로 영토적 욕심이 없는 나라와 동맹을 해서 중국, 소련, 일본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채울 수 있는 국가는 오직 미국뿐이다.
- ◎ 한국의 국방과 통일에는 거대공룡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확실한 견제하고 미국의 보장 하에 영원한 중립국가로 가야할 것이다.
- ◎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혈맹으로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을 더 결속시켜 미국의 절대 보장 안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정책 5**

## 한민족교민청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

- ◎ 최근 대한민국의 한류문화가 전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라 볼 수 없다. 한국의 문화의 원천이라고 하는 우수한 종교들을 통하여 저력이 다져져왔다. 불교의 시대적 사명과 유교의 인간관계적 가르침에 근대에 들어온 기독교문화가 전 세계 문화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므로 이제 한국에서 일어나는 문화는 앞으로 전 세계의 문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다.
- ◎ 영화, 음악, 스포츠, 드라마 등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1등 대한민국으로 성장시켜야 된다. 이를 위하여 세계 대사관 외에 한민족 교민청을 설립하여 이중대사관 제도를 운영 하므로 전 세계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 ◎ UN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는가? 이제 앞으로는 어느 한 나라를 침략한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외교적 리더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은 반만년 세월 동안 한 번도 외국을 지배하거나 침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구촌나라와 적대적 감정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 ◎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외교사회에서 전 세계를 아우르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다
  
- ◎ 이와 같은 기회를 100분 활용하여 지구촌의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하여 탑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정책 7**

교육제도 변경을 통한 자기 성취도 향상

- ◎ 대통령이 열 번 바뀌어도 대한민국의 교육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 역시 접근방법을 아날로그식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접근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요즘 반값등록금, 사교육비등으로 사회문제가 고조되고 있으나 기독교자유당은 교육제도를 5.3.4.4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 초등학교를 5학년으로 하고 중학교를 3학년, 고등학교를 4학년으로 늘려 3년까지는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4학년 때에는 공부중심이 아니라 1년을 4분기로 하여 3개월씩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하고 싶은 적성의 일을 먼저 해 봄으로써 자기의 적성과 능력을 찾는 행사를 하여 11월 3째주 토요일을 공휴일로 하고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가정, 사회, 직장 에서 축하파티를 하는 등의 문화행사로 통하여 성인식을 선포한다.  
 이것은 대학전공자 중 82%가 일생을 비전공분야에서 사는 비극적 사회현상을 가지고는 어떤 교육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 ◎ 서울의대 치과 의사가 김밥장사를 한다느니, 일류 기계과 출신이 부동산을 한다느니 하는 것은 사회적 인적재앙이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3년을 마친 뒤에 1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먼저 하고 대학은 내신 성적과 직장오너가 추천하는 성적으로 암기식 수업이 아닌 재능과 선천적 대학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3개월 동안 일을 하는 과정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국 돌아와야 할 곳이 이 자리라면 구태여 대학공부를 안 해도 현재 실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대학 갈 필요없이 모자란 지식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기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등록금은 1년 다닌 직장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책임지고 부담함으로써 산학협동이 되게 한다.

## 정책 8

### 반기독교 악법 저지

◎ 정부에서는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이유로 동성애법 및 차별금지법 등의 반기독교 악법들을 통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들의 선교를 위한 할랄식품단지 조성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기독교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와 국가의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 기독교자유당은 이와 같은 재앙적 법률을 철저히 대응하고 저지할 것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7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7대 정책

NO.	7대 정책
1	저비용사회
2	저비용상생정치개혁
3	새만금 신경제수도
4	인사선진화법
5	65년 한일협정 재협상 추진과 '15년 한일 '위안부'협상 무효화
6	한반도 신평화체제 구축
7	당원중심정당정치 복원



### ㉸ 제안이유

- ◎ 박근혜 정부를 비롯 여야 모두, 주거문제 해결에 소극적
- ◎ 저금리 시대 고착으로 자본가들이 월세시장에 몰리고 있으면서 주민주거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 2014년 기준 신고한 임대사업자들의 상가임대소득만 56조원(주택임대 제외)
- ◎ ‘100세 시대’, ‘삼포세대’ 그리고 ‘1인 가구’ 확대라는 전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전무

### ㉸ 세부정책

- ◎ 정부·지자체가 주도한 가격폭등 품목의 원상복구 및 가격 대폭 인하를 추진
- ◎ 공공요금인하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을 구축
- ◎ 국민 가처분 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춤
  -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의 현실화
  - 생활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와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공급 / 주거 월세 반값정책
- ◎ 공공요금, 세수확보를 위한 무차별적 간접세 인상,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비용 사회구조를 타파(이스라엘은 국민의 통신비를 1/3로 낮춘바 있음)
  - 공공요금/ 통신요금 / 담뱃값 인하 / 의료 및 국민연금 개혁 / 대학등록금혁신
  - 고용자와 피고용자 간 상생공유임금정책 개발

## 정책 2

### 저비용상생정치개혁

#### ㉞ 제안이유

- 국회의원은 법률상 연봉이 무려 1억 7천만원
  - 9명의 보좌진(연봉 합계 약 4억원) 모두를 합한 의원 유지비는 연간 약 6억원 / 4년간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약 7천여억원
- 국회의원 연봉(2012년 기준)은 스페인, 포르투갈, 덴마크 등의 약 3배 수준, 10년간 한국 연봉 상승률은 51%(미국 20%, 영국 27%)
-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 순수하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철회, 단순폐기 제외)의 경우, 대표 발의 통과율이 30.45%, 공동 발의의 경우 32.32%, 의원발의 법률안의 통과율은 32.28%
-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등한히 하여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것임

#### ㉞ 세부정책

- 국회의원의 세비를 중산층 수준으로
  -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인턴포함 최대 11명) 정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궁극적으로 보좌관 제도를 없앨 것
- 국회,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로 구성된 「국회의원권한조정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국회 의원 특권 축소를 당정책으로 제안
- 재보선 2위 승계제 도입(예산절감, 지역주의완화) / 국회의석 여야교차제(지역구별 또는 상임위별 배치)
- 국회의원연금법 현실화를 위해 연금은 의원으로 봉사한 횟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법 일부조정
- 연정을 통한 국난 극복

**㉸ 제안이유**

- 창조적이고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한 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 경제자유와 공공주거·공공보육의 사회적 공동체를 동시에 실현해,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게 주거 및 자녀양육부담에서 해방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새만금 신경제수도의 목표.
- 민주당은 새만금을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기지이자 신경제수도,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 대한민국 안의 싱가포르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향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

**㉸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 기초**

-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의 3대 원칙
  - 강력한 추진주체 창설:
    - 현 국무총리 소속‘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위원회’로 격상 / 대통령실 ‘새만금전담 수석비서관’ 신설 / 전라북도 소속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 ‘경제규제 제로(free), 주거부담 제로(free)’:
    - 최소한의 규제 외에 모든 것을 풀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 / 전면적 무상주거,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문명 도시를 만들어야 함
  - 이익공유:
    -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군산, 부안, 김제 등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
- 신경제수도는 대한민국과 호남경제의 새로운 융성을 위한 위대한 도전
  - 신경제수도는 한중일 경제협력시대의 중심이 되고, 새만금-세종시-포항을 잇는 신중원벨트의 주춧돌
- 새만금 신경제수도 기획단 구성 및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 범국민추진본부 (약칭: 경제수

도 추진본부)

- 시민사회 협력과 정당정파를 뛰어넘는 범국민추진본부 또는 새만금신경제수도기획단을 구성, 구체적 정책을 당의 핵심공약으로 제시

### ㉘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의 행정추진시스템

- ◎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새만금 신경제수도 조성위원회」로 격상
- ◎ 대통령실에 ‘새만금 신경제수도 전담 수석비서관’ 신설
-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정책자율성 제고와 자치입법권 부여

### ㉙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의 재정추진시스템

- ◎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실현 및 자원(수입금)조달 규정 강제
  -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강행규정화하고, 「새만금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이라 함) 제38조 세입 규정 중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액을 법정률(예, 내국세 총액의 2% 등)로 정함
- ◎ 새만금 내 ‘토지 공개념’ 도입으로 공공주거, 공공보육 기반실현
  - 토지공유화를 바탕으로 새만금 내 토지를 전면 공유화하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토지를 임대한 후, 토지 사용료(임대료) 징수
- ◎ 종합적으로, 새만금 신경제수도 조성 재원은 국가 출연(예, 내국세 총액의 2% 등), 새만금 토지사용권 임대 수입, 새만금 토지임대수입 담보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제안이유**

- ◎ 헌법 제 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 공무 담임권은 지역적 차별 능력없이 능력에 따라 최상위직까지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
- ◎ 박근혜 대통령은 요직인사 등용에 있어 호남지역 출신자를 과거보다 더한 차별과 홀대를 하고 있음
  -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 보고서 (2015년 2월 현재)』에 따르면 영남 지역 출신의 인사 편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국가 의전서열 순 10위 11명 중 영남 8명이 차지하며 호남은 1명으로 이 또한 당연직 (국회부의의장)

**㉸ 주요내용**

- ◎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상위(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출신지역을 배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고위직지역균등인사법」 발의

## 정책 5

### 65년 한일협정 재협상 추진과 '15년 한일 '위안부'협상 무효화

#### ㉸ 제안이유

- ◎ 1965년 한일협정에서 들어진 청구권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위안부'협상 함으로 더욱 심각하게 틀어짐
- ◎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를 강요한 것으로 이는 국가주도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
- ◎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국민의 납득이 없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에 반대하며 문제의 근원인 1965년 한일협정 협상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음

#### ㉸ 주요내용

- ◎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중재와 재협상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전면 공개
- ◎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 감사 요청
-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할린 억류 피해자, 원자폭탄 피해자,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의 청구권과 공탁금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조치를 강구
- ◎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연대하며 이를 기억할 수 있는 '위안부 평화공원'을 조성
-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이 일본의 법적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청구권 배상을 요청해 우리 국민의 존엄과 기본권 회복

#### ㉸ 위안부평화공원재원조달

- ◎ 현 중복 추진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중 일부와 국민 성금으로 조성

**㉸ 제안이유**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온 햇볕정책은 남북한 적대적 인식을 완화시키고 협력을 증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되려 심화시켰다는 한계를 가짐

**㉸ 주요내용**

- 한반도 신평화체제
  - 강력한 안보와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꾀하고 북한과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는 대북정책
  - 지난 햇볕정책을 계승하지만 한계를 보정한 대북정책

**㉸ 세부정책**

- 북한의 핵모라토리엄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원샷협상 추진
  - 북핵 모라토리엄과 군사연습 중단을 협상안으로 제안 → 북·미 수교→평화협정 과정을 통해 북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가 충분히 쌓인 후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를 논의
  - 우리 한·미 연합군사력은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위반했을 경우 언제든지 군사연습 재개
- 우리군의 한반도 방공체계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
  - 북핵은 한반도에 위협이 되지만 북한과의 분쟁 발생시 초도 위협은 북한의 장사정포
    - 장사정포의 사거리는 60km. 개성공단과 서울 도심이 직선거리로 50여km에 불과해 수도권이 장사정포의 사정권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함
  -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논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경쟁을 촉발 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사드의 전략적 그리고 전술적 실효성은 아직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항
  - 이에 대한 대비로 우리군이 KAMD를 준비해온 만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추진단 구성

-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폐쇄에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 발의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기존 사업 재개는 필수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북협력 중심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국회 내 추진단 구성

**㉸ 제안이유**

- ◎ 정당의 중심주체는 당원!
- ◎ 당 지도부 선거가 당원중심에서 시민 및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정당정치의 적잖은 변화

**㉸ 방 안**

- ◎ 전당원 투표제
- ◎ 정당의 주인인 당원의 주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 당의 정책결정이나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전당원의 투표를 실시하여 정당을 바로 세우고 정당정치를 복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가자코리아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가자코리아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국방, 안전, 외교, 통상, 분야
2	경제, 일자리, 노사, 세금, 금융
3	행정, 사법, 검경, 국방, 감사
4	입법, 헌법, 대통령, 헌재, 선거관리위원회
5	복지부, 여성, 아동, 가정, 노인
6	보건부, 의료, 국민연금, 공공연금, 의약분업
7	경제활성화정책
8	교육, 족보종친회청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9	특수사회, 시민, 정당, 중앙정부지방행정청설립, 지방행정개혁
10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대한민국미래문명연구원



**㉞ 통일****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

- ⊙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 통일 헌법 · 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 ⊙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 개성 · 장단 · 문산 · 철원 금강산 · 고성일대
- ⊙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 10년-국민직접선거
- ⊙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 5년
- ⊙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 선관위
- ⊙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 ⊙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 ⊙ 통일기 · 애국가 - 삼태극기

**㉞ 북한왕조 종북좌파 타도 정책**

- ⊙ 친북한기업 · 정당정치세력 · 경제세력 · 위장국내재외노동자세력 · 종교사회단체 · 공공조직 축출로 국가적, 사회적비용 절감으로 북진통일비용 재원 마련

**㉞ 국방**

- ⊙ 핵무기, 수소폭탄 무력화 전략 · 전술 · 기술 · 개발
- ⊙ 첨단 ICT 통합국방군 설립

**㉞ 안보**

- ⊙ 국가안보도청법제정 - 국내외를 총망라 한 도청기술개발
- ⊙ 국가테러방비안전법 제정
- ⊙ 대미안보 우호 강화
- ⊙ 주변국 주적을 행한 안보전략 개발

## ㉟ 외교 및 대외 통상

- ◎ 북진통일 국제외교 강화
- ◎ FTA등 통상외교 강화
- ◎ 내국인 우선보호 정책

## ㉟ 목표

- ◎ 북진통일, 흡수통일

## ㉟ 이행방법

-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㉟ 이행기간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 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 경제****ICT 융합 경제학 확립,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아시아 공동체 주창**

- 국가비용 절감으로 지속 가능한 통일경제발전5개년계획 수립
- 고대역사경제학
- 문화경제학
- 문명경제학
- 민권경제학
- 매국경제정책 폐기
- 과거기업인사면정책수립
- 기업인전용연금정책실시
- 부동산등재산평가재실시 및 담보대출활성화
- 국민지식재산권등재사업

**㉸ 일자리, 노사, 기업**

- ◎ 일자리나눔, 2/1 3/1 근무, 투잡 쓰리잡허용
- ◎ 귀족노조폐지, 대기업대주주 가족 기업세습경영배제

**㉸ 세금, 교통과태료 인하**

- ◎ 양도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 절반 인하
- ◎ 교통과태료 3월 인상 전 가격에서 절반 인하

**㉸ 금융**

- ◎ 서민금융 자본금 1000억 이하 소규모 금리 저리 은행 설립자유화
- ◎ 기준금리 0%달성, 금융이자 인하
- ◎ 서민전용(제2금융권) 기업전용(제1금융권) 분리운영
- ◎ 서민금융 신용소득 증빙제도 철폐

## ㉟ 생활경제

- ◎ 금융소비자원설립
- ◎ 긴급민생지원은행설립, 식량연료의료지원긴급센터설립
- ◎ 신용불량자사면복권, 은행부실채권 휴지화정책 수립

## ㉟ 현황과 문제점

-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 위에 굴림하여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㉟ 목표

- ◎ 빈익빈 부익부 정책 폐지로 차별 없는 금융 이용

## ㉟ 이행방법

-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국민재산을 축내는 정책 폐지와 정부와 지자체 행정조직의 리모델링 및 구조조정 으로 이행.

## ㉟ 이행방법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 낭비되는 국가예산 절감과 정부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으로 달성

**㉸ 행정****국토부해체 분화, 허가권 10/1 축소 폐지**

- 국토부 - 건설, 부동산, 교통기술, 국가검정기술, 환경기술 전문분야로 해체 분화
- 기초자치제 폐지, 광역화만 지방자치허용,
- 지방의회폐지, 광역화자치의회만 허용, 지역구선출폐지, 탈정당비례대표제선출
- 주식회사개념도입 수시 공무원퇴출 임용제 허용, 공무원신분보장제폐지
- 공무원 연금 폐지, 노동의 강도에 따른 보수 차별제 도입
- 지방자치 허가권, 입안권, 조례 제정권 10/1로 축소
- 지방의회 의원 각종 행정위원회 참여 불허
- 지방자치조직 3/1축소, 구조조정으로 복지전문공무원 증원
- 소방공무조직 소방재난안전경찰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변경
- 시민사회종교 조직 정부, 지방 사업 및 복지시설 대행 수행 금지

**㉸ 사법**

- ◎ 대법원개혁, 대법관확충, 법관보수 2배 인상, 상고심사제폐지
- ◎ 변호사시험제 수시제, 대학미수학자대상 사법시험부활, 법대교수변호사자격증부여
- ◎ 대법관 정수 33인 이내 증원

**㉸ 검경**

- ◎ 검찰외 기소권 법원 내 법원검찰 설치
- ◎ 경찰조직 개편, 수사전문, 보안전문, 정보전문, 가정실종자수사전문, 공수처 전문경찰로 조직개편

**㉸ 국방**

- ◎ 주적 확대에 따른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 국가테러방비안전 전략 전술 부대 설치

- ◎ 전통 육군 공군 해군 외 전략 부대 설치
- ◎ 국방비 재정비, 국방전략자산 전문부대 설치

## ㉟ 감사 회계

- ◎ 감사원의 혁신.
- ◎ 회계감사원 설치
- ◎ 정부 지자체 감사직 독립화

## ㉟ 현황과 문제점

- ◎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위에 굴림하여
- ◎ 미래문명을 전혀 준비함이 없이 과거 체제와 조직 이론에 기대어 망국적 경제 체제를 완전히 개조해야 함

## ㉟ 목표

- ◎ 정부 지방 조직의 리모델링화

## ㉟ 이행방법

-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비용충당

## ㉟ 이행방법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 사업 시행으로 재원 마련

**㉸ 입법****북진통일 비상시국 상태로 변환**

- ⊙ 여의도 국회를 미8군 주둔지역인 국립박물관과 교체
- ⊙ 국회의원선출 지역구제 폐지, 정당권역별비례대표제로만 선출
- ⊙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 10년-국민직접선거
- ⊙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 선관위
- ⊙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 ⊙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 ⊙ 통일기·애국가 - 삼태극기

**㉸ 선거관리위원회**

-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선거관련법 입법 거부권 행사권 부여

**㉸ 대통령**

- ⊙ 대통령이하 지방단체장 및 선출직 상시 선거운동 허용
- ⊙ 대통령 탄핵사유 명문화

**㉸ 헌법**

- ⊙ 남한대통령 5년 임기 중임제, 통일대통령 10년 임기 단임제 개헌
- ⊙ 이원집정부제 및 내각제 가미 권력구조개편
- ⊙ 통일헌법제정
- ⊙ 대통령 지방단체장 국회의원 임기 1년 후 해산권 허용

## ㉟ 헌법재판소

- ◎ 대법원판결 현재심사권 부여
- ◎ 현재재판소구성은 대법관 및 30년 이상 재직 법대교수로 임용제한
- ◎ 헌법개정심사권부여

## ㉟ 목표

- ◎ 북진통일, 흡수통일

## ㉟ 이행방법

-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㉟ 이행방법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 사업 시행으로 재원

**㉸ 복지****보건복지부의 해체 및 전문화 조직 구성**

- ⊙ 보건복지부를 해체한다.
- ⊙ 의료보험관리청을 설치하며 낭비적인 무상건강진단을 폐지한다.
- ⊙ 건강식품안전청을 설치한다.
- ⊙ 식량자급증자원을 설치한다
- ⊙ 복지공무청을 신설한다.
- ⊙ 복지경제청을 신설한다.
- ⊙ 신약개발청을 신설한다.
- ⊙ 국가병원청을 신설한다.
- ⊙ 의료자원청을 신설한다.
- ⊙ 대체민간의료청을 신설한다.

**㉸ 여성**

- ⊙ 가정해체, 전통문화속보해체, 여성성침해, 여성인권, 여성 노동력 착취하는 양성평등 제도하의 여성정책 개선
- ⊙ 여성, 가정, 폭력실종수사처 설립

**㉸ 아동**

- ⊙ 아동의 육아는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어야 한다.
- ⊙ 무상복지를 지양하고 잉여인력 여성 노인 인력을 투입하고 보수는 국가가 지급하는 각종 복지자금으로 충당한다.

**㉸ 가정**

- ⊙ 가정의 구성원은 행복한 가정을 영위할 권한이 있다.

- ◎ 국가는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정책에서 우선하여야 한다.
- ◎ 국가는 하위계층에게 보살핌을 주어야 하나 유노동 유임금제로 변환한다.
- ◎ 국가는 가정의 육아 교육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 ㉞ 노인

- ◎ 대한민국을 건설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 ◎ 복지센터에서 아동 여성 가정교육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노임을 지급한다.
- ◎ 노인 지식재산권을 국가가 매입하며, 노인의 재교육 재취업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한다.

## ㉞ 목표

- ◎ 북진통일, 흡수통일

## ㉞ 이행방법

-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 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㉞ 이행방법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㉞ 재원조달방안 등

- ◎ 대북 퍼주기 예산 절감, 기업의 정치조직의 상납 비용 금지, 시민사회에 뿌리는 정부 지자체 사업 대행처리 중지, 낭비 전시행정 중지, 도둑질 당하는 경제활성화 예산 절감 사업 시행으로 재원 조달

**㉸ 보건**

- ⊙ 통일 헌법 · 정부 조직 구성 통일위원회 발족
- ⊙ 통일수도 강역 - 남북한 휴전선 전부/ 개성 · 장단 · 문산 · 철원 금강산 · 고성일대
- ⊙ 통일수도 명칭 - 아사달
- ⊙ 통일정부 권력구조 - 통일대통령 1인 임기 10년-국민직접선거
- ⊙ 지방자치 - 대통령남북총리임명제 각1인 임기5년
- ⊙ 국방원, 사법원, 정보원, 경제원, 감사회계원, 헌법원, 대법원, 선관위
- ⊙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
- ⊙ 통일국가 명칭 - 한국조선
- ⊙ 통일기 · 애국가 - 삼태극기

**㉸ 의료, 의약, 한의, 대체의술**

- ⊙ 대체의술을 허용한다

**㉸ 국민연금 공공연금**

- ⊙ 국민연금 공공연금 통합
- ⊙ 공공연금폐지

**㉸ 첨단의료기술 합법화를 위한 의학제도 개혁**

- ⊙ 의학신기술처를 설립한다.
- ⊙ 의과개학을 개편하고 의료인을 전부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 의료, 의약, 한의, 한약, 대체의료, 통폐합 한다.
- ⊙ 병의원을 모두 공공자원화 한다.

## ㉟ 의료인 육성

- 첨단화하는 의료발전에 맞게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 연중시험제로 의료인을 다수 양성한다.
- 공공의료와 사적의료 시설을 분리 운영한다.

## ㉟ 목표

- 국민건강

## ㉟ 이행방법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의료 사회 조직 일반의 일반 사회의 낭비적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의료제도를 개편한다.

## ㉟ 이행방법

- 2016년 6월부터 ~ 2040년 6월까지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의료보험 연기금 등을 구조조정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㉔ 대한민국경제주식회사 설립 -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민족자본 민족은행 17개 시도에 설립 - 경제활성화 대책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시도농민 경제지원 대책
- 신용불량자 사면-신용불량자도 담보와 지식으로만 재활 대출을 받는다.
- 30분 주차, 식사주차 허용(4차선 이상 도로, 골목길, 전통시장)
-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원/ 사업지원
- 백화점세일기간 주차장 폐쇄 - 교통정체 해결
- 정부규제 정책시행 대행업무 축소
- 공공 청사 축소
- 정당, 정치 중립의무 위반 시민단체 지원 배제

**㉕ 국가세계경제위기대응센터 설치**

- 남북한, 중국, 일본과의 경색국면, 유럽 및 서양사회의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보호정책 수립

**㉖ 정당조직폭력배 척결 -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민족자본 민족은행 설립 - 담보대출허용, 신용대출과 분리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책
- 신용불량자 사면 - 신용불량자도 담보 대출제도
- 정당제 조직폭력행정 뿌리 뽑는다  
    청탁인사, 개방허가제, 위원회공화국폐지, 행정조례축소
- 부당감정 감정사 감정기관개혁과 검찰고발 및 손해배상청구
- 집주인 공짜 아파트 공급 - 재개발 재건축 적극지원
- 분양가 상한가 통제
- 불법주차공과금연체차, 세금기여자, 영세사업자, 생계곤란자, 각종 부담금 면제 사면조치

### ㉸ 현황과 문제점

- ◎ 낭비적 예산집행 / 신용제도, 소득증빙제도로
- ◎ 재산권행사제한, 연체자만 양산, 경제활동위축해소, 재산세 2%인하로
- ◎ 재산평가 현실화로 실질소득 증가, 부익부 빈익빈 정책 폐지

### ㉸ 이행방법

- ◎ 정책변경

### ㉸ 이행방법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 재원조달방안 등

- ◎ 재정 구조조정

**㉸ 교육제도**

- ◎ 단계적 교육폐지
- ◎ 유아, 초등, 중등 교육 의무화, 고등학교폐지
- ◎ 6년제 고등대학 직업교육제도 실시
- ◎ ICT 직업교육, ICT인문역사교육, ICT인성법률교육
- ◎ 교육자치제 폐지, 서울대학 및 문과대 폐지 기술과학개방대학원으로 개편
- ◎ 국립대 문과대 이과대 분리

**㉸ 족보종친회청 설치, 고대역사연구원설치, 원구단, 장충단 복원**

- ◎ 1인 1족보 지원
- ◎ 족보 온라인 발급제도 도입
- ◎ 종친회 협동조합 지원 - 전통세습문화 사업화 지원
- ◎ 전국성씨종친회 무상이용 빌딩 제공
- ◎ 역사도서관 설치
- ◎ 역사시험 복원
- ◎ 미래교육 - 공공자산 사교육 서당화 - 실제미래직업교육
- ◎ 고학력실업자 퇴직자 미래직업 교육직 채용 - 유아교사, 유치원교사, 초중고교사, 대학 직업교육 교사제 도입 및 채용제도

**㉸ 원아시아 원히스토리 고대역사연구원설치**

- ◎ 항구적인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고대역사연구원 설치

### ㉟ 현황과 문제점

- ◎ 패권적인 국가 우월주의 민족우월주의 종교우월주의 타파하여 아시아의 시원의 역사를 연구하여 항구적인 아시아와 세계 비폭력 평화 정착을 위한 연구소 발족이 시급함

### ㉟ 목표

- ◎ 전쟁을 향한 현실과 미래시대 대비

### ㉟ 이행방법

- ◎ 동북아역사재단을 해체 개편한다.

### ㉟ 이행방법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 문화재청예산전용, 동북아역사재단 재원을 사용함

**㉸ 시민 종교 사회**

- 시민종교 봉사적 조직이 국가시설과 예산을 이용하여 이념전파 정당정치 종교등의 선교를 목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아웃제 신설

**㉸ 시민 생활**

- 성매매 자유촌 설치
  - 인신매매 납치 고용 강력 처벌
  - 성매매 개인사업자 부여
  - 위생증미소지자 -강력처벌
  - 성매매 금지법 개정 추진
  - 성매매 노임착취 강력처벌

**㉸ 정당 및 지역패권주의**

- 정당원 또는 지지자가 지지대가로 행정허가 또는 사업에 불개입 조치
- 국회, 국회의원 행정권행사에 불개입 원칙 확립

**㉸ 중앙정부지방행정청**

- 국가사무지방자치행정에 위임업무폐지  
국가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청을 설립하여 직접 수행한다.

**㉸ 지방행정개혁**

- 지방시군구단체장 및 의원은 선출직폐지 전까지 정당가입 금지
- 지방행정청은 복지 교통 등 허가관리직 폐지하고 봉사조직으로 변환한다.

### ㉸ 목표(현황과 문제점)

- ◎ 점증하는 성폭력범 대비 정책, 무너지는 가정보호, 국회입법

### ㉸ 이행방법

- ◎ 국회입법 및 공청회

### ㉸ 이행기간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 자원조달방안 등

- ◎ 행정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으로 모교달성 / 민간자본 참여

**㉔ 고대역사 북진통일, 흡수통일 정책에 기여되는 부분**

- ◎ 진보이념으로 무장된 대남통일 전선 정책을 무력할 수가 있음
- ◎ 아시아의 원류 역사를 통한 국가간 민족간 동질성 회복
- ◎ 북한왕조 세습정권과 인간성 말살 정책, 독재정권 악습을 제거
- ◎ 세뇌된 북한 지도층의 재교육으로 민족문화 동질성 고취
- ◎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종말을 앞둔 시점에 새로운 문명 탄생을 모색
- ◎ 살인적인 종교간 갈등을 해결
- ◎ 인공지능 로봇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구
- ◎ 통일헌법 육법전서제정에 다문화 이념 수용
- ◎ 해방전쟁에 동원되는 최소한의 살상을 수반 전쟁수행 방법연구
- ◎ 이념간 국가간 문화간 이해 충돌을 해결할 다자간 동질성회복 방안 연구

**㉔ 미래시대준비**

- ◎ 언제까지 화폐교환의 경제체제가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체제를 어떻게 비폭력평화 세계를 구축할 것인가
- ◎ 인공지능에 인간성 및 인권을 집어넣을 수 있는가
- ◎ 인공지능 시대에 맞서 인간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 ◎ 세계인구는 폭발일로인데 어떻게 3000년 정도의 문명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 ◎ 인간 생명의 경시로 인한 종교전쟁 패권전쟁 부의 집중화 정책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 ◎ 독재경제체제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독점적 노동착취와 부의 집중 현상을 해소할 연구
- ◎ 인공지능시대에 인간 사회의 낙원은 가능한가

**㉔ 이해충돌의 시대와 문명의 총동시대 해결방안**

- ◎ 북한왕조 종북좌파와 애국자유주의 입각한 보수주의와 싸움 해결 방안
- ◎ 남한 사회의 자유주의 자본주의와 북한의 독재 작당적인 민주주의 계획경제와 대한민국의

신진세력인 작당적인 부패한 진보 보수 주의자에 의한 왜곡된 국가이념의 재확립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으로서의 북진통일과 흡수통일의 당위성연구

## ㉸ 목표

- ◎ 북진통일, 흡수통일, 역사연구, 미래연구

## ㉸ 이행방법

- ◎ 국민의 생명과 생존을 책임지어야 할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정치 사회 조직 일반의 망상적 통일정책과 중복좌파적 성향의 투쟁을 종식시켜 사회불안 비용과 정치 일반 사회의 낭비적 좌파 성향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통일 안보 국방 예비비용으로 적립하여 사용함.

## ㉸ 이행방법

- ◎ 2016년 6월부터 ~ 2020년 6월까지

## ㉸ 자원조달방안 등

- ◎ 동북아역사재단의 재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개혁국민신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개혁국민신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통합정치'와 '실용적 중도정당'으로 민주주의를 완성
2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정착과 내실화 (중앙정부) 책임행정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정부를 구성
3	따뜻한 시장경제인 공생경제로 새경제질서 구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신산업정책의 실현
4	건강증진과 예방을 우선하는 건강사회의 실현
5	'생산적·보편적복지'를 넘어 '창조적·국가복지' 구현 최약자 보호의 원칙 확립, 장애인을 위한 창조적 복지의 실현
6	인성강화교육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입국 사교육 없는 참교육 실현
7	여권신장과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원대한 포부와 꿈을 실현하는 젊은청년 육성 노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창조적 일터와 복지 구축
8	농·축민 성공시대 국제수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9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문화관광체육산업의 진흥
10	보편적 세계주의의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추적 역할 안보역량강화와 확고한 안보 협력체계 구축



### ㉞ 국민이 주인 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구현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

- 국민의 기본권을 창조적으로 확장해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 모든 국민이 주인정신을 함양해 공정한 기회 속에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추구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한다. 형식적, ‘절차적민주주의’를 넘어 ‘책임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생활화를 통해 참된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 ㉞ 창조적 대의정치 구현

- 철학에 기반한 ‘정도(正道 : 좌/우, 보수/진보, 양비론적 중도를 넘어선) 이념’ 으로 정책 정치를 완성하여 구시대의 낡은 제도와 누적된 악폐를 청산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창조적 대의정치를 구현한다. 실업, 세금, 보건, 물가, 환경 등 국민의 실생활에 와 닿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하며, 저급한 이념이 배태한 지역간 대립구도의 타파, 소모적 정쟁의 지양, 배려 없는 이기심을 척결하여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 ㉞ 개헌에 의한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추진

- 국가원수와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현행의 대통령제는 권력형 부정부패, 지역분열, 고비용의 선거구조 등 모든 정치폐단을 야기하는 근본원인이다. 우리 당은 궁극적으로 현행 제도의 폐단을 없애고, 국가권력구조를 더욱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개헌에 의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와도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추진한다.

### ㉞ 국민화합과 사회적통합의 정치 구현

- 우리 당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 양비론적 중도를 넘어선 정도(正道)의 새 이념으로 지역, 계층, 빈부, 세대, 성별간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생활공동체를 실현하여, 국민화합과 사회적통합의 진정한 중도개혁정치를 구현한다. 대결과 갈등의 정치가 아닌, 타협과 공존, 공생, 공익, 상생의 정치를 편다. 조세정의와 사법정의의 구현으로 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과 공정한 인사운용을 통해 지역 간 화합을 추진한다.

## ㉸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선진민주인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한다. 사법제도는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피의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소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

## ㉸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치

- 맑고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개선한다.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모금과 배분을 투명하게 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 강화하여 돈 안 드는 선거와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킨다.

## ㉸ 의회 중심의 정치 구현

- 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강화하여 의회 중심의 정치를 구현한다. 국회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권력투쟁의 장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 수렴, 갈등조정, 법안 및 예·결산 심의 의결, 행정부의 권력남용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회운영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관행을 정착시킨다.

## ㉸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공정한 제비뽑기와 철학 기반의 정책정당화

- 정당의 진정한 민주화는 당의 공천과 국민참여경선제도가 아니라, 적절한 능력을 갖춘 지도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공정한 '제비뽑기'다. 적절한 능력을 갖춘 공직예비후보의 선출과정과 당론의 결정과정에 평당원과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정당구조를 확립한다. 당의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철학에 기반을 둔 정책정당을 구현한다.

## ㉸ 선거제도의 개선과 철학에 기반을 둔 정책정당으로 전국정당 실현

- 1인 2표 권역별정당명부비례제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등 지역과 계층의 이해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모든 정당의 전국정당화의 한 방법론이지만, 근본원인은 우리의 정당구조가 편협한 이념과 지역에 기반을 둔 인물

중심의 전당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모든 정당의 전국정당화를 위해서 새로운 가치관에 의한 철학을 기반을 둔 정책정당을 실현한다.

**정책 2**

(지방정부) 지방자치의 정착과 내실화  
 (중앙정부) 책임행정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정부를 구성

**㉸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 주민이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와 생활자치를 구현한다. 또한 교육자치와의 연계성, 경찰·항만·노동 등 지방행정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확충한다.

**㉸ 지방선거제도의 개선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선거 등 지방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내실화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행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분쟁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 권한과 책임이 조화된 선진형 자치기반을 구축한다.

**㉸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가보조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지역개발세 등 신규 지방재원을 발굴하고, 사용자료·수수료의 현실화 등 자주재원의 확충노력을 강화한다.

**㉸ 지방공기업의 경영쇄신**

- 지방공기업의 자율경영체제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책임운영을 위한 경영
-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상수도사업의 지방공사화·공공재의 원가절감 등 다각적인 경영 합리화방안을 추진한다.

**㉸ 지역경제의 활성화**

- 지식정보산업, 문화산업, 생명산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지역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을 집중

투입하고, 중소기업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대한다. 또한 재래시장의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 ㉞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개발을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특히 낙후 지역의 정주권 개선을 위해, 도시달동네·농어촌주택·오지와 낙후도서지역의 개발을 대폭 확대하고, 접경지역 및 소도읍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정주생활환경사업권을 추진한다.

### ㉞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 지역의 치안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찰서비스가 지역주민 중심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주민의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는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한다.

### ㉞ 찾아가는 정부 구현

-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통해 행정의 민주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여 21세기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한다. 조직의 능률화와 공무원의 전문화, 규제개혁, 분권화를 통해 정부기능을 효율화하고, 동시에 정책 기획과 조정 및 통합기능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강한 정부를 구현한다.

### ㉞ 지식·지성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정부역할 정립

- 지식·지성기반사회로의 이행을 선도함으로써, 기업과 민간의 경쟁력향상을 보다 능동적으로 이끄는 지식국가 경영자로서의 정부역할을 정립한다.

### ㉞ ‘행정정보 공개’의 확대와 ‘행정서비스 리콜제’의 도입

- 정부의 행정 및 정책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비스 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향한다.

### ㉞ 전자정부의 고도화

- ◎ 인터넷·이동통신 등 각종 정보단말기로, 민원처리·행정정보검색·피드백이 보장되는 소비자중심의 다양화된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의 구조와 업무를 혁신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국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식정보시대에 걸맞은 전자정부를 구현한다.

### ㉞ 공무원 보수를 민간중소기업 수준으로 현실화

- ◎ 공무원 보수를 민간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긍지를 높인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성실히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 ㉞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국가채무관리로 건전재정의 기조 유지

- ◎ 재정사업을 재정개혁 차원에서 영점기준 하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의 억제와 엄격한 예산집행관리로 재정운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국가채무를 최대한 축소함으로써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 ㉞ 통합재정운영방식과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정착

- ◎ 재정운영을 국가경제운영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재정운영방식을 도입하고, 재정을 중장기 국가경영 목표에 부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제도를 정착시킨다.

### ㉞ 재정의 경기조절기능과 투명성 제고

- ◎ 기금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예산과 기금, 기금 상호간의 효율적 운용 및 철저한 재정집행점검을 통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한다. 부담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감으로써 기업활동 및 국민생활에 대한 과다한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 ㉞ 공평과세의 구현과 과세기반의 확충

- 각종 과세대상 간 세부담을 시정하고, 포괄적 소득세제를 확립하여 세정의 과학화를 통해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누진과세구조를 확충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며, 소득의 재분배에도 기여하도록 한다. 각종 과세자료의 철저한 확보 등으로 각종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의 축소조정과 새로운 세원의 발굴로 과세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가운영에 필요한 세수입을 확보한다.

## ㉞ 알기 쉽고 편리한 조세제도 마련

- 불명확한 세법규정과 세무용어 등을 알기 쉽게 개정하며, 성실한 자진납세가 이루어지도록 납세절차를 단순화하고, 국고 위주의 세법규정을 납세자 편의 위주로 개정하며,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등 알기 쉽고 이행하기 쉬운 민주세제를 마련한다.

## ㉞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경감

- 근로소득세는 원천 징수되어 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세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경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의욕과 기업의욕을 고취한다.

## ㉞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세제개혁

- 세계화경제시대의 조세는 국가경쟁력강화의 한 요인으로써, 세금을 낮추어 소비를 진작하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세제개혁을 추진한다.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급확대와 함께 부동산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헌법정신 내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보유세 강화가 임차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전가되거나 영세임대업자의 생활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강화한다.

## ㉞ 변칙상속 및 증여로 탈세하는 부당한 부의 대물림을 근절

- 법망을 회피하는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등으로 탈세하여 이루어지는 부의 부당한 대물림을 철저히 방지하는 세법상의 장치를 마련한다.

**정책 3**

따뜻한 시장경제인 공생경제로 새경제질서 구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심의 신산업정책의 실현

**㉞ 자유시장을 넘어 혼합경제인 공생경제질서의 구축**

○ 사회주의계획경제의 몰락과 함께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자본주의신자유시장의 질서를 파탄내어 시장경제는 종언을 고하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조화시켜야한다는 혼합경제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 개혁국민신당은 자유시장을 넘어 따뜻한 시장경제를 뜻하는 혼합경제·공생경제를 새로운 경제의 대안으로 정부와 시장의 조화론인 생산과 유통의 50% 공영화제도를 도입해, 빈익빈 부익부로 인해 양산된 소득의 양극화를 치유하고, IMF와 경제민주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영화한 기업을 공영화로 복귀시킬 것이며, 그 비율을 50% 수준까지 높이고, 96%로 사유화된 유통을 ‘마트공사’를 창설해 ‘50% 공영제’로 재편, 국민의 소비주권을 확립한다.

**㉞ 지식·지성기반경제의 구축**

○ 지식·정보·지성기반산업을 미래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인 인재의 양성, 연구개발투자 확대, 지식거래시장 활성화, 표준·디자인 등, 지식기반산업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식과 지성기반경제는 ‘지식과 정보’,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가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고, 이의 가공·전달·활용이 곧 국가경쟁력인 바, 제조업수준으로의 지식서비스산업지원, 정부규제개혁, 제도개혁, 상생정책 확립, 유연한 노동시장, 투명한 기업환경, 정책금융으로의 전환, 공존·공영화 등, 공생경제의 기초적 여건을 완비한다.

**㉞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과 역할분담형 산업발전전략 추진**

○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극미세기술),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 ST(우주·항공기술) 등을 성장주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자동차·철강·조선·섬유·화학·전자 등 기존산업에 정보화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기존산업과 첨단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대기업은 집단기업법의 제정으로 계열사 간의 협력을 도모하게 하되 해외중심으로 키우고, 중소·벤처기업은 기술력제고를 적극 지원해 내수중심으로 키워 역할을 분담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공존하는 기업문화를 확립한다.

## ㉟ FTA·TPP를 대비한 수출증대 블루오션전략으로 마케팅세계화를 구축

- FTA·TPP는 유통의 세계화의 상징이다. 이에 따라 유통의 50%공영화전략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 마트공사를 창설하여, 국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초국적 글로벌 마트를 전 세계에 구축함과 동시에, 환율·물가 등 수출경쟁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부가가치의 첨단부품·소재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며, 수입유발적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통상·무역 전문인력을 확대양산하며, 무역정보의 유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일류상품의 지속적 발굴·확산, 국제수준의 전시산업 및 수출유망 지식서비스산업육성 등, 다양한 무역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수출의 획기적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킨다.

## ㉟ 공공부문·기업·노사관계 대혁신

- 공공부문은 공생경제의 핵심축이며 자유시장의 보루이다. 사유화와 민영화의 높은 비중이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임을 인식하고, 공공부문의 경영혁신과 함께 공기업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 기업은 건전한 재무구조와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 노사관계는 기업의 핵이다. 시대정신에 맞는 노사 간의 상호상생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확충한다.

## ㉟ 기업과 가계의 금융비용 최소화

- 정책금융의 복귀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정착시키고, 가계의 금융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

## ㉟ 마트공사의 창설로 물가를 안정시켜 내실 있는 경제성장기반 정착

- 신축적인 통화정책과 마트의 50%공영화로 유통구조를 대혁신, 물가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내실 있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정착시킨다.

## ㉟ 환율의 안정적 유지와 외환시장의 안정성 강화

- 환율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국제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대외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고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자본거래가 대부분 자유화

됨에 따른 단기성국제투자기금의 급격한 유·출입 가능성에 면밀히 대응하며, 국제금융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 ㉞ 금융의 50%공영화로 정책금융을 구축

- 금융은 실물자원에 대한 보조와 지원기능이다. 지나친 금융의 자유화로 신자유주의시장 경제를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 개혁국민신당은 금융의 50%공영화로 대전환, 정책금융을 확립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책임금융을 확립한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의 회계·공시제도를 확립하고, 전자화폐·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체계를 확립하며, 국제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금융관련 전문정책금융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정책금융인프라를 구축한다. 금융시장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강화하고, 인프라투자를 위한 글로벌정책금융을 전 세계와 연대해 새롭게 조성한다.

### ㉞ 약속어음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결제수단 조성

- 약속어음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약속어음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전자자금결제제도를 구축해 어음의 기능을 대체한다.

### ㉞ 신용평가기법의 공정화로 신용대출관행의 정립

- 국내외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신용평가등급 활용도제고로 신용평가제도를 구축하고, 유통시장에서의 신용평가등급 활용도제고로 신용평가제도를 활성화하며, 신용평가기법을 공정화함으로써 신용 위주의 대출관행을 정립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한다.

### ㉞ 증권 및 채권시장의 적정화

- 증권 및 채권시장의 지나친 활성화는 신용부실을 키울 수 있기에, 운용의 효율성제고와 신뢰성확보를 위해 주식 및 채권시장의 지나친 활성화를 지양하고 적정화를 확립한다.

### ㉞ 금융감독체제의 공정성 확립

- 투명한 원칙에 의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금융감독체제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 ㉞ 집단기업법 제정으로 대기업구조개선, 사회적책임과 세계일류기업육성

- ◎ 유럽식 집단기업법을 제정해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과 함께 해외중심기업으로 키워,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재무구조의 개선, 계열사 간 상호협조,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를 확립한다.

## ㉞ 동아시아 경제협력강화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

- ◎ 무한경쟁의 세계무역체제 속에서, 우리의 교섭력을 높이고, 중국·일본 등의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확대를 통해 동아시아경제협력을 공고히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세계 우수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을 축으로 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에 노력한다.

## ㉞ 자유무역협정(FTA)의 세계화

- ◎ FTA·TPP를 통해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주요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수출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지속적인 개방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고 구조조정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정치·경제적연대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21세기의 선진경제국가 진입의 기틀을 마련한다.

## ㉞ 외국기업의 투자환경개선

- ◎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외국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㉞ 공격형 신통상국가 지향

- ◎ FTA·TPP시대를 맞이해 마트공사를 창설, 유통의 50%공영화로 우리나라를 국제비즈니스센터로 발전시켜 물유유통, 인프라투자를 위한 금융거래 및 국제기술개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한다.

### ㉔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추진

-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 경남 ‘기계’ 등, 기존의 4대 지역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 9개 비수도권 시·도에도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지역신흥산업을 지원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 아울러 테크노파크를 지역기술혁신의 중심체로 발전시키고, 지역산업진흥사업과 연계 운영하여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한다.

### ㉔ 정부규제개혁으로 기업활동 촉진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규제개혁의 기본 이론과 목표를 재정립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역 없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촉진한다.

### ㉔ 소비자정책의 강화로 소비생활의 소비자 소비주권 확립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관련업무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며,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 ㉔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적 국가에너지체계 구축

- 국내 및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을 활성화하여 자주공급능력을 제고하고, 산유국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석유 비축을 주요 소비국 수준으로 확충하여 비상시 대비능력을 강화한다. 에너지전문기업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산업 등을 육성하고, 산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확대하여 에너지절약을 유도하며, 에너지가격체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구조를 개선한다.

### ㉔ 원자력 안전성 강화와 민주적 핵폐기물 관리

- 원자력위원회 등 원자력 관련 국가조직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며, 원자력안전관리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원자력체제를 구축한다.
- 핵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에 따르는 가공할 위험에 대한 정책적 반성을 기초로 기존시설의 효율성제고와 보다 안전한 에너지체제의 창출을 위하여 노력한다. 핵폐기물관리시설 문제에서 정책적 합리성과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수렴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 ㉞ 민족의학의 부활과 의료주권의 독립체제 구축

- 병들어 고통 받는 환자에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슨 법이 필요하겠는가. 살인강도를 제외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치료해야한다.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로 대접받고, 부작용 없이 치료되는 천연물질이 진짜 약으로 인정받는 상식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70년 역사에 불과해 검증되지 않은 서양의학이 5000년 역사로 검증된 민족医学을 철창에 가둔 의료주권의 독립체제를 구축한다.
- 감기, 독감, 메르스, 에볼라 모든 바이러스를 면역력이 약해야 감염된다. 국민들이 면역력이 약화되는 인스턴트식품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식생활을 개선하면 면역력이 높아져 감염됐던 메르스도 금방 사라진다. 탈모, 비만, 아토피, 무좀 등 눈에 보이는 병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에서 대책을 내고 치료하게 하고 있다.
- 만약 이대로 두면 앞으로 4년 뒤 2020년 의료재정(국민의료비)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42조 6,000억여 원에 이르게 된다. 국민부담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매년 불임률이 4.2%가 증가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우리 개혁국민신당은 메르스 독감 걱정 없는 무병장수시대 건설과 모든 국민이 질병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㉞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식품정책 개혁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장내유익균이 죽고 몸 속에 쌓여 비만, 아토피, 불임 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방부제, 착색제, 표백제등 600여 종 식품첨가물이 많이 사용된 햄, 소세지 등 육류가공식품을 1급 발암물질로 발표했다. 1급 발암물질을 국민 한 사람이 연간 24.69kg을 먹도록 사용을 허가한 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식품사업자를 위한 정책이자 환자를 만들어 병원에 바치는 정책이다.
- 국회의원들이 만든 식품위생법 제 18조 1항 ‘질병의 예방이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규제로 오인하는 표현까지 과대광고로 정부가 고발하고 살인범도 죄인만 처벌하는데 노벨상을 수상해야 할 항생제보다 위대한 슈퍼유산균을 발명한 발명가는 전과 4범, 법인 전과 3범, 광고기획직원 전과 3범 영업정지 1~3

개월 과태료 한 건에 6,0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3중 4중 처벌로 발명기업을 범죄집단으로 만들어 망하게 하는 나라를 후손에 넘겨줄 수 없다. 우리 당은 국민의 생명을 짓밟는 식품 정책의 개혁을 추진한다.

### ㉘ 의료독재 사기진료 과잉진료방지 의료시스템 구축

- 환자가 입장을 바꿔 만약 자신이 의사 또는 병원장이라면 면역력을 빠르게 높이는 천연 물질(식물 동물)의 소화효율을 높이는 유산균이나 물질을 권장하겠는지 자문자답 해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다. 법적으로 허용된 독극물 항생제를 처방해 작은 병이 큰병이 되도록 과잉진료하여 단골환자를 만들지 않을 의사가 없다. 감기가 치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의사는 없지만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사용해 비염, 폐렴, 기관지염을 만들어 단골환자를 만들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이 있다. 우리 당은 의료독재와 사기진료·과잉진료방지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 ㉘ 인류를 멸망시킬 항생의학의 안전성검증 제도화

-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항생제는 물론 대부분 세균이 죽는 독소다. 이 약들은 장에 유익균까지 유해균으로 보거나 고려하지 않고 개발되었으며 면역력을 떨어트리고 몸속에 쌓이기 때문에 병원가면 작은 병이 큰 병 되고 걸어서 입원해 시체로 나오는 것이다. 2005년부터 장내유익균이 생명의 수호천사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으로 하루속히 안전성을 검증 하도록 제도화한다.

### ㉘ 발명가 성공시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체제 구축

- 한국의 경제정책은 뿌리부터 자른다. 경제는 발명이 싹인데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자 승소 비율이 2% 내외에 불과해 사실상 한국의 특허법은 모방기술 보호법에 불과하다. 한국의 특허출원건수는 전 세계 3위로서 인구에 비례하면 세계 최고의 두뇌이므로 미국과 같이 특허제도를 개혁하면 빌게이츠 같은 발명가가 미국보다 많아 발명가성공시대 실현으로 발명가가 연예인과 같이 인기 있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청소년들이 발명가에게 싸인 받는 세상이 되면 학교도 창의력교육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 사교육 없는 교육혁명이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이다.
- 2015년 10월에 일본에 방선균대사물질을 개발한 사람과 중국에 개똥쑥을 약으로 개발한

발명가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시간에 인류가 떨고 있는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항생제보다 백배 좋은 슈퍼유산균을 개발한 우리 당의 박세준 공동대표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 범죄자로 섰다. 또한 수시로 배달되는 경찰, 검찰, 법원이 보내는 소환장을 받는 집사람은 소환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아 심장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한국은 발명가를 죽이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당은 발명가들이 제대로 치우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한다.

### ㉞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구축

- ◎ 국민건강 수명연장을 위하여,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주기별 보건서비스 제공과 건강욕구에 부응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의 다양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생국민건강관리체제를 구축한다.

### ㉞ 주요질병과 중점보건문제에 대한 국가관리체제의 확립

- ◎ 질병의 빈도, 중증도, 비용, 예방효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등 주요 질병을 관리하고, 전 국민 암검진체제를 구축하며, 모자보건, 정신보건, 구강보건 등 주요보건문제의 국가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질병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㉞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를 통한 국민보건의 향상

-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정착과 의료수가의 적정화와 수가구조의 선진적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과 급여구조를 내실화하고 보장성을 확대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달성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지속적 향상을 추진한다.

### ㉞ 의약품 사용과 유통의 선진화

- ◎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며, 왜곡된 의약품거래질서와 낙후된 의약품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유통질서로 바꿈으로써, 의약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료비절감을 추진한다.

## ㉞ 보건의료산업 및 의료서비스의 육성 및 지원

- ◎ 신약개발과 첨단의료기기의 기술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외국병원 개방에 따른 국내병원의 경쟁력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보건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 정책 5

‘생산적·보편적복지’를 넘어 ‘창조적·국가복지’ 구현  
최약자 보호의 원칙 확립, 장애인을 위한 창조적 복지의 실현

### ㉸ ‘생산적·보편적복지’를 넘어 ‘창조적·국가복지’ 구현

-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모든 국민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생계·의료·교육·주거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여시켜 빈곤을 예방하고 자립을 촉구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제고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찾아가는 창조적·국가복지를 실현한다.

### ㉸ 사회보험의 확대와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강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내실화하고 급여수준을 합리화하며, 자산 및 소득과약의 충실화를 통해 보다 형평성 있는 제도로 개선, 국제수준의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 ㉸ 최약자 보호의 원칙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보호

- 최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창조적복지·국가복지의 이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탈빈곤정책으로 기능하도록 지원 및 기부제도를 창조적으로 개편한다.

### ㉸ 고령사회와 저출산대책 수립

- 모든 국가정책수립과정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저출산대비책이 반영되도록 하며, 연구 및 정책개발에 지원을 확대한다.

### ㉸ 도·농간, 지역·계층 간 소득격차 완화

- 도·농 간, 지역·계층 간의 경제력 차이를 축소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더불어 사는 생활경제공동체를 구현한다.

### ㉞ 주택의 50%공영화 수립

- 주택의 50%공영화를 통해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거생활의 질 개선 및 주택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최저주거복지수준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하는 세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수준을 제고한다.

### ㉞ 독립세대주와 다문화가정에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

- 자립능력이 없는 미혼남녀 독립세대와 한(편)부모세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탈북주민을 위한 유연한 정책을 펼치고,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세제혜택과 주택분양, 그리고 은행권 대출 등에서 공평한 정책적 수혜를 누리도록 한다.

### ㉞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보장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상금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급대상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완전한 생활을 보장한다.

### ㉞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 강화

-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생계보장과 이동, 간병보호 비용 등을 포괄 지원하는 종합적 소득보장체제를 구축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 대해서는 종합적인 자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한다.

### ㉞ 장애인 편의적인 생활환경의 조성

- 시설과 도로 등에 출입구 장애턱 제거 및 안내표시 완비로 보행환경을 개선하며, 건축물 및 설비 내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이 살기좋은 공간을 조성한다.

### ㉞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 직업재활시설을 확대하고 민간자격 수화통역사의 공인화 등 재활전문인력을 종합적으로 양성·관리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재활서비스를 강화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의 범위를 넓혀 장애인고용기반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한다.

## ㉞ 장애발생의 예방

- ◎ 모자보건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영·유아의 예방접종 및 정기검진을 제도화하며, 학교교육보건 및 교통안전교육강화, 산업재해발생예방 등 후천적장애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한다. 일상적·사회적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장애범주를 확대해간다.

**정책 6****인성강화교육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입국 사교육 없는 참교육 실현****㉸ 인성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사회·학교교육 강화**

- 학교교육이 사회와 시스템화 되어, 사고력과 탐구력향상을 위한 ‘창조적 교육’이 되도록 하고, ‘지·정·의’와 ‘지·덕·체’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전인교육을 추구한다. 학교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주는 적성교육이 되도록 하고, 점수와 서열 위주의 교육방식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도록 교육현장의 변화를 추구하며, 이와 함께 교육평가체계를 확립하여 학교교육이 질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을 OECD 상위국 수준으로 향상**

- 초등학교 2부제 수업을 완전히 해소하고, 초·중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 학습환경을 크게 개선하며,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육환경을 OECD, 상위국수준으로 향상시킨다.

**㉸ 교육재정의 GDP 7% 확보**

- 교육환경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교육재정을 GDP대비 7% 수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관련세제를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확보된 교육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한다.

**㉸ 취학 전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확대해나간다. 농어촌 자녀에 대한 유치원 학비지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취학 전 만5세 아동에 대한 1년 간 무상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 무상교육 1년은 기간학제 속에 포함시켜 초등교육과 연계시킨다.

**㉸ 교육개혁의 일관성·신뢰성 유지**

- 교육갈등조정 및 해소와 중·장기교육인적자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체계의 지속

혁신, 주요정책의 개발, 정책추진상황의 공정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 위원회는 학부모·교원·전문가·시민단체관련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되며, 교육에 관한 상호신뢰 및 일관성 있는 교육혁신방향을 정립해 나간다.

### ㉞ ‘중증장애아의 특별지원’과 ‘고교생 학비지원’, ‘대학생 학자금 저리융자’

- ◎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돈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아의 교육에 대한 맞춤형 특별지원과 고교생 30만 명에게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대학생 100만 명에게 학자금 저리융자를 시행한다.

### ㉞ 평생교육제도를 선진국형 지역대학으로 확대개편

- ◎ 고령화, 조기퇴직, 평생직장개념의 변화, 지식주기단축 등, 급속한 사회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제도를 대폭 보완·확대 실시한다. 학령기뿐만 아니라, 성인·장년까지를 포함한 국민적 재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 현행 평생교육제도를 선진국의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수준으로 개편 운영하며, 평생교육정책 확대추진을 위해 점진적으로 교육부 총예산의 1%를 배정·지원한다.

### ㉞ 중등교육의 정상화 및 사교육비의 대폭 경감, 사교육 없는 참교육 실현

- ◎ 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과외가 필요 없는 입시제도의 정착을 통해, 사교육에 맡겨진 다양한 과외학습이 공교육과정에서 흡수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대폭 경감한다. 아울러 대학들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신입생 선발방침을 규정하도록 제도화한다.
- ◎ 개혁신당 공동대표 박세준은 초등학교 학력인데 기계공학박사, 환경공학박사, 생명공학박사, 의학박사, 한의학박사, 미생물박사가 생각조차 못한 발명으로 다수 성공했다. 만약 대학교육을 받았다면 고정관념이 족쇄가 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10이라면 사업이나 창조에 응용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1/10에 불과하지만, 체험으로 깨달은 격물치지 지혜(智慧)가 10인 경우 10×10 또는 ×100 창조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세준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211개의 발명에 성공했고 지혜를 공유하고자 책 지도책 포함 48권을 집필했다. 발명가가 빌게이츠와 같이 성공하고 연예인과 같이 인기 있는 사회 풍토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이 전혀 불필요한 변별력과 창의력을 가르치는 교육이

보편화될 것으로 확신하므로 사교육 없는 교육의 제도적 기초를 구축한다. 특히 건강 교육은 영어나 수학보다 소중함으로 스스로 질병을 예방하고 스스로 치료하는 면역력 향상방교육의 제도도입에 앞장선다.

### ㉸ 교원의 처우개선과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 구현

- ◎ 교원처우개선, 교원의 수업업무경감, 교원편의시설확충 등, 교직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교사들의 위상과 사기를 드높이고,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수석교사제 도입 등, 우수하고 능력 있는 교사들을 적극 육성하며,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에 충만하여 활기차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한다.

### ㉸ 체제복지에 준하는 학교급식의 확대와 학생건강의 증진

- ◎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공급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초중고 천체학교에 대하여 국가복지이념에 준하는 100% 급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급식체제를 개선하여 양질의 급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 지속적인 건강 및 체력검진을 통하여 학생건강을 증진한다.

### ㉸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와 지성중심대학 육성

- ◎ 대학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쟁력과 지성을 갖춘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성적 가치의 교육자료'를 창출할 수 있게 대학의 연구개발비를 대폭 확충한다. '한국형 대학원중심대학 모형' 및 발전지표를 마련하고, 연구에 중점을 두는 대학원중심대학을 육성하며,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우수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포함한 산학협동교육지침을 강화한다.

### ㉸ 지방교육자치 확대 및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

- ◎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교운영에서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서로 협조적동반자관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 ㉟ 사학의 자율성 및 민주성 제고

- ◎ 사학의 학사 및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되, 그 운영상황을 교수, 학생, 학부모 등에게 적극 공개하여, 사학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함과 아울러, 대학 평가에 따른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학의 공익성을 구현하도록 한다.

**정책 7**

여권신장과 사회참여확대와 양성평등사회의 구현  
 원대한 포부와 꿈을 실현하는 젊은청년 육성  
 노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창조적 일터와 복지 구축

**㉸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 여성 50% 할당**

-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기구의 권한과 기능강화 등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정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정부 각 위원회 위원 50%, 정무직공무원 50%를 여성에게 할당한다.

**㉸ 여성의 취업기회보장과 사회적지원 확대**

- 여성의 취업기회평등을 보장하며, 채용 승진 훈련 퇴직에 있어서 차별이 없도록 하고, 여성고용할당제를 한시적·순차적·분야별로 도입한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복지제도를 마련한다.

**㉸ 여성을 위한 창조적복지 확립**

- 저소득층 여성 및 실직여성, 여성모자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제적 자립과 생활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과 취업을 지원한다. 실직상태에 있는 고학력 여성 인력을 사회의 생산성 증대와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한다.

**㉸ 양성평등교육의 생활화**

-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양성평등교육을 확대한다. 교과과정 등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의 양성평등을 지향하도록 지원한다.

**㉸ 여성의 능력개발지원**

- 지식·지성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정보, 과학, 기술, 문화산업에서 여성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양성을 촉진하며, 정보화사회에서의 적응을 위한 일반여성과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한다.

## ㉞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 및 종합피해서비스 강화

-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강하고, 피해상담소와 여성보호 시설을 확충 지원하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 상품화를 예방하기 위한 의식교육과, 의료 및 법적장치를 강화한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성폭력과 외설물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장치를 발전시킨다.

## ㉞ 여성건강증진과 모성의 보호

- ◎ 여성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증진하며, 생애주기에 따라 여성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저소득층과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한다.

## ㉞ 여아에 대한 보호

- ◎ 생명공학과 의학기술이 여아의 출생을 막는 것을 방지하며, 남녀출생비율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하여, 남아선호사상을 전환하는 의식교육을 지원한다. 여아가 가정과 학교에서 성차별이나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고 보호한다.

## ㉞ 여성의 국제교류협력의 강화

- ◎ 여성의 국제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여성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여성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

## ㉞ 청년실업 해소와 사회참여 확대

- ◎ 심각한 청년실업의 근본방안을 모색하여, 일자리늘리기와 맞춤형교육 및 취업알선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적 정책의 창출 및 청년의 사회적, 정치적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장·청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사회를 지향한다.

## ㉞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 강화

- ◎ 시·군·구 단위로 청소년직업훈련원을 증설하여, 청소년에 대한 직업교육과 취업알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한다. 이공계 중심의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투자확대와 취업지원을

위하여 직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취업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㉞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장려

-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등의 전통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여, 주체성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민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에게 전통적 문화예술을 계승하는 동시에, 청소년은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는 주체이므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확대한다.

### ㉞ 청소년의 국제교류와 남북교류의 활성화

- 청소년의 국제교류사업을 확대하고, 학술, 문화, 예술, 체육분야 등에서 남북 청년 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한다.

### ㉞ 실효성 있고 전문성 있는 청소년 선도

- 청소년문제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기법의 연구개발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비행청소년선도와 재활을 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원을 확대하여, 청소년선도대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 ㉞ 청소년을 유해환경, 폭력, 약물로부터 보호

- 학교주변의 청소년안전지대에 대한 유해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청소년단체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 ㉞ 모든 노인의 안정된 삶을 위한 소득보장

- 노인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취약노인은 시설 보호, 생계지원 등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로연금대상과 지급수준을 확대하여 안정된 삶을 위한 소득을 보장한다.

## ㉞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의 보장

- ◎ 저소득노인의 건강진단비 지원을 내실화하며, 치매질환 예방 및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요양시설 및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등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대책을 추진한다.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과 가족의 보호를 위해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서민과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 및 실버노인시설 확충 등, 활기찬 노년생활 기반조성에 노력한다.

## ㉞ 노인의 취업지원

- ◎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고령자 적합 직종을 확대하며,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등을 통한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한다.

## ㉞ 노인의 여가활동촉진과 자원봉사활성화

- ◎ 노인복지회관의 확충과 경로당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여가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선도 및 복지시설 내 간병 등 노인의 자원봉사를 활성화한다.

## ㉞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 ◎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효행자 및 전통모범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며, 현대적 효의 실천지침을 개발·보급하는 등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에 힘쓴다.

**정책 8**

**농·축민 성공시대  
국제수준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

**㉸ 농·축민 성공시대**

- 농민성공시대, 화학비료와 농약 없이 농사할 수 있도록 땅을 살리는 것이다. 사람이 슈퍼유산균으로 발효한 식품을 먹으면 면역력이 향상돼서 걸렸던 병도 치유되듯이 식물도 어떤 종균으로 퇴비를 발효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다. 의심이 간다면 슈퍼유산균으로 발효한 퇴비 또는 슈퍼유산균을 사용한 축산분뇨를 매년 탄저병과 역병, 뿌리썩음병 등 식물병으로 망한 토양에 사용해 보라. 농약 없이 1.5배 이상 수확이 보장된다. 정부가 돼지고기보다 돼지똥을 더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면 농민성공시대가 된다.
- 축산농민 성공시대, 너무나 간단하다.
- 슈퍼유산균발효사료를 사용하는 양돈농장은 소화효율이 높아 배설량이 1/3 감소하고 냄새가 없어 돼지털이 번쩍번쩍 빛을 발하고 구제역보다 더 폐사가 심해 한 달에 50%가 폐사되는 PRRS, PED도 치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약취 없는 똥은 농작물에 주면 식물의 잎도 빛이 나고 탄저병, 역병 등 병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반면 약취가 나는 똥을 농작물에 주면 당장 고사한다. 사람도 모유를 먹을 때는 개도 먹지만 약취가 나면 식물이 죽는다. 돼지똥을 더 소중하게 사용할 줄 알면 축산농민성공시대가 된다.

**㉸ 농어업 관련 산업의 지원과 농어촌 생산물 유통체계 획기적 대전환**

-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발전 대책을 수립 지원하고 공영마트를 창설해 농어촌 지역의 가공공장과 종자산업의 육성을 대폭 지원한다. 동시에 우수농가를 지원하고 후계자 육성제도를 정착시켜 귀농 귀촌을 적극 권유하고 적극 지원해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현저하게 줄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건설한다.

**㉸ 마트공사의 창설로 농수산물의 국내소비 해외수출을 보장**

- 수출용 농수산물 브랜드 도입 등 신규 유망수출품목을 육성 발굴하고 글로벌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용해 해외시장진출을 지원하여 농어업을 고부가가치수출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우리 농수산업의 활로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동시에 공영마트를 통한 수매제 실시와 직거래 중심의 국내시장의 유통체계를 구축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보장한다.

## ㉞ 농어촌 소득의 획기적 증대 확립

- 농어촌에 지원되는 농어업 정책자금과 정책금융으로 인한 금리인하, 논농업직접직불제의 확충, 발농사 양식어업 직접직불제의 도입 등을 통해 농어촌의 소득 보전 및 부채경감을 촉진한다. 또한 자율적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마트공사를 통해 보전하며, 농작물 재해보험을 확대하고 다양한 농어업 외 소득원을 창조적으로 개발 확대한다.

## ㉞ 환경친화적 농수산업과 FTA TPP 대비 대체작물을 개발

- 친환경 농어업 경작 농어가에 대한 지원확대로 농수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의 대체작물(전 국토의 70% 약초화) 개발로 FTA TPP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 해외수출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한다.

## ㉞ 식량주권 회복을 위한 곡물생산의 강화

- 현재 우리의 곡물 총생산은 22.6%에 거치고 있어서 식량주권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곡물 생산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식량안보 체제 유지를 위한 대비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곡물가의 안정적 가격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관련 해당부서를 신설하고,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우량농지에는 기반정비를 집중하되 한계농지는 타목적 이용을 쉽게 한다. 쌀의 적정면적생산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한다.

## ㉞ 국산농산물 품질관리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강화

- 국산 농산물의 재배 출하 등 산지유통단계에서의 안정성 검사를 강화하고 품질인증제를 확대 실시하며, 수입농산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 검역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 ㉞ 선진적 환경정책 추구

- 사전 예방적 통합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선 계획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환경 친화적 개발을 정착시켜 환경과 경제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한다.

## ㉸ 환경민주주의 지향

- ◎ 환경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반을 둔 환경적책 수립 집행으로 민주적 자율환경관리체제를 구축하며 대화와 협력을 토대로 한 열린 환경 행정을 구현해나간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권의 주체임과 더불어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 ㉸ 맑고 깨끗한 도시 대기환경 조성

- ◎ 천연가스버스 등 저공해 차량 보급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에 주력 하고,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중장기 대기질 개선여건을 확립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상시원격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가 정착되도록 한다.

## ㉸ 효율적 물 관리 정책추진

- ◎ 상수원 유역별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하천수질을 개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질과 수량의 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물 수요와 공급관리정책의 효율적인 물 관리 행정체제를 수립한다. 4대강 수질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노후수도관 교체, 수돗물 수질 기준 강화 등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한다.

**㉞ 창작활동의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폐지하고 문화예술지원기금은 대폭 확충하여,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문화예술정책을 정착시키는 한편, 문화정책의 입안과정에 민간 문화예술인을 적극 참여시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한다.

**㉞ 문화정체성 확립과 세계 속의 한국문화 창출**

- 문화의 완성기인 21세기 지식정보 지성시대를 맞아 국가경제력의 원천인 문화 창조력을 높이고 문화적 다원주의의 세계적 추세에 대처하여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능동적인 문화개방을 통하여 외래문화를 전통문화와 창조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문화정체성 확립과 함께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를 강화하여 세계 속의 한국고유문화를 창출한다.

**㉞ 문화 스포츠 시설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시설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의 운영을 고객 중심으로 개선하며, 각 지역에 전통과 특성이 있는 문화적 명소거리와 열린 문화공간을 조성, 국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다.

**㉞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투자환경 조성**

- 문화산업을 민족문화의 국제화와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선도할 차세대 국가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들 분야의 창업과 제작지원을 대폭 늘린다.

**㉞ 순수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동시 발전 도모**

- 순수예술, 인문학, 전통문화 등 전래되어 온 우리민족의 문화예술과 전통에 기초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이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한다. 문화기반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진흥 예산지원을 강화하여 운영의 실질화를 추구한다.

### ㉞ 문화상품 유통구조의 개선

- ◎ 인터넷 등 새로운 전자매체의 출현과 산업개방에 대비하여 디지털콘텐츠를 비롯한 문화상품의 유통구조를 현대화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유통의 투명화 효율화를 달성,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㉞ 언론의 자율성 보장과 경영의 투명성 강화

- ◎ 국민의 알 권리를 바탕으로 신문 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가기관 통신사를 육성하고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유선방송의 매체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21세기 방송의 주력이 될 디지털 방송의 발전과 방송 통신 융합을 통해 미디어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㉞ 생활스포츠 활성화와 전문체육 지원으로 건강한 시민사회 건설

- ◎ 국민 누구나가 생활주변에서 쉽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나간다.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을 통하여 여가생활의 건전화를 유도하여 창조적 생산적인 건강사회를 구현한다.

### ㉞ 스포츠산업의 육성 지원

- ◎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월드컵 기념사업과 스포츠 산업의 육성을 본격화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화시키는 창조적 외교**

- 창의력과 도전정신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세계평화와 번영을 이끌며, 동시에 국가의 안위와 번영을 확보한다. 인권 환경 민주주의 등 세계사적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창조적 외교를 편다.

**㉸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국제협력 강화**

- 국제연합, 세계무역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지역협력체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테러 마약 등 반인류적 국제범죄에 공동 대처하며 환경 건축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 기여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구현에 공헌한다.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협력, 인도적 지원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하여 협력외교를 강화한다.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주변환경 조성**

- 한반도 문제의 항구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 일, 중, 러, EU 등 국제사회가 협조하는 우회적인 국제환경을 적극 조성한다. 전통적 한미동맹체제, 한미일 공조체제 및 한중, 한러 간 성숙된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관계국회담이 당면한 한반도 안보불안의 해소는 물론 한반도의 실질적 냉전종식과 나아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안정을 위하여 주한미군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북한의 미국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개선과 국제기구에의 가입을 지원하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한다.

**㉸ 세계 일류경제를 지향하는 경제 외교**

- 21세기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제 통상외교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가와의 원만한 통상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며, 자유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지역적 세계적 노력에 참여한다.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 OECD WTO 등 경제 통상기구에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한다.

### ㉞ 재외통포의 권익신장과 민족의 정체성 유지

- 거주국에서의 재외동포의 성공적 정착과 위상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또한 한글과 고유문화를 보급하여 민족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 이를 위해 범세계적인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과의 관계는 물론 재외동포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외동포의 역량발휘를 극대화한다.

### ㉞ 전문 및 민간외교 역량의 강화

- 국가의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국익을 발굴 확보하는 외교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재외 공관의 경제 통상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외교인력의 충원 등을 보강하여 외교조직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의원외교를 활성화하고 민간외교 활동과 우리문화의 세계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국가의 총체적 외교역량을 강화한다.

### ㉞ 국민참여의 강력한 안보태세 확립

-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기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완벽한 국방태세의 구축을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군사정책을 발전시킨다. 통일 후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가 생존과 번영을 이루기 위해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전방위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한다.

### ㉞ 한미 안보협력체제 강화와 지역안보협력체제 구축

- 한미 안보협력체제는 한반도 평화와 전쟁 억제를 위한 국방의 기축이 됨으로 이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간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고 지역의 공동 번영과 안정을 위해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㉞ 정부군 과학군의 육성

- ◎ 21세기 안보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선진 정보화군 건설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전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방인력의 정예화, 무기체계의 과학화, 운영체계의 합리화, 국방 정보화를 통해 기술 정보 집약형의 작지만 강한 선진 정예국방을 달성한다.

## ㉞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상 정립

- ◎ 국제 평화유지활동과 국제 안보협력 및 국제 군비통제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과 군 기밀유지와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 속에 국방정책의 신뢰증진과 자발적 안보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국민의 군대상을 구현한다.

## ㉞ 군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

- ◎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진념할 수 있도록 장병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 능력과 전문성, 군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제도를 정착하고, 선승구전의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 ㉞ 제대군인에 대한 복지 강화

- ◎ 보훈가족과 참전 제대군인에 대한 후생복지를 강화한다.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원활히 연결하는 관리체제를 확립하여 제대군인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에서 잘 훈련된 유용한 인력을 사회발전에 재활용함으로써 현역군인의 사기진작과 군의 우수인력유치에 기여한다.

## ㉞ 병무행정 개선

- ◎ 병무수행자 중심의 병무행정을 실현하고 병역의무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킨다. 유사시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동원체제를 발전시킨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 6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 6대 정책

고용·복지·연금 6대 과제	상세 실천과제
고용 - 1백만 일자리, 고용 창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직업 100개 양성</li> <li>2. 청년일자리: 대학생 창업교육 의무화</li> <li>3.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통합</li> </ol>
복지 - 눈먼 돈 복권기금, 서민 생활비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복권기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li> <li>5. 복권기금,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li> </ol>
연금 - 부자세 신설, 노인 1인당 40만원 지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연금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li> </ol>



## 정책 1

### 고용 - 신직업 100개 양성

구 분	내 용
정책명	· 미래사회 신직업 100개 양성
정책대상	· 모든 실업자 및 구직자
주요내용	· 디지털 혁명을 맞아 변화하는 생활체계 대응 신직업 100개 발굴
	· 미래사회 수요에 부응한 새로운 직업, 직업인 양성
	· 실업자 및 구직자 대상 신직업 교육·고용서비스 확대

#### ⊗ 무엇이 문제일까요?

격변하는 IT세상, 새로운 직업이 절실합니다.

- 인공지능이 현실화된 세상, 2020년까지 710만 개 일자리 소멸됩니다.
- 일반기업 사무직, 금융권, 세무업계 등에서는 이미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 현실적 대응방안 없는 '고용창출'은 진심 없는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 2020년까지 신직업 1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 ⊗ 이렇게 하겠습니다!

- ◎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신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확대하겠습니다.
- ◎ 고용노동부에 신직업 육성사업 전담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 ◎ 한국폴리텍대학이 신직업 양성 커리큘럼을 구축, 각 대학에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 신직업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㉘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신직업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 ◎ 2016~2017년, 전담조직 신설 및 교육체계를 완료하겠습니다.
- ◎ 2018~2019년, 실질적인 신직업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 2020년, 대한민국 신직업 창출 원년이 될 것입니다.

**㉙ 많은 돈이 들지 않겠냐구요?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 ◎ 미래사회에 필요한 신직업 연구가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황입니다.
- ◎ 관련 정부조직의 소폭 개편, 그리고 기존 교육재정을 활용해 얼마든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정책 2

### 고용 - 청년일자리 : 대학생 창업교육 의무화

구 분	내 용
정책명	· 대학생 창업교육 의무화
정책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주요내용	· IT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교육 의무화
	· 창업(스타트업)교육 및 실무경험 학점인정
	· 대학생들의 자발적 · 창의적 스타트업 양성화

#### ⊗ 무엇이 문제일까요?

청년실업, 모든 것이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 1970~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들이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 기업은 더 이상 토익점수 높은 학생들을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 청년들이 변화하는 IT세상의 주인공이 돼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 대학의 창업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 ⊗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대학의 교양과목에 창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신설하겠습니다.
- ⊙ 휴학 후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에게 학점을 인정하겠습니다.
- ⊙ 대학생들이 기업과 고객을 이해하고, 시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 현재 제조업에 치우진 중소기업청의 정책자금을 스타트업에 쏟아 붓겠습니다.

㉸ **청년창업,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 ◎ 2016~2017년, 대학의 학제개편과 관련부처의 전담조직을 정비하겠습니다.
- ◎ 2018년, 대학생 창업교육 우수대학 선정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 ◎ 2019년, 국가적 대학생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만들겠습니다.

㉸ **역시 별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 ◎ 고객을 이해하고 배우는 스타트업 교육은 시장검증 단계이므로 많은 비용이 필요치 않습니다.
- ◎ 대학의 창업교육 및 성과를 평가, 각 대학이 자비로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유도하겠습니다.

### 정책 3

#### 고용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통합

구 분	내 용
정책명	·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노동부 통합
정책대상	·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을 원하는 여성
주요내용	· 직업교육 탈피, 통합적 취업지원
	· 마을기업 등 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실질적 지원

#### ❧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성이 여성가족부에 의해 역차별 당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력단절여성법'에 의한 새일센터는 전문성이 결여된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직업훈련에 치우친 교육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취업자 10명 중 4명은 1년 이내에 쫓겨나고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취업지원이 절실합니다.

####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 새일센터를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통합,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 ❧ 이렇게 하겠습니다!

- ◎ 새일센터 소관부처를 고용노동부로 전환하겠습니다.
-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새일센터가 함께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직업훈련은 물론 취업연계, 사후지원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 고용부가 마을기업 설립, 운영 등 전반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㉘ **‘경력단절여성’이란 해괴한 단어부터 없애겠습니다.**

- ◎ 2016~2017년, ‘경력단절여성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 2018년, 새일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㉙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비예산 정책입니다.**

- ◎ ‘경력단절여성법’에서 고용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 ◎ 기존 예산으로, 더욱 강력한 여성고용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정책 4

### 복지 - 복권기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구 분	내 용
정책명	· 복권기금, 저소득층 생활비 지원
정책대상	· 저소득층
주요내용	· 공공기관 · 정치권 쌈짓돈 비난 받는 복권기금의 투명한 사용과 집행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현금 지원
	· 복권기금의 투명한 집행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 ⊗ 무엇이 문제일까요?

서민 지갑에서 나온 복권기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 2012년 복권기금은 3조6934억 원에 달합니다.
- 현행 복권기금 운용구조는 그림과 같습니다.

당첨금 지급(50%)	발행비(10%)	복권수익금(복권기금사업)(40%)
-------------	----------	--------------------

- 복권수익금의 35%는 정체불명의 법정배분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법정배분사업(35%)	공익사업(65%)
-------------	-----------

- 법정배분사업은 국가재정운용 우선순위와 필요성을 무시한 눈 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 왜 서민의 피 같은 돈이 정부기관의 쌈짓돈으로 쓰여야 합니까?

####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복권기금, 전액 서민생활비로 지급하겠습니다.

## ㉸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 법정배분사업을 전격 폐지하겠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연간 50만씩 지급하겠습니다.
- ◎ 기존 공익사업도 지원계획, 대상, 집행, 평가 등 전반적으로 대수술하겠습니다.

## ㉸ 서민의 돈은 서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 ◎ 서민의 꿈과 애환이 서린 복권기금, 전액 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 정책 5

### 복지 - 복권기금,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구 분	내 용
정책명	· 복권기금,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정책대상	· 일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
주요내용	·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
	· 장애인의 직무교육 향상 및 취업 지원
	· 장애인 가구의 주 수입원 우선 지원

#### ⊗ 무엇이 문제일까요?

유명무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기업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사회복지시설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실질적인 정부주관 직무교육센터 설립이 절실합니다.
- 장애인의 직무능력이 향상되면 기업의 채용의지도 바뀌게 됩니다.

####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 복권기금으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 ⊗ 이렇게 하겠습니다!

- ◎ 복권기금의 공익사업으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 설립·운영을 추가하겠습니다.
- ◎ 장애인에게 적합한 재택근무 중심으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 보건복지부의 관련 감독 아래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확립하겠습니다.

#### ⊗ 3년 이내에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 2018년까지는 관련법을 개정, 반드시 장애인 직무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 ◎ 복권 구입행위가 곧 이웃을 돕는 기부행위가 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㉞ 눈먼 쌈짓돈을 올곧게 사용하는 착한정책입니다.**

- ◎ 단 돈 1원도 별도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착한정책입니다.
- ◎ 복권기금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의 내일을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 정책 6

### 연금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구 분	내 용
정책명	· 기초연금 40만원 지급
정책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주요내용	· 법인세 및 사치품 개별소비세 인상
	· 현행 기초연금 최대 지급금액 20만→40만원 인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원 일괄 지원

#### ㉸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 어긴 박근혜 정부, 어르신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 1등이란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 기초연금 지급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부자만 배를 불리는 사이 어르신들을 폐지를 모아 근근이 연명하고 있습니다.

#### ㉸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만의 해법!

- ◎ 부자세 신설, 기초연금 최대 4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 ㉸ 이렇게 하겠습니다!

- ◎ 영업이익 기준 우량 법인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겠습니다.
- ◎ 명품가방, 고급외제승용차 등 사치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 ◎ 법인세와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 ㉸ 부자들의 저항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 ◎ 부자세 신설은 번번이 부자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 ◎ 고복연은 부자들의 비호를 받거나 결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㉞ 관련세법을 개정,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 일반 국민의 세금이 아니라, 부자들이 더 낸 세금으로 실현하겠습니다.
- ◎ 사회지도층과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는 문화를 개척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화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공화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성매매 합법화
2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
3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4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5	5.18 민주화 재평가
6	종북 좌익인사 북한이주
7	사형제도 이행
8	복수당원제
9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10	사교육 전면금지



**㉸ 목표**

- ◎ 자발적 성매매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며 생계형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특정 구역 내에서는 성구매와 성판매를 모두 합법화해야 한다.
- ◎ 집창촌 여성들은 생계를 위협하는 사회적 처우로 사각 지대에 놓여 있고, 개인의 인격권과 관련된 성관계의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가 형벌권을 가동할 수는 없다.
- ◎ 특정 구역 내 성매매 합법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성적소외자들의 인간성 존엄과 성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도 합법화 되어야한다.
- ◎ 독일과 네덜란드는 성매매가 합법이며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있고, 프랑스 · 이탈리아 · 영국 등 유럽 몇몇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범죄로 간주하지 않고 알선 · 호객 행위 등만 금지하고 있다.

**㉸ 이행방법**

- ◎ 성매매 합법화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 2016. 4월 ~ 2017. 12월

**정책 2****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 목표**

- ⊙ 현재 북한에서 저지르는 핵개발을 지켜볼 수만 없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위하여 깔아놓은 거대한 원자력 기술을 추수할 때이다.
- ⊙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 원자핵공학 권위자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보았을 때 최장 18개월 정도면 핵폭탄, 더 나아가 수소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원자료를 통해 핵연료와 핵 융합에 필요한 핵심 물질인 삼중 수소를 확보할 수 있고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에 따라 완화된 재처리 능력 등을 고려 할 때 핵무기 개발 기술 확보는 어려운 게 아니다.
- ⊙ 이에 자위적 핵무장, 거국적 핵안보 체재 구축, NPT탈퇴 등을 걸고 국민투표를 실시 하도록 한다.

**㉸ 이행방법**

- ⊙ 핵무기 개발 및 핵무장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 2016.4월 ~ 2020. 1월

## 정책 3

###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

#### ⊗ 목표

- ◎ 6.25참전군인과 월남 참전군인의 참전수당을 1,000% 인상하겠다는 법률을 제정하겠다.
- ◎ 피와 생명을 담보로 조국을 지키고 국가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낸 6.25참전군인과 월남 참전군인의 명예와 노후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참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국가의 도리다.
- ◎ 지자체가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통해 6.25전쟁과 월남전쟁에서 숨진 군인의 유족에게는 한 달 5만원의 명예 수당을 주는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유족에게는 매달 50만원의 수당과 생존 참전군인에게는 매달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 특히 6.25참전군인과 월남참전군인에게 고속도로통행료 면제카드를 발급하겠다.

#### ⊗ 이행방법

- ◎ 6.25전쟁, 월남전쟁 참전수당 1,000% 인상에 관한 법률 제정

#### ⊗ 이행기간

- ◎ 2016.05월 ~ 2017.12월

#### ⊗ 재원조달방안

- ◎ 기존 사회복지 예산 중 우선 배정

**정책 4**

## 택시기사 기본급 100% 인상

**㉸ 목표**

- ⊙ 노동법이 적용안되는 유일한 현장이 택시업계이다.
- ⊙ 노동법이 유명무실하게된 이유는 하위법인 택시법을 따로 두어 노예제도와 같은 사납금 착취 행위를 정당화 하였다는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
- ⊙ 택시노동자는 회사원이 아니다. 사무직원들과 경영진 먹여 살리는 일꾼이지만 그들은 택시 노동자들을 한낱소모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 그리고 현재 택시기사들의 기본급은 대체로 100여만 원 정도 인데 이것은 각종수당을 붙인 것이고 거기서 4대 보험과 어용노조 조합비로 20만 원 정도 빼면 실제 기본은 70여만 원 정도가 현실이다.
- ⊙ 따라서 현실적 노동법에 의해 기본급 100%를 인상하도록 택시법을 개정하여 명문화 하여야 한다.

**㉸ 이행방법**

- ⊙ 택시법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 2016.4월 ~ 2019.12월

**㉸ 목표**

-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평가가 상반되어 있어 이념간의 극한 대립으로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을 단절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평가 절실히 필요하다.
- ◎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측의 추천인 5인과 5.18 폭동이라 측의 추천인 5인과 정부의 추천인 5인의 합의로 과학적인 검증을 한다면 사회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대통합의 대승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5.18에 대한 평가가 나오도록 한다.

**㉸ 이행방법**

- ◎ 5.18 재평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이행기간**

- ◎ 2017. 1월 ~ 2018. 12월

**정책 6**

## 종북 좌익인사 북한이주

**㉸ 목표**

- ◎ 해방이후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이념간의 극한 대립이 사회 갈등과 사회 분열 조장으로 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것을 단절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대화합의 대승적 이념이 절실히 필요하다.
- ◎ 이념이 북한을 찬양하고 추종하는 사람을 신청자에 한하여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북한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간의 기본 가치인 생활권과 삶에 관한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해 주고자한다.

**㉸ 이행방법**

- ◎ 종북 좌익인사 북한이주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 2016.4월 ~ 2020. 01월

**㉸ 목표**

- ◎ 김대중 정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한때 사형수였기 때문에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계속 사형집행을 거절하는 상태로 퇴임하여 그 이후 정권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 하지만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엽기적인 강력살인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은 극심한 사회불안에 공포에 떨고 있다.
- ◎ 이에 국가대개조의 차원과 강력한 통치의 상징으로 하루 속히 사형제도를 이행시킴으로써 국민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살인마에게는 경종을 울려 주고자 한다.
- ◎ 억울하게 복역 중인 사형수는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문지마 살인 등의 범인은 이기적인 이유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흉악범이기 때문에 인정이나 인권에 연연하지 말고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

**㉸ 이행방법**

- ◎ 사형제도 이행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 2016.4월 ~ 2018.12월

**정책 8**

## 복수당원제

**㉸ 목표**

- ◎ 복수당원제는 100%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대안 정책으로 유권자가 원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입당할 때 둘 이상 정당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민의 심각한 나뉘 현상을 복하고 지역감정해소와 국민통합의 100%상향식공천의 목적이다.
- ◎ 정당의 경선문제를 국민여론조사로 하는 것은 불법선거가 된다고 본다. 소속된 정당의 경선을 해당 지역구 국민에 여론조사 하는 것은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은 지지했던 후보가 공천이 되어 선거를 치를 경우에 선거제도에 따른 선거행사 때 당선 가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당 경선을 위한 국민여론조사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가(여론조사기관 또는 소속정당) 선거운동을 하는 결과가 발생된다.

**㉸ 이행방법**

- ◎ 복수당원제에 관한 법률제정

**㉸ 이행기간**

- ◎ 2016.4월 ~ 2018.12월

**㉸ 목표**

- ◎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 명시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1년부터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이때는 단체장이 임명제였기 때문에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 그러나 제도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이 더 많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이는 세금의 대부분이 국세이고 지방세 항목은 많지 않으므로 결국 중앙정부에 예산을 의존하고 나아가 행정사무까지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 ◎ 그리고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인선함에 따라 다음 선거를 의식하여 실적 쌓기를 위한 전시성 행정을 하고 얼마 안되는 예산으로 보여 주기식 선심성 집행을 함에 따라 그 부담을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갈 수밖에 없으므로 대통령 임명제를 시행해야한다.

**㉸ 이행방법**

- ◎ 지방자치 단체장 임명제 특별법 제정

**㉸ 이행기간**

- ◎ 2016.4월 ~ 2019.12월

**정책 10**

## 사교육 전면금지

**㉸ 목표**

- ◎ 2014년 3월22일 “선행학습 금지법”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뿌리 깊은 학벌위주의 고질에 따라 대입경쟁에 의한 계층간 교육 양극화 현상은 여전하다.
- ◎ 학원이 선행 교육을 하는 것은 규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이어 영어·수학에 한해 방과 후 허용된 것에 이어 방과 후 전체과목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된 것이다.
- ◎ 이에 대해 교육관계자들 조차 졸속적인 법률 추진으로 인해 교육기관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다각적인 검토와 실효성을 판단해 법을 개정하여 사교육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각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오려 경제와 교육을 살리는 것은 물론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 이행방법**

- ◎ 사교육 전면금지법 제정

**㉸ 이행기간**

- ◎ 2016.4월 ~ 2020.1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그린불교연합당

## 7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그린불교연합당 7대 정책

NO.	7대 정책
1	분열된 국가와 국민을 반드시 대통합 대화합으로 이끌겠습니다.
2	남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3	미국·일본 등의 서방국가의 외교정책과 중국·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정책을 균형있게 펼치겠습니다.
4	복지 문화 관광의 세계중립국을 만들겠습니다.
5	법치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6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신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국민직선, 정당한 분배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7	파산자은행 설립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와 실천방안 제시로 국민대다수를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 정책 1

분열된 국가와 국민을 반드시 대통합 대화합으로 이끌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 1%의 가진 국민과 99%의 빈곤한 국민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일자리 불평등을 줄이며, 지역으로 갈라진 갈등을 없애고, 이념과 주의, 종교편향으로 갈라진 국민의식을 통합하여 찢기고 갈라진 나라와 남과 북을 대통합, 대화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 ㉸ 목표

- ◎ 국가와 국민의 대통합, 대화합

### ㉸ 이행방법

- ◎ 지속적인 노력(입법과 교육)

**정책 2**

남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 현재의 남북통일의 가장 걸림돌인 경제적 차이를 줄이는 획기적인 방안이 있습니다. 남한 경제는 더욱 발전하여 전 국민이 고루 잘 살게 되고, 북한 국민(인민)도 지금 보다 월등히 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남북 국민이 잘 살게 되면 서로 죽이고 빼앗으려는 군사적 대치의 적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할 민족이라 생각하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 그린불교연합당에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남북통일! 모든 국민이 찬성하고 환영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 첫번째 실천방법으로 임진강이나 한탄강의 비무장지대에 통일댐을 건설하여 남북이 함께 이용하는 등 에너지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 하겠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정책으로 내놓겠습니다.

## 정책 3

미국·일본 등의 서방국가의 외교정책과 중국·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의 외교정책을 균형있게 펼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그린그린불교연합당의 정책은 이념과 주의가 아닌 오직 국민의 평안과 행복에 있습니다. 이념이나 주의를 앞세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를 걷어내어 잘사는 나라, 행복한 국민을 만드는 것입니다. 남북통일을 최우선의 국정지표로 삼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미국은 물론이고 남북통일에 영향력이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국가와도 균형 있는 외교를 수립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린불교연합당은 한반도의 통일이 대한민국의 국민은 물론이고 북한국민(인민)도 다 같이 잘사는 것이기에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 목표

- 균형외교

**정책 4**

복지 문화 관광의 세계중립국을 만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 지방과 지역을 세분화하여 공업지대와 문화지대, 복지지대, 관광리조트지대로 나누어 발전시키겠습니다. 공업지대에서 열심히 일하고 문화지대에서 문화를 갖추어 나가고, 복지지대에서 충분한 여유를 즐기며 관광리조트지대(관광특별시)에서 삶의 여유와 재충전을 하여 활력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관광객이 찾아오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표**

- ◎ 복지선진국가 만들기

## 정책 5

법치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법을 어긴 국민은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 목표

- 원칙과 법치가 있는 국가건설

**정책 6**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제 신설,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을 국민직선, 정당한 분배원칙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권력집중을 막기 위하여 부통령제를 신설하고 주요 권력기관장의 동일출신지역 중복임명금지법을 만들어 실천하겠습니다.
- ◎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여 삼권 분립의 정신을 이루어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받으며 헌법을 엄정하게 수호하겠습니다.

**㉸ 목표**

- ◎ 지속가능한 국가건설과 권력분권적 국가로 발전

## 정책 7

파산자은행 설립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제도와 실천방안 제시로 국민대다수를 중산층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 통일담건설을 통한 일자리창출
- ◎ 저신용자(파산자포함)을 위한 [파산자은행]을 설립하여 재기를 꿈꾸는 국민은 누구나 조건없이 지원을 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 국민의 중산층으로 신분상승을 통한, 국민통합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
- ◎ 청년들의 해외창업이나 취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해외 현지지원센터 (창.취업 해외 스테이션)를 대폭 설립하여 안정적 및 조기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 ㉸ 목표

- ◎ 일자리 많은 나라, 재기가 가능한 국가

### ㉸ 재원조달방안 등

- ◎ 민간주도 일자리창출국민재단설립 추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기독교민주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독교민주당 10대 정책

NO.	7대 정책
1	광역국회의원제도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추진
2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3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한민국 핵무장
4	할랄식품공장 설립반대
5	13세 이상 성매매합법화 반대
6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조성
7	카드결제 전자 화폐화로 카드결제수수료폐지
8	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추진
9	의료진료 무료화
10	중소기업지원확대



## 정책 1

광역국회의원제도로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음
- ◎ 지역이권을 대표하는 현 국회의원제도는 지역이기주의 확대원인이 됨
- ◎ 막대한 국민세금이 인원지원에 활용됨
- ◎ 현재 국민대다수가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봄

### 목표

- ◎ 국회의원을 지역대표에서 광역대표로 바꾸고 현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임
- ◎ 지역의견 수렴 및 반영은 현재 존재하는 지역 시,군,구 의원이 하도록 함

### 이행방법

- ◎ 제도개선

### 이행기간

- ◎ 2016~

### 재원조달방안

- ◎ 입법추진
- ◎ 여론조성

## 정책 2

### 동성애입법화반대 및 동성애자 선도법 신설

####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지향차별행위금지” 조항이 있어서 동성애를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이다.
- 동성애 항문성교를 통한 AIDS감염 및 확산

#### ㉸ 목표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오는 “성적지향차별행위금지” 조항의 삭제 및 AIDS 관련 정보공개 및 원인파악

#### ㉸ 이행방법

- 행정자치부에서 입법 발의하여 “성적지향차별행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동성애자 선도 교육 조항신설

#### ㉸ 이행기간

- 2016~

#### ㉸ 자원조달방안

- 국민보건관련 예산우선배정

**㉸ 현황과 문제점**

- ◎ 현행 북한의 핵무장은 이미 현실화된 것이 사실이다.
- ◎ 위키백과에서는 10개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

**㉸ 목표**

- ◎ 핵 무장을 통한 동북아시아 핵 균형을 통한 평화체제구축

**㉸ 이행방법**

- ◎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주변국에 대한민국의 핵무장 현실성을 설득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 짐을 떠안겠다고 설득

**㉸ 이행기간**

- ◎ 2016~

**㉸ 자원조달방안**

- ◎ 예산우선배정(연구위원회구성)

**정책 4****할랄식품공장 설립반대****㉸ 현황과 문제점**

- 할랄식품의 무슬림의 식품을 의미한다.
- 할랄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선 전용도축장과 무슬림이 하게 되어있다
- 이를 위해 무슬림이 대거 들어오게 되고 반드시 필요하다,
- 전 세계적으로 무슬림의 단체행동과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는 사회 문제화되어있다.
- 무슬림의 대거유입 구실이 되는 할랄식품공장설립을 우리는 우려한다.

**㉸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포기

**㉸ 이행방법**

- 지속적인 홍보

**㉸ 이행기간**

- 할랄식품공장설립 취소 때까지

**㉸ 자원조달방안**

- 불필요

## 정책 5

### 13세 이상 성매매 합법화 반대

#### 현황과 문제점

- ◎ 13세 이상 성매매합법화는 19금 성인영화 시청 금지와도 맞지 않는 시도이다.

#### 목표

- ◎ 합법화 취소

#### 이행방법

- ◎ 시민운동 여론형성

#### 이행기간

- ◎ 2016~

#### 재원조달방안

- ◎ 불필요

## 정책 6

### 수도권 영구전세 주택단지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 비싼 주택가격으로 서민 삶의 질 저하 및 국민전체가 은행 대출로 실질적 월세 세입자화가 되어가고 있음.
- ◎ 이는 저출산 및 경제부진의 원인이 됨
- ◎ 부담 없는 의, 식, 주의 해결과 생활안정이 복지요 국익이다.

#### 목표

- ◎ 국가주도 원가주택시공 및 저렴한 영구임대 전세주택 공급하여 주택으로 인한 국민 스트레스 해소 소득의 경제 소비지출확대 기여 및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

#### 이행방법

- ◎ 유희지를 전세단지로 조성 전세수요 공급
- ◎ 유희지 매입 및 평당 500만 원의 국가주도 건축으로 현 전세 보증금 정도인 1억 5천에 전세 공급

#### 이행기간

- ◎ 5년

#### 재원조달방안

- ◎ 복지차원의 금융지원

## 정책 7

### 카드결제 전자 화폐화로 카드결제 수수료폐지

#### 현황과 문제점

- ◎ 현재 카드사용이 많고 카드결제 및 수수료가 없이는 장사가 어려울 정도로 보편화되어 국민 경제에 현찰을 대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 현찰과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입장에서 카드금액의 입금지연 및 수수료 발생 등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수입이 적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 목표

- ◎ 카드를 지금의 카드사보증에 의한 신용화폐에서 국가주도의 전자화폐화 실현으로 카드 수수료의 폐지 및 즉시 입금체제로 전환
- ◎ 전자화폐화를 통한 거래투명화, 세금 투명화 실현

#### 이행방법

- ◎ 국가주도의 전자화폐화 실현

#### 이행기간

- ◎ 2016~

#### 재원조달방안

- ◎ 기존지폐의 발행 및 유지비용을 줄여서 전자화폐구축에 투입

**정책 8****대학생 전액장학금제도 추진****현황과 문제점**

- ⊙ 우수한 인재 육성 및 교육은 국가의 자산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 ⊙ 그러므로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비가 없어 교육을 못 받거나 포기하는 환경은 없어져야 한다.
- ⊙ 대학도 상업화 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한다.
- ⊙ 대학등록금이 1000만 원을 상회하므로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됨
- ⊙ 대한민국의 등록금이 타국보다 비싸므로 우수인재양성에 문제가 됨

**목표**

- ⊙ 초, 중, 고, 대학생이 무료교육 받을 수 있을 때 까지

**이행방법**

- ⊙ 대학의 축적 장학금 투명, 공개화 및 지급확대 유도 법제화 추진
- ⊙ 예산우선배정

**이행기간**

- ⊙ 2016~

**재원조달방안**

- ⊙ 대학의 공익성향상 및 대학의 장학금 지급확대 유도 법제화 추진
- ⊙ 예산우선배정

**㉸ 현황과 문제점**

- ⊙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체제가 잘 되어있으나 빈곤층의 의료혜택 사각지대가 더 많다.

**㉸ 목표**

- ⊙ 전 국민 무료진료

**㉸ 이행방법****현 의료비는**

- ⊙ 보험에서 30조
- ⊙ 특진 5조
- ⊙ 정부지원 5조를 지원하므로 40조는 해결됨
- ⊙ 10조 내외가 더 필요하므로 예산 우선배정으로 가능함

**㉸ 이행기간**

- ⊙ 무료진료 시행
- ⊙ 특진, 응급진료 5년
- ⊙ 의료보험료 안 내기까지 20년

**㉸ 재원조달방안**

- ⊙ 이행방법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가능

**정책 10**

중소기업지원확대

**현황과 문제점**

- ◎ 중소기업 인력난에 의하여 외국인이 취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 ◎ 대기업 중심의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계점에 왔으므로 유럽 및 독일처럼 중소기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때임

**목표**

- ◎ 유럽 및 독일처럼 중소기업의 활성화
- ◎ 전담지원부서 신설

**이행방법**

- ◎ 유럽 및 독일처럼 중소기업의 활성화 분위기 조성 및 전담지원부서 신설

**이행기간**

- ◎ 2016~

**재원조달방안**

- ◎ 희망기업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작업이므로 재원은 기업이 합니다.
- ◎ 기업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지원을 하도록 정책지원을 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노동당**

**10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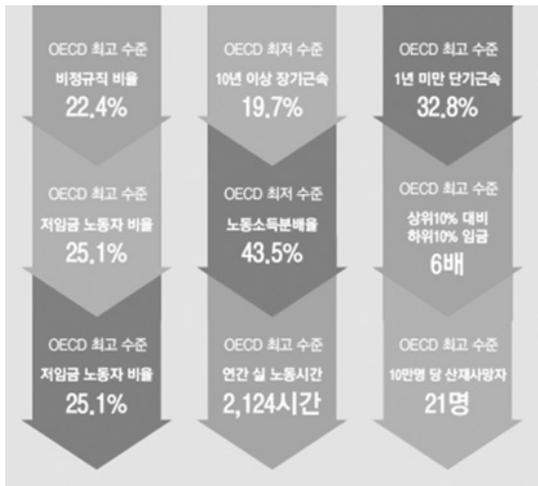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노동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종식과 연대적 노동사회 실현
2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3	기본복지 확충
4	조세재정개혁
5	정치선거제도 개혁
6	탈핵과 생태적 전환
7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 평화
8	사회공공성 강화
9	청년 정책
10	사회 재생산 위기의 해소와 일·가족·생활의 균형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OECD 기준 최악의 노동조건을 가진 사회



㉸ 목표

○ 세계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원하는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지금보다 훨씬 적게 일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는 연대적 노동사회로 전환

㉸ 이행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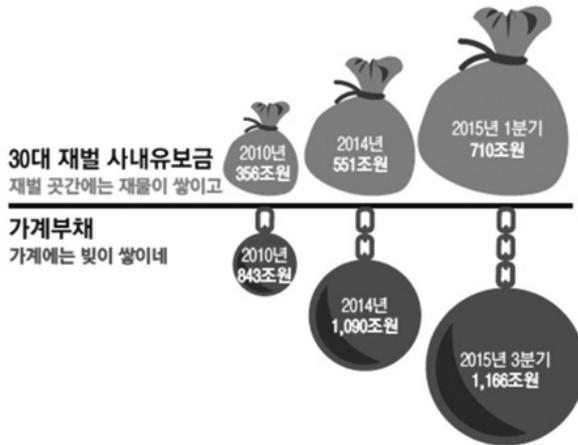
- 노동관계법의 제·개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진행
  - 노동시간 단축 : 주당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5시간까지로 상한
  -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 악법 철폐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으로 의무화
  - 3개월 평균 주당 3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정규직으로 본다. (정규직 고용 의제)
  - 이러한 내용을 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 특별법’을 제정해 사용자에게 정규직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위반 사업자는 형사 제재

- 각종 수당, 상여금 등 변동급여 중심의 임금체계를 기본급 중심으로 전환
- 최저임금을 2017년부터 1만원으로 즉시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국회가 정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가산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휴일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200%로 인상(연장근로 억제 효과)
- 통상임금에 변동급여를 포함하고, 직무성과급제와 포괄임금약정을 금지
- 가산휴가를 포함한 휴가일수의 한도를 1년 최저 25일로 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소멸된 휴가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부나 모인 근로자에게 최소 24주의 육아 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
-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60%를 지급하고,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현행은 통상임금의 40%와 상한액 100만원)

## 정책 2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

### 현황과 문제점



-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 국가경제 시스템을 위협
- 가계부채 증가와 재벌의 사내유보금 증가가 비례관계, 즉 가계소득으로 돌아가야 할 부가 재벌의 곳간에 비생산적으로 고여 있는 상황
- 한국은 최악의 자산과 소득 불평등 국가이며 이를 시정할 강력한 재분배정책이 필요

####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계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지급됩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실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이나, 성남시가 시행하는 청년수당은 제한된 계층에 대한 부분적인 기본소득입니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주장합니다. 약 167.5조 원이라는 큰 재정이 소요됩니다. OECD 국가를 평균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은 마련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더 걷을 것인가입니다. 노동당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고소득에 누진증과세하여 세금을 늘리고 재벌에게는 더 많은 부담을 지워서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기본복지를 확충하자고 제안합니다.

- 현재의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제도로는 기본소득은커녕 기본복지를 확충할 수 없다. 따라서 조세제도를 고부담 누진직접세 위주로 개편해 기본소득과 기본복지 확충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 ◎ 지금은 장기 저성장 국면이며 ‘수출절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내수 활성화 정책이 필요

## ㉟ 목표

- ◎ 소득불평등의 시정
- ◎ 강력한 내수부양 효과로 저성장 수출절벽 시대의 경제위기에 대처

## ㉟ 이행방법

- ◎ 기본소득법을 제정하고
- ◎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되, 만 6~17세에게는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만 0~5세에 대해서는 실질적 무상보육이 될 수 있게 재정을 중앙정부가 전액 책임
- ◎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은 모두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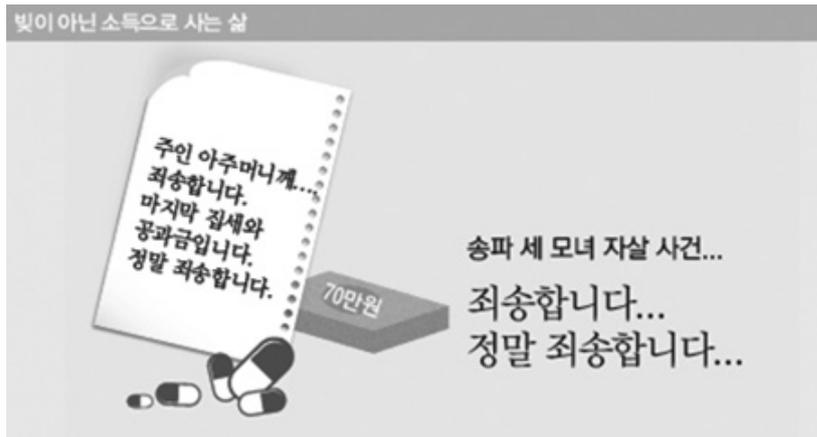
## ㉟ 이행기간

- ◎ 2018년부터 이행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노동당 기본소득 공약에 따른 재정소요는 167.5조원
- ◎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약 200조 원의 재원이 마련된다.
- ◎ 증세의 기본 방향은 재벌 증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중과세, 소득분위 상위 구간에 세율 인상 등 소득세율 인상으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를 고부담 누진직접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현황과 문제점



- OECD 자살률 1위는 OECD 꼴찌 수준의 복지가 중요 이유
-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복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서 생계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 목표

- 국민의 기본복지를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올린다.

㉸ 이행방법

- 의료 공공성 강화
  - 62%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5%로 인상
  - 11%에 불과한 공공병상을 30% 수준으로
  - 의료비에 차지하는 공공재원(건강보험 + 정부지원)의 비중을 현행 55%에서 75%로 인상
- 대학등록금 무상화
  - 사립대학을 공영형 대학 전환 및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하고
  - 공영형 대학 및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전면 무상화

◎ 주거 걱정 없는 사회

- 전월세환율 상한제 : 전세 보증금에 적용되는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에서 낮은 값으로 정한다.
- 전셋값 인상 상한제 : 전세보증금의 인상률을 통계청 가계물가지수 상승분 또는 연리 2% 중에서 낮은 값으로 한다.
- 주거임대차계약기간을 기본 10년이 되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전체 가구의 20%로 확대

◎ 통신비 절감

- 이동통신 기본요금을 폐지
- 전국의 공중전화 박스 7만개에 무료 와이파이 설비를 장치해서 데이터 자유롭게 이용

◎ 대중교통 정액카드제로 반값 교통비 실현

- 현재 대중교통비의 절반 수준에서 정액카드를 발급해 일정 구간 안에서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함

## ㉞ 이행기간

- ◎ 2017년부터 시작하고 기본소득이 도입 해인 2018년에 전면 구현

## ㉞ 재원조달방안 등

- ◎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약 200조 원의 재원이 마련되고, 토건예산과 국방예산을 감축하면 약 55조 원의 재원이 절감된다.
- ◎ 증세의 기본 방향은 재벌 증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중과세, 소득분위 상위 구간에 세율 인상 등 소득세율 인상으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를 고부담 누진직접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정책 4

### 조세재정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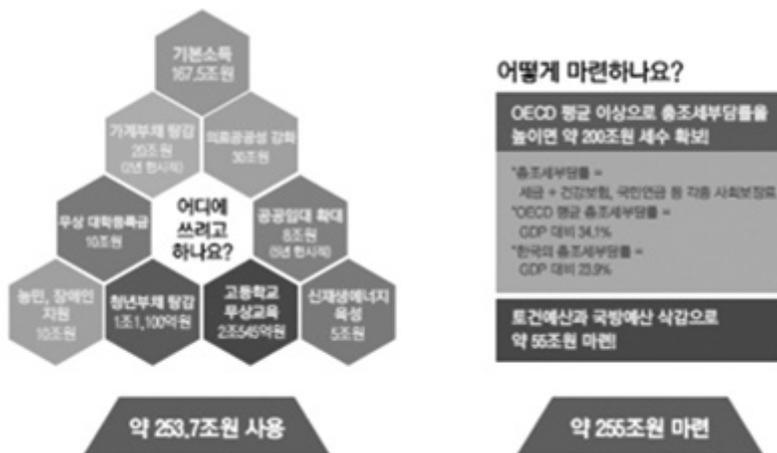
#### 현황과 문제점

- GDP 대비 총조세부담률(세금 + 각종 사회보험료)이 OECD 평균보다 10%p 낮아 항상적 복지재정 부족을 야기
- 박정희 시대 수출주도성장 경제 모델에 맞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의 직접 세에 대한 각종 감면제도가 발달했고, IMF 구제금융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감세기조로 인해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제도가 고착화
- 기본복지를 확충하고 수출내수 균형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체제를 고부담 누진직접세 체제로 전환이 불가피

#### 목표

-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 간접세 위주 조세체계를 누진직접세 중심으로 전환
- 재벌 증세를 통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과 기본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끌어낸다.

#### 이행방법



◎ 재벌증세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현행 22% 세율을 30%로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없애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높인다.
- 금융자본보유세를 신설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과 채권 보유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한다.
- 상속증여세 비과세 감면규정을 정비해 실효세율을 강화하고, '기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 혜택을 현행 200~5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축소
- 주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고 종합과세에 포함한다.
- 재벌의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한다.

◎ 불로소득 증세

- 이자/배당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시켜 누진과세한다.
- 임대소득 세원 파악을 강화하고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한다.

◎ 소득세 과세 강화

- 종합소득 3억 원 초과에 대한 세율을 현행 38%에서 45%로 올린다.
- 종교인 과세를 제대로 실시한다.

◎ 국방예산과 토건예산 감축

- 국방예산을 GDP 대비 5% 수준으로 나춘다.
- 국가재정에서 토건예산의 비중을 15% 수준 이하로 낮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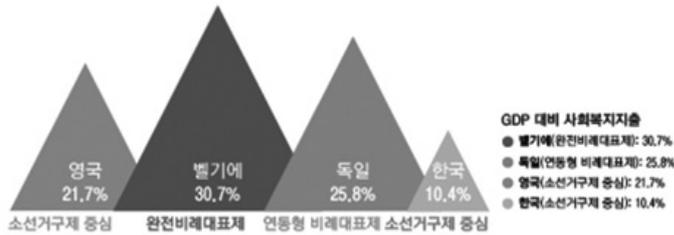
◎ 생태세 신설

- GDP 대비 약 4% 수준으로 간접세 방식의 생태세를 신설해 탈원전 -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

⊗ 이행기간

- ◎ 2017년부터 전면 실시

㉸ 현황과 문제점



- 지역구 위주 단순다수제 선거제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아 정당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왜곡
- 완전비례대표제에 가까울수록 사회복지가 발달하고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일수록 반대의 경향
-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의석수 중심으로 되어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구조
- 결선투표제도가 없어 유권자의 사표심리 작동으로 양당구도를 고착화하는 요인
- 선거권연령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서 국민의 참정권 제약
-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의 잦은 선거개입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

㉸ 목표

- 평등선거 구현
-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지원해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정보기관에 의한 선거와 민의의 왜곡을 막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

㉸ 이행방법

- 전면적 비례대표제 도입
  - 소선거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전면적

## 비례대표제 도입

- 연동형 완전비례대표제 도입도 고려,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50:50으로 구성해야 한다.

- ◎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 선거권 연령 인하 등 참정권 확대

- 선거권 연령을 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
-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의원 및 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다.
-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선거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투표 시간을 추가 연장하고 선거일 유급휴가사용 권리와 위반 사업주 처벌 등
- 정당 비례대표후보의 선거운동 제약을 없애고 지역구 후보와 같은 수준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 ◎ 국고보조금제도 개혁과 전면적 선거공영제

-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중심으로 배분되는 현행 정당 경상보조금 제도 폐지하고, 정당의 전국득표수와 자발적인 후원금에 비례하는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 예) 독일식으로 개정하여 1표 득표당 얼마, 정당에 대한 자발적 후 원금액당 얼마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 10% 이상 50%, 15% 이상 100% 방식으로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제도를 전면적 선거공영제가 되도록 이보다 훨씬 낮은 기준선에서 100% 지급으로 개정

- ◎ 정보기관 선거 개입 차단과 정치 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개입, 인권유린 일삼는 국가정보원 폐지
- 국가정보원 폐지 이후 설립될 국가 정보기관의 권한과 위상
  - 수사권과 정보 및 보안 업무 행정부내 기획조정권 폐지
  - 국내보안정보는 해외정보, 대북정보 등과 관련한 정보에 한해 수집 허용
  -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한 거부권 폐지
- 2016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각종 제도와 법률의 폐지 및 개혁

## ⊗ 이행기간

- ◎ 20대 국회 구성과 동시에 즉시 시행 또는 시행 준비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은 4개의 핵발전소 부지에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인 핵발전소 최대 밀집지역으로, 후쿠시마 참사에서 보듯이 한국도 원전 사고의 안전지대가 결코 아님
- 설계수명이 끝난 이후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이 결정된 월성1호기 주변 주민의 몸속에서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전원 검출됨으로써 노후원전의 안전 문제가 부각됨
-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13년 기준 3.52%로 OECD 꼴찌 수준
- 핵발전을 줄여나가면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로드맵 필요



원자력위원회는 2015년 2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3년째 가동 중단 중이던 월성1호기에 대해 2022년까지 운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환경운동단체들이 2016년 1월 월성1호기 인근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어린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몸속에서 방사능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정부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방사능물질에 안전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에서도 보듯,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핵발전소 밀집지역으로 한 번의 사고가 대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

- 핵발전에서 완전히 탈피
- 에너지 자원을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중심체제로 전환
- 대기업 주도 중앙집중형 에너지 생산체제를 소규모 기업과 조합이 주도하는 분산형 에너지 생산체제로 전환

이행방법

- 2040년까지 모든 핵 발전 중단
  - 2030년까지 12개 핵발전소 폐쇄
  - 2040년까지 나머지 12개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원전건설은 중단하여 탈원전 완성

- 월성 1호기는 2020년까지 발전 중단
- 탈원전에 따른 기술개발, 법과 제도의 정비,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 탈원전 로드맵을 2018년까지 완성하여 시행
- ◎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차에너지 기준 20%, 전력사용 기준 30%까지 확대
  - 산업에너지 특혜 폐지와 대기업 규제(원가의 90% 수준에서 제공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한 특혜 폐지, 재벌대기업에 대한 전력할인보조금제도 폐지 등)
  - 신재생 에너지 산업 분야의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출 규제
  - 생태세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GDP의 4%를 생태세로 걷고 이중 연 9조원 정도를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
  -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 2011년 종료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제도 도입
- ◎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본법으로서 사용 후 핵연료 처리방안계획을 포함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시민 대표의 위원 참여 보장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30%로
    - 배출권거래제도를 이용한 배출권 구매 없이 순수하게 감축
    - 산업부문 감축 부담의 특혜 없이 감축

## ⊗ 이행기간

- ◎ 탈원전은 2040년까지 완료
- ◎ 신재생에너지 비율 향상은 전력사용 2030년까지 전력사용 기준으로 30% 목표, 이후 계속해서 상향

## ⊗ 자원조달방안 등

- ◎ 생태세 부과 등

㉞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DD)의 남한 배치 공식 선언으로 맞선 대치 국면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
- 대북 강경책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며, 북핵에 반대하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과 주변 이해국이 모두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일괄타결하는 전략이 필요



- 사드(THADD) 배치 문제는 미중의 협상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으나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이해가 필요하며,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군사적 완충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의 재개가 시급한 과제
- 동아시아에서 대중국 봉쇄를 세계 패권의 핵심 이해로 설정한 미국과 미국의 봉쇄를 저지하려는 중국의 대립 구도에서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 추종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적극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한국의 이해에 반한다.
- 동아시아 평화 주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의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을 한국이 주도해야 하며, 군사문화, 전체주의 문화와의 단절이 필요

㉞ 목표

-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남북 군사대결 국면의 진정과 남북대화의 진전
-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및 주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 맹목적 한미군사동맹에서 탈피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관리하고 주도하는 한국의 위상 정립 필요
- 동아시아 평화주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정립

## ㉸ 이행방법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를 포함하여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에 대한 반대, 만약 설치가 강행된다면 즉시 폐기
-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남과 북의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의해 개성공단 협력사업이 부침을 겪지 않게끔 관련법을 강화
  - 남북 에너지 평화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산시설 기지로 활용
  - 북한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을 늘려 남북 모두의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
- 북핵 폐기 및 한반도 평화협정의 일괄타결
  -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일괄타결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긴장을 완화
  - 비무장지대(읍)를 평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남북이 공동관리
- 동아시아 평화주도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정립
  - 일본군 성노예(‘위안부’) 협상 무효화와 제대로 된 협상 추진
  -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및 전시 성폭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사과와 배상, 주한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 침략전쟁과 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위한 동아시아 진실연구위원회 발족
  - 평화 위협하는 맹목적 한미일 군사동맹 탈피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폐기, 북한에 대한 공격적 군사훈련의 중단 등
  -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재원을 평화복지국가 건설에 사용
  - 평화유지군(PKO) 활동 이외 국군의 해외파견 금지
  - 확산탄, 대인지뢰 등 비인도적 무기의 수출을 금지하고 생산을 엄격하게 통제
- 사회복지제도 도입과 군 인권 개선
  -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사회복지제도 도입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병영문화체험 등 군사교육 금지
  - 군대 내 폭력과 강압 등을 없애기 위한 군인권기본법 제정

㉟ 현황과 문제점

- IMF 이후 의료, 수도, 전력, 철도, 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박탈당하고 지속적으로 영리상품화 과정을 밟음
- 민영화는 공공기관 소유권의 민간 이전 방식만이 아니라 수익성 논리에 따른 공공기관의 사업재편과 분할, 공공재 성격 탈각과 시장재 성격의 강화,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특별법 제정과 기구의 설치, 민간자본의 공공서비스 위탁 운영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남
- 공공서비스 영리화는 환경, 건강, 안전 등 공익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해침
- 규제개혁위원회, 자유무역협정(FTA)의 독소조항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공공서비스를 영리화하는 제도와 기구로 작동하고, 이에 반해 공익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규제강화 및 사회화는 전혀 작동하지 않음

㉟ 목표

- 영리화된 공공서비스 분야의 재규제로 공공성을 재강화
- 기 진행된 영리화 과정의 중단과 원상회복

㉟ 이행방법

〈진행 중인 공공서비스 분야 영리화 현황〉

- 

병원의 영리회사 설립,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의료법인 영리부대사업 범위 확대,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진료 허용, 국제의료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 

수서발 KTX노선 자회사 설립, 4개 일반노선을 민간운송회사에 개방, 적자노선 중심 최소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민간운영자 선정, 철도유지보수 자회사 분할 등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상수도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자 방식일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해 민자사업 독려
- 

발전 부문 6개 자회사로 분할과 시장형 공기업 지정, 재벌기업들의 민자발전 적극 참여와 특혜, 사기업에게만 복합화력 허용 등
- 

개인정보의 민간 수집과 집중 허용, 인터넷은행의 온산분리 규제완화, 정보인권 침해 방지책 없는 빅데이터(big data) 산업 육성 등

- ◎ 공공성 파괴 기본법과 기구의 폐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
  -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고 공익을 위한 규제강화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규제개혁위원회 폐지
  - 공공규제강화위원회를 설립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익적 규제를 재강화
- ◎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 ◎ 규제완화영향평가제 도입
  - 규제완화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평가하여 공공성 훼손하는 규제완화는 불허
- ◎ 분야별 공공성 강화
  - 금융 : 외국환 거래에 0.03% 세율로 외국환거래세(토빈세)를 도입,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등급 사전심사제, 금융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작업장 안전 강화 :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자 및 기업에게 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작업장 위험물질이나 위험시설에 대한 비공개 관행을 없애고 노동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 GMO 표시제 강화 :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계없이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과 사료에 GMO 표시제 도입, 일본산 수산물 검역 강화

㉸ 현황과 문제점

- 실업과 부채 문제 등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에도 지금까지 거대 정당들은 청년을 세대 문제로 특화하는 각종 정책을 쏟아냈고 결국 실업과 부채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짐
-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하고, 청년 부채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학비와 생계비를 줄이고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이 필요

㉸ 목표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 청년에게 월 100만원의 소득효과를 낼 수 있는 소득정책 실현
- 청년의 노동권 보호 강화



㉸ 이행방법

-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통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
  - 노동시간 주 35시간 + 연장 5시간 상한제를 실시하면 약 235만개의 일자리 창출
  -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하고, 주당 평균 35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의 질 문제를 해결
- 대학등록금 무상화
  - 사립대학을 국가가 재정을 대부분 지원하여 정부책임형 대학으로 전환하고 국공립대학으로의 통합을 지원

- 정부책임형 사립대학교와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을 0원으로 함.
- ◎ 청년부채 탕감
  -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부채를 100% 탕감
  - 기존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으로 원금의 30~60% 수준으로 일괄 감면
  - 취업 전 모든 학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면제
- ◎ 청년의 생계비 절감
  - 주거비 : 공공임대주택을 100만호 공급하고 이중 30%를 비혼 청년에게 우선 할당,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금리의 2.5배 또는 연리 6% 중에서 낮은 값으로 하여 주거비 부담 인하
  - 통신비 : 이동통신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전국 주요 시내에 7만개의 무료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해 통신요금 절감
  - 교통비 : 월 정액 교통카드제로 현재 수준의 반값 수준에서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함
- ◎ 청년의 시간제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대학생 60%가 알바 노동을 하고 있어 최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알바노동을 통한 청년소득이 45% 증가
  - 명예근로감독관제도 도입 :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지명하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대학등록금 무상화에 약 10조원, 청년부채 탕감에 1조원 정도의 예산 소요
- ◎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재원은 충분히 마련됨

**현황과 문제점**

- ⊙ 노동시장 내 성차별과 남성중심적 가족제도, 계층화된 결혼시장 등으로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의 증가
- ⊙ 일과 육아에서 여성의 이중부담, 출산 이후 양육비과 교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
- ⊙ 부와 모의 평등한 돌봄 참여를 노동시장정책,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위한 공공인프라의 구축, 성평등사회를 위한 정책들이 사회재생산 위기에 대한 해법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봄 참여**



**목표**

- ⊙ 사회재생산 위기의 해소
- ⊙ 남녀 성별분업 노동체제의 극복과 보편적 양육자 모델 수립

**이행방법**

- ⊙ 일과 생활의 균형
  - 육아휴직 제도 개편
    - 육아휴직기간은 ‘최소 24주간’ 명문화
    - 육아휴직을 허용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
    - 육아휴직의 대상을 ‘부’나 ‘모’인 자로 규정해 ‘부’의 육아휴직도 의무화
  - 육아휴직 급여액 인상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24주간은 통상임금의 100%, 24주 이상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60%로 하고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인상
    - 무급인 가족돌봄휴직기간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의 연장과 급여액의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규정을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의 급여액을 현행 통상임금 60%에서 80%로 인상
- ◎ 보편적 양육자 모델로의 전환
  - 주당 35시간 법정노동시간 상한제로 노동시간 단축
  -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
  - 무급 2일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2주일로 확대하고 전일 유급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고용 원칙을 명문화
- ◎ 아동돌봄 공급체계 공공성 강화와 실질적 무상보육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50%로 확대
  - 만0~5세에 실질적 무상보육 :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으로 일원화
  - 보육비 지원액은 현행대로 하되 지원 형태는 현행 보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의 구분을 없애고 어린이집 이용과 무관한 무조건적 아동수당으로 전환
  -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에 추가하여 참여소득으로서 아동돌봄수당 도입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와 모로서 육아휴직 중이거나 전업적으로 아동돌봄에 참여 하는 사람에게 월 월 20만원, 이중 한부모 가족의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지급)
- ◎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 노동자의 소득과 노동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 (노동당 10대 정책 1.연대적 노동사회 정책)
  -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즉각 인상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공공서비스 분야 성별 임금격차 해소
- ◎ 공공서비스 일자리 질 향상
  - 공공 돌봄서비스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
  -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강도를 완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녹색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2	기본소득과 노동전환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4	차별 없는 평등사회
5	주거권 보정과 토지정의
6	동물권 보장
7	교육(배움)의 녹색화
8	탈토건 안전사회
9	한반도 비핵평화
10	민주주의 회복



### ㉞ 기초와 방향

- 녹색당은 창당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탈핵 탈석유 에너지전환’을 주장해왔으며, 이를 당 강령 및 지난 19대 총선 공약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과 소비과정에서의 효율향상, 산업계의 절약,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줄여나가며, 공급 측면에서는 화석연료와 핵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특히, 노후 핵발전소는 빠른 시일 안에 폐쇄(가동중지)하고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지하며, 현재 운영 중인 핵발전소는 설계 수명이 완료될 경우 즉시 폐쇄하고 2030년에는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가동중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 에너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원(energy source)의 변화가 중요하지만, 에너지 생산과 소비, 이와 연관된 지역/공간의 변화, 에너지 설비의 소유·운영·관리 주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환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에너지전환은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대규모 에너지 시스템, 연관된 법률과 제도를 개혁하여, 지자체/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는 지역분산 에너지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 또한 전력 분야의 경우, 한전과 민간발전사의 독과점 구조를 개혁하고, 지역공동체(시민)/지자체가 전력 생산, 송배전 시스템의 소유·운영·관리의 주체가 되어 에너지 전환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다.
- 에너지전환은 경제녹색화와 긴밀히 연결된다. ‘경제녹색화’는 에너지전환 + 경제민주화 + 지역균형발전을 포괄하는 녹색당의 비전이다.
  -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 탈핵-에너지 전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포괄하는 녹색당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여 녹색사회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 탈핵에너지 기본법(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전환기본법(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 수요 관리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 대체), 경제민주화, 수도권규제 강화 & 지역균등발전법 재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 ◎ 녹색당의 에너지-기후 분야의 정책공약을 아래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제안한다.
  -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 불같이 정책
  - 기후변화 대응 정책 : 경제녹색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육성 : 기업은 에너지 요금인상, 시민은 에너지 주권을!
  - 에너지 햇볕정책 : 에너지 평등, 에너지 정의, 에너지 복지 정책
  - 지역/공동체 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 : 밥 먹여 주는 에너지 정책

## ㉞ 세부 공약

- ◎ 2030 탈핵·탈석유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 불같이 정책
  -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을 공론화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탈핵을 추진하겠다.
  -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 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고 LNG 발전 이용을 장려하겠다.
  -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핵폐기물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
  - 북한, 중국을 비롯한 지역 국가들의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와 함께 동북아 핵안전·탈핵·재생에너지 협력체를 구축하겠다.
  - 도로에서 철도 중심으로 교통체제를 개편하겠다.
- ◎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
  - 전 지구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하겠다: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3.5%까지 감축.
  - 수출중심·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를 내수 중심의 에너지효율적 산업 구조로 개혁하겠다.
  - '기후변화종합대책'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것이다.
-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추진하겠다: 평등한 햇빛, 정의로운 바람.
  - 재생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고 주민참여와 이익공유를 확대할 것이다.
  - 해외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
- ◎ 기업의 에너지 요금을 인상하고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겠다.
  -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
  - 특혜를 받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
  - 한전과 발전사의 초과 수익에 과세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사용하겠다.

- 주택 단열 개선 지원, 신규주택 단열기준 강화, 일조권 보상 등으로 따뜻한 겨울을 대비 하겠다.
  -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을 법제화하여 전력자립도가 높은 광역지자체와 전력설비로 인 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지원하겠다.
  - 에너지 소외 계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 취사용 LPG 지원, 난방용 등유의 겨울철 가격 인하, 난방용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설비 지원.
- ◎ 에너지 부정의 해소, 공동체에너지와 녹색경제-녹색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
- 초고압 송전탑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력 3대 악법'을 개정하겠다.
  - 지자체, 지역공동체가 에너지 설비를 소유·운영하여, 에너지가 지역을 살리는 산업이 되도록 하겠다.
  -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효율화 사업 등의 녹색산업을 찾아 녹색일 자리를 창출· 유지하겠다.

**정책 2**

## 기본소득과 노동전환

**정책 2-1 기본소득****㉸ 기초와 방향**

- 녹색당은 다음과 같이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한다.
  - 불평등과 빈곤해소, 불안으로부터의 탈피, 생태적 전환을 위해 한국사회에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간다.
  - 기본소득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기본권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 기본소득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측면을 고려하여 생태세를 도입한다.
  - 재정확보의 면을 고려하여 2016년 입법화작업. 2017년부터 ‘기본소득세’ 징수, 1단계 지급 시작. 2020년 2단계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간다.

**㉸ 세부 공약**

- 불평등과 빈곤해소, 불안 탈피,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1단계 :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태배당금을 지급한다.
  - 2단계 : 1단계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 기본소득 재원 조달과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 보편 증세와 생태세 도입을 추진한다.
- 기본소득과 동시에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권 보장을 추진한다.

**정책 2-2 노동전환****㉸ 기초와 방향**

- 녹색당일이 삶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과잉노동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안정

노동을 없애고 최소필요노동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성장위주의 한국사회를 탈노동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 ◎ 불안정노동과 과잉경쟁노동을 만들었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신자유주의 정책에 과감하게 맞서야 한다. 이윤을 독식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트리고 수백 조의 사내유보금을 쌓아 놓았으며 탈세와 비자금으로 언론을 장식하는 자본가와 실질임금상승이 없고 나날이 부채가 늘어가는 노동자의 잘못된 분배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 ◎ 지금의 한국사회는 인간뿐만 아니라 여타 생명들과 자연에 대한 착취가 심각한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 반 생태적 노동, 불필요한 노동이 삶과 생명을 잠식해가고 있다. 이제 생태계에 부하를 가하는 산업들을 줄이고, 녹색경제로 나아감으로써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는 전 사회 계층의 참여 속에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노동환경을 해소하고 노동인권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 ◎ 공공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사회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게 한다.

## ㉞ 세부 공약

- ◎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겠다.
  - 주 35시간 노동제 법제화하고 '칼퇴근'을 가능토록 하겠다.
  - 심야노동을 금지하고 교대제를 개선하여 수면시간을 보장하겠다.
  - 휴일을 확대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안식년 제도를 도입하겠다.
- ◎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실질적인 생활임금제도를 정착시키겠다.
  - 노동자 경영참여 및 노사 이익균점제를 통한 소득분배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
- ◎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안경제를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
  -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
  - 녹색경제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
  -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고 대안적/녹색일자리 창출하겠다.
- ◎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이 되도록 하겠다.
  - 객관적 사유가 없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겠다.
  - 안전한 노동환경과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

## 정책 3

##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 ㉸ 세부 공약

-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 농민과 지역의 식량주권을 지킨다: 국가먹거리계획과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 친환경 로컬푸드 무상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한다: 먹거리 공공조달 프로그램 실시
  -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GMO, 방사능 수산물, 공장식 축산물, 과당분 식품 규제
  -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FTA와 TPP 추진을 반대한다.
- ◎ ‘사회적 농민’을 키울 것이다.
  - 농민에게 월급을 지급하겠다: ‘월급형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
  - ‘깨어있는 귀농촌인’을 지원하겠다: 지역사회전문가 및 생활기술자 직업학교 설립
  - 농민복지 제도를 현실화 하겠다: 마을-지역공동체 공동생활주택 제공
- ◎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지키고, ‘사회경제적 농업’을 살리겠다.
  - 농민들만이 농업용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겠다.
  - 중소농·가족농을 우대하겠다: 중소농·가족농 주도 지역단위 협동조합 구성
  - 유희시설 지역 공유자산을 재활용하겠다: 유희시설 지역공유 사회적경제자산은행 설립
  - 도시농업을 장려하겠다: 유희지·공유지 도시농장 개발
- ◎ ‘사회생태적 농촌’을 지키겠다.
  - 농촌교육공동체를 건설하겠다: 농촌 작은 학교 살리기 법률 제정
  - ‘마을만들기’가 아닌 ‘마을살리기’를 하겠다: 생활 중심 마을공동체사업 전환
  - 농민을 ‘농정협치’의 주인으로 세우겠다: 민간 주도형 농업회의소 설치
- ◎ 농업과 농촌의 주체 농민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향상한다.
  - 농민여성의 오랜 숙원사업, 농민으로서 법적 지위 보장과 공동경영주 등록을 실현한다.
  - 농민여성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기구에서의 여성참여와 지도력 육성을 특별히 제고한다.

**정책 4-1 성소수자 인권****㉸ 기초와 방향**

- 성소수자 인권운동 20년의 성과로 사회문화적으로나 법제도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이 특정 종교집단에 의하여 더욱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원내정당인 여야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것 자체를 회피하며, 시민사회와 성소수자 운동이 그나마 이루어온 차별금지 등 정책적 진전을 후퇴시키고 있다.
- 녹색당은 이런 위기 속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성소수자의 존재를 말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정책들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

**㉸ 세부 공약**

-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전국적인 연결망을 구축하겠다.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성소수자인권 분야를 포함시켜 범정부차원의 정책을 실시하겠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다.
- 성평등한 교육정책을 위한 성평등교육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겠다.
  - 현재 교육 정책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무정책’ 상황을 개선하겠다.
  - 성소수자 친화적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선하겠다.
  - 성별중립 정책을 실시하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
  - 교과과정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등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기적인 교사 교육을 실시하겠다.
- 혼인 평등 제도화 및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
  - 혼인 평등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

-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속제도, 연금제도, 사회복지 및 조세제도, 의료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
- 성정체성을 존중하고,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의 성별정정 제도화 및 의료접근권을 보장한다.
  -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스 당사자들과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 국가차원의 남녀이분법적인 성별 구분 등록의 철폐 방안을 모색하겠다.
- HIV/AIDS 감염인 고용 차별금지와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
  - 본인 동의 없는 HIV/AIDS 검사를 금지하고, 채용과정의 신체검사 규제를 강화하겠다.
  - HIV/AIDS 감염인도 환자로서 인간다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립요양병원을 마련하고 제도화하겠다.
  -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적극적인 차별예방 정책과 의료서비스, 주거지원이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

## 정책 4-2 성평등

### ㉸ 기조와 방향

- 녹색당은 젠더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영역과 분야에 걸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참여와 연대를 정치적으로 조직해내고자 한다.
- 녹색당은 내부로부터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당으로 삶의 모든 부문에서 성평등을 지향한다. 단지 성별의 구분을 넘어 여성들 내부에 얽혀있는 서로 다른 삶의 위치로 인한 젠더교차성(gender iIntersectionality)을 포착해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이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한다.
- 지속가능성은 지구적 차원의 과제이다.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MDGs 이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Post-2015 개발 의제 및 지속가능발전목표(Post-2015 development agenda and SDGs)를 작성하고, SDGs에서 모든 부문의제에 젠더관점이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주류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변화되고 있지 못한 여성들의 삶에 대한 현실인식에서 기반으로 국제사회 여성운동이 SDGs의 성주류화와 더불어 여성 독자적제 병행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 다양한 가족형태를 존중하며,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삭제되지 않는 서로 돌보는 호혜적인 성평등 지역/마을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 ㉸ 세부 공약

- ◎ 일터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자여성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넘어, 아동, 양육자, 그리고 교사 모두를 위한 ‘인권보육’을 실현한다.
  - 사문화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실질화한다.
  - 여성이 다수인 비정규직노동자문제 해결과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 한다.
  -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부터 여성 고위직 임용과 비정규직 고용 문제를 해소한다.
- ◎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중과 서로 돌보는 ‘평등 돌봄’을 실현한다.
  -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정 내 ‘평등 돌봄’의 가능성을 연다.
  - 건강가정기본법을 인권과 성평등의 관점에서 전면 개정한다.
  - 서로 돌봄의 사회적 대안인 마을공동체에 다양한 여성들의 삶터를 만든다.
- ◎ 건강하고 안전한 여성의 삶터를 만든다.
  - 여성의 임신·출산 결정권을 보장한다.
  - 일하는 노인여성의 안전정책을 수립한다.
  - 지역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출산지원센터를 구축한다.
- ◎ 농촌을 살리는 농민여성에게 권력을
  - 농민여성의 오랜 숙원사업, 농민으로서 법적 지위 보장과 공동경영주 등록을 실현한다.
  - 농민여성의 문화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지원책을 마련한다.
  - 농업정책 의사결정과정과 관련 기구에서의 여성참여와 지도력 육성을 특별히 제고한다.
- ◎ 사회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민주주의, 성평등을 다시 쓴다.
  - 모두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운다.
  - 정치영역에서의 성평등과 동등한 참여를 실현한다.
  - 성평등정책 작동 체계를 새로 짠다.

## 정책 4-3 이주민 인권

### ㉸ 기조와 방향

- ◎ 이상과 같은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녹색당 인권 관련 정책의 총론적 차원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집중하는 것을 제안한다.
  - 첫째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하여 인권관련 개별법(장애차별, 고용차별, 개인정보보호 등)의 모법을 마련함

으로써, 인권레짐의 안정화, 체계화, 명확화(cf.인권교육기본법)를 도모할 수 있다. 동시에 현재 불안정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인권레짐의 근거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 둘째 NAP 모니터링 강화와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운동을 공약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굳이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우회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강구될 수 있다. 이미 성북구의 생활임금제나 동행계약서, 장애접근권 확보,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 보장, 용인시의 여성특별시 선언 등은 사실상 인권영향평가제와 인과관계를 맺는 상징적 정책들이다.
- 셋째 인권교육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여 세계에서 유래 없는 인성교육, 윤리교육 중심 체제에 문제제기를 한다. 여기에는 인권과목을 초중고등교과과정은 물론, 공무원임용시험 및 보수교육에 필수과목으로 확충하고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과 통합하도록 한다.
- 경제성장 논리를 벗어나고 디지털 시대의 정보인권 옹호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국가감시의 확산 근거라 되고 있는 만큼 공동체 안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정보기관들의 지구적 경쟁을 탈피하기 위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야 한다.

## ㉞ 세부 공약

- ◎ 이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 지방선거투표 자격을 확대하여 이주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한다.
  - 이주민 당사자 의견이 제도와 법률에 반영될 수 있는 이주민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 이주민 정책을 인권과 노동권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가족 결합을 보장한다.
  -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미등록자의 합법화를 추진한다.
  - 결혼이주여성의 영주권 취득을 간소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 해외 동포의 영주자격 및 귀화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 모든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는 복지 정책을 실시한다.
- ◎ 난민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난민신청자를 위한 통번역 시스템을 지원하고, 난민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난민 신청 시점부터 취업 허가 및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한다.
- ◎ 지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 이주민들과 연계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체계를 구축한다.
- 귀한 이주민의 협동조합과 녹색연대 등을 지원하며 한국인권문화원을 건립한다.

## 정책 4-4 장애인 인권

### ㉸ 기초와 방향

- ◎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나가겠다.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15년에 발표한 요구안을 수용하여, 총선 장애인 인권공약을 구성한다.

### ㉸ 세부 공약

- ◎ 장애인의 생존권과 활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혁하겠다.
  -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
  - 활동지원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송국현·오지석 법을 제정하겠다.
- ◎ 장애인과 어울려 사회는 만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 시내 저상버스를 100% 도입하고 시외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실현하겠다.
  -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 장애인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권역별 의사소통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 ◎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
  -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수교사를 충원하고 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
  -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문화향유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
  -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UN정책권고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겠다.

## 정책 5

## 주거권 보정과 토지정의

## ㉸ 기초와 방향

- 땅은 삶이 뿌리내리는 토대이다. 공기나 물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 모두를 위한 소중한 자원이다. 그 땅 위에서 주거하는 공간으로서 ‘집’은 사람들이 정주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조건이 된다.
- ‘집’은 인간생존의 기본적 조건인 의식주라는 차원에서 볼 때, ‘특수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유’라는 재산권 차원과는 별도로 거주하는 거주자도 집의 주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즉 ‘재산권’과 더불어 ‘주거권’도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 집은 인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이제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수단 부동산이 아니라 안정되게 머무를 수 있는 주거의 장소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 자영업자 임차인에게 ‘가게’ 역시 생계와 직결된 삶의 장소가 된다.
- 녹색당은 삶의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아갈 적정 주거권을 보장하고, 빌려 쓰는 자들의 연대를 형성하며, 비뚤어진 토지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 ㉸ 세부 공약

- 공정한 주거임대료 수준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주거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 지자체, 임차인, 임대인이 포함된 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기준의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다.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 자동연장제도’를 도입하겠다.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토지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 노숙인, 비닐하우스, 쪽방, 지하방 주거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겠다.
-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겠다.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엄격히 보장하겠다.
  - 양도양수를 비롯한 상가권리금을 엄격히 보장하도록 하겠다.
  - 재건축으로 권리금 회수를 못하는 경우, 이전 수준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하겠다.

- 임차인과 건물주가 포함된 상가관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겠다.
- ◎ 토지임대 불로소득 환수 등, '토지정의'를 강화하겠다.
  - 고액 비거주용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
  - 부동산 소유 통계를 공개하겠다.

## 정책 6

## 동물권 보장

## ㉸ 기초와 방향

- 녹색당은 강령으로 생태적 지혜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이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동물을 단순히 이윤추구의 대상, 물건으로만 취급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동물도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고통과 쾌락을 느끼는 생명으로 존중하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 ㉸ 세부 공약

-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의무로 '동물보호의무'를 명시하겠다.
  - 대한민국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 의무를 명시하겠다.
  -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총괄하는 전담국을 설치하겠다.
  -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닌 보호대상인 생명임을 명문화하겠다.
-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적 도시 정책을 마련하겠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시민단체로 구성되는 동물복지위원회를 제도화하겠다.
  -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적 운영 지침과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
  - 동물 학대적인 동물 번식업을 금지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 길고양이 급식소를 확대하고, 캣맘이 참여하는 인도적 중성화(TNR) 사업을 지원하겠다.
- 공장식 축산업을 동물복지 기준으로 전환시키겠다.
  - 감금틀 사육방식을 금지하고 동물복지농장 기준을 의무화하겠다.
  - 농장동물 사육환경 표시제도를 의무화하고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겠다.
  - 단체급식에서 채식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식료품에서 비건 표시제도를 도입하겠다.
- 동물학대 제로의 사회를 만들겠다.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실효성과 재발방지책을 강화하겠다.
  - 동물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는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 10년 내로 현행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로드맵을 수립하겠다.

- 학교에서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생명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정책을 실시하겠다.
-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을 제정하겠다.
- ◎ 야생동식물 서식지의 보존과 복원을 위해 지원하겠다.
  -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파괴하는 토건사업을 규제하고, 야생동식물 서식지를 복원하겠다.
  - 멸종위기종을 상업적으로 이용·사육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포획을 강력히 처벌하겠다.
  - 생물권역에 해당하며 이용률이 낮은 고속도로의 재자연화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겠다.

## 정책 7

## 교육(배움)의 녹색화

## ㉸ 기초와 방향

- ◎ 교육과 시대정신 : 배움의 내용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전환의 핵심이다.
  - 오늘날 한국에서 발생하는 교육문제는 초·중·고등교육을 막론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실제의 사회경제적 삶, 다가올 시대의 삶을 준비하는 것에 실패하는 데서 비롯하며, 이는 경제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시대적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이 엄중한 시대 정신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교육의 전환은 시작된다.
  - 진보적 교육담론은 지금껏 ‘무상교육’을 비롯한 교육비용 문제, 입시제도와 학벌사회를 포함한 기회 균등의 차원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에서 기반한 정책은 한국 교육 문제의 심층을 건드릴 수 없다. 이 시대는 근대적 학교 교육과 학교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무상교육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
- ◎ 교육과 권리 : 배움 주체의 사회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배움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
  - 지금까지 교육정책은 철저히 배움 주체의 사회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가 아닌 교육을 통해 훈련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 이념적으로 순치된 국민을 원하는 국가의 요구를 중심으로 설계 운영되어왔고, 따라서 철저히 반교육적인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 교육의 전환은 이러한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 (피교육자라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배움 주체의 사회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배움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자립적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이 교육 공간에서 강요당하는 신체의 구속과 시간의 착취, 강요된 ‘학습노동’, 그리고 수없는 인권유린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체제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 ◎ 교육과 평가 : 평가 시스템에 대한 급진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 일제식 평가를 비롯한 오늘날 학교 교육의 평가 및 입시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교육의 전환은 요원하다. 평가체제는 점진적 개선이 불가능하며,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적 변화 외에 답을 찾을 수 없다. 교육과정의 녹색화는 거기에 걸맞은

평가 체제를 요구한다. 교육적 환류가 아니라 줄세우기 식 평가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관찰과 대화에서 비롯한 배움 주체의 성장과정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평가 체제가 전환 되어야 한다.

◎ 교육과 장소 : 배움은 공교육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 한국 교육의 질곡은 또한 공교육 학교가 곧 배움의 공간으로 등치되고, 교육에 투여되는 사회적 경제적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는 데서 비롯한다. 배움은 공교육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공교육 학교 바깥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교육 영역의 존재와 이들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며, 국가는 이들이 누릴 배움을 위한 물질 기반을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

◎ 교육과 공공성 : 교육의 기회균등, 학교 간 서열과 차별 철폐 등 전통적 과제와 아울러 확장된 교육공공성의 관점이 필요하다.

- 교육 공공성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주에서 더 확장 되어야 한다. 교육 공공성은 학령기를 지난 국민들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공교육 학교 체제 외곽에 존재하는 대안교육, 교육기관의 형식을 띄고 있지 않으나 시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을 포함하여 공교육 학교 체제 바깥에서 일어나는 배움의 가능성을 포함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 교육과 자유 ; 교육은 국가와 자본의 도구가 아니다.

- 최근 보수정치의권인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서 새삼스럽게 드러나지만, 교육은 특정 정치세력의 치부를 감추거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내면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을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는 철저히 배움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선택에 의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교육과 지역 : 한국 교육의 전환을 위한 공간적 조건으로서의 지역 교육을 되살려야 한다.

- 지역 교육을 부흥하는 것은 교육 다양성과 교육의 녹색화를 통한 교육의 전환, 더 나아가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지역 교육에서 배출된 인재가 다시 중앙에서 경쟁하기 위해 몰려드는 체제를 지역 단위로 다시 구획하지 않으면 경쟁과 줄세우기의 체제는 변화할 수 없다.

◎ 교육과 교사 : 교원양성과정과 승진구조를 혁신하고 교육노동자의 차별구조를 철폐한다.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교사는 경쟁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세상

에 대한 책임의 덕목으로 양성되어야 하며, 교육자의 교육노동은 평등하므로 무의미한 경쟁으로 교육적 영락을 소진하지 않아야 하며, 무엇보다 차별받아서 안 된다.

## ㉮ 세부 공약

- ◎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교육(배움)의 녹색화
  - 교육과정 혁신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대토론을 시작하겠다.
  - 생태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겠다.
  - 인지 교과를 축소하고, 노작과 예술, 체육 등 ‘몸을 쓰는 교육과정’으로 혁신하겠다.
  - 농사·급식과 연계한 먹거리교육과 에너지 자립교육을 도입하고 구현하겠다.
  - 학교 텃밭, 학교 숲 등 생태학습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거대 학교, 과밀 학급의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교육공간을 녹색화하겠다.
- ◎ 배움 주체들의 사회경제적·정치적 권리 보장
  - 청소년·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 ‘학습노동’ 금지를 법제화하겠다.
  - 중등교육과정 6년 중 1년은 학생 안식년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고등학생의 1년 수업일수 중 10% 범위 내에서 학기 중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
  -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 대학 자치를 위한 대학평의회 구성을 제도화하고, 학생 대표의 참석과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하겠다.
- ◎ 교육(배움) 평가 체제의 근본적 혁신
  - 국가 수준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하겠다.
  - 초등교육 평가를 폐지하고, 년 2회 담당교사 주도의 학급 단위 성취도 평가만 시행하겠다.
  - 중등 교육의 평가는 학생성장기록부(학생이력철)의 기록 및 서술식 평가로 대체하겠다.
- ◎ 교육(배움) 공공성의 확장 : 교육(배움) 다양성 보장, 학교 바깥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학교 밖 교육기관에도 공교육비를 지원하며, 다양한 교육기관의 자유로운 설립을 지원하겠다.

- 평생교육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하겠다.
- ◎ 국가주의적 교육에 대한 반대와 교육(배움)의 자유권 옹호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며, 검인정 체제를 넘어 모든 교과서의 자유발행제를 시행하겠다.
  - 인성교육진흥법을 폐지하겠다.
  - 지역 및 학교,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편성 및 선택권을 보장하겠다.
- ◎ 학교 서열화 전면 폐지와 학력차별 금지 법제화
  - 중등학교 '귀족교육'을 폐지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종합학교'로 전환하겠다.
  - 학력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
  - 대학통합네트워크(공동학위대학)를 구축하겠다.
- ◎ 지역을 살리는 교육(배움) 지원 체제 수립 지원
  - 농·어·산촌의 작은 학교를 되살리고, 자원 교사를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
  - 지역에 남아 지역을 활성화시킬 사람에 대한 교육(배움)과 고용을 지원하겠다.
- ◎ 국가의 교육 행정 권한 지방 이양, 교육자치 확대
  - 교육부를 폐지하고,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 이관하겠다.
  - 단위 학교의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하겠다.
- ◎ 교원양성과정의 혁신과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의 권익 보호
  - 교원 임용고사제 폐지, 사범대 구조조정을 통한 목적형대학 전환, 교·사대 교육 과정을 현장실습 및 사회체험 3년을 포함한 6년제로 전환하는 등 교원 양성과정의 혁신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겠다.
  - 교감직을 폐지하고, 교장직을 선출보직으로 전환하며, 교장직 임기 순환제를 시행하겠다.
  - 기간제 교사의 권익을 정규직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겠다.
  - 비정규직 교육노동자의 법적 경제적 권익을 보장하겠다.

## 정책 8

## 탈토건 안전사회

## ㉞ 세부 공약

- ◎ 사람과 생명을 위한 탈토건 국가화를 추진하겠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단시키겠다.
  - 4대강의 보는 수문 개방하고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
  -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제도를 강화하고 국회 내 ‘토목예산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겠다.
  - ‘토건예산 감축제’를 도입하고 절약한 예산을 녹지축 회복과 재자연화에 사용하겠다.
  -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공간 계획’을 수립하겠다.
  - 현실적 근거가 부족한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의 법정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
- ◎ 미세먼지 없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
  -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 위험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한 지역을 만들겠다.
  - 지자체의 재해영향평가를 확대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겠다.
  - 생활안전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을 최소화하여 시민안전을 지키겠다.
  - 미세먼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
-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
  - 기업의 이익 대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만들겠다.
  -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을 의심하고 확인할 권리를 부여하겠다.
  -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Toxic Free) 사회를 만들겠다.
- ◎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남북한 협력과 생태적 통일을 추진하겠다.
  - 남북한 공용하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 남북한 에너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 한반도 백두대간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산림 복원 및 친환경 농업을 지원하겠다.
  -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을 구성하겠다

㉞ 세부 공약

- 한반도 완벽한 비핵화(핵무기와 핵발전 모두 포함)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를 추구한다.
  -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폐기하고, 핵무기의 사용/비축/이동/생산을 금지한다.
  - 남한의 선도적 군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평화기금을 설치한다.
  -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
  - 공유 하천의 공동관리, 재생에너지 협력 등의 남북협력 사업을 강화한다.
  - 남북 통합 방식으로 지역분권과 자치를 기반으로 한 다연방네트워크국가를 구상한다.
  - 남북한 및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을 구성한다.
- 해외 파병과 무기 수출 규제 등,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평화적 정책을 추진하겠다.
  - 국군 및 PKO의 해외파병을 제한하는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한다.
  - 국제적인 군비통제 및 군축 협약에 적극 참여한다.
  - 군수산업과 무기 수출을 규제하고 기업책임 배상법을 제정한다.
  - 국민연금 등의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반생태적 기업에 대해 투자를 금지한다.
- 군대의 시민에 의해 통제를 강화하고 군 활동의 인권적/환경적 개선을 이뤄내겠다.
  - 군대 활동에 의한 민간 피해 조사, 규제, 예방하는 법률과 기구를 마련하겠다.
  - 군의 민간 대상 활동이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
  - 병력을 감축하고 예비군제를 폐지하겠다.

## 정책 10

## 민주주의 회복

## ㉸ 기초와 방향

- 녹색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일상과 맞물린 ‘삶의 양식’ 자체이다. 깨어있는 시민을 넘어 스스로 다스리는 시민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직접·참여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 녹색당은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시민의 힘을 통해 ‘정치를 유예한 경제성장’이 아닌 ‘탈성장의 정치 전환’을 꿈꾼다. 녹색당이 실천하는 풀뿌리민주주의는 다양하게 규정되고 수식되는 종류의 민주주의들 중 하나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이며, 제한된 지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작동되는 원리이자 과정이다.
- 녹색당은 청년과 청소년 젊은이를 특정 세대가 아닌 동료 시민으로 존중한다. 소수자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기성정치에 의해 ‘초대된 소수’가 아닌 스스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정치주체로서 시민적 권리를 공유한다.

## ㉸ 세부 공약

-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정의로운 정치참여 구조를 만든다.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지방의회 구성방식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비율 확대를 지향한다.
  -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명부 남녀교호순번제를 의무화해서 성별균형의회 구성한다.
  - 중앙정부 내각을 성별 동수로 구성한다.
- 가장 보통의 민주주의, 젊은이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로 확대한다.
  -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학생들에게 ‘의견투표’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과 지역자치를 강화한다.
  - 추천제를 통해 구성된 ‘시민의회’가 새로운 정치의 밑그림을 그린다.
  - 국회의원 소환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국회의원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자치의 관점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주민참여제도를 재검토하고, 근린의회로 전환한다.
- 지방재정과 예산의 분권과 자치를 확보한다.
- ◎ 정당 선거보조금을 폐지하고, 선거공영제를 바로 잡는다
  - 전국단위 선거 때마다 지급되는 정당 선거보조금을 폐지한다.
  - 기득권 정당의 눈 먼 돈이 되어버린 정당 국고보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 ◎ 정치관계법의 유신독재 잔재를 지우고, 주권자와 직접 만나는 정치를 구성한다.
  -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역정당의 설립을 보장한다.
  - 줄투표를 조장하는 정당 기호제를 폐지한다.
  - 과도한 기탁금과 반환기준, 선거비용보전기준을 개선한다.
  - 주권자와 대면하는 정치활동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을 삭제하고 선거운동기간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한다.
- ◎ 생명과 공존하는 전환적 자치개념의 가능성을 연다.
  - 법률에 자연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받을 경우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민중연합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민중연합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휴수저 방지를 위한 등록금 백만원 상한제 · 졸업 실업급여제 실시
2	청년 정치진출 3대 프로젝트 국회의원 할당제 · 18세 피선거권 인하 · 기탁금 국가보장
3	쉬운 해고 막아내는 한상균법 제정
4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
5	재벌세 제정!
6	제2의 금융실명제 '지폐발행 중단'
7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 책임제 시행
8	정치개입 근절! 국정원해체법 제정
9	민주주의 암적 존재, 종편 퇴출
10	개성공단 재개 ·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논의



### ❧ 취지와 문제점

◎ 고등교육예산 민간 부담률 1위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은 국가의 의무, 그러나 예산으로 확인되는 정부의 의무이행은 낙제점

- 2015년 기준 고등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1위, 정부부담률도 평균보다 0.4% 떨어져 (정부부담률 0.8% & OECD 평균 1.2% / 민간부담률 1.5% & OECD 평균 0.4%)
- 박근혜후보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0.7%에서 1% 확대” 불가능  
→ 2016년 예산안 GDP 1,600조원 추산, 교육부 고등교육예산 0.58%인 9조2,322억원<sup>1)</sup>

◎ 학자금 문제 해결 요원, 학자금 연체자 증가

- 정부의 반값등록금(국가장학금)은 뺑뺑이 거짓말 정책임. 소득수준별 차등지급하여 대학생 절반가량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제 반값도 아닌 문제, 높은 등록금을 낮추지 못하는 근본 문제 때문임.
- 2015년 기준 사립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4만원이고, 국가장학금 최고 지급액인 480만원을 받더라도 65%에 불과함.
- 학자금 대출도 심각한 수준<sup>2)</sup> 2014년 학생 1인당 대출액은 704만원으로 2010년 525만원에서 34% 증가하고, 든든학자금 이용자 중 3명 중 1명은 상환을 시작도 못하고 있음.
- 연체 관련 2014년 12월 말 기준 1백만원 이상 연체자는 4,358명으로 10%가 되고 6개월 이상 연체로 신용유 의자가 된 학생수는 2014년 말 기준 20,231명이며 이중 17.6%(3,548명)은 빚이 1천만원 이상임.
- 독일은 등록금 0원, 프랑스는 평균 등록금이 100만원임. 더구나 독일의 경우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첫째 아이는 매월 27만원, 넷째 아이는 매월 32만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이유는 2014년 기준 독일의 교육예산은 GDP의 9.5%(367조원)인데 우리나라는 4.55%(53조원)에 불과하기 때문임.
- 7년간 대학등록금의 인상률은 억제 되었지만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자산은 12조원(32%)

1) 대학교육연구소 “고등교육예산 GDP 1% 확보 대선 공약 물 건너가나” 2015.9.18

2) 대학교육연구소 학자금 대출현황 2015.2.5

가 증가하였고 보유현금도 2013년 10조원으로 2003년 대비 2배 증가되었음. 이러한 대학의 자산 증가는 대학등록금에 의존한 결과인데, 지난 10년간 사립대학 법인이 학교 자산 증가에 기여한 금액은 1조7천억원으로 전체 자산 증가액의 14.2%에 불과함.

- 대학적립금도 2009년 7조원에서 2013년 8조1천억원으로 1조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2조2천억원으로 27%나 됨.
- 취업준비생이 늘고 있음.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것이 현실임.
- 졸업을 한 이후 취업준비생 흡수자들은 당장 생활비가 없어 알바를 하면서 취업준비를 함. 반면 금수저들은 어학연수, 고가학원, 스펙 쌓기 등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음. 또한, 한 번이라도 정규직에 진입한 경우는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으나 정규직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이에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되는 졸업생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목표

- ◎ 등록금 1백만원 상한제 실시
- ◎ 졸업 실업급여제 실시

## ㉸ 방법

- ◎ 등록금 1백만원 상한제 실시
  - 고등교육 정부부담 OECD 평균 수준인 GDP 1% 확대 (2016년 기준 6조7천억원 예산 더 필요) 할 때 현재 3조9천억원의 국가장학금과 합쳐져 10조원 예산 가능
  -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등록금의 단계적 인하를 등록금 상한제에 포함하고 정부 지원과 대학의 부담률을 정함 (등록금 자율화 폐지)
  - 사립대학의 법정부담 전입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는 예외조항 삭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할 경우 매년 2천억원 상당 예산이 확보됨. (2014년 법정부담전입금 49.8%)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법정부담전입금(a)	223,306,089	229,775,888
법정부담금(b)	407,295,015	460,972,978
비율(a/b)	54.8	49.8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 불필요한 기타 적립금의 적립을 금지하고, 매년 8천억원~1조원의 이월금에 대한 과다 기준을 정하여 이월금을 1천억원 수준으로 낮추도록 강제.

[대학 적립금 이월금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적립금	79,463	80,153	81,888
이월금	12,535	11,647	8,937
소계	91,998	91,800	90,824

출처 : 대학교육연구소

- 대학의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 공개 대폭 확대 및 국가보조금과의 연계, 시행 항목은 이월금 처리기준과 세부내역, 적립금 적립 계획과 이행여부, 감가상각 계산 기준과 내용, 건설공사 수의계약 내역, 사학연금의 세부내역, 입학전형료 및 입학금 세부내역, 적립금 투자내역에 대한 공개 확대

◎ 졸업 실업급여제 실시

- 졸업과 동시에 미취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함.
- 기존의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기에 새로운 기준이나 취업프로그램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의 일관된 기준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함.
- 졸업과 동시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연도, 대학교 졸업연도 학생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납입하게 함.

-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납입하게 함.(일부 고소득가구는 제외 가능.)
  - 졸업이후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과 프로그램에 따라 진학자 및 취업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과 프로그램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만 졸업 실업급여가 지급됨.
  - 알바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은 실업급여 대상자를 위해 EITC 청년층 확대 정책과 동시에 시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임.
  - 국가예산과 기금의 재정 칸막이 현상으로 인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이 실업기금에 편입될 수 있는 원칙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마련하여 재정의 칸막이를 허물고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청년수당 등 청년을 위한 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적은 예산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취지와 문제점**

- ◎ 2012년 19대 총선 유권자 중 40대 미만은 38.9%이나, 총선 당선자 중 40대 미만은 9명으로 3%에 불과함. 다양성과 비례성, 미래지향적 정치실현을 위해 청년세대의 정치진출이 확대되어야 함.
- ◎ 오늘날 청년세대는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놓여있음. 이는 일자리, 주거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청년세대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과제임. 청년계층의 요구를 직접 대변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함.
- ◎ 19대 국회에서 65세 이상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 발의 수 상위 10%를 차지한 의원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이었고,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청년 비례인 19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었음.
- ◎ 현행 선거법상 공탁금제도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청년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기회를 어렵게 하고 있음.
- ◎ 현재 선거권은 만19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피선거권은 만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음. 우리나라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부과되고 공무담임권이 인정되나 참정권만은 제외됨.
- ◎ 독일, 스페인, 캐나다 등은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 영국 21세, 프랑스 23세 등으로 하고 있음.

**㉸ 목표** - 청년세대의 직접정치 실현의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 보장함.

**㉸ 이행방법**

- ◎ 청년국회의원 20% 할당제 실시: 정당의 비례후보, 지역구후보 추천시 청년후보 할당 각각 10% 할당,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개정
- ◎ 청년후보 기탁금 등 국가 보장 : 공직선거법 제56조(기탁금) 개정
-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만18세)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거권) 개정

**㉸ 이행 기간** - 20대 국회 도입

## 정책 3

### 쉬운 해고 막아내는 한상균법 제정

#### ☞ 취지와 문제점

- ◎ 2016년 1월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공정인사지침은 근로계약 전 과정을 직무능력 및 성과 주의로 개편하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 공정인사지침의 문제점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내용을 정부의 행정지침이 법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을 자의적으로 넘어섰다고 할 수 있음.
- ◎ 대법원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때 해고가 가능하다”고 하였음. 반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능력부족이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서 통상해고가 가능하다고 하며, 기존 판례 법리에서 나온 적이 없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 없음에도 자의적인 해고의 가능성을 확대하였음.
- ◎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어 노동시장이 양극화 된다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주장에 불과함. 2014년 기준 한국의 정규직노동자 개별·집단해고 보호지수는 OECD 평균인 2.29 보다 아래인 2.17에 불과하였음.
- ◎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는 강행법규(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적용되는 법규)임.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의 하락을 강제하는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하는 것임.
- ◎ 정부의 노동개약 2대 지침은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해산, 전교조 법외노조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죽이기의 일환으로 2대 지침이 법률화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의 무력화가 예상되기 때문임.

#### ☞ 목표

- ◎ 근로기준법의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 ◎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강화
- ◎ 파견법 폐기

## ㉟ 방법

### ◎ 근로기준법의 해고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 폐지

- 업무능력이나 성과평가에 따른 해고 금지 조항 신설 및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교육과 업무를 병자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근로기준법 제23조)
-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징역과 벌금형 신설(구 근로기준법 조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리해고 조항 폐지

### ◎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강화(근로기준법 제94조 보완)

- 취업규칙의 변경에서 종합적 판단이 아니라 각각의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대해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임금, 근무시간, 휴가, 징계, 인사위원회 구성 외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각각 명문화)
- ※ 국회법 개정 보완 필요
  - 국회법에 행정입법 시정요구권 신설하여 행정지침이 현장에서 법률화 되는 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 파견법 폐지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 예산 소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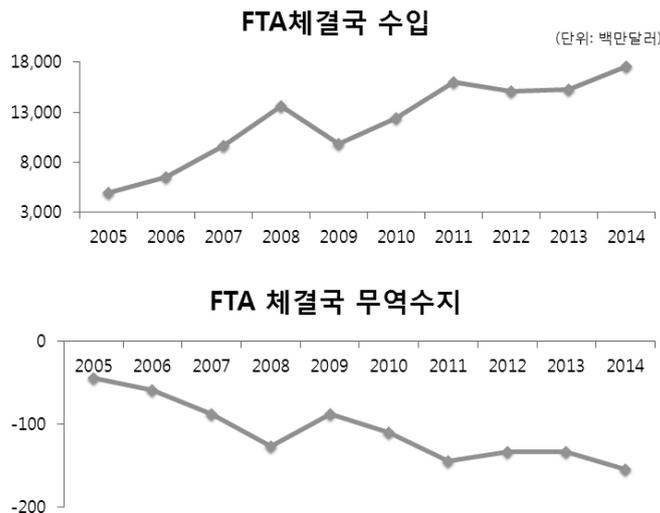
**정책 4**

농민수당 신설로 중소농 육성

**㉸ 취지와 문제점**

- ◎ 50여 개국과 맺은 FTA와 WTO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축산물 수입은 늘어나고 국내 농업 생산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농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음.
- ◎ 최근 정부는 기업농, 대농 육성과 6차 산업, 수출농업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하고 중소농에 대한 대책이 없음으로써 농촌사회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 중소농이 무너지면 농업의 다양성이 무너져 식량자급율이 더욱 떨어지게 되며, 농업이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농업 생태계마저 불균형하게 됨. 또한 중소농이 무너지면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농촌사회가 뿌리째 흔들리게 됨.
- ◎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농업 생태를 보호해 온 농민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더불어 FTA 등 개방농정으로 인해 농업에서 밀려나고 있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연도별 FTA 체결국 농축산물 수입 및 무역수지〉



□ 식량자급률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0	54.1	104.6	26.3	1.7	3.8	32.4	109.4	10.6
'11	45.2	83.1	23.5	1.9	3.6	26.1	107.3	9.7
'12	45.7	86.6	17.3	1.7	3.4	30.8	105.9	11.1
'13	47.5	89.2	20.5	0.9	4.5	29.6	106.5	12.3
'14잠정	49.8	95.7	26	1.1	4.2	35.9	106.3	13

□ 곡물자급률

양곡년도	계	쌀	보리쌀	밀	옥수수	콩	서류	기타
'10	27.6	104.6	25.1	0.9	0.9	10.1	98.7	9.7
'11	24.3	83.1	22.5	1	0.9	8	96.9	8.7
'12	23.7	86.6	16.5	0.7	0.9	10.4	95.8	10
'13	23.3	89.2	19.3	0.4	1	9.7	96.3	11.1
'14잠정	24	95.7	24.8	0.7	0.8	11.3	96.1	11.3

㉸ 목표

- 농업·농촌을 지키고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소농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함.

㉸ 이행방법

- '생태 농촌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약칭 농민수당)' 신설.
- 전국 112만 농가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월 20만원 지급.
- 이후 증액하여 농가수당이 농민 기본소득수준으로 발전.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지급 시작

㉸ 자원조달방안 등

- 약 1조 5천억 정부 예산 배정

## 정책 5

### 재벌세 제정!

#### ❧ 취지와 문제점

-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늘어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많은 재원이 필요함.
- ◎ 일부 재벌대기업은 이익규모가 큰 반면 나머지 경제주체들의 이익은 줄어드는 양극화 현상 심화. (트리클다운 효과 실종)
- ◎ 반면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되고 있음.
- ◎ 기업들의 세금감면 혜택의 대부분은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되고 있음.

#### ❧ 목표

- ◎ 과표 1천억원 초과 재벌기업 법인세율 상향하여 복지재원 10조원 마련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R&D 세액공제 등을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재벌대기업의 세금 특혜를 폐지함.

#### ❧ 방법

- ◎ 과표 1천억원 초과 재벌기업 법인세율 상향
  - 과표 1천억원 초과 재벌기업은 우리나라 300개 이하임.
  - 이들 300개 재벌기업은 세금을 초과하여 낼 여력이 있음.
  - 이들 300개 재벌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함.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기업 R&D 세액공제 등을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재벌대기업의 세금 특혜를 폐지함.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폐지
  - 대기업인 경우 R&D세액공제 폐지
  - 최저한 세율인상

**㉸ 취지와 문제점**

- ◎ 지상경제 : 이미 비현금화 사회 도래(낮은 현금 사용률)
- ◎ 지하경제 : 대부분 현금 사용, 탈루규모 30조원, 30조원으로 복지 가능
- ◎ 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GDP 15~25% 정도로 예측됨, 이는 탈루 규모로 25조원~40조원 이라는 의미
- ◎ 금융실명제가 반대 논리를 뚫고 시행 된지 20년간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불충분함.
- ◎ 지하경제를 없애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뇌물 등 범죄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는 제2금융실명제가 필요함.
- ◎ 지폐발행 중단(일천원 동전 출시)으로 고액 화폐를 없애 지하경제를 근원적 차단
- ◎ 뇌물, 청탁, 도박, 마약, 성산업 등 불법자금거래를 없애 범죄율을 낮추고 투명정치 환경 도움.

**㉸ 목표**

- ◎ 지폐발행을 중단하여 지하경제 근원적 차단함(일 천원 동전 출시)

**㉸ 이행방법**

- ◎ 지폐발행을 중단하고 액면가 일천원 동전 출시함.
- ◎ 외국인 관광객 현금 필요한 경우 체크카드 발행을 통해 불편 해소.
- ◎ 지폐발행 중단과 함께 FIU 고액현금거래 신고기준 금액을 점차적으로 낮춤 (일천만원에서 백만원 까지).
- ◎ FIU 고액현금거래 신고기준 금액을 낮추면 이후 불법거래를 통해 쌓아놓은 현금을 지속적으로 암거래하기 어려워짐.
- ◎ 국정원 및 검찰 등의 계좌추적 요건을 강화하고 추적 기록 공개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함

## 정책 7

### 0~14세까지 병원비 국가 책임제 시행

#### ㉸ 취지와 문제점

- ◎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
  - 출산은 부모의 몫이지만, 태어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의 건강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 그러나 소아나 청소년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신생아를 제외하면 50% 초반대
  - 전체 보장률 62%나 고령층(64~69%)에 비해 매우 낮은 편
  - 미래세대 육성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정작 아동의 건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 아동의 질병이나 사고 등에 따른 병원비 걱정 때문에 많은 가구가 소아나 청소년 대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 특히 10세 미만 소아의 가입률은 84.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전체 가구 대비 10세 미만은 월 48,429원을, 10~19세는 월 39,270원을 지출, 가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음(0~14세 총 민간의료보험료는 연간 3조9천억원)

#### ㉸ 목표

- ◎ 아이를 키울 때 병원비만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줘야
  - 불의의 질병이나 사고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에 따르는 비용만큼은 국가가 해결해주는 게 도리
  - 전면 무상의료는 장기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 ㉸ 이행방법

- ◎ 민중연합당의 해법 : 0~14세 병원비 전액 지원
  - 출생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외래, 약제비, 입원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비 모두를 국가에서 책임짐
- ◎ 비급여항목 보장성 확대
  - MRI, 정신과 치료 비급여(상담) 등도 건강보험 보장 범위 확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 0~14세 무상의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분히 감당 가능
  - 0~14세의 본인부담 병원비를 전액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2조 3,837억원 (비급여항목 보장성 확대는 별도 추계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제외)
  - 현재의 건강보험 흑자 자원 13조원에서 조달
- ◎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로 국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매년 이를 미달함.
  - 법정 지원 비율 20%를 준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30%로 확대
  - 한편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은 2016년 12월 말 종료 예정이나,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당연히 연장되어야 함.

## 정책 8

### 정치개입 근절! 국정원해체법 제정

#### ㉸ 취지와 문제점

- ◎ 2012년 12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판단하였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까지 유죄로 인정하여 원세훈 전국정원장을 법정구속하였음. 반면대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증거능력부족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파기 환송하였음. 이러한 판결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 국정원은 대선개입 뿐만이 아니라 2014년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2015년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 등,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사찰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음.
- ◎ 2016년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직권상정까지 요구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 까지 제정될 경우 국정원이 전 국민을 일상적으로 감시하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 따라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방지와 국민에 대한 일상적 감시를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권 및 국가보안법 수사권 등의 권한을 폐지하도록 해야 함.

#### ㉸ 목표

- ◎ 국정원 국내 정보수집 및 수사권 폐지, 해외정보 수집권만 부여
- ◎ 테러방지법 폐지

#### ㉸ 방법

- ◎ 국정원 폐지법 제정 및 테러방지법 폐지

**㉸ 취지와 문제점**

- ◎ 민주공화국의 공적, 종편
  - 생존 위기에 내몰려 거리로 나선 시민을 '폭도', '사회적응 장애'라 매도하고 경찰의 폭력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에 막말을 퍼부은 종편
  -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들을 향해 '기저귀' 운운하며 조롱
  - 5.18 광주항쟁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
- ◎ 견해가 다른 사람을 대화와 비판이 아닌 증오와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찍으며 종북몰이의 침병을 자처
- ◎ 태생부터 불법, 특혜로 연명하는 종편
  - 종편을 탄생시킨 2009년 7월 '미디어법 날치기'에 대해 헌법재판소 조차도 미디어법 날치기는 위헌·위법임을 인정
  - 경쟁력이 취약한 종편은 방송사업자의 의무전송, 황금채널, 광고 규제 완화, 방송발전 기금 납부 유예와 같은 특혜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

**㉸ 목표**

- ◎ 종편은 퇴출 대상
  - 다양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수구기득권 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종편은 부분적 '규제'가 아니라 '퇴출' 대상
  - 종편에 허용된 과도하고 비정상적인 특혜만 없애도 종편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퇴출이 가능

**㉸ 이행방법**

- ◎ 종편 소유구조 정상화하면 조·중·동은 종편에서 손 떼야
  - 여론 독점을 막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에는 소유 지분을 엄격히 제한 하지만, 지상파에 맞먹는 혜택을 누리는 종편은 이러한 제한을 크게 완화시켰음
  - 종편 소유구조를 지상파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종편은 신문사, 외국기업, 대기업 등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조·중·동이 손을 떼야 함

◎ 종편 특혜 철폐

- 전국 식당 어디서나 종편이 켜져 있는 배경인 '의무재전송'과 '황금채널' 특혜 폐지
- 방송 제작 및 편성, 광고 규제의 특혜를 지상파 수준으로 환원

**㉸ 취지와 문제점**

- 개성공단 중단은 2013년 개성공단 재가동 시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 가동 보장’이라는 남북의 합의를 깬 것임. 2012년 북의 핵실험과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개성공단을 유지했던 것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있음(영국 리즈 대학 명예 선임연구원 에이드 포스터 카터, 한겨레신문 2016.2.12.)
-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제3항(대통령은 국회의 체결 · 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을 위반한 것임.

-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비준동의안 2003.6 국회 본회의 가결
- 남북 상사중재위 구성 합의서 및 남북간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개성공단 검역 및 통관 합의서 체결 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2004.4.9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005.12.29 제정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2007.5.25. 제정

- 단절된 남북 간의 대화를 즉시 복원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추진해야 함
  -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더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 북한 체제를 변화 하는 시도는 계속되어 왔지만 해법이 되지 못하였음. 제재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북의 핵개발은 계속 진행된 데서 보듯 대북 제재는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음
  - 최근 미국도 대북 제재가 북을 협상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목표 및 방법**

- 우리 정부가 대화를 주도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화 틀을 만들어가야
  - 기존 6자 회담의 틀에서는 북핵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 남북과 미중이 참여하는 4자회담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4.16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 추진된 바 있고, 10.4 공동선언에서도 남북이 이를 합의한 바 있음
- 4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및 평화협정 체결 등을 논의,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해법을 만들어 가야 함.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복지국가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복지국가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비례대표제 확대
2	격차 없는 사회, 일하고 싶은 경제
3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4	국가가 보장하는 양육제도
5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연동한 등록금 지원정책
6	더불어 연금 60만원
7	건강보험 하나로
8	원·하청 공동책임제도
9	공공 사회서비스 30% 프로젝트
10	행복재정3대원칙



## 정책 1

비례대표제 확대로 정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후진성 : 두 거대 정당 간 영호남 지역주의와 인물 중심의 패거리 정치
- '넓은 정치'의 원인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의 문제 :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 득표율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다수표를 얻는 1명 만 당선됨. 이로 인해 낙선자에게 간표는 모두 사표가 됨

19대 총선-영남	새누리당	민주당
득표율	54.7%	20.1%
의석점유율	94%	4.5%

- 각 정당이 얻는 득표율과 실제 의석 수 간의 괴리로 유권자의 민의 왜곡
- 그 결과 정당의 지역주의 고착화, 국가 전체를 고려해야 할 국회의원도 지역구 관리에만 치중하게 되고, 특정 인물에 의한 공천이 당락을 좌우하면서 계파 줄서기로 다수 국민들을 위한 정책 실종

### 목표

- 득표율과 비례하도록 선거제도 개혁
- 지역구 관리에만 급급하지 않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

### 이행방법

- 선거제도 개혁
  -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도입 :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로서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에 비례하여 총의석을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총득표율과 연동되도록 조정
-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
  - 중기 : 현재의 300석 내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비중을 1:2로 조정

- 장기 : 국회의원 세비 총액 내에서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 수 줄이기

### ⊗ 이행 기간

⊙ 20대 국회 회기 내 선거법 개정

### ⊗ 자원조달방안

⊙ 추가적인 자원 필요 없음

## 정책 2

격차 없는 사회, 일하고 싶은 경제 :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지난해 주요 대기업의 등기임원 중 5억 원 이상의 보수 수령자는 227명(2015,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의 연봉 수준도 역대 수준. 반면 최저임금은 해당기업 최고 임금의 1/2,000에 불과할 정도로 임금 격차 심각
- 전체 임금 근로자의 1/3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54.4%,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30~40%에 불과(2015, 한국노동연구원). 기업들의 외주화와 초단기 고용계약 등 비정규직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정규직 채용시 ‘기간제한’을 연장하는 등 관련 법률 “개악”을 추진 중
- OECD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1,796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57시간으로 3위(2014, OECD).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삶의 질 하락
-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노조들이 약 천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이 위축됨
- 우리나라의 낮은 최저임금과 심각한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증가, 장기간의 노동시간 등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며,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이 제한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 목표

- 임금 격차 축소
- 일자리 격차 축소
- 노동시간 격차 축소
- 노동권 보장

### ㉸ 이행방법

- 임금 격차 축소 :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간의 격차 조정
  - 최저- 최고임금 연동제 : 고위 공직자 및 일반 사기업의 최고 임금을 최저 임금에 연동

- ※고위 공직자의 경우 최고 연봉을 최저 임금의 9배로, 장기적으로 사기업의 경우도 최고연봉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고, 연봉 협상 시 최고임금 인상률 연동
-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현 6,030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 정책과 연동하여 단계적 인상
- ◎ 일자리 격차 축소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 비정규직 사용 사유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 원칙적으로 정규직을 고용하되, 불가피한 임시적 고용 이유로 가능한 경우(병가, 휴가 등으로 결원을 잠시 대체 시, 계약기간이 정해진 사업 등)를 명기하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도입
  - 기존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의 단계적 추진
- ◎ 노동시간 격차 축소 : 법정 근로시간 37시간(연장근로 8시간)으로 조정
  - 현행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37시간으로 축소, 연장근로는 주 8시간으로 축소하여 일자리 나누기를 제도화하여 추진
  - ※OECD 평균수준으로 노동시간을 줄일 경우 최소 62만개(1주 52시간 기준)에서 최대 105만개(1주 48시간 기준)의 신규 일자리 창출(2016, 민주노총)
- ◎ 노동권의 보장 : 파업 관련 민사소송 금지 등
  - 노동 쟁의로 인한 민사소송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 특히 정리 해고를 사유로 하는 쟁의는 민사소송 금지

## ㉞ 이행 기간

- ◎ 20대 국회 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㉞ 재원조달방안 등

- ◎ 소요재정
  - 최저임금-최고임금 연동제 : 비예산 사업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중소기업 지원분만 재정 소요, 세부내용은 추후 산정
  -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법 : 비예산 사업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비예산 사업
  - 법정근로시간 37시간(연장근로 8시간 초과 금지) : 비예산 사업
  - 노동권 보장 : 비예산 사업

**㉸ 현황과 문제점**

- ◎ 청년 실업률 9.2%로 급증
- ◎ 졸업 후 구직기간 평균 12개월, 구직활동으로 인해 청년 빈곤률도 급증
- ◎ 취업 정보의 분산과 공정성 없는 민간 구직 사이트들로 인한 구직 정보 취득제한
- ◎ 대학과 민간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취업 담당관, 대학 청년고용센터로 인해 고용 지원 서비스의 질이 낮고 홍보 미흡

**㉸ 목표**

- ◎ 구직 시점까지 청년고용수당 제공
- ◎ 구직 시기까지 청년고용담당관의 1:1 취업 알선서비스 제공
- ◎ ‘자브로(job으로)’ 사이트 운영으로 공공 고용 알선 지원
- ◎ 인력, 교육, 소득보장의 통합적, 체계적 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 이행 방법**

- ◎ 청년 고용 및 고용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법에 명시
- ◎ 구직 시점까지 청년 소득 보장
  - 구직 활동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청년고용담당관 알선서비스) 참여 조건
  - 졸업 후 구직 기간 동안(평균 12개월) 월 60만원 지급
  - 각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전자카드 형태로 지급  
(직업교육 관련 용도로 사용 시 카드할인 혜택 부여)
- ◎ 구직 시기까지 청년고용담당관의 책임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
  - 노동부 및 산하 기관 소속 청년고용담당관이 고용지원센터 및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근무, 1:1 매칭을 통해 책임지고 일자리 소개 및 지속적인 구직활동 지원
  - 고용 알선, 직업 교육 계획 수립 및 고용되기 전까지의 청년 소득 보장 등을 담당
- ◎ 공공 구인 구직 사이트 ‘자브로(job으로)’ 운영
  -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익 및 시민단체 등의 구인/구직 현황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 구축

- 공공기관, 민간기업, 공익 및 시민단체들의 구인/구직 현황 자료 정기적 파악 및 근로 감독과 연계한 실태 점검

◎ 인력, 교육, 소득보장의 통합적, 체계적 연결서비스 구축

- 청년 고용 소득 보장, 청년 고용 서비스, 자브로 사이트 운영을 중앙정부(지자체 지원)로 공공 단일화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고용 지원 서비스망 구축

## ㉞ 이행 기간

- ◎ 2016년 준비 후 2017년부터 시행

## ㉞ 자원조달방안

◎ 소요 자원 : 총 2조 1,500억 원/년 +  $\alpha$

- 청년고용수당 : 1조 1천 6백억 원(2015년 기준 미취업자 16만명, 월60만원 지급)

- 청년고용담당관 임금 : 99백억 원

※청년고용담당관 1명당 연간 청년 구직자 100명 담당 시 최소 필요 인원 1,600명

※전국 동 단위 주민자치센터(1,974개), 읍 단위(138개) 등 2,112명과 고용 지원센터

추가 배치 등 2,500명

※2015년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 임금 330만원 기준

- 자브로 사이트 개설 : 추후 산정

◎ 자원조달방안

- 현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들어가는 예산 70억 8,300만원을 전용

- 비과세 감면 제도 단계적 철폐를 통해 고용지원을 위한 세수 마련

㉞ 현황과 문제점

- ◎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1로 전 세계 190여개 국가(UN 회원국 기준) 중 홍콩(1.20), 마카오(1.19) 등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
- ◎ 2012년 보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 가구 중 23.7%는 보육비 지원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
- ◎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1)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 2)취직과 고용유지에 대한 어려움, 3)양육지원 시스템의 미비 등으로 나타남. (※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등 2005)  
⇒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육아지원제도의 미비’에 기인.
- ◎ 현행 출산·육아휴직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금 근로자)을 대상으로 실시
- ◎ 양적 지원 확대(8.3조원)에도 불구하고 공공 인프라·평가인증·교사지원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시설(보육료)지원에 집중되어 자녀 양육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
-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나 시설수가 적어 대기 아동 수가 매년 증가(2011년 6월 기준 현원 14만 117명, 대기 아동 16만 8,153명)
  - 2012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5.1%,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 22%, 2012년 OECD 국가 평균 공립 유치원 수용률 68.6%인 OECD 국가의 1/3수준(보건복지부, 2014보육 통계)
- ◎ 보육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의 상당수 보육교사는 비정규직
  - 보육교사의 1인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28시간인데도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24%에 불과
  - 보육교사의 기본 급여는 약 131만원,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의 임금은 122만원 (보건복지부 「2012년 전국보육교사 실태 조사」)
- ◎ 보육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가 양육의 책임을 공유하는 적극적인 대처 필요

## ☞ 목표

- ◎ 육아 지원사업의 공공성 확대
- ◎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의 제공
-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장,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
- ◎ 육아지원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 이행 방법

- ◎ 양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법으로 규정
- ◎ 산전후 휴가와 육아 휴직의 국가 보장
  - 고용보험의 “가족보험(가칭)” 급여 신설 : 여성의 육아와 출산에 대해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족 급여 신설, 상시적 추가적인 여성 고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중소기업들에게 가임기 여성 고용 시 추가 고용인원의 인건비 지원(기간제 교사 채용의 사례 참조)
- ◎ 국공립 보육시설의 점진적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현재 이용 아동 비율 대비 30%로 확대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화, 공공건물 어린이집 설치 확대, 민관 연대를 통한 기부 채납과 운영비 지원,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 ◎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대
  -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과 평가 인증제 연계, 퇴출 시스템 구축
  - 학부모 운영위원 및 감독관 제도 도입으로 민간 어린이집의 공공화
- ◎ 아동수당 지급
  - 보육서비스 외에 다양한 육아 지원 현물 서비스 제공, 아동이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하는 형식으로 육아로 인한 추가 비용을 국가가 지원
  - 양육수당을 아동수당에 통합
  - 궁극적으로는 만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되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와 기존의 둘째 아이부터 시작, 지급 범위 확대
-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정규직화와 평가 인증 연계

-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수준 인상

## ㉟ 이행 기간

◎ 2017년부터 단계적 추진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소요 재정

◎ 아동수당에 대한 재정 추계<sup>1)</sup>

- 매년 출생아 숫자 + 둘째 자녀부터 단계별 확대(예시)

단계	지원 대상	예산액(백만 원)
1단계	둘째 아 이상 5세 이하 하위 50% 지급	1,283,388
2단계	둘째 아 이상 11세 이하 하위 50% 지급	2,916,317
3단계	2단계 + 둘째 아 이상 5세 이하 전체 지급	4,199,705
4단계	둘째 아 이상 11세 이하 전체 지급	5,832,634

- 매년 신규 출생아부터 지급할 경우(예시)

연도	출생아 수	소요 예산(만원)
2010	471,171	56,540,520
2011	471,265	56,551,800
2012	484,550	58,146,000
2013	436,455	52,374,600
2014	435,435	52,252,200
계		275,865,120

◎ 보육교사 정규직화 등 타 사업은 추후산정

- 자원 조달방법 : 불필요한 토목과 건설 관련 예산 삭감으로 마련

1)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 혁명』, 2007.

## 정책 5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연동한 등록금 지원정책 :**  
대학의 질을 높이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등록금 수준 : 연간 700~1,000만원에 이룸
  -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의 70% 이상이 등록금 마련 목적
  -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등 기존 제도들이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사립대학들은 9조원 이상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중
  - 연간 3.9조원의 정부의 학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사립대학 “퍼주기”의 형태가 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대학의 재정운용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소송 등 스스로 문제 개선에 나서는 상황임

### ㉸ 목표

- 등록금 낮추기 3R 플랜 마련
- 대학 사학 재단의 지배구조 민주화
- 등록금완전후불제와 학생 지원금 제도 실시
- 대학 행복 랭킹 추진

### ㉸ 이행방법

- 등록금의 수준과 집행의 정상화
  - 합리적인 예산 편성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통해 등록금 예산 및 결산의 심의 강화
    - ※대학의 재정과 결산 공개와 연동한 예산편성 모니터링
  - 대학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 대학 평가와 연동한 대학 직접 지원
    - ※서울시립대와 같이 지원금과 연동하여 등록금 고지서에 금액을 낮추어 고지
    - ※대학 지원금은 전임교수 확보, 실험실습 및 도서관 장서 확보 등 대학의 질적 개선에만 투입하도록 규정

- ◎ 대학 사학 재단의 지배구조 민주화 : 직접 지원액과 연동한 공익이사 비율 확대
- ◎ 등록금완전후불제
  - 학비, 생활비 등 학습에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하여 학업기간 동안 무이자 대출
  - 졸업 후 취업을 하여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 ~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원금 상환

## ㉞ 이행 기간

- ◎ 2017년부터 등록금 낮추기 플랜을 통해 등록금 인하 추진
  - 이행 기간 동안 등록금은 등록금완전후불제를 통해 학생들의 부담 경감

## ㉞ 재원조달방안

- ◎ 소요비용
  - 등록금완전후불제 : 연간 5조 5천억원
    - ※연간 이자비용(10년만기 국고채 금리 3.2% 기준, 금리 인상 예상) : 2천 6백억원
    - ※미취업자 미상환비용 : 1조 5천억 원
    - ※반값등록금 국가지원 국가장학금 : 3조 9천억 원
  - 등록금 낮추기 플랜 : 각 대학별 이월금 및 적립금 규모 조사 실시 후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 추후 산정
  - 기타사업 : 비예산 사업
- ◎ 재원조달방안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업의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 마련
  - 기존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재정 투입

## 정책 6

노인빈곤 벗어나는, '더불어 연금 60만원' :  
노인 빈곤의 해소는 최저생계비 보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 급속한 고령화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수 670만명,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의 4배임(2014, OECD). 즉, 노인 2명 중 1명의 가처분 소득이 국민 전체 중위소득의 50% 이하임
- ◎ 최저생계비 미만인 노인은 132만 가구이며, 생계비 부족분은 월평균 29.9만원으로 추정됨 (2014, 현대경제연구원)
- ◎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짐
  - 대상의 협소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노인은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7%이며, 급여액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32.3%에 불과하며 그 중 30만원 미만인 수급자 비율이 61.2%, 기초연금은 급여액이 최대 20만원에 불과함
  - 급여수준의 빈약 : 세 급여의 중복 수급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함.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노인의 경우, 국민연금 혹은 기초연금 수급 시 해당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여서 지급됨. 또한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되어 가입기간이 길수록 액수가 줄어들게 됨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제도들이 보장하는 노후소득의 크기는 생애소득의 16.3%로 OECD 평균인 58.6%의 1/3도 안됨, 이는 현 제도가 실질적으로 노인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노인들의 가처분 소득 부족으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저하가 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 목표

- ◎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생계비 보장

## ㉸ 이행방법

- ◎ 모든 노인들에게 최저생계비 보장
  - 노인들에게 최대 약 60만원을 보장하는 '더불어 연금' 도입

- 대상 : 65세 이상 모든 노인
- 방식 :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적 이전소득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소득 총액이 최저생계비(2016년 약 65만원) 이하일 경우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
- 노인 1인 가구와 2인 가구 차등 지원
  - ※1인 가구 : 최저생계비 65만원 기준
  - ※2인 가구 : 최저생계비 110만원 기준으로 각각 50%씩 지급

### ㉟ 이행 기간

- ◎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 ㉟ 재원조달방안 등

- ◎ 소요재정 : 연간 4조 7천억 원 ~ 5조 4천억 원
- ◎ 재원조달방안 : 법인세 세율 인상회복(25%)을 통해 세수 마련

## 정책 7

민간보험 대신, 건강보험 하나로 : 가계파탄으로 이어지는 높은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습니다.

## ㉞ 현황과 문제점

- ◎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함. 특히 중증질환의 치료비는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음
  - 2013년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1.8%이고,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38.2%임. 이는 OECD 평균 본인부담률 19%의 2배 수준임
  - 현재도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100%를 부담해야 하므로 실제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진료비 상한제도의 상한보다 훨씬 높음
  - 과도한 의료비는 가계 파탄의 3대 원인 중 하나임. : 기초수급자 편입 사유는 실직(29%), 수입 감소(22%)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18%, 보건복지부, 2011)로 나타났음.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생활비나 저축, 민간보험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세를 줄이거나 재산을 처분한 가구가 41만 가구, 사채 등의 빚을 진 가구가 13만 가구에 달함
- ◎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진료비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하루 평균 간병비(24시간)’는 2010년 현재 6만 4,870원으로 월 194만원에 달함
  - 대부분(75.4%)의 종합병원 환자(보호자)는 자신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직접 고용한 믿을 수 있는 간병사의 서비스를 희망함
  - 전국 1,000개가 넘는 요양병원의 80%는 간병비를 따로 더 내야 입원할 수 있음. 공동 간병비는 보통 월 50만원이어서 입원비를 합치면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부담
- ◎ 높은 의료비 부담은 민간의료보험의 높은 가입률로 이어짐
  - 전체 가구의 81.4%, 20세 이상 성인의 69.8%가 질병보장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이들이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민간의료보험료도 월 평균 10만원을 넘음. 이는 국민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자가 부담 건강보험료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임

## ㉞ 목표

-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병원비 연간 본인부담액 상한 100만원 이내
  - 현재의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항목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본인부담률을 10%

로 낮춤 : 2017년도부터 시행, 소요 재정 : 8.7조원(2014년 기준 추계)

※입원진료 건강보험 보장률 90% 보장 :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차액을 포함한 입원 분야의 비급여 진료에 전면 건강보험 적용

※2014년 입원진료 보장률을 63%로 가정하고(2013년 본인부담률 38.2%), 이를 90%로 상향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 병실차액, 치료재료, 간병비 등의 급여화

-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 급여로 전환한 후, 연간 본인 부담 진료비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한정

※소요 재정 : 3.9조원(2012년 기준 추계)

◎ 간병을 건강보험에 적용함으로써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책임지도록 함

- 병원이 제대로 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간병 인력을 채용하고, 간호사를 증원할 수 있도록 간병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포함하여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함.

-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병인의 처우 개선, 6인 병실을 기준으로 4인의 간병인이 3교대 근무를 건강보험의 보상 기준으로 적용

- 간병 급여화 : 소요재정 1.1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의 연차별 간병 급여화 확대 소요재정 추계 결과 적용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및 중소기업사업장 사용자 부담 보험료 지원 : 소요재정 0.5조원

-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

- 상대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15% 소득계층에 대해 무이자로 건강보험료를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대상자의 20%가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의 소요재정 산출)

- 종업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재정 상태가 열악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분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

## ⊗ 이행방법

◎ 소요재정 확보

-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보험료 수입 기준 20%) 시행

- 부족한 재정은 건강보험료를 인상

## ㉞ 이행기간

- ◎ 2017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국고지원 사후정산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 ◎ 2016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건강보험재정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의결

## ㉞ 재원조달방안 등

-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요재정 확보 방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2.9조원의 추가 보험 재정 확충(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추계 결과, 전체 국민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계층의 보험료 부담 증가)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과 건강보험료 수입 증가(부과체계 개편, 보험료율 인상)로 인한 3.6조원 국고 지원액 추가 확보)
  - 건강보험료를 약 20% 인상하면, 국민 부담 추가 보험료가 4.6조원, 사용자 부담 추가 보험료가 3.2조원으로 총 7.8조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 확보
-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월평균 세대 당 건강보험료는 현행 추세 유지 기준(2015년) 9만 4천원에서 11만2천원으로 약 1만8천원 인상, 1인당 건강보험료는 4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약 8천원 인상

### ㉞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소득 양극화의 문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불평등에 기인
  - 대부분의 위험과 책임은 하청기업으로 전가되는 반면, 이익은 원청기업으로 집중
  - 원청기업의 부당노동행위나 기타 불법노동행위로 인해 하청근로자의 권리 침해
  -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에 노동시간과 노동여건 등에 있어서 차별, 특히 임금상의 차별이 심각하고 4대보험이나 사내 복지 혜택 등에서도 차별이 생겨나 간접소득상의 불평등도 고착화
  - 하청기업이 파산되는 경우, 하청근로자의 체불 임금 등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 산업재해의 책임이 재정능력이 부족한 하청수급인에게 집중되어 재해당사자가 보호되지 않는 상황 발생
-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청기업들은 점점 더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원청과 하청 간의 불평등이 시작됨
  - 파견근로와 하도급은 파견 받은 기업과 원청기업의 ‘사용자성’이 부정되어, 파견회사, 하청기업에게 노무관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맡기는 형태임
  - 원청기업은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의 확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개선하며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 2006년 기간제법 시행 이후, 원청기업은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 등을 통해 노무관리비용을 절감하고 노조와의 협상을 회피하며 노조의 활동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함
- 파견근로, 외주화, 사내하도급 등은 산업현장의 안전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하청근로자에게로 돌아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산재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최고임. ILOSTAT의 2012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십만인률(십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수)은 7.3으로 OECD 평균인 2.6보다 약 3배나 높음(박두용, 산업재해 예방-보상제도간 합리적인 연계방안, 2014).
  - 산업재해의 경우, 원청근로자 보다 하청근로자에서 2.53배 더 자주 발생했고, 자신의 소속 업체가 원청기업인지 하청기업인지를 몰랐던 노동자에게는 사고가 4.57배 더

찾았음(이들은 하청기업에 속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이 더 높다고 추론 가능)

- 우리나라 기업들은 값비싼 안전설비를 하는 것보다 사망자에게 보상비를 내고 다른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산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 정부통계는 산재보험 수혜자에 한정되므로 산업재해의 실제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비용의 하청기업으로의 전가와 사각지대 증가

- 산재보험법상 건설업 등에 있어서는 원청기업이 산재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음. 다만, 원청과 하청간의 계약에서, 하청기업이 산재보험을 책임지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는 하청업체에 책임이 있음. 현실에서는 원청기업이 계약을 할 때 산재보험을 하청업체가 맡도록 강요하고 있음
- 이런 상황은 고용보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영세한 사업주들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산재보험(고용주와 사용자)이 담당해야 할 부담들이 국민건강보험(모든 국민)으로 전가됨

-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재해는 산재보험을 통해 사용자에게 진료책임을 부과함. 그러나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 보니,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어, 사업주가 져야 할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국민)에게 전가됨
- 산재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산재보험이 건강보험 보다 더 나은 서비스(휴업급여, 재발시 재치료, 재해보상과 연금 보장)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이나 사용자와 고용주의 회유와 방해에 의해 건강보험을 택하고 있음

## ☞ 목표

- ◎ 위험, 책임, 비용의 하청기업으로의 전가 방지
- ◎ 하청근로자의 노동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
- ◎ 산재축소와 산재처리의 합리화
- ◎ 하청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
- ◎ 산재보험의 정상화와 건강보험으로의 비용 전가 방지

## ㉟ 이행방법

### ◎ 하청근로자에 대한 원청사용자의 '사용자성' 인정

- 파견근로이나 도급관계를 통해 같은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를 작업공정에 투입하는 경우, 사용주가 고용주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파견과 하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층적 사용자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함
- 원칙적으로 고용주인 수급인의 사업주책임과 더불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병존시켜야 함. 특히 기존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의 체계를 제도화해야 함
- 원청사업자를 중심으로 각 관련 사업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정보제공 및 조치확인 그리고 기록의무를 원청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책임의 기본구조를 정립해야 함
- 이를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일부 개정해야 함

### ◎ 노무관리의 공동책임체계 구축

- 사용사업자와 파견사업자, 원청기업과 하청기업이 노사교섭에 함께 참여
- 노무관리비용의 공동부담
- 하청에서 일어나는 부당노동행위나 기타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 불법노동행위의 확대 및 철저한 적용
-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 사이의 차별적 처우를 시정함에 있어서 공동책임 부과
- 하청기업 파산 시 체불임금 등에 대해 공동책임 부과

### ◎ 하청기업 산재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이외의 자로 확대
- 원청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산재사망 시 처벌, 산재 보상 등의 공동책임을 부과
- 원청사업주가 안전교육과 안전정보의 제공, 안전보건관리자, 안전수칙 등을 직접 책임 지도록 함
- 공동책임의 회피 정도에 의거하여 산재보험료 조정
- 하청사업주에게 원청 작업장의 장소, 설비, 공정에 대한 권한 부여
- 안전보건위원회의 정보제공 및 사내하도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역할 강화
- '작업중지권'을 근로감독관에게 부여

### ◎ 유해위험작업 도급 금지

- 제4차 산재예방 5개년계획(2015~2019)에 따르면, 유해위험작업 도급 시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장이 확보되도록 도급인가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만 있음

- 하청근로자의 안전보장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조치, 즉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자체를 금지시켜야 함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 확충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재로 의심되는 질환 중 50만원 이상 진료비가 지급된 보험 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장, 그리고 근로자를 조사하여 산재 미보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하지만 산재은폐 적발 관련 전담 인력이 매우 모자란 상황임(국회예산정책처, ‘2011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따라서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조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시급함

## ㉞ 이행기간

- ◎ 2017년부터 적용

## ㉞ 자원조달방안 등

- ◎ 미예산 사업이므로 자원조달 불필요

### ㉞ 현황과 문제점

◎ 민간주도의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 의료서비스, 육아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즉 필수 사회서비스임. 현재 이 서비스들은 민간 부문에서 90% 이상을 제공하면서 공공성의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
- 2013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이고 공공병상의 수는 9.5%에 불과. 이로 인해, 병원 간의 경쟁 심화, 국민의료비 증가, 의료자원의 불균형 분포,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 저하 등이 발생함
-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과 요양공동생활가정)이 영리화와 시장화에 의거하여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심지어는 시설 내 노인방임 사례 증가
- 민간이 주도하는 필수사회서비스는 질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

◎ 민간 주도에 따른 서비스 미충족의 문제

- 필수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력 부족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을 고통 속에서 살거나, 직접 제공함으로써 다른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음.

◎ 국공립 시설에 대한 높은 국민적 요구

- 민간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확충 필요
- 필수 사회서비스의 전달체계 상에서 공적 서비스가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기 위해 최소한 전체 시설 대비 30% 수준이 공공화 되어야 함
- 국공립 시설의 확대는 각각의 필수사회서비스의 수가를 조절하고 질의 향상을 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분야에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냄

◎ 공공부분 고용의 낮은 비중

- OECD국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전체 고용의 30%가 공무원, 공기업, 공사 등 공공분야

에서 담당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870만 근로자 중 10% 미만만 공공에서 고용하고 있어 청년 일자리 부족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㉞ 목표

- ◎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국공립 기관 및 공공 기관의 비중을 30%까지 상향
- ◎ 필수사회서비스의 제공체계를 공고히 하여 기본적 삶의 안전망 확보
- ◎ 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 ◎ 사회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통해 2027년 까지 전체 고용의 30%를 좋은 일자리인 공공 부분에서 만들기

## ㉞ 이행방법

- ◎ 국공립 시설의 확충에 대한 국민적 논의
  - 국공립 시설을 신설 확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적 재정이 소요됨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전국적으로 개최. 특히, 논의과정에서 공공이 민간보다 목표달성에 더 효과적임을 이해시키고, 이로부터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냄
- ◎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30% 달성
  - 필수서비스의 공적 확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음.
  - 각 영역에서의 30% 달성은 향후 있을 대선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2027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표치 30%는 2027년까지의 목표치이고 장기적으로는 50%가 목표임
- ◎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충 방안
  - 연도별 보육대상 아동수의 추이와 이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고려
  - 국공립 보육시설 30%를 달성하기 2027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9,994개 필요, 한 해 평균 767개 신규 공급
  -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비용은 396m<sup>2</sup> 이하의 경우 505백만 원, 396m<sup>2</sup> 초과인 경우 1,887백만 원으로 평균 1,320만원
  -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을 위해 2027년까지 총 13조 1,920억 원 소요, 매년 1조 14억 원 소요

- 아동대 교사 비율을 OECD수준으로 상향 조절하고, 보육교사 신분보장,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개선 및 급여 정상화를 통해 1급 정교사의 배치
- 신설 외에도 가정형 어린이집의 확대 및 국 공립화 방안, 국공립화를 전제로 한 종교 법인의 설립 지원, 민간 시설의 기부체납을 통한 공공화, 민간 어린이집의 시설 및 인건비 지원과 연동한 공익이사 확대를 통한 공공화 등 다양한 방안 추진
- ◎ 학생 대 교사 비율의 정상화로 공교육의 질적 개선
  - 학생 숫자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장, 교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을 제외하고 수업하는 시수에 따른 OECD 기준으로 교사 대 학생 숫자를 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아직도 137,000명 부족
  - 단계별로 교사 숫자의 정상화를 통해 수준별 이동수업, 토론형 수업, 학습계좌 이력관리제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적 향상
- ◎ 사업장내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간호사 배치
  - 전국의 영세 중소기업에 안전보건공단 소속의 준공무원 신분의 순회 산업보건 간호사 및 산업안전기사 6,000여 명 파견 배치
  - 1인당 5개 이상의 사업장을 담당하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산업보건 지원 및 지도
  -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가동 중지,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 부여
- ◎ 공공의료 30% 확충 방안
  - 현재의 병상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전체병상 중 공공병상의 비중을 30%로 확충
  - 2013년 현재 총 병상수는 629,629개이며, 이중에 공공 병상수는 대략 6만개임. 전체 병상의 30%는 약 19만개이므로, 추가로 약 13만개의 공공 병상 필요
  - 전체 급성기 병원은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이므로 시설이 없는 지역은 신축(17개소)하고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은 민간 시설을 매입하거나 기부체납을 받는 방식(17개소)으로 확보
  - 민간병원의 매입이나 개축의 비용은 약 25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하고, 신설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916억 원 소요
- ◎ 공공 장기요양시설 30% 확충 방안
  - 2014년 현재,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은 168,924명이며, 이 입소노인은 전체 노인 중 2.5%에 해당. OECD국가의 노인 시설 입소율 평균이 5%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입소율은 아직 낮음
  - 2014년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은 총 4,871개, 정원은

- 150,616명임. 이 중 국공립시설은 108개로 전체 시설의 2.22%(입소정원의 5.15%)
- 향후의 급속한 고령화로 요양시설이 부족할 것이며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신축 필요
- 매년 부족분 중 80%를 국공립시설의 신설을 통해 충원할 경우 2027년에는 약 30%가 국공립시설
- 장기요양시설 1개의 신축 비용은 25억으로 계산, 2027년까지의 부족분 80%의 누적수인 2,683개소를 신설에 67,075억 원 소요
- 이중 일부는 평가 인증을 통한 민간 시설 퇴출 후 매입, 공공시설과 공간 임차 설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민간시설 공공화를 통해 확충

### ☞ 이행기간

◎ 2027년까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확충

구분	연간 소요 예산
국공립 어린이집 30%	매년 1조 14억 원
확충 및 보육 교사 처우	이중 50%를 신축할 경우 5,000억 원/년 소요

개선과 충원	※보육 교사 충원 예산은 별도 산정
학생 대 교사 비율의 정상화	10년간 매년 13,700명 충원, 초임 교사 연봉 2400만원 매년 3,288억 원 소요
사업장내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간호사 배치	5년간 매년 1,200명 충원 1200명*연봉 3,500만원(경력직) = 420억 원/년
공공의료 30% 확충	10년간 34개 확충을 위해 민간 시설 매입 : 약 250억/년 신설(공사기간 3년) : 916억 원/년
공공 장기요양시설 30% 확충	2,683개소를 신설에 10년간 67,075억 원 10년간 매년 6,700억 원 소요
계	매년 1조 6,574억 원 소요

## ㉟ 자원조달방안 등

- ⊙ 시설 신축 및 민간시설 매입비용은 국민연금 기금에서 금리 2차 보전을 통해 확보
- ⊙ 인건비 등 경상 경비는 국비에서 지원

## 정책 10

## 행복재정3대원칙 : 효율적 지출, 적절한 배분, 형평한 수입

## ㉞ 현황과 문제점

- ◎ 예산의 일부가 잘못된 예측과 방만한 운영으로 낭비되고 있음.
  - ※2015년도 추경예산 중 4조 1,500억 원이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에 지출되었다고 지적됨 (2015, 예산정책처)
- ◎ 예산 배분이 경제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20%로 OECD 평균 11%보다 약 2배가량 많음. 반면 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해 사회적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 예산은 10.4%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 불과함
- ◎ 세수의 크기가 작음 : 2013년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4.3%로 OECD 평균 34.1%보다 9.8%p(약 146조원) 낮음
  - 이로 인해 GDP 대비 정부총지출 규모는 30%대에 불과함. 즉, 정부재정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하기 어려움
  - 구체적인 세목을 살펴보면 소득세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가 특히 낮음
    - ※소득세 GDP 대비 비중 : 한국 3.7%, OECD 평균 8.8%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비중 : 한국 2.9%, OECD 평균 5.3%
    - (법인세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은 높으나 이는 법인 소득 자체가 크기 때문임. 실효세율은 10%대에 불과함)
  - 낮은 세수의 원인은 각종 비과세·감면과 공제제도 때문
  - 계속해서 복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앙 및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누리과정 논란에서 나타나듯 중앙에서 결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게 예산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중앙과 지방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 근본적 원인은 중앙정부의 재정규모가 작다는 것임
- ◎ 따라서 향후 복지부문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원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향후 복지에 매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 추정

구분		연간 소요 예산(단위 : 억원)
청년	청년고용소득보장제도	21,500
아동	아동수당	5,200
교육	공공화 연계 반값등록금 ※등록금 완전 후불제 5.5조원과 미취업자 상환비용 1.5조원의 금리 2차 보전	2,600
	국가장학금(기 지출되고 있는 금액이므로 제외)	(39,000)
노인	연대연금 60만원	50,000
의료	건강보험하나로 국고지원	36,000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30% 확보	16,574
계		131,874

## ㉞ 목표

- ◎ 효율적 지출 : 불필요 · 불합리한 낭비사업 예산 삭감
- ◎ 균형 있는 배분 : 구조 조정을 통해 중요사업 예산 우선 배정
- ◎ 공정한 수입 : 비과세 감면 조치 축소 및 조세 정의 바로세우기

## ㉞ 이행방법

- ◎ 효율적 지출
  - 예비 타당성 조사 강화, 유사 - 중복 사업 통폐합
  - 사업의 성과와 기관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
- ◎ 균형 있는 배분
  - 토목 건설 및 기업지원 등 경제 분야 예산 축소
  - 복지, 교육 등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복지국가 정책 분야에 우선 배정
- ◎ 공정한 수입
  - 비과세 감면 규모의 축소 : 일몰 도래한 비과세와 감면 조치 폐지
  - 개인 및 법인 공제 제도 정비
  - 법인세 실효 세율 인상 : 법인세 실효 세율을 25%로 정상화

- 불로소득 과세 강화 : 상속세, 부동산 보유세(부동산 자산 일정규모 이상)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금융소득 과세 강화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인하, 종합과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기준 강화
- 종교인에 대한 과세 및 종교법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 인상
-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등으로 초고소득자 증세
- 소득세 인상 : 최종 연도 소득세율에 1~20% 세율 차등적 적용

###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단계적 추진

### ⊗ 재원조달방안

확보 방향		확보재정 규모
예산의 효율적 지출		4조원
예산의 적절한 배분		15조원
예산의 형평한 수입	비과세·감면 축소	7조원
	법인세 세율 정상화	12조원
	불로소득 과세 강화	5조원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인상	15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4.5조
	소득세 인상	약 5조원
총계	연간 약 67.5조 정도 확보 가능 ※ 해당 분야의 최소 추계로 계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진리대한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진리대한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정치혁명
2	종교혁명
3	경제정책(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4	사회정책(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5	문화, 예술, 교육, 언론
6	통일정책과 군사력 증강
7	당의 윤리정책
8	외교 안보 및 세계화
9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10	국민혁명(세계주도)



- ◎ 국회의원의 명예직화와 의원 수를 120명 수준으로 만들어 국회의원 개인영달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목숨 바쳐 헌신할 수 있는 애국자들로 국회를 구성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곧 입법기관으로서 청렴결백하게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발전에 상응하는 입안 상정이 모든 국민들이 의롭게 사는 방향 제시로 국민단결과 국력을 키워가는 상향적이며 자발적인 국민동기유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부정과 악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필벌을 기하는 법안으로 악은 아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세계에서 가장 악한 북한공산당과 대치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물리칠 정치적 경찰, 군부의 조직을 강화한다.(한국형 민주주의 건설요망)
  - 북한공산당을 지지하는 모든 자들을 엄벌할 법안을 마련하여 처벌하고 전 국민의 반공 사상을 초등교육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실시하여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과 부정한 정치체제인 북한을 흡수 통일할 방안으로 정치조직을 국민들과 합치된 의사로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 사법부, 판검사의 임준에 있어서 그저 암기식의 시험을 탈피하고, 초등학교에서부터 사법고시 전, 전 과정에의 철저한 개인 신상을 제시 하여 판검사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판검사의 기소·재판의 책임은 영존하는 책임으로 명시하여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 선임비용도 저가로 통제되어야 한다. 국선변호사의 자격 강화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가난한 자들의 변호를 위한다. 이미 국민 간에 소문이 남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례들을 고치기 위하여 돈을 받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중앙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행정이 직능을 구별하여 유대협외의 관계 및 중앙통제체제로 재조정하여 강력한 행정부, 시도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하나가 되는 행정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행정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정부서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직의 모든 관리들은 급여 외의 사취를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국가를 위하지 않는 부정부패한 백성들에게로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공의가 전국 행정관서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 백성들도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 정책 2

## 종교혁명

- ◎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는 인정하나 이단, 기타의 우상숭배 등으로 인한 개인재산침해와 국익에 저해가 되는 경우는 이의 단체들은 즉각 철폐할 법령을 제정한다.
- ◎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등의 종교에 종교청을 두어 각 종단의 성경·법령 등을 기준하여 종교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개인의 재산침해, 불법, 영적인 문제의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 종교계 내의 불법이 자행되지 않게 한다.
- ◎ 각 종단들 중에 많은 신도들로 많은 헌물, 기부금의 경우는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다. (곧 서민들의 복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는 행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특별재원과 안식처로도 제공되어야 한다.)
- ◎ 특히 기독교(천주교, 불교를 포함)내의 성직자라 함은 세상을 초월하여 영생하는 나라 천국과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로 주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자신들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여야 할 복음의 말씀을 받고도, 이를 부정하게 사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여서 부자가 되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잡아서 자신들의 종을 만들어 국가와 민족까지를 혼드는 경우가 최근 자칭 크다는 교회들로 만연할 때에 성경말씀의 법 밖에서 이와 같이 악을 행하는 목사들을 먼저 종교 재판할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 ◎ 기독교 일부 부자된 교회들과 목사들이 위 세번째 ◎항과 같이 패역할 때에 천주교 신부들은 북한지지 성향으로 나라를 흔들고, 중들은 도박과 술 취함과 온갖 추대를 벌이는 만큼 의로운 정치는 의로운 성직자들과 더불어 사악한 종교계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강력한 방안을 성경 법과 법령 등으로 기초하여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해가 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 유럽에서의 악한 교회들에서 도망친 기독교(청교도)인들이 미국대륙을 개척하여 오늘날에 이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었던 나라들은 세계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인이 초대 제헌국회처럼 신실히 창조주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조국통일은 절로 되어 세계를 지배, 주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의 정치판도는 표를 얻기 위하여 큰 교회, 단체들을 이용하여 교묘하며 형식적인 야합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진정한 애국자들과 성직자들은 가난한 가운데 있으며 작은 자 가운데서 이순신, 유관순, 안중근, 이승만, 박정희, 주기철, 손양원 같은 순교 애국지사들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 기존의 정치가들과 종교계의 모든 자들은 회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 진리대한당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천국을 위하여) 이 나라에 세울 것이다.

## 정책 3

## 경제정책(과학 기술의 첨단화, 세계화 등)

- ◎ 자원과 재원개발 증대에서부터 동네, 주변 청소까지 전 국민이 이웃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 (가난할 때의 새마을운동은 전 국민이 힘써 일하여서 부강한 나라를 만듦) 부자라도 일하지 않으면 병이 걸리고 악한 생각이 사로 잡아와 놀음, 간음, 살인, 술 중독 등으로 망하게 된다. 곧 모든 국민 남녀노소가 일하는 풍토로 조성될 때에 최대의 경제력이 확보되는 것이다. 또한 주간 6일 근무제로 전환하여 모든 국민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위하여 일을 하여야 한다.
- ◎ 중소기업의 육성책을 펴서 대기업화 혹 이윤창출극대화 하고 대기업들은 항상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들의 사회 및 생활복지 등에 그 이윤을 돌려야 할 책임을 준다.
- ◎ 과학기술 첨단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특수학교개설운영과 육성책을 구체화하여 영재교육을 겸하여 실시한다.
- ◎ 외교정치는 경제정책도 수반하고 정치와 경제는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해외주재 대사관 내에 국가경제부서를 두어 수출입 증대화, 시장개척 등을 겸한다. 또한 해외의 노동시장도 개발하여 한국의 두뇌인력, 첨단과학기술을 수출하고 1차 산업생산 요원들의 생산성을 후진국의 인력으로 보충하는 방안도 활성화한다.
- ◎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위 네번째 ◎항에 1차 산업생산의 노동력이라도 할 생각을 지닌다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다. 사람들은 일은 하지 않고, 앉아서 먹고 노는 일자리는 찾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국회의원이나 행정부의 관리들도 최소생계비로 생활하는 풍토를 조성할진데 (곧 최대의 행복지수는 돈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과 이웃을 위하여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이며 비록 자신이 배고파 먹지를 못하여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자신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사회풍토와 근로 풍토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신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과 선한 가난을 사모치 않고 사단마귀의 역사로 물질만능 주의적이며, 부하게 되려는 탐심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1960-1990대에도

우리들은 오늘과 같은 풍요를 누리는 경제성장보다는 더 행복하였고 이웃 간에 사랑들이 있었다. 어떤 일들이고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먹을 것들을 쓰레기처럼 버리면서도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이로 진리대한당의 경제정책은 저소득정책으로의 경제정책을 바꿀 것을 택하는 바이다. (또한 대부분의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하므로 부자는 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경제법안의 제정도 필연하다. 이것은 한 국가 내의 국민 평등권이기도 하다.)

## 정책 4

## 사회정책(국민건강, 영토권확장, 국토개발, 복지대책)

- ◎ 국민 간에 불신과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첫째 의로운 교육의 부재요, 정치인들의 기만에서 유래하였으므로 먼저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타인을 유익하게 하여 구원하라 등)과 용서와 화해를 선도하는 사회정책과 바른 정치인들과 단체와 국민의 선행을 지속적으로 증대 홍보한다.
- ◎ 각 국민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 시설물들과 풀 한 포기라도 아끼는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심기는 정책을 펼친다. 또한 마약, 도박, 매춘, 음란, 불법, 중복세력, 부정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대처법안 등과 악을 물리칠 기독교신앙생활로 국민생활 안정과 정서를 아름답게 하며, 대중교통, 건강운동, 스포츠, 문화행사 등을 육성하여 안락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 삼강오륜 윤리 도덕의 강령을 되살려 국가와 국민, 남과여, 아내와 남편, 어른과 청소년, 애국 애족, 친구간의 사랑, 노사가 하나 됨, 이웃 간의 사랑 등으로 전 국민이 국가와 민족의 번영과 개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정책을 펼쳐간다.
- ◎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각 직장·학교·단체들은 매일 체조, 달리기, 율동 등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스포츠 등의 일정 일과표를 작성하여 즐기는 훈련을 통하여 체력을 증강하여 국민력을 키운다. 남녀평등 원칙에 입각한 사회, 공무원, 교사 등의 진출을 하되 남녀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성희롱 등을 방지할 환경·여건을 조성한다. 특히 마귀적인 속성이며 반인륜, 반도덕, 반윤리적인 동성연애자들은 공직, 교사직, 어떤 단체 활동 등에도 제외하고 형집행을 하여서라도 철퇴시켜야 한다.
- ◎ 삼면이 바다인 동·서·남해의 개발과 섬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내지는 수산자원을 극대화할 정책과 해양과학을 개발한다. 우주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국민과 세계에 알리어서 과학화하고 신비화하여 국민과 세계로 기쁨과 우주시대와 천국의 희망을 준다.

- ◎ 통일국가 형성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서 통일 후의 중국·러시아를 향한 역사적인 영토권확장을 물리적 영적인 지배를 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다. 남으로는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이며 영적인 지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가능한 일로 성취한다. (해가 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로마제국의 세계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용하고 진리로 하나가 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 삼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졌었다). 진리대한당 전체가 충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들의 몸처럼 사랑하고 주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66권의 말씀의 법을 다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선 대한국민이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할 때가 분명히 오게 할 것이다. 곧 모든 지혜와 생사화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자는 것은 세계평화와 모든 인류가 악과 거짓을 행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으로 살다가 다 천국으로 가기위한 수단과 최후의 방편이기 때문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선교사들은 지금도 가난한 자들에게로 복음과 양식을 주어가며 물리적이며 영적으로 세계를 지배하여 가고 있다).

  - 제헌국회, 이승만 초대정부, 외국선교사들이 세운 수많은 기독교, 교회들로 한국에 의로운 기초를 놓았던 것이 오늘의 발전을 기했던 것을 기념하여 진리대한당은 대한민국을 기독교국가로 만들어 가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의로운 대한민국건설을 성취할 것이다.
- ◎ 현재 대기업, 큰 부자들이 지닌 재화만으로도 전 국민의 평생복지정책을 실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은 이를 계몽하고 모범을 보여서 자진하여 국가와 사회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명예를 주어야 한다. 큰 기업과 부자(재벌)에게로는 과징세로 징수하여 사회적 평생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세금의 사용도 간접시설 확장보다는 국민들이 평균하게 잘 살 수 있게 한다.
- ◎ 농토와 해상을 보존 유지하되 수익성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 세계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치성을 높이는 개발을 한다. 농지로 활용할 수 없는 지역을 과감히 개발하여 서민주택정책과 공장 시설 등으로 확장하여 간다.
- ◎ 자연과 산림의 큰 훼손이 있을 경우 어떤 개발사업도 추진할 수 없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자연훼손에서 시작된 것이다). 특히 통일 후로 비무장지대는 국제자연공원화를 중심으로 개발한다.

## 정책 5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 ◎ 우리 조상들의 문화·예술, 현실에 맞는 역사전통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의식주 생활을 계승하여 간다. (전시회, 박람회 등을 열어서 국내외에 홍보한다.)
- ◎ 세계 문화·예술 중에 가장 인간적이며 아름답고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선을 추구하는 음악, 미술, 연극, 영화, 창조론적인 문화행사 등만을 수입하고 비인간적이며 악을 초래할 문화·예술은 차단한다. 노인과 상관을 공경하는 예절문화와 아이들을 보호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 ◎ 교육정책은 먼저 초등단계로부터 부정과 거짓하지 않고, 정직과 의를 행하는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중고등학교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거짓을 행하면 죽게 된다는 강력한 말씀과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모두가 의를 행하는 마음을 심긴다. 또한 계속하여 악과 부정을 행하는 자들은 별도 처벌 관리한다. 특히 전교조와 같이 학교 밖 정치 투쟁하는 자들은 전부 사직 시켜야 한다.
- ◎ 이웃과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선행의 교육과 이의 행함에 등급 한 신상명세서가 각 직장, 사회, 사법 행정시험 등에 50% - 90% 이상의 반영과 교사 채용에도 엄별하고 대우를 하여야 한다.
- ◎ 반공교육, 애국애족교육, 창조교육, 과학교육과 삼강오륜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육과 강력한 체력을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 삼강오륜 ;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 ◎ 공공의 언론은 악한 것들의 보도보다는 선행과 발전적인 면에서의 언론정책을 추구하고 특히 언론은 보도하고 말했던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부정한 부분을 정하게, 정한 것을 부정하게 왜곡한 보도에 대 해서는 엄벌에 처한다.)
- ◎ 반인륜, 반도덕적 동성연애, 짐승과의 교합 등은 엄벌에 처한다.

- ◎ 그동안 통일정책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돕는 정책을 대화와 타협이란 각도에서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의 3대 세습독재 공산주의는 양민학살과 학대 및 인권을 유린하여 왔으며, 우리가 아무리 저 악한 자들을 도와주어도 이를 감사와 회개의 창구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과 같은 무력도발의 재화 등으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일체의 도움을 대한민국의 민관은 김정은에게 도와서는 안 된다. 다만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게로 식량의 직접적인 공급만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북한보다 월등한 개인 및 육해공군의 군사훈련과 예비군 훈련과 전 국민 비상체제 군사훈련도 보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곧 북한의 전쟁 도발 시는 북한을 단번에 쳐부수고 통일할 수 있는 전 국민의 투철한 정신무장을 하여야 한다. (숫자와 군사력 열세에도 아랍전쟁<제3차 중동 6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히 준비된 사람들의 편에 선다. 따라서 세속적이며 인본신앙으로 타락되어가는 한국교회들은 회개하여야 한다.)
- ◎ 국내외로 북한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척결하여야 한다. (차라리 이러한 불순세력들은 북한으로 강제 추방하는 법 제정도 필연하다.)
- ◎ 군사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어느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체계를 유지하고 미국 등과 우방국동맹을 강화한다.
- ◎ 한반도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크고 작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로 전쟁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에 대한 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은 미흡하여 국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모든 평화위협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군사력을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바탕으로 총체적인 국가안보 태세는 구축하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 ◎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주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강력히 반대하고 무력화할 방도를 찾아 철저히 굴복시켜야 한다. 북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고 통일을 진전시키는 데도 명백한 장애물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하에 북한을 비롯한 역내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한다. 이를 위해 한미연합 전력을 기반으로 한 능동적인 억제전략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한미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이 가시화될 시 남북 정상 간의 핫라인을 최우선 구축하여 한반도의 우발적 위기를 차단한다.
- ◎ 미래 전쟁과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잠재적 위협까지 고려하여 첨단화·과학화된 강군을 육성한다. 현대전의 효과적인 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 구조와 전력구조, 병력구조를 개선하고 고효율 국방운영 체계를 만들고 이를 위해 미래 지향적인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다. 민·관·군 연구개발 융합·복합으로 군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활성화하며, 방 산비리 척결을 위한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 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함으 로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 ◎ 군 복무 장병들이 국민안전을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는 활동에 자부심 을 갖도록 군대 내 약 폐습을 일소하고 선진 병영문화와 환경을 만든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도록 일반사회와의 단절을 최소화하고 군복무 기간이 자기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군 복무와 사회적응을 연계하는 선순환구조와 애국애족교육 등을 완비한다.
- ◎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하여 보상과 지원을 하고 그들의 숭고한 명예가 고양 되도록 보훈제도를 개선한다. 독립유공자, 호국 유공자, 민주유공자의 공헌이 국가 공동체의 영예로운 가치로 존중받고 귀감이 되도록 예우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군인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이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을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도록 한다.

정직, 성실,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한 윤리강령을 전 진리대한당 원들은 지켜야 하며 특히 대의원(임원)급에 속한 당원들은 이에 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사퇴하고 평당원으로만 활동 및 탈당시킬 수 있다.

- ◎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공직후보자와 대의원들은 당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진리대한당의 강령에 준수할 것을 서약·서명하여야 한다.
- ◎ 서문에 밝힘처럼 사리사욕 사치하지 말고, 공명정대, 근검절약, 최소 치의 기본생활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동방예의지국의 예절과 윤리 도덕을 지켜 준수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도록 경주한다.)
- ◎ 욕설, 비방, 모욕 등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타자의 부정을 책하고자 할 때에는 근거에 의거 하여 사랑 안에서 권면한다.
- ◎ 당원들 간의 고소고발을 금하며 당내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시켜서 당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 되며 심할 경우는 당명으로 법적 처벌 할 수 있다.
- ◎ 당직자 공직자 국회의원 지방회의원 등은 항상 자기의 유익이 아닌 당과 국민의 유익 편에서 일하며, 중앙당은 이의 신상필벌을 철저히 적용한다.
- ◎ 경노우대 효친사상을 극대화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어린이 등을 각별히 보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와 정성을 다하여 도와 국민의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인도의 M.간디, 백결선생과 같은 본이 되자)
- ◎ 지위와 신분을 남용하여 사취 및 가족, 지연, 학연 등을 돕는 행위는 처벌하나, 정당한 수고로 얻어지는 대가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가능한 사취하지 말고, 공의를 위할 줄 아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

- ◎ 당직자 및 소속 공무원들은 철저하게 공사를 구별하는 업무비용의 사용을 하여야 한다. 회계 총무부에서는 이를 감시하는 전담기구를 둘 수가 있다.
- ◎ 당의 기밀을 유지보안 하여야 하며 사적유용 등의 책임과 특히 국가 적인 손실을 초래할 경우는 법적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 일반적으로 재화로 가치가 없는 선물, 서민적인 숙식의 접대 등은 허용하나 사치스런 향응,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금지한다.
- ◎ 당내에 공직자 경선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여 공적에 의한 선출제도를 확립한다.
- ◎ 모든 정치자금은 투명하게 수입 출금이 되어야 하며 로비활동 역시 사적이 아닌 공적이며 국가적인 이익의 범주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 ◎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경조사인 경우 사적로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소액(5만원 정도이하)의 기부금, 화환, 물품은 허용하고, 범인이 인정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서의 도움을 위한 기부금은 그에 상응한 범위 내의 기부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한 병상치료,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 등으로 기부하는 행위)
- ◎ 진리대한당의 당직자들은 조선시대의 암행어사처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로운 대한 민국 건설과 영생하는 천국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악들과 싸워야 할 도덕 윤리적인 책무가 있다.

- ◎ 세계는 정보화, 일일시대로 변화되었다. 기존 미국에 의존하던 외교정책을 초월하여서 다국적인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세계에 배치된 대사관을 통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방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서 대한 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앞당기고, 세계를 지배할 경제, 문화, 정치의 외교정책을 수립, 강화한다.
- ◎ 이로 대사관 및 외교관의 파송나라들에 경제, 문화, 정치, 군사의 교류증대와 모국의 발전을 위한 제반 전문가들을 선임하여 대사관에 공존시키고 파송하여야 하며 특히 러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유럽의 지배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고용인력 증대 및 자국의 이익을 증대하여 간다.
- ◎ 5대양 6대주를 지배(사랑)하고 다스릴 교육, 군사훈련, 경제정책훈련, 생산능력의 증대, 언어 훈련, 각 나라들의 적응능력을 배양한다. (곧 이의 모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십자가의 도를 온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배란 의미는 세상의 부정함을 정하고 의롭게 변화시키는 일련의 과정들로서 행사되는 교육,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등의 제반수단인 것이기도 하다.)
- ◎ 안보의 최고점은 첫째 북한공산당을 속히 박멸하고 흡수통일 할 제반 정책들을 세워 실천 함이며 둘째는 타국의 부정한 윤리, 도덕, 문화, 침범 등의 국내진입을 막는 것으로 국방력 강화, 정신력강화, 개 국민의 애국 애족하는 정신배양이다. 이에 상응한 국가시책이 시급함에도 나라는 악한 정치인, 경제인들로 흔들리니 차라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라도 먼저는 부정 부패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 정책 9

## 소득평균화와 근로(서민)정책

- ◎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정직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로 상위급여 책정은 당연하다. 따라서 일하지 않고 노동쟁의 투쟁만을 일삼는 자들에게론 그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치 않거나 퇴사하게 하는 법안을 강력히 입법한다(민주노총 등). 곧 일하는 단체의 각 사람들과 사업주, 노사가 함께 상벌을 같음하는 기록을 유지하되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분쟁이 없게 하는 체제를 갖춘다.
- ◎ 행정부와 근로자들은 회사의 책임자(공직자의 장)가 근로기준법에 불법하는 행위. 회사의 이익을 부당히 사취하는 행위 등을 고발하여 노사가 서로 한 가족으로 소득의 분배와 대우를 형편에 알맞게 하고, 노사는 또한 직장이 없거나 소외된 서민들을 도와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경주할 법체계를 확립한다.
- ◎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소단위 행정관으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노인, 장애인, 어린이, 거지, 노숙자 등에게로 사랑의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의 부와 정부의 예산투입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의 보강책으로 각 종교단체가 이것을 선행할 경우는 후로의 세금을 면제할 수도 있으며, 단 이의 시행은 그 지역의 행정관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전 국민의 소득 평균화와 서민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 일들이 허위, 사취하는 식으로 된 것에는 엄벌에 처한다.
- ◎ 진리대한당은 분배 및 재분배 구조를 개혁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비정규직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 할 것이다. 민주적 시장경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며 공정한 제도와 정책을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제체제를 만든다. 이 역사적 과업의 성취를 위해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경제주체들 간의 협력과 대화를 촉진한다.
- ◎ 일터에서의 격차와 차별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와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격차,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장애인 차별, 연령차별 등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

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세대별 맞춤형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며,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정 생산발전관계를 구축한다.

- ◎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동일 가치노동 동일 임금제를 실시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특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정규직 채용을 기본으로 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단 회사의 실정에 따라 일정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고용 등을 할 수가 있다.
  
- ◎ 일자리를 갖는 것은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나눔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한다. 실업, 육아, 퇴직, 산업재해 등 근로자가 직면한 사회적 위험을 체계적으로 해소하며, 적정한 최저임금과 실업 급여보장, 직업훈련 확대,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등을 골간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훈련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정책 10

## 국민혁명(세계주도)

- ◎ 대한국민과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방법의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미개한 게르만 민족 섬나라 영국과 유럽 로마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 지지 않던 나라 대영제국과 모든 세계의 길은 로마로 통했던 세계사가 증명함처럼, 진리대한당의 일진 대의원들은 결론으로 세계주도를 확실히 만군의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현할 것을 믿고 제시한다. (여기서 먼저 이의 성취 전에 기독교 안의 거짓 믿음인 샅군 목사들과 교인들의 회개와 우상숭배의 타종교개혁을 덧붙여 행할 것을 필하고 조국 내에 만연된 부정부패와 악들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 ◎ 개 국민 각자의 양심이 자신을 판단하고 인지함처럼... 사람으로의 최대의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삶은... 부자가 된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게로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로 받는 위로일 것이다. 우리의 애국지사들과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잘 살게 되었는데, 마귀의 역사들은 지금도 악에 악을 거듭하여 국민이 세운 현 정부에 반정부시위와 폭력과 폭행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탐심이 가득하여서 정치권력과 출세와 재물과 자기 명예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공의와 사람과 가족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북한공산당의 우두머리처럼 역사까지를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에 진리대한당의 일진 대의원들이 이제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와 대한민국의 정의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싸워옴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울 것이다. 곧 진리대한당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 주 앞에서 당당히 세계 주도 (복음화)를 위하여 모든 소유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사랑하여 진리로 정의롭게 세워갈 것을 3월 1일 기미 독립만세를 추념하며 정책의 결말로 같음한다.

2016년 3월 2일

진리대한당 총재 외 대의원 일동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친반국민대통합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친반국민대통합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부정부패 척결로 정의사회 구현
2	대법원장 민선으로 사법 개혁 추진
3	청와대 세종시 이전으로 중추적인 행정도시화,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도시화로 미래도시 완성
4	청년과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5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
6	서민경제의 버팀목 자영업 경쟁력 확보
7	저출산 대책
8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 강화
9	활기찬 농어촌 만들기
10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긴장 완화



**㉸ 현황과 문제점**

- 부정부패는 국민의 혈세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위협
-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 공무원 등의 부정부패는 국민위화감 조성
-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군도 고위장성은 물론 참모총장까지 방산비리 주범으로 전락
- 부정부패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내부고발자의 힘으로 부정부패를 척결

**㉸ 목표**

- 공무원 직무상 범법 행위 소멸시효 폐지
- 내부고발자의 완벽한 신분보장 및 훈·포장

**㉸ 이행방법**

- 공무원 직무상 범법 행위 소멸시효 폐지
  - 국가직 4급 이상, 지방직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준공무원은 직무상 범법 행위에 대하여 소멸시효 폐지 추진
- 내부고발자의 완벽한 신분보장 및 훈·포장
  - 내부자 고발 제도로 국고 환수액의 30%를 고발 포상금으로 지급
  - 민간 내부고발자는 훈, 포장을 수여하고 공직자는 진급 기회 제공
  - 부정부패 문제의 핵심은 내부고발자의 완벽한 신분 보장임. 내부고발자 신원을 공개하는 자는 형사처벌 강화(「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 재원조달방안 등**

- 非예산 사업

## 정책 2

### 대법원장 민선으로 사법 개혁 추진

#### ㉸ 현황과 문제점

- 법치 국가를 지탱하는 법조 3륜인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바로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섬
-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엄격한 3권 분립 취지를 약화시킴

#### ㉸ 목표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구현

#### ㉸ 이행방법

- 대법원장 민선 선출 추진
- 3권 분립에 맞추어 민선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직접 임명
- 대법원장이 법원을 책임지고 임기 시한까지 법원을 운영

#### ㉸ 자원조달방안 등

- 非예산사업

## 정책 3

청와대 세종시 이전으로 중추적인 행정도시화,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도시화로 미래도시 완성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는 현재 서울 중심의 1도시 체제여서 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 성장 문제, 범죄·교통·주택 등 사회문제, 빈부 갈등, 지역 간 갈등 심화

### 목표

- 세종시의 중추적인 행정도시화
-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도시화

### 이행방법

- 세종시의 중추적인 행정도시화
  - 서울에서 세종시까지는 고속철도로도 한 시간 이내의 거리이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완성될 경우 더욱 교통 소통이 원활해질 것임
  - 국회와 대법원의 세종시 이전으로 미래의 통일시대 진정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 추진
- 서울시는 세계적인 경제도시화
  - 서울, 경기도, 인천 중심의 세계적인 경제도시화 추진
  - 세종시 중심의 신수도권 시대는 새로운 경제부흥과 국가발전 도모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 개정 후 예산안에 반영

## 정책 4

### 청년과 중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 ㉸ 현황과 문제점

- 청년(15~29세) 실업률은 2013년 8.0%, 2014년 9.0%에 이어 지난해 9.2%로, 1999년 통계 기준이 변경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청년실업 심화→소득·소비 감소→성장률 둔화의 악순환 우려

#### ㉸ 목표

- 청년취업 확대를 통해 소득·소비를 증가시키고 경제성장을 도모
- 사상 유래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조기 은퇴를 맞아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정비가 시급

#### ㉸ 이행방법

- 청년신규고용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청년신규고용을 지원하고, 기금은 정부와 기업의 출연금으로 조성
- 지자체별로 '청년인력개발센터(가칭)'를 설립하여 청년들의 첨단 직업훈련과 취업 연결을 지원
- 고용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콘텐츠 산업을 집중육성
- 청년인턴제를 보완하여 인턴의 일정 비율을 안정적 일자리와 연계 되도록 운영 개선
- 청년채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현을 위한 기업 환경 개선 지원
- 은퇴예비자의 미래 준비를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중·고령자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통합·확대 추진
- 장기요양 서비스, 의료·건강 등 고령자 친화적 실버산업 육성

####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예산확보
- 조세체계 정비,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감세 기초 조정, 불합리한 조세감면 제도 정비로 세입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 전세값 급등과 급격한 월세화, 주택자금 대출 증가로 가계부채가 급증
- ⊙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10%에 근접하지만 자가 거주 비율은 53.6%에 불과하여 전가구의 절반이 전·월세 고통 심화
- ⊙ 최근 서민, 중산층의 주거여건이 더욱 악화

**㉸ 목표**

- ⊙ 서민 주거문제해결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추진
- ⊙ 획기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으로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 전월세 상한제 제도 도입
- ⊙ 적정 임대료를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제도 추진
-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 민간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발생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 마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 ⊙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주택기금의 관리감독 강화
- ⊙ 실수요자형 중저가 아파트 대량 공급
- ⊙ 빈곤층(소득하위 20%)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급여 인상(현 가구당 11만원에서 2배 증액) 추진
- ⊙ (이행기간) 제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

**㉸ 자원조달방안**

- ⊙ 관련법 개정 후 예산안에 반영
- ⊙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로 충당

## 정책 6

### 서민경제의 버팀목 자영업 경쟁력 확보

#### 현황과 문제점

- ⊙ 서민경제의 버팀목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경제적 손실 규모 급증
- ⊙ 대기업까지 골목상권 침투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 연간 100만 개가 창업, 84만개가 폐업 하는 악순환을 반복
- ⊙ 폐업 자영업자의 1/3이상이 무직자로 전락

#### 목표

- ⊙ 자영업자들이 경제의 핵심주체로 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준 비된 창업으로 성공률을 높이는 맞춤형 지원

#### 이행방법

- ⊙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1,000 억원(9만명)으로 확대(2016년 100억원, 9,000명)
- ⊙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호남권)로 소상공인 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준비된 창업으로 경영능력 향상
- ⊙ 자영업자 자생력 강화, 경영개선, 업종전환 등 맞춤형정책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특별법」 개정
- ⊙ 자영업자의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조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 사업영역 진출 방지(「공정거래법」 개정)
- ⊙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노력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
- ⊙ 대기업 임원 및 지배주주 일가의 각종 법률 위반행위는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억제
- ⊙ 부당단가인하, 담합행위 등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하여 소상공인 보호
- ⊙ (이행기간) 제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

#### 재원조달방안 등

- ⊙ 관련법 개정 후 예산안에 반영
- ⊙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확보

**㉸ 현황과 문제점**

-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으로 각종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여전히 세계 최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음(2010년 합계 출산율 1.15)

**㉸ 목표**

-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 여성의 경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

**㉸ 이행방법**

- 3째 아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
  - 3번째 아이가 100일이 되면 양육비용으로 먼저 5,000만원을 지급
  - 초등학교 입학 시 3,000만원 지급
  - 중학교 입학 시 2,000만원을 지급
- 영유아 보육을 국가의무보육으로 편입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
-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충(2014년 어린이집 국공립시설비중 5.7%)
- 보육, 교육, 방과후 돌봄 등 돌봄 서비스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의 사회적 보험료를 확대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직업훈련 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 개정 후 예산안에 반영
- 조세체계 정비,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감세 기초 조정, 불합리한 조세감면 제도 정비를 세입 기반 확충

## 정책 8

###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정책 강화

#### ㉸ 현황과 문제점

-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
- 보훈정책은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국가정신의 계승으로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

#### ㉸ 목표

- 국가에 헌신하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 군인 처우 개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현실화

#### ㉸ 이행방법

- 복무나 사고로 순직한 경찰,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현실화하고 순직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
- 소방공무원의 위험수당 현실화(현행 위험수당 6만원, 화재진압수당 8만원)
- 참전용사 명예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2배 정도로 상향 조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찾아 볼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원마다 일제 강점기 애국 투사 및 6.25 참전 용사들의 충혼탑 및 위령탑 설치
- 군인의 부상·질병을 체계적으로 진단·치료할 수 있는 군 전문의료인 확보를 위해 '국방의전원(가칭)' 설립
- 군인의 목숨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불량무기 및 방위산업 비리 근절
- (이행기간) 제20대 국회에서 관련법 제·개정

#### ㉸ 재원조달방안 등

- 관련법 개정 후 예산안에 반영
- 조세체계 정비,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감세 기초 조정, 불합리한 조세감면 제도 정비로 세수 확충

**㉸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농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곡물 자급률 하락, 소득 정체, 기후변화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00~2014년 전국 농가는 19.2% 감소하고 농가인구는 31.7% 감소
- 농가수지 악화, 농가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농가경영의 위험요소 증가

**㉸ 목표**

-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세대교체
- 고령농·여성농업인의 지원 강화
- 농업경쟁력 강화

**㉸ 이행 절차 및 이행기간**

- 후계농업인의 농업자금 지원 규모를 3억원 이상, 1%의 금리로 상향 조정(현재 2억원, 2%의 금리)
- 실효성 있는 FTA 대책 마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등의 관련법 개정)
-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산지 조직화 지원, 계통출하 농가지원, 권역별 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농산물 유통과정 실명제를 의무화하여 부당이익을 바로 잡아 서민물가 안정 도모
-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받기반 정비지원 강화(2014년 기준 받기반 정비면적 14%에 불과. 반면 논 정비면적은 77% 수준)
- (이행기간) 제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 재원조달방안**

- 조세체계 정비, 소수에게만 이익이 되는 감세기조 조정, 불합리한 조세감면 제도 정비로 세수 확충

## 정책 10

###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긴장 완화

#### ㉸ 현황과 문제점

- 북핵문제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군의 역량 강화가 필요
-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안보 불안 확산

#### ㉸ 목표

-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북방경제 실현하여 남북 공동 번영
- 원칙있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철저한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간 신뢰 및 동질성 회복 추진

#### ㉸ 이행 절차 및 이행 기간

- 북한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우리 군의 역량 강화
-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테러 공격에 대비하여 전력·교통·통신·금융 등 분야별로 철저한 방어막 구축 및 보안전문가 확충
-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생존권 및 인간의 존엄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북한이 군사적 긴장완화에 호응하면 북한 경제회복과 재건을 위해 인도적 대북지원
- 한반도의 안정적 질서를 위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정립
- (이행기간) 제20대 국회 회기 중 지속적 추진

#### ㉸ 자원조달방안

- 남북협력기금 활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친반통일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친반통일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
2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3	정의로운 시장경제 확립과 경제성장 실현
4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선싱국가 실천
5	기회균등의 창출적 미래교육 실현
6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만들기 혁신정책 실시
7	소외계층·서민·중산층 권익신장을 위한 재외국민청, 다문화사회청, 실버사회청, 협동조합청 신설
8	1국가 2주권 상호공존의 안보를 바탕으로 한 유럽연합방식 점진적 남북평화통일 추진
9	국민안전·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행정국가 구축
10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 강령[전문]

## 1. 중도적 자유민주주의 친반통일당은

국민의 안전과 풍요로운 삶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며,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있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다. 세계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낸 민족이다. 친반통일당은 중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정의로운 법치주의와 선진사회 구현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중도적 가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희생 그리고 책임정신을 통해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추구한다.

## 2. 현재 세계 틈바구니에 선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반복되는 경제위기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정세는 신냉정체제의 진입 국면으로 전 세계적 차원의 불확실성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가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사이의 간극 확대, 일자리 없는 정체된 성장,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등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3. 선진국가 구축 친반통일당은

이와 같은 대내외적 위기와 시련을 현명하게 극복함은 물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전보장을 통한 평화통일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생산적 보완복지의 대한민국, 글로벌 모바일경제 창출을 통한 선진경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 4. 보완적 생산복지 확립 친반통일당은

성장과 복지가 공존하는 것이 시대적이고 국민의 요구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회안전망과 실효성 있는 보완적 생산복지제도를 확립한다. 나눔과 봉사 그리고 배려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비롯한 국민의 자아실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너진 서민과 중산층의 사회적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하는 공헌사회, 따뜻한 다문화사회를 실현한다.

## 5. 경제정의 혁신 친반통일당은

정의로운 시장경제를 추구한다. 자유와 책임, 혁신적 분업과 합리적 분배,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정의롭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적 불균형과 격차를 줄이는 한편, 성장과 개방의 혜택이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한다.

## 6. 민주평화통일국가를 열어가는 친반통일당은

호혜적 상호공존과 안보를 전제로 하는 대화와 타협의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평화유지와 공동발전을 도모하며, 점진적으로 1국가 2주권체제의 유럽연합식 대한민국조선연합공화국의 민주평화통일국가를 주도적으로 열어간다. 남북한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대 강국과의 외교안보 균형외교 리더십을 발휘하여 실현한다.

## 7. 이원집정부 대통령 중임제 추진 친반통일당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맞는 프랑스 이원집정부제의 보완형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한다. 이원집정부제에 맞는 지방자치제의를 더욱 확고히 하고, 선진문화강국을 지향하며, 언론과 학문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재외국민과 다문화국민의 권익을 신장한다. 소통과 여론을 통한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고, 패권주의를 타파하여 희망의 정치를 생산하고 계파주의를 타파하여 경제정의를 혁신하며 소통부재를 타파하여 민주사회를 회복하며 빈부격차를 타파하여 서민과 소상공인경제를 진흥시키는 정책정당,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복원을 위한 경제중흥정당,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정당으로써 한국 최초의 정치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국회의원소환법 제정을 통한 충무공 정신의 의회정치 실현과 선진문화국가를 창출한다.

## 8. 희망정치 친반통일당은

‘선진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실천구범으로 배려와 융합을 지향한다. 성장과 복지, 시장과 정부, 자유와 평등, 효율과 형평, 환경과 개발의 융합적 배려를 추구하고, 이념·지역·세대·계층 간 갈등을 나눔 봉사 배려의 실천덕목으로 해소하는 국민적 합의에 의한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

**㉸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여는 보완적 생산복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보완적 생산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한국형 보완 생산복지 성공모형을 설정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제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적재적소에 모아 보건복지부, 재외국민청, 다문화사회청, 실버사회청, 협동조합청 등으로 이관하여 국민의 후생복지 기능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지원 관리한다.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자아실현 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탈북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문화적 향유와 소통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및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보험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완비한다. 복지와 일자리, 교육정책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충한다.

## 정책 2

### 살맛나는 일자리 창출 국가 실현

#### ㉸ 일자리 창출 국정운영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 지표로 설정한다. 모든 경제정책을 고용의 관점에서 재정립한다. 노사가 법과 원리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노사분쟁해결시스템을 정착시킨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전문직업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실현하여 이들을 중산층으로 복원하여 관련 일자리를 재창출한다.

#### ㉸ 청년일자리 마련 중점 추진

청년고용은 일자리 정책의 핵심과제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학·연 연계를 강화한다. 스타트업기업, 벤처기업, 창출기업 등의 성공모형의 창업시스템을 활성화시킨다.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학력에 따른 각종 차별을 해소한다. 청년고용 증대를 위하여 성과에 따른 임금직무체계의 구축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마련 대책 추진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적합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성공모형을 창출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다. 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융합적 경제 창출의 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며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의 무고용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장애인고용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정의로운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경제정의 실현**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한다. 정부는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정의를 구현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경제주체의 불공정거래를 엄단하여 공정한 경쟁관계를 지향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한다. 각 주체들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국제표준에 입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국내·외 기업들이 자기책임 아래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한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중소기업 투자확대 및 농어촌 향토문화 복원으로 신명나는 농어촌 관광힐링 국가 추진**

한국 농어촌경제 발전의 관건은 지역 특성에 따른 향토문화를 복원과 지역특산품을 특화하는 6차산업형 농어촌 관광힐링농원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의 관광힐링국가는 경쟁력 있는 벤처·중소기업형 관광힐링농원의 육성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금융, 인력, 기술, 조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건전한 실패자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한다. 개방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은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미래 주요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미래 농어업 경영주체를 관광힐링산업의 주역으로 양성하고 후계인력을 확보한다. 6차산업의 유통구조개선 등을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풍요로운 농어촌 관광힐링국가를 건설한다.

## 정책 4

### 지적재산 중점지원을 통한 라이선싱국가 실천

#### ㉸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 기반국가 구현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원천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혁신기업과 문화콘텐츠기업을 양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한다. 국민의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마인드를 고취하고 과학기술계와 문화콘텐츠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과학기술인과 문화콘텐츠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반 시책을 강구한다. 과학기술을 국정 의 중심에 두고 국정운영 각 부문 및 국가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참여를 보장 한다. 과학기술과 문화콘텐츠의 연구 및 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글로벌경제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적재산권을 라이선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한다.

#### ㉸ 글로벌 모바일 창출인재 육성과 지식융합사회 발전

창의력과 IT·BT·CT·NT·BTT·AT·CCT(문화콘텐츠기술) 등 산업기술 융합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수학·과학기술융합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과 사고력을 뒷받침하는 인문 대학과 이공대학교육을 강화한다. 우수한 젊은 인문학적 과학자의 지원을 강화하여 세계적 석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기초과학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식융합창조시대를 여는 동시에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글로벌 모바일경제 창업전성시대를 열어간다.

**㉸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공교육 되살리기 실천**

국민은 누구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여 공정한 출발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교의 자율성과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의무화를 확립한다.

**㉸ 오성과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오성과 인성 중심의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잠재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따른 교육제도를 정착시킨다.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내실화하여 학생 스스로 생애진로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오성과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전한 시민으로 양성한다.

**㉸ 평생교육사회 구축**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한다. 대한민국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고 개인의 창의력을 존중한다. 이를 위해 성인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과 교육이 병행하는 평생교육 여건을 조성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가 함께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정책 6**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만들기 혁신정책 실시

**㉞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국회를 세종시로, 청와대를 국회로 이전 추진**

행정수도와 국회는 지리적으로 매우 동떨어져 있다. 이러한 지리적 제한은 국정운영상 비효율적이다. 청와대도 직무 공간 부족으로 국정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친반통일당은 국회를 행정수인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는 국회로 이전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㉞ 정의롭지 못한 선출직에 대한 국민소환법 제정**

친반통일당은 국민의 뜻과 민생의 조화를 통해 국민과 국회의원, 지도자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 좋은 지도자, 좋은 국회, 좋은 지방자치단체, 좋은 국가를 건설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경제제민의 정신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양성한다.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실현가능한 현장 중점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자를 양성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 바쳐 책무를 다한 충무공 정신으로 무장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가지도자를 양성한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국회의원, 좋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지도자를 평가하고 내실화하여 그들의 고유의 권한을 복원하여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추구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국가지도자로서 그에 따른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이 소환하여 그 직위를 박탈할 수 있는 국민소환법 제정을 추진하여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확립한다.

**㉞ 법조계의 비리 근절을 위한 대법원장, 검찰총장의 직선제 추진**

친반통일당은 만성적인 법조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법원과 검찰청의 독립을 추구한다.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직선제로 선출함으로써 정치세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보장된다.

**㉸ 재외국민 권익에 부응하는 재외국민청 신설**

친반통일당은 재외국민의 권익신장과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국민들이 국민이 누리고 있는 기본생활권과 교육·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외국민들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과 함께 재외국민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반지원을 다함으로써 지구촌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러한 재외국민의 권익, 참정권, 기본생활권, 교육과 복지, 외교적 지원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청을 신설한다.

**㉸ 다문화사회 권익에 부응하는 다문화사회청 신설**

친반통일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다문화가족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다양한 세계문화가 혼재히 수용되는 열린 문화사회를 구축한다. 한국문화의 해외진출과 한류의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고 다문화사회의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한다. 국민과 다문화가족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족을 배려하는 기부문화와 자원봉사를 활성화하며 사회구성원의 도덕적 책무를 진작한다. 이러한 정치·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국가발전의 신원동력으로 대두된 다문화가족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사회청을 신설한다.

**㉸ 실버사회 권익에 부응하는 실버사회청 신설**

친반통일당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부양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분담하도록 한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다원화 사회에 대비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대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정착시키며 가족복지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가발전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노년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또 실버층 취업교육을 통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실버사회청을 신설한다.

### ㉞ 서민·소상공인의 중산층양산을 위한 협동조합청 신설

대한민국은 경제적 빈부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에 반목현상이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반통일당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지도를 추구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면서 직원이고 유통업자며 소비자이고, 생산자이면서 판매자이다. 친반통일당은 주인과 직원, 생산자와 유통업자, 판매자와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공존 공영하는 안정적인 중견 기업적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우리는 협동조합이 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질적 지원을 증대한다. 공제회 모든 형태는 후생복지 혜택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며, 조합원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신원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지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을 중산층으로 견인한다.

**㉔ 튼튼한 안보체제 확립과 모병제실시를 통한 병역의무 및 청년실업 동시 해결**

친반통일당은 군의 정예화와 국방력 강화를 통해 자주국방을 지향한다. 미래지향적 국방체제와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유지한다. 주변국과의 안보협력과 평화정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병역의무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국방무기 자동화, 전자화에 따른 국방무기 전문운용 정예 부사관제를 도입한다. 모병제도 도입은 군의 전문적 정예화로 자주국방 강화를 확립하고, 또 병역의무의 병폐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친반통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㉕ 안보와 국제협력개발 리더십을 통한 균형외교**

친반통일당은 한반도의 안정과 국익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개발의 리더십과 평화통일 기초의 균형외교를 추구한다. 동맹 및 우방을 비롯한 이웃나라와의 협력적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관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외교, 공적개발원조 등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세계경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가되, 국익우선을 통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다.

**㉖ 한반도 맞춤형 유럽연합방식 민주평화통일국가 달성**

친반통일당은 중도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초로 한 평화통일을 위해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원리원칙에 입각한 유연한 대화와 타협을 통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나간다.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4대 강국과의 동북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리더십으로 단호히 대처한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 친반통일당은 이러한 기본정책을 바탕으로 1국가 2주권체제의 한반도 맞춤형 유럽연합방식에 대한 대한민국조선연합공화국을 추진하여 민주평화통일국가를 달성한다. 민주평화통일국가는 대한민국조선연합공화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연합공화국 행정기능에 해당하는 한민족

연합수상평의회와 한민족연방사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그 아래 대한민국 국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한국하원의회를, 북한 북한최고인민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북한하원의회를 두고 연합 정부의 통합적 국정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과 북한은 각자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국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 국민과 소통하는 국민안전과 행정편익 구현**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정편익에 대한 모바일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치 그리고 깨끗하고 믿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 각종 제도를 개혁한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회네트워크형 모바일정당을 건설한다.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을 책임진다.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정치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사회적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또한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보장하는 정치를 구현한다.

**㉸ 국민의 행정편익을 위한 모바일 지방분권화**

친반통일당은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한다. 중앙정부의 기능,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한다. 지역경제 및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세계적 경쟁력과 매력을 갖춘 거점도시들을 각 지역별로 구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전국을 광역권 네트워크 체제로 재편한다. 이러한 것들을 모아 국민 행정편익을 위한 지방분권적 모바일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 행정국가체제를 확립한다.

**정책 10**

정의로운 사람이 대접받는 선진문화국가 건설

**㉸ 정의로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정부**

친반통일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든다. 정부의 정책수립과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와 아이디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한다.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정부가 소유한 각종 정보를 개방하고 민간과의 공유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도모한다. 모든 행정체계를 국민중심의 원스톱 모바일 행정서비스체계로 전환한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에는 엄정하게 대처한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권력기관의 신뢰를 회복하여 법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 신뢰사회를 만든다. 정의로운 사람은 대접받고 비정의로운 사람이 푸대접받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 글로벌모바일경제 창출을 통한 선진경제국가 실현**

친반통일당은 균형재정을 지향하면서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유지한다.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특히,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모바일조세시스템장치를 구축하여 이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재정지출의 효율화와 조세정의를 기초한 세원확충을 통해 국민행복을 위한 복지의 재원을 확보한다. 친반통일당은 글로벌 모바일경제를 창출하여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소득을 증대하여 선진경제국가를 실현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친반평화통일당

##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친반평화통일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 건설
2	살기 좋은 복지국가건설
3	영구임대주택 다량 공급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해결
4	교육제도 개선 및 대학 반값등록금 해결
5	신뢰받는 정치회복
6	중소기업 보호 육성 특단의 정책
7	금융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조치 단행
8	조국애를 고취시키는 재외동포정책
9	세계개혁
10	경제성장



### ㉞ 평화통일 완성

- 북한정권 지도자(김정은)의 실체를 인정해주고 북한의 국시인 ‘한반도 공산적화통일’을 폐지하고 ‘한반도평화공존’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남북불가침평화조약을 체결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겠습니다.
- 경제·문화·체육 분야는 1국가로 하고, 완전통일 시까지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북한통치지역은 완전통일 시까지 국유지·저임금·무노조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 전역에 삼성반도체·현대자동차·포스코 등 남한의 기업이 진출하여 북한인의 시장경제적응을 도모하면서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저비용으로 생산된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전 품목 세계시장을 압도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을 1인당 5만 불(\$) 시대를 앞당기겠습니다.
- 북한에 진출한 기업이 국유지·저임금·무노조를 통하여 얻는 기업이윤의 20%를 북한 개발비용으로 출연하도록 한 재원과 비무장지대(DMZ)를 생태공원화한 관광수입으로 북한전역의 도로·항만·공항건설과 주요도시에 지하철을 건설하여 우리 국민의 통일비용을 제로로 하겠습니다.
- 남북불가침평화조약을 바탕으로 남북이 군비 30%를 절감하여 약 12조원의 비용을 마련하여 의무병제도를 50만 모병제로 전환하여 50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군을 정예화 하겠습니다. (사병1인당 월 평균임금 200만원X50만명X12개월=년 12조원)
- 병역의무기간을 3주로 단축하며 3주간 고단위군사훈련을 마친 후 예비군에 편입시키고 비상시 국방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㉞ 사회악 근절

-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하여 불법폭력시위를 뿌리 뽑겠습니다.
- 불량 식·의약품과 미성년자 성추행 범을 근절하고, 조직폭력배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15년 이상의 가중처벌법을 입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정책 2

### 살기 좋은 복지국가건설

#### ㉸ 복지예산 확보

- 938만 명의 면세대상자에게 소액과세를 하는 한편, 고소득자 세율을 3% 올려 7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SOC사업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 ㉸ 출산장려정책

-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든 병원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취업과 승진에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학비와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 연금을 현재의 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소요예산 : 월 30만원인상X30만명X12개월=1조 800억원)
-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시 혜택을 배우자나 자녀가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엽제 휴유 의증환자’를 ‘고엽제환자’로 승격시켜 예우하겠습니다.

#### ㉸ 노인복지정책

- ‘토·일 노인사원제도’를 신설하여 건강한 노인들은 일하는 성취감과 월60만 원정도의 수입을 보장하겠습니다.
- 대한노인회법을 제정하여 대한노인회 시·도연합회 및 지회운영에 국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노인회 연합회와 지회에 ‘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 건립하여 건강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지원하며, 현행 노인복지관장이 받는 월 400만원을 노인회지회장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 종교단체(교회 등)는 장소를 제공하고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는 경비를 제공하고 여성단체(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단)는 밥 짓고 설거지를 담당하여 곳곳에 노인무료

급식소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점심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대한노인회 16개 연합회별로 공원묘원 및 장의용품공장을 건립하도록 하여 장례비용을 현재의 50%정도로 대폭 절감시키며 모든 노인들이 노인회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 100%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 ◎ 지방선거시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출마하고 투표하는 ‘원로의원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 우리당은 지방의회(광역과 기초의원) 선거 시에 노인대표를 비례대표 1번으로 배정하겠습니다.

### ㉞ 기초생활필수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하여 장바구니물가 안정

- ◎ 식량·부식·치약·칫솔·타올·두루마리화장지 등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를 전담하는 기초생활필수품물가관리청을 국무총리산하에 두어 기초생활필수품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 ㉞ 지하매설물관리청을 신설하여 지하매설물 효과적 관리

- ◎ 작금의 땅을 파서 하수도관 묻고 포장한 후 다시 땅을 파서 상수도관을 묻고 포장한 후 또 땅을 파서 가스관 묻고 포장하는 반복공사로 인한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하매설물관리청을 신설하여 한번 땅을 파았을 때 하수도관 상수도관 가스관 케이블을 한꺼번에 묻고 지하매설물지도까지 작성하여 다음 공사 시에 지하매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매설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 정책 3

#### 영구임대주택 다량 공급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해결

- ◎ 영구임대주택 다량 공급하여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해결하겠습니다.
- ◎ 대한주택공사를 영구임대주택 건설에만 전담토록 운용하여 영구임대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주택의 주거개념을 확산하고, 기존 주택가의 거품현상을 빠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 무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의 10%의 권리금납부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해주고, 나머지(주택가격의 90%)는 360개월(재건축허가기간 30년) 분할 납부토록 하여 내 집 마련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1) 1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1,000만원 일시 불 납부하고, 9,0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25만원)
  - 예2)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2,000만원 일시 불 납부하고, 1억 8,0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50만원)
- ◎ 일반건설회사에도 아파트건설공사대금을 저리(연2%)로 용자해주고 중·소형 임대주택 건설에 동참토록 유도하여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 ◎ 한국토지공사를 원가개념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규주택용지의 저가공급으로 주택가격을 대폭 인하시켜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 아파트가격의 거품현상을 빠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 5년 한시특별법으로 1가구 3주택까지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등 건설 붐을 조성하여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고, 전세물량을 공급하여 전세가를 인하시키겠습니다.

### ㉞ 교육제도 개선

-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겠습니다.(재원 : 현재 대학에 지원하는 연10조원 정도의 예산을 고등학교 의무교육재원으로 전환)
- 초등학교 6년간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여 공부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인문 중·고·대학에 진학하도록 하고, 체육과 예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은 축구·야구·농구중학교 등 체육 중·고·대학교와 성악·피아노·바이올린·국악 중학교 등 예능 중·고·대학교에 진학하도록 하여 예·체능학교를 강화시키겠습니다.

### ㉞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과 입시제도 개선

- 대학을 졸업정원은 지키되 입학정원을 5배로 늘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대학의 질을 높여 세계50대 대학에 수개대학이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 현재 500만원(등록금)X10,000명(정원)=500억원 대안 250만원(반값등록금)X50,000명(정원)=1,250억원 등록금 총액 1,250억원 중 250억원은 10,000등까지 합격자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억원 시설비 등 대학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
- 합격기준을 전과목점수제에서 대학전공과목 관련과목점수로 개선하겠습니다.  
(예시 : 물리학과인 경우 물리·화학·수학점수로만 평가함)

### ㉞ 대학을 2중 구조로 개편

- 공무원·법관·학자 등을 양성하는 대학과 취업전문대학으로 개편한다.
- 전문가양성대학은 4년제로, 취업전문대학은 2년제로 한다.
- 전문가양성대학은 졸업정원제를 전제로 입학 문을 대폭 넓리고, 취업전문 대학은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제로 하며, 1학년은 교양과정으로 하고 2학년은 전공과목에 해당되는 기업 등에 실습생으로 근무하도록 한하겠습니다. (예시 : 무역과는 무역회사에, 신문방송과는 언론사에 실습생으로 1년 동안 근무하도록 한다)

## 정책 5

### 신뢰받는 정치회복

#### ㉞ 정치개혁

- 국회의원 세비를 월 1,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내리겠습니다.
- 세비책정을 현재 국회의원이 정하는 것을 외부기관이 정하도록 고치겠습니다.
-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입각 회의비는 회의에 참석해야만 지급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여 불량 의원은 임기 중에도 해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합동연설회”를 부활시켜 후보자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의 정당가입을 권장하여 공천자는 해당지역 당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거운동원 수당지급을 폐지하고 자원봉사자중심의 축제분위로 바꾸고 선거비용을 대폭 줄이겠습니다.
- 우리당 소속 의원은 반드시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은 임명제로 바꾸겠습니다.

## 정책 6

### 중소기업 보호 육성 특단의 정책

- ◎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정책을 국정우선과제로 승격시키겠습니다.
- ◎ 중소기업제품 사업평가진단회사를 설립하여 우수제품을 개발한 유망 중소기업체는 사업평가서를 담보로 하여 소요자금을 완전신용대출로 지원하겠습니다.
- ◎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침해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한 법적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 어음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가격 후리치기를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 정책 7

### 금융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조치 단행

- ◎ 특별자금을 조성하여 신용카드 및 다단계영업 피해로 인해 금융 적색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회생을 위해 금융사면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 ◎ 사채의 최고 세율을 22%로 대폭 인하시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 ◎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인정해주어 주재국 국적을 취득하여 주재국 정계진출을 권장시키겠습니다.
- ◎ 재외동포에게도 인구비율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교민청’을 신설하겠습니다.
- ◎ 재외동포 인명사전을 작성하여 수출상담 등 국익을 위한 민간외교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재외동포학교 및 각급 단체와 내국인과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상호 홈스테이 방식의 초청을 통해 재외동포 애국심고취와 내국인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재외동포 2세들의 한글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우리역사 및 한글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세계 한상(韓商)단체지원책을 강화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 농·축산업 이민희망자에게 주재국 목장 및 가축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등 적극적인 이민권장정책을 강구하여 국내 농축산 인구를 축소조정하고 주재국 국적취득을 권장하여 F·T·A협정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 시 우리국민 주재국 국적취득자의 농축산물을 구입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농축산물 수입정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9**

세제개혁

-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아래 간접세보다 직접세 비율이 높도록 세제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 ◎ 소득과 소비 스타일의 변화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개편을 단행하겠습니다.
- ◎ 소득세와 상속세를 누진 다단계화 하겠습니다.
- ◎ 전 국민의 현금영수증의 생활화로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조세징의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 전문직 자영업자(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에게 지불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10%를 환급해주도록 하여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를 방지하겠습니다.

- ◎ 노·사가 화합하는 공존 시장경제 극대화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립하고, 기업의 성장 발전환경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원가개념에서 운영하여 공장용지를 저가에 공급하는 등 기업요소 비용을 최소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적극적인 국내 유치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세수증대로 국가운영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 ◎ 작은 정부를 실현하여 기업발전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 발목 잡는 ‘비대한 공공부문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습니다.
- ◎ 공장건설 접수처를 국무총리직속에 두어 공장건설절차를 최단 시일 내에 마치도록 지원하는 한편, 발견되는 장애요인에 대한 법의 개정을 즉각 서둘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등의 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대기업의 은행설립 허용 등 투자의 업종규제를 해제하겠습니다.
- ◎ 지하경제를 양성화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 서울 여의도를 미국의 심장인 월스트리트를 능가하는 금융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 ◎ 한국인 대주주에게는 가혹하고 외국계 펀드에는 너무 험한 주식양도 관련 세제를 개선하겠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통일한국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통일한국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2	“자위적 핵무장”으로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시키겠습니다.
3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 이룩하겠습니다.
4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5	“부정부패 척결” 앞장서겠습니다.
6	“서민생활 안정” 정책실천에 나서겠습니다.
7	억울한 “역사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앞장서겠습니다.
8	“교육”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9	“청년 일자리” 및 “빈곤노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10	“빈곤노인” 생활지원

## 전문(前文)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5년간의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그 기쁨을 느껴보기도 전에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분할 점령함으로써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그 후 70년이 경과한 지금 북쪽에서는 주민들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김씨(김일성-김정일-김정은)일가의 세습독재통치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체제 하에서 신음하고 있다. 반면에 남쪽에서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됨으로써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3년간의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자유가 너무 과도한 나머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무질서와 방종이 극에 달함으로서 풍요로운 사회에서도 삶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은 자연자원을 가졌으면서도 그 자원을 오로지 김씨 일가와 그 지지 세력 만을 위하여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무기체계의 제조에 집중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우리만의 자유와 풍요를 만끽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한 동포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기 위하여 자유민주통일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책임과 의무가 수반하는 자유로 재정비해야 한다. 친(아무개) 비(아무개) 하면서 파벌적 이해관계로 이합집산하는 오늘날의 주요 정당들의 모습을 바꾸어야 하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하여 불구가 되어 있는 국회를 완전히 혁신해야 한다.

젊은 층에 확산되고 있는 일종의 절망과 자학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재정비하고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자유통일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결집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우리의 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한다.

**㉸ 현황과 문제점**

- ⊙ 대한민국은 건국기념일도 제정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약화시키고 있다.
- ⊙ 일부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고 폄훼하며 애국가를 부르기를 거부하거나 태극기를 밟고 서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 ⊙ 전교조 교사들은 어린 학생들에게 미국을 적대시하거나 북한을 미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다.
- ⊙ 군인들에게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혼동하도록 하고 있다.
- ⊙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더라도 때를 쓰면 들어주는 소위 “떼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 목표**

- ⊙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 정통성을 갖는 국가임을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준법 정신을 가지도록 국민정신 함양

**㉸ 이행방법**

- ⊙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제정
- ⊙ 광화문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건립
- ⊙ 종북척결 자유통일 국민현장 선포
- ⊙ 제주 4.3 역사왜곡의 반역수사특별법 제정

**㉸ 이행기간**

- ⊙ 지속적

**㉸ 재원조달방안**

- ⊙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 정책 2

“자위적 핵무장”으로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시키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 북한은 4차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계속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 ⊙ 유엔의 제재 이후 북한이 타격을 입게 되자 북한은 보복을 호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 ⊙ 북한에 의한 도발과 테러 위협뿐만 아니라 IS에 의한 테러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

### 목표

- ⊙ 북핵에 대한 공포의 억제력 확보
- ⊙ 북한과 반복적인 전쟁위협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 이행방법

- ⊙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대일 안보협력의 강화
- ⊙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와의 협조된 노력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
- ⊙ 북한의 비핵화 실패에 대비 자위적 핵무기 개발 추진
- ⊙ IS등 외부 테러세력의 진입 원천 차단
- ⊙ 국내 테러세력의 발생 선제적 예방

### 이행기간

- ⊙ 지속적

### 재원조달방안

- ⊙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 정책 3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통일 이룩하겠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일가의 세습독재체제
- 남북의 분단으로 인한 국력낭비가 너무 엄청난
- 탈북인들이 3만명에 육박하고 있음
- 탈북인들은 새로운 이산가족
- 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존엄의 손상 및 낭비가 심함

### 목표

- 자유통일로 헌법의 명령을 완수하고 세계일류국가 추구

### 이행방안

- 유엔 및 기타 국제인권단체와 협력 북한인권 개선에 주력
- 모든 수단을 동원 북한체제붕괴 목적의 대북선전 강화
- 탈북민들의 북한민주화운동 적극적 지원
- 이북5도청에 북한체제붕괴 대비 탈북민 중심의 예비 행정부서 구축
- 일선학교 및 모든 교육기관에서의 통일교육 확대

### 이행기간

- 지속적

### 재원조달방안

- 별도의 재원 불필요

## 정책 4

“정치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 현황 및 문제점

- ⊙ 국회는 국가와 국민의 필요악이 되고 있음
-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음
- ⊙ 국회의원 중에 국가반역 전력자, 부패전력자, 병역기피자가 너무 많음
- ⊙ 국회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임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음
- ⊙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고 있음
- ⊙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재선에 도움 되는 지방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

### ㉸ 목표

- ⊙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익우선의 선진화된 국회의 구성

### ㉸ 이행방법

- ⊙ 국회의원 정원을 현재의 1/3인 100명 감축
- ⊙ 현역국회의원 50% 물갈이 법 제정
- ⊙ 소선거구 폐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 ⊙ 무보수 명예직 추진
- ⊙ 지방자치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
- ⊙ 정치제도개혁에 정당추천 및 정치인배제

### ㉸ 이행기간

- ⊙ 지속적

### ㉸ 자원조달방안

- ⊙ 별도의 자원 불필요
- ⊙ 남는 자원은 서민경제 지원

## 정책 5

“부정부패 척결” 앞장서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의 만연으로 정의의 사회가 되지 못하고 있음
- ⊙ 특히 정치인의 부패가 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함
- ⊙ 국가의 흥망은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하느냐에 달려 있음

### ㉸ 목표

- ⊙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사회의 건설

### ㉸ 이행방법

- ⊙ 3급 이상 고위공직은 정규군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 제한
- ⊙ 부정부패전력자 공직 추천, 임명 금지 및 재산물수법 제정
- ⊙ 부정부패전과자 명단 상시 영구 공개
- ⊙ “암행어사”와 유사한 감찰제도 운영
- ⊙ 유병헌의 세월호 사고 및 전직대통령의 부정부패사건 재조사
- ⊙ “암행어사”와 유사한 감찰제도 운영

### ㉸ 이행기간

- ⊙ 지속적

### ㉸ 자원조달방법

- ⊙ 별도의 자원 불필요

## 정책 6

“서민생활 안정” 정책실천에 나서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조기퇴직, 경기불황, 빈부격차의 심화로 사회문제화
- 소위 “흙수저”와 “금수저”의 비교로 근로의욕의 상실
- 빈곤층의 증대로 사회복지재원의 부족

### ㉸ 목표

- 중산층의 증대를 위한 경제정책

### ㉸ 이행방법

- 경제정책의 기본은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유지
- 부익부 빈익빈의 해소를 위한 소득세율 조정
- 재벌급 상속세율의 대폭 인상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철폐
- 가계부채의 축소, 한계기업, 한계가정의 회복을 위한 지원
- 서민자녀 취업할당제 도입

### ㉸ 이행기간

- 지속적

### ㉸ 자원조달방안

- 국회개혁에서 절약된 재원의 활용

## 정책 7

억울한 “역사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앞장서겠습니다.

### ㉸ 현황과 문제점

- ◎ 일제식민통치 및 6.25전쟁 등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그 가족의 고통 지속
- ◎ 희생자 유족들이 사회 하류층으로 전락

### ㉸ 목표

- ◎ 국가의 책임이 있는 적극적인 자세 촉구

### ㉸ 이행방법

- ◎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 ◎ 6.25전쟁 참전 경찰 전 사상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보상
- ◎ 모든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대폭 개선

### ㉸ 이행기간

- ◎ 지속적

### ㉸ 자원조달방안

- ◎ 국회개혁으로 절약된 재원의 활용

## 정책 8

“교육”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합니다.

### 현황과 문제점

- ⊙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에 의존함으로써 국가의 권위 실추 및 교육비 증대
- ⊙ 과도한 대학졸업생의 배출로 고급실업자의 양산
- ⊙ 인성 및 직업교육의 부실로 사회의 불안 초래
- ⊙ 역사교육의 결핍으로 잘못된 역사관 주입

### 목표

- ⊙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정립

### 이행방안

- ⊙ 사회 필요인력의 수급에 입각한 교육기관의 재편
- ⊙ 인성 및 직업교육과 역사교육의 강화
- ⊙ 전교조의 완전 폐지 및 학생규율의 강화
- ⊙ 3-5세 유아교육: “국가의무교육”으로 전환

### 이행기간

- ⊙ 지속적

### 재원조달방안

- ⊙ 별도의 재원 불필요

## 정책 9

“청년 일자리” 및 “빈곤노인”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이 사회문제화 함
- 청년빈곤은 결혼지연으로, 결혼지연은 출산율 저하로, 출산율 저하는 사회역동성의 결핍으로 악순환
- 노인의 빈곤은 황혼이혼과 노인자살률 증가로 나타남

### 목표

- 세대 간의 연결고리의 강화

### 이행방안

- 20대 부부 공직 우선 채용: 조기 결혼 장려
-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지원과 자녀수당 지급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맞벌이 부부에 우선 배정
- 청년들의 귀농, 귀어를 위한 특별지원책 수립
- 청년들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KOICA 활용)
- 빈곤 노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생계비 지원

### 이행기간

- 지속적

### 재원조달방법

- 국회개혁으로 절약된 재원의 활용
- 부정부패자 및 탈세자의 몰수된 재원 활용
- 어린이집과 유치원지원예산의 조정으로 가능

**정책 10**

“빈곤노인” 생활지원

㉞ 무재산 “빈곤노인” 생활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 빈곤 노인을 위한 노인생활지원법 제정
- 빈곤 노인에게 대한 사회적일자리 보장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국민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한국국민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헌법 제3조의 개정
2	병역 면제자 및 대체복무자의 국방세 의무 부과 및 민간군역법 제정
3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재편성과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4	국회의원 임기 중 자격 상실자의 재임 중 세비 몰수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및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의 선거법 입법 금지
5	법인세 및 소득세 예납제도의 개선과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및 업종별 차등과세를 위한 특별법 제정
6	기업 한계초과 잉여이익(剩餘利益)의 사회 환원 및 근로자 의무 배당제 실시
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소방안전 분야 국가부담률 확대
8	건강보험료 재정 돈 비리 척결 및 전 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9	유급 및 연금 적용 교사 안식년제 확대와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10	사법부의 민주화·선진화 실현과 경찰조직의 확대 및 전문화



국가구성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인 영토에 있어 외국의 실효적 지배권에 있는 영토라 할지라도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분명한 것은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에 명문화시킴으로써 영토의 회복을 위한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고대사 및 역사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 동북아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한다.

### ㉸ 헌법 제3조의 개정

- ◎ 현행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 말기의 영토로 한다’로 개정하여 대한민국의 주체성을 밝히고, 영토주권을 분명히 한다.

### ㉸ 현황과 문제점

- ◎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국가의 영토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써 국가의 정체성과도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 ◎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국민들의 국가관에도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
- ◎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영토·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국가로서의 요건은 단순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즉 국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미래지향적 국가관으로의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정신적 문화가 국가를 더욱 더 국가답게 만드는 것이다.
- ◎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왕권 체제’에서 ‘민권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지 나라를 새로 세웠다는 뜻이 아니다.
- ◎ 따라서 ‘대한민국’이 ‘대한’의 연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대한제국’의 ‘장자 됨’을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한제국’의 ‘채권 채무 등 모든 권리’를 ‘상속’ 받음을 뜻하므로 ‘대한민국’ 영토는 ‘대한제국’ 말기의 영토가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미래 지향적 가치관이 헌법 제 3조에 기록되어 후대에게 전승되어야 한다.



미·중 등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기존의 모든 불평등 조약과 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며, 한·미 관계에 있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영토주권 확립과 국군의 제도 개선과 아울러 국가정보력의 확충을 통하여 군사 안보력과 경제 안보력을 강화한다.

### ㉞ 병역 면제자 및 대체복무자의 국방세 의무 부과 및 민간군역법 제정

- 국방의무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이다.
- 국방은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안전사고 등 생의 위협에 노출되어 매우 위험한 업무이며, 이러한 국방의무는 항상 잠재적 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병역을 면제받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병역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병역대상자와 면제자와의 국가 의무적 차원에서의 형평성과 병역자의 봉급 및 복지, 그리고 국방인력 대체 비용과 자비로 국방생활을 영위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애자를 제외한 모든 군 면제자 및 민·관 유급 대체복무자 등에게 ‘국방세’를 의무 부과하여야 하며, 이러한 ‘국방세’는 군의 타 사업에 전용하지 않고 ‘사병의 봉급과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한다.



- 또한 군무원과는 다른 전투지원 병과로서 ‘민간군역법’을 제정, 60세 이상 전역 노장층들도 재입대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들이 사회 전공과 관련된 군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방에 있어서 나이를 초월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장층들은 국가안보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원될 수 있으므로 자주국방 안보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경험을 되살린 전문 기술병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방전문직’에 충원하면 군영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 『20대 젊은이들이 부조화된 사회에서의 경험이 내재된 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보면 스스로의 통제감을 잃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장층들의 국가관은 그 어느 세대보다 중심이 잡혀 있으므로 20대 입영 대상자들에게 귀감이 될 뿐 아니라 병영 내에서도 애국심으로 중심 잡힌 어르신들의 활동이 군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된다』

### ㉞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 해당된다.
-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권력층과 부유층 그리고 소위 금수저 집안이라 분류되는 자녀들의 군 면제 논란은 여전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조화된 사회 구조를 경험하며 성장하는 젊은이들에게 패배감만 주고 있다.

- ◎ 특히 고도화된 지식사회의 도래로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시민 상호간의 직접적인 교류가 적어지면서 사회 부적응 폐쇄형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자리 잡아 모든 잘못된 상황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정신구조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폐쇄형 사람들의 특징이다.
- ◎ 이러한 사회의 구조에서 성장된 젊은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다보니 사회와 괴리된 명령복종과 규칙적인 일과에 습관을 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로서 세월이 흐를수록 ‘보호·관심병사’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보면 잘 알 수 있다.(참조-1, 동아닷컴 뉴스)
- ◎ 국방의 의무는 국가관과도 매우 밀접하지만 이는 국가의 정체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지금 젊은이들에게 그러한 정체성을 논하기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 ◎ 정상적인 젊은이들조차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고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이들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는데 기인하며, 또한 대체 복무 등을 통하여 면제 받는 젊은이들과 그리고 기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데도 신체적 결함으로 면제 판정을 받는 이들에게 가지는 반감은 상상외로 강하지만 체념에 익숙한 현대 젊은이들은 이러한 사회 구조적 모순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를 가지고 입영하게 된다.
- ◎ 대부분의 대체 복무자들은 입영자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월급을 받으면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 ◎ 이러한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되는 각종 언론들을 통하여 밝혀지고 있으므로 입영자들의 상대적 괴리감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 따라서 법이란 평등의 원칙에서 입법되어야 하고, 집행되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군 면제자들에게는 ‘국방세’를 부과하여 원칙 있는 법 집행이 되어야 하며, 사회 구조적 모순과 결합해야 하는 군의 의무병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매우 힘들지만 오히려 정책적 판단에 의하여 청년들의 군 입대가 사회생활의 초석이 되게 유도시킴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완화시킬 수 있다.
- ◎ “병역 면제자 및 대체복무자에게 국방세를 의무 부과”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상대적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국방 인력들에게 역차별의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군 면제자들에게 징구되는 ‘국방세’는 특별회계로 처리하여 국가의 지원 외의 일반 병사들의 봉급 인상과 복리후생에만 전용 될 수 있도록 하며, 병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내면의 울분을 정책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활기찬 군영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며, 군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다.

◎ 2015~2016년 국방전력운영비

국방분야 전력운영비		
지표	2015년	2016년
 병 봉급 (상행 기준)	154,800원	178,000원 (15% 인상)
 영내자 기본 급식비 2.0% 인상	7,190원 (사회단체 81%)	7,334원 (사회단체 81%)
 이전-해체 예정부대 병영생활관 개선	15개 대대 (97.1%)	11개 대대 (100%)
부대관리 민간용역	4개 부대	33개 부대
 세탁기-건조기 보급 (보유율)	36,441대 (73.9%)	47,561대 (96.4%)
 민간조리원 운영	1,721명 (120명 당 1명)	1,767명 (110명 당 1명)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320명	369명
독서카페 설치	-	GOP/격오지 310개소
 병영도서관 도서구입비 인상	50만원/년	100만원/년
 간부 증원	2,124명 (30.3%)	2,265명 (30.9%)
 표준 차량 상용 전환-확대	표준 574대 상용 3,381대 (상용화 47.6%)	표준 264대 상용 2,740대 (상용화 50.2%)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13~'17년)	242억원 (85%)	304억원 (92%)
중대급 마일즈 장비	4식 (33%)	6식 (58%)
 대대급 전투 피복-장구류 보급 확대	GOP 11개 사단	예비 6개 사단
 생물학테러(두창) 백신 확보율	35%	64%

자료/국방부

문가원 인턴기자 / 20151203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hN1



연합뉴스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상호견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권력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로의 권력 분산과 넓은 정치를 지양(止揚)하며, 소통(疏通)과 협력하는 정치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공감의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민본(民本) 정치를 실현한다.

### ㉞ 여성가족부의 폐지 및 재편성과 노인경제복지지원청 신설

- 효율적 국가운영을 위해 행정부의 구조개혁으로 '여성가족부'를 해체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여성아동청소년지원청'으로 재편성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부처와의 업무 중복을 없애며, 전문성을 키운다.
- 또한 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경제복지지원청'을 신설하여 노년층의 공백화된 경제구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노년층 경제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년층의 경제와 복지를 일원화 시켜 담당하게 함으로써 노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나간다.



www.konap.org

정책 4

국회의원 임기 중 자격 상실자의 재임 중 세비 몰수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및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의 선거법 입법 금지

-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제도화하기 국회의원의 임기 중 범죄행위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 재임 중의 세비를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국민에 의한 견제, 소환이 가능해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헌법 제1조3항의 정신에 부합한다.
-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민주적 통제는 선출과정, 선거를 통해 이뤄지는 행위가 이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선거 이외의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민소환(recall)과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할 시에 해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며, 또한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을 다룰 수 없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4년마다 벌어지는 선거법을 둘러싼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공평하고 평등한 원칙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안 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



- ◎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국회 내부의 제명을 통해서만 탄핵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한 요소이므로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임기제가 ‘위임통치’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이 주도해 탄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입법기관의 특권만 누리려는 선출직 의원들을 민주적 방법으로 통제하고, 아울러 선거 과정의 민주적 통제 기능의 실패를 바로 잡아 정치공동체의 규모와 대의민주주의 조건의 차이에 따른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의 차이를 해소하여 대의정치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회해산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제정한다』

**정책 5**

**법인세 및 소득세 예납제도의 개선과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및 업종별 차등과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체감 여부에 집중하는 경제정책으로 시장과 호흡하며 내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시 경제에 대한 종합적 경제 정책을 수립한다.

**㉸ 법인세 및 소득세 예납제도의 개선과 부가가치세의 분리 과세 및 업종별 차등과세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법인세 및 소득세의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의 체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안으로써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세당국의 공적 권력에 의한 이익만이 수반되어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개선하여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사업주 통합과세 제도는 영세 생활업종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사업주의 소득세화 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소비 거래 시 카드 결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자 부담으로 별도로 자동 징세가 되는 등의 분리과세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결제액 까지 카드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의 사업주의 이익의 침해를 막아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한다.
- 따라서 정부는 원활한 국세징수를 위한 방편으로 첨단 기기를 통하여 징세를 확보하는 만큼 재래 방식의 세수입 절차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가가치세 차등과세를 실시하여 지역에서의 생활 업종 및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10%대의 부가가치세율을 업종별로 차등과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회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간접세(間接稅)로서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법에서의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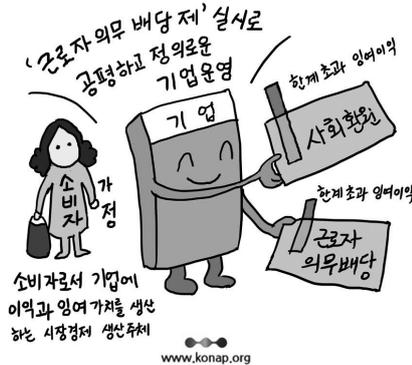
-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一般消費稅)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되며, 실제 납세자는 최종소비자이다.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전(全)거래 단계의 모든 사업자가 자기단계(自己段階)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며, 전단계 세액공제법(控除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시 누적된 부가가치세의 전용으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
- ◎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는 1977년 확정된 이래 시장 경기에 따라 8%~13%까지 대통령령에 의하여 차등 적용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한 차례도 적용된 예가 없었다.
- ◎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세라는 점에서는 업종별 차등과세 시 전단계 세액공제법(控除法)에 의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나 이는 과세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므로 지역의 생활업종이나 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업종별 차등과세를 실시하면 소비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생활경제로 집중되므로 시장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정책 6

기업 한계초과 잉여이익(剩餘利益)의 사회 환원 및 근로자 의무 배당제 실시

㉸ 기업 한계초과 잉여이익(剩餘利益)의 사회환원 및 근로자 의무배당제 실시

- 국민 개개인은 소비주체이자 경제주체이므로 따라서 체감 여부에 집중하는 경제정책을 수립한다. 그리고 소비자는 시장 활동에 있어 기업의 잉여가치(剩餘價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經濟主體)이기도 하므로 공평하고 정의로운 경제운영을 위해 기업의 적정 생산이익(生産利益)을 초과하는 잉여이익(剩餘利益) 중 일정률을 사회 환원 및 ‘근로자 의무배당(義務配當)’으로 환원(還元)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업의 이익은 시장경제에서 소비자 경제활동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한 기업의 적정 이윤 이상의 초과 잉여가치(剩餘價値)는 대부분은 노동잉여가치로서 고정인력 자원인 직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부가(附加)되어 있다.
- 따라서 기업의 한계이익을 초과하는 잉여가치(剩餘價値)가 적정하게 사회에 환원(還元)될 수 있도록 공정(公正)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경제개혁을 단행하며, 기업가 정신 쇠퇴(衰退)에 따른 투자 둔화(鈍化)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잉여금의 사내유보 비율을 줄여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양극화(兩極化)로 인한 국력의 저하 및 민주주의 붕괴(崩壞)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과세(課稅) 등으로 소득 구조의 재편성을 위해 현행 소득세법을 전면 재검토하고, 누진(累進) 평가기준의 재정립하여 상위 소득의 증세(增稅) 요소 확대 및 하위 소득의 세금 경감(輕減)요소 확대 등으로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여 시장경제 주체인 국민 모두에게 공정(公正)한 경제 민주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초석(礎石)을 만든다』

사회 안전망 구축에 앞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안전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가의 통제권 확대를 서둘러 시행하고, 국민들 스스로 자구력(自救力)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뿐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재해, 재난, 안전사고, 테러와 위해 식품 등의 물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병, 폭력, 범죄, 공해,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 등으로부터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청'을 두고, 공공 부문(公共部門)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재난(災難)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든다.

### ㉞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공무원 전환과 소방안전 분야 국가부담률 확대

- 소방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處遇改善)을 위하여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 그리고 국가의 소방안전 분야의 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또한 소방청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확대하여 목숨을 담보로 안전을 책임지는 자들에 대한 대폭적 처우 개선을 통하여 예우하며, 민생 속에서 민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희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士氣振作)을 통해 사회가 더욱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소방공무원이 목숨을 잃으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없다』



www.konap.org

## 정책 8

## 건강보험료 재정 돈 비리 척결 및 전 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에게는 헌법적 권리이므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초한 사회 정의실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복지과용(福祉過用)으로 인한 폐해(弊害)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구하여 이를 바로 세움으로써 모든 국민이 공평한 복지의 틀 위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安全)과 건강(健康)이 강조되는 차세대 복지를 실현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이 갖추어져야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으므로 보편주의(普遍主義)에 입각(立脚)한 기본 틀 아래 선별주의(選別注意) 복지정책실현과 복지정책을 일체화시키는 통합을 추구하고, 성장과 복지가 유기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복지시스템으로 전환시켜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정건전성과 책임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 ㉸ 건강보험료 재정 돈 비리 척결 및 전 국민 건강보험료 인하

- ◎ 2014년 말 현재 건보재정은 사상 최대금액의 연속흑자행진 중이고, 사상 최대의 수십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임에도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의 건보료를 올리고자 하고 있다.
- ◎ 그리고, 건강보험료 수입 금액의 발표도 해마다 수천억씩 차이가 발생하므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이전에 건보재정 돈 비리 감사가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있어도 건보재정이 흑자면 내리고, 적자면 더 거두어야 하는 1년 단위의 단기보험이므로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유무를 평가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다르다.
- ◎ 2014년 말 현재 건보재정은 사상 최대금액의 연속흑자행진 중이고, 사상 최대의 수십조 원의 적립금을 쌓아둔 상황이므로 지금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내릴 때이지 부과체계 개편한다며 많은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올릴 때가 아니다.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이미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수입이 빠르게 증가함을 지적하였고, 해마다 인상하여 더 거두어들이는 건강보험료도 2014년의 경우 2013년보다 2.6조를 더 거두었으며, 또한 2013년의 경우도 2012년보다 2.6조를 더 거두었기에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는 당분간 내리고, 피부양자 규정을 강화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는 인하여 국민들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참고자료)

## 결산기준 2009년도 건보료 수입 3가지

[출처] 148. 건보료 수입 3가지로 분식회계 고발건

자료발표일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09년도 건보료 수입금액	26조1,661억원	25조9,352억원	25조8,590억원	25조9,474억원 (2012년보다 122억원 부풀린 대신 기타수입에서 122억원 줄임. 즉 2014년~2012년) 2013년도 보건복지부령안서 예비심사보고서
자료명	'06~'10년도 비교손익계산서	2011결산 부처별분석6	2012 건강보험주요통계	2013년도 보건복지부령안서 예비심사보고서
자료발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예산정책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보건복지위원회

2011년 발표 : 26조1,661억원

자료1) 건보공단 결산서  
'06~'10년도 비교손익계산서(건강보험·입산보험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1. 사업수입	18,810,579,314.167	21,728,699,897.310	24,973,026,442.734	26,166,081,793.339	28,457,726,348.436
가. 보험료수입	18,810,579,314.167	21,728,699,897.310	24,973,026,442.734	26,166,081,793.339	28,457,726,348.436
나. 지역보험료	4,914,102,085.858	5,380,246,463.745	5,943,351,963.139	5,928,391,069.291	6,374,589,856.065
다. 정부보조금	1,202,958,004.012	1,324,683,765.566	1,447,259,850.872	1,525,971,106.126	1,628,037,295.262
라. 공과사업보험료	1,524,701,483.507	1,706,828,011.108	1,862,781,196.691	1,967,885,716.834	2,110,109,685.720
리. 일반사업보험료	11,169,717,740.790	13,316,941,661.889	15,719,633,452.032	16,744,125,901.094	18,344,999,511.373

2013년 발표 : 25조8,590억원

2012 건강보험 주요통계  
■ 2012년 보험료 총 징수 금액 36조 523억 원 ... 징수율 99.1%  
(단위: 억 원, %)

구분	합계			지역			직장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2007년	217,287	213,865	98.4	53,802	51,140	95.1	163,485	162,725	99.5
2008년	249,730	244,334	97.8	59,434	55,526	93.4	190,297	188,808	99.2
2009년	261,661	258,590	98.8	59,294	57,117	96.3	202,377	201,472	99.6
2010년	284,577	282,065	99.1	63,746	62,143	97.5	220,831	219,922	99.6
2011년	329,221	326,714	99.2	67,806	66,851	98.6	261,416	259,863	99.4
2012년	363,900	360,523	99.1	70,103	68,576	97.8	293,796	291,947	99.4

주: 1) 결산기준  
2) 징수율은 12월 납부미납일인 익년 1.10일까지 징수액 포함  
3) 부과액 = 당년 부과액, 징수액 = 당년 징수액 + 과년 징수액  
4) 직장 부과액 및 징수액은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소득형액보험료(2012. 9. 1. 시행) 포함  
\* 소득형액보험료: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간 200만원이 넘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

2012년 발표 : 25조9,352억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2011년 건강보험 재정준-지출기준으로 37조 3,766억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도 운영되며 정부재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재정에 포함되는 부분은 정부지원액인 5,361억원으로, 통-규조인 국외의 심화-회원을 만든다.

【표 7】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002~2011년 (단위: 억 원, %)

	2002	2008	2009	2010	2011	합계 1 연평균 2002~2011년
수입(A)	108,764	248,817	264,897	286,991	329,413	2,691,729
보험료	896,466	244,334	259,752	281,659	323,785	2,053,191
기타수입	2,398	3,934	4,262	4,202	4,202	33,344
재정지원금	917	1,272	1,139	1,335	4,264	37,2
지출(B)	146,510	273,412	311,849	348,399	373,766	2,453,339
보험급여	138,993	264,948	301,461	336,855	361,890	2,356,089
관리운영비	6,564	8,944	9,234	11,677	11,040	96,874
기타지출	949	623	664	687	1,366	6,760
당기유지(소)액	-37,746	-26,595	-46,860	-61,608	-44,353	-563,591
당기유지(대)액	30,139	40,262	68,633	49,614	30,561	397,500
일반회계	23,747	30,023	35,261	37,263	40,794	310,987
건강보험기금	4,392	10,239	10,262	10,631	9,567	86,993
정부지원금	-7,607	13,667	-32	-12,994	6,008	33,709
누적재정수지	-25,716	22,618	22,566	5,992	15,600	63,809

주: 1) 2011년기준으로, 건강보험 2012년은 세입 및 지출의 기준  
2) 임의회계 기금(지역별) 제외  
3) 2002년 2006년 및 2007년 건강보험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임의회계 반영  
4) 2002년 2004년(2004년~2006년) 2007년(2007년~2009년)  
출처: 보건복지부(2012. 5)

### - 2014년7월 발표 : 25조9,474억원

2009년도 보험료 수입을 위의 2012년도 가을 정기국회에서는 25조9,352억 원이고 기타수입은 4,365억 원이라 발표한 것을 2014년7월에는 다시 멋대로 122억 원을 늘린 25조9,474억 원이라 하고, 동시에 기타수입은 122억 원을 줄여서 4,243억 원으로 발표이처럼 건보료 수입에서도 비리를 저지르고, 또 동시에 기타수입에서도 허위표기로 비리를 저지름.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li> <li>▣ 식품의약품안전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관</li> <li>소관</li> </ul>
---	--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재정현황 >

(단위: 억원)

구분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b>수입</b>	<b>185,722</b>	<b>203,325</b>	<b>223,876</b>	<b>252,697</b>	<b>289,079</b>	<b>311,817</b>	<b>335,605</b>	<b>379,774</b>	<b>418,192</b>	<b>451,733</b>
·보험료수입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474	281,650	323,995	358,535	386,117
·국고지원금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44,980	50,193
·담배부담금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82	10,630	9,588	10,073	9,986
·기타수입	2,147	2,513	2,947	3,449	3,916	4,243	4,202	4,062	4,604	5,437
<b>지출</b>	<b>170,043</b>	<b>191,537</b>	<b>224,623</b>	<b>255,544</b>	<b>275,412</b>	<b>311,849</b>	<b>348,599</b>	<b>373,766</b>	<b>388,035</b>	<b>415,287</b>
·보험급여비	161,311	182,622	214,893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376,318	402,723
·관리운영비	7,901	8,535	8,966	9,734	9,841	9,724	11,077	11,040	11,387	12,117
·기타지출	831	380	764	610	623	664	687	836	330	447
<b>담기수지</b>	<b>15,679</b>	<b>11,788</b>	<b>Δ747</b>	<b>Δ2,847</b>	<b>13,667</b>	<b>Δ32</b>	<b>Δ12,994</b>	<b>6,008</b>	<b>30,157</b>	<b>36,446</b>
<b>누적수지</b>	<b>757</b>	<b>12,545</b>	<b>11,798</b>	<b>8,951</b>	<b>22,618</b>	<b>22,586</b>	<b>9,592</b>	<b>15,600</b>	<b>45,757</b>	<b>82,203</b>

\* 자료 :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87쪽

2014. 7.  
보건복지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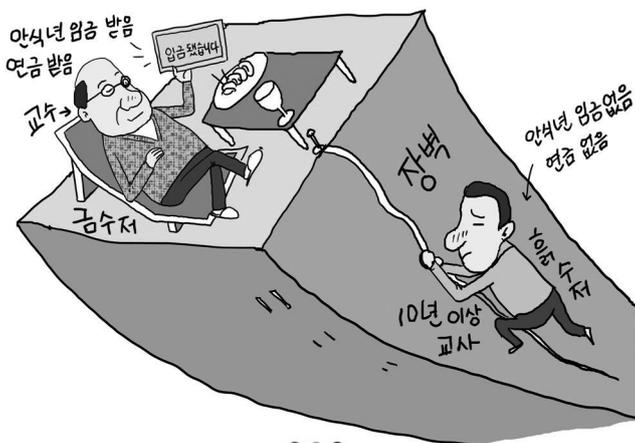
**정책 9**

**유급 및 연금 적용 교사 안식년제 확대와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교육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독자적 능력에 따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으로써 정부는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고, 청소년기의 심리적, 환경적 영향으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지원책을 마련하여 교육이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 및 대물림 기초가 되지 않도록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㉘ 유급 및 연금 적용 교사 안식년제 확대와 영·유아 보육교사의 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 교육계 교원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체계적인 수업 준비와 교과연구에 몰두하기 어려운 교사들을 위해 ‘교사 안식년제’를 확대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일정액의 유급처리와 연금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사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교육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교사가 신뢰 받는 사회로부터 가능한 선진 교육을 추구한다.
- 그리고 오늘날의 보육개념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비롯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녕과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사회 복지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영·유아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보육전문 공무원(준공무원)제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및 민간시설에 맞는 재무 회계규칙 재검토 및 다양한 유형 및 수요와 공급 조절 등 서비스의 전반과 준공영제를 적극 검토하여 민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한다.



www.konap.org

- 『영·유아 보육교사는 보모가 아니다.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 그러므로 국가의 인적 기초자원인 영유아들의 양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더하기 위해 이들을 보육전문 준공무원으로서 대우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며, 요람부터 교육이 바로 서려면 인솔하는 교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기사 참고)

## 교사들 "금수저도 아니고, '무급 1년 안식년'은 그림의 떡" 반발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기사입력 2015-11-06 08:39

-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되는 초·중·고 교사들의 무급 휴직제를 둘러싸고 6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수는 안식년 1년 동안 월급과 상여금은 물론 특별연구비까지 지원받는 반면, 급여를 주지 않는 안식년제도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 인사혁신처는 앞서 지난 5일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10년 이상 일한 초·중·고 교사들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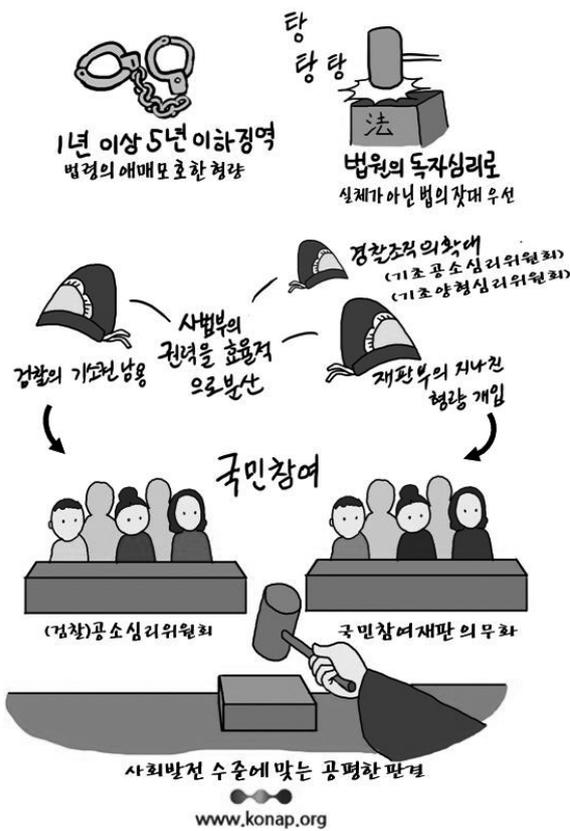
안식년제처럼 교사들이 쉬면서 재충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취지다.

- ◎ 새로 도입되는 ‘교원자율연수 휴직제’는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재직 기간 내 한 번씩 최대 1년을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정원 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급여는 주어지지 않는다.
- ◎ 오승걸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최근 교사들이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명예퇴직 신청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며 “재충전할 기회를 준다면 교원의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고 교단이 안정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휴직 간 교원은 신규 채용 시 뽑은 정규 교원이 대체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일부 기간제 교원 등 대체 교사를 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일선교사들은 “금수저, 은수저 빼고 교사월급 갖고 1년 무급으로 안식년 쉰 사람 있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홀벌이 교사의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육아휴직도 못하는데 무급 안식년 같은 소리를 하느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나왔다.
- ◎ 네이버에서 한 교사는 “무급에 안식년제도? 교수들도 무급인가? 연금도 기간에 산정 안하고 무급? 죽게 안 생긴 이상 누가 안식년하나? 있느냐 마나한 제도 같다”고 적었다.
- ◎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교사 무급안식년제의 도입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 교사는 “교사들의 무급 안식년제가 교사를 위한 제도로 포장됐지만 사실은 정부의 실업률을 위한 정책”이라면서 “기간제의 무차별적 양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한편 정부는 학교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와 관련한 임용 결격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 경우만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됐지만, 이를 성인 대상의 성폭력도 포함시키고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 ◎ 각종 성비위로 해임될 경우 연금이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삭감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교원의 경우 금품 관련 비위로 인한 해임 시에만 연금이 삭감됐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상호견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여 국가 권력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로의 권력 분산과 낡은 정치를 지양(止揚)하며, 소통(疏通)과 협력하는 정치로 국민대통합을 위한 공감의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민본(民本) 정치를 실현한다.

### ㉞ 사법부의 민주화 · 선진화 실현과 경찰조직의 확대 및 전문화

-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법 감정은 극에 달해 있으므로 이를 사법부의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해소(解消)하고, 상식을 토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는 억울함 없는 국민을 위한 법으로 운영되도록 한다.
-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억지맞춤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기소권(起訴權)의 남용(濫用)으로 그 폐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독자적인 권한의 심리(審理)제도와 법령의 애매모호한 형량 등으로 법원의 개입 여지가 많아 실체가 아닌 법의 잣대를 우선함으로써 공정하지 못한 재판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 이에 점진적으로 사법부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억울함 없는 공평한 법 적용을 통하여 사법의 민주적 기반 이를 위하여 법원에 집중된 심리(審理)가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또한 유·무죄 또는 양형에 있어서도 법원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말미암아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판부에는 ‘국민 참여재판’을 의무화한다.
- 따라서 사법부의 권한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킴에 있어 형사사건은 경찰조직의 개편과 확대를 통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로 검사의 기소(起訴)독점권에 대한 폐해(弊害)를 막고, 각 경찰의 전문분야 위원회인 ‘기초공소심리위원회(기소제안권)’ 및 ‘기초양형심리위원회(양형제안권)’를 설치한다.



○ 그리고 각 경찰의 전문분야 위원회인 ‘기초 공소심리위원회(기소제한권)’ 및 ‘기초양형심리위원회(양형제한권)’의 설치에 따라 사법부의 비대화(肥大化)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운영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사법부의 무소불위(無所不爲)적인 권한에 따른 폐해(弊害)와 유전무죄무전유죄(有權無罪無權有罪)등 비하(卑下)적인 국민적 평가를 불식(拂拭)시켜 억울함 없는 국민의 사법 제도로 거듭나게 한다.

○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 등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의 애매모호한 법규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여 국민 누구나가 범죄사실에 있어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업무로 전환하며 국민들이 자유롭게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10대 정책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10대 정책

NO.	10대 정책
1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
2	국회와 정당 혁신, 경제 민주화, 일자리창출
3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 4권 분립론
4	6대 교육, 22대 이념, 5국통일 대한민국
5	민주 정치 실현
6	대한민국의 대발전, 지상낙원 건설
7	국민성 : 정상화, 전문가, 당연성, 근본성
8	교육 과학 기술 발전 영성 교육 깨달음
9	한을 풀고, 소원성취 하는 한나라당
10	통일, 행복, 낙원, 대발전, 대통합, 대광명



## ㉞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나라당 대표 이태희 총재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다가오는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나라당이 국민의 대표로 입후보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한나라당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저희 한나라당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정치가 현 상태대로 잘못 가서는 안 된다는 통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호의호식과 정치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일반국민의 애환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정치인들만의 파벌정치 당파정치 그룹정치, 정치인들만의 이익 추구 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정치인들만의 권익추구와 향유 때문에 일반 국민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살기가 어렵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나라당이 끝장을 내고 박살내고 다시는 이런 잘못 된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이 출마를 하였습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 여러분들의 애환과 고통과 숙원 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주권과 대통령 주권이 아니라 국민주권 과 주권재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순응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근본에 충실한 민본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이 올바르고 좋아야 그 결과가 좋고 시행착오가 적은 것입니다. 국민이 근본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 정치가 잘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국방 외교 행정 등 등 모든 분야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선진화 되고 축복받은 살맛나는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잘못된 정치를 모두 박살내어 집어 치우고,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여 훌륭하고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한나라당과 함께 동참해 봅시다.

### ㉞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이 은혜스럽고 평화스러운 땅, 이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당, 한나라당이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하여 애국심으로 펼쳐 일어섰습니다.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인 자유와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깨달음 대광명을 실현하기 위한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수증, 복본, 기여 헌신 봉사 성공 대통합 깨달음, 대광명 이라는 22대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세계인류 보편타당성에 근거한 정치를 하는.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의 정강정책과 당헌 당규 등 당의 목표와 이상이 활기차고 용솨음치는 역동성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운영 등 모든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과 협조와 조언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나는 잘 살고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세계3대 강국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살기 좋고 살맛나고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한나라당과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합심 협력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조언하고 상호 협력하여 건강과 사랑과 행복과 자유와 평화가 넘쳐흐르는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땅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 **존경하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국민 여러분 !!**

이 은혜롭고 평화스러운 땅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으며 세계가 잘 될 수 있으며, 대한 국민들이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살맛나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는가를 국민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 협력하고 구상하여 세계에서 일등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나라당이 나서서 그 청사진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고 무엇을 추가하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으신가를 자문해주시고 심의해주시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발전을 근본에서 생각하고 구상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대한민국 외 다른 나라에서 잘 된 부분을 전부 접목하고, 여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세계 국가들의 잘 된 부분을 수용하여 대한민국의 독창적이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구성하여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북극원(지상 천국)을 건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숙원사업은 저희 선거 홍보물을 통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단기 중기 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집행감시 개선책도 저희 홍보물에서 제시할 것입니다.

## **㉞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과 성공 시대를 넘어 선진 시대를 이룩하겠습니다.**

◎ 꿈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땅, 약속의 땅, 삼천리 금수강산의 대한민국~

◎ 자연과 사람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 역사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다시 신바람 부는 신명 풍류와 해학 다정 행복한 대한민국 세계로 미래로 뻗어가며 발전하는 세계선진일류국가 세계 제일 장손 민족국가 대한민국을 재창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 청사진의 종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공청회와 정책수립을 통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을 창조하고 건설하겠습니다. 4년 전 보다 살림살이와 살맛이 나아지셨습니까?

## 농가 부채를 완전 해결하여 부강한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농업인 권익보호와 소득증대 사업, 환경개선 사업, 농가 주택 개량사업을 통하여 표준형 2층 양옥을 농민들에게 선사하겠습니다. 올해 풍년이 들어 쌀값 등 농산물 임산물 광산물 수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아 제값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와 연계하여 세계적인 분업체제와 협업체제와 공동 생산 소비 저축으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경제 기술 인프라 구축으로 첨단전략산업, 무공해 산업, 그린 테크놀러지 산업, 첨단 BT산업, 첨단 IT 산업, 첨단 CT 산업, 첨단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유치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 한나라당 대표 이태희 총재에게 대한민국의 정치를 맡겨봐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희망차고, 행복한 국가,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살기 좋은 살맛 나는 세상, 지상 낙원을 건설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어린이, 가난한 가정, 뒤쳐진 마을, 소외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고 소외됨이 없는 사회복지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성공시대를 넘어 선진화 시대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 세계 1등 지역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 ㉞ 한나라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략

- ◎ 저희 한나라당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다면 선거 공보물에 있는 내용의 정책들과 국민들께 약속한 정책들을 확실히 실천하겠습니다.
- ◎ 저희 한나라당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할 당위성 저희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새 인물들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뽑아 대한민국 발전을 꾀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 ◎ 한나라당이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뽑아주신다면 정치개혁, 경제발전, 사회발전 문화발전, 교육 예술 스포츠 (생활체육) 동호인회와 생활 정치 삶의 질 향상, 국민성 개혁, 국민교육 등 6대 교육과 9자정신과 22대 덕목을 함양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세상 즐거움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통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고,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통하여 선진민족성을 양양하며, 살기 좋고 잘 사는 부강한국민을

만들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나갈 것입니다.

- ◎ 대한민국 발전 전략 - 12페이지 책자형 선거 공보물 참조
- ◎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 -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

안파견 환인 천제와 거발환 환웅 천황 자오지 천황 단군왕검 김유신 장군의 얼을 계승하여 한나라당이 한·몽(韓蒙), 한·연해주, 한·북한,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통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5연방 1체제 1국가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름 하여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大桓])”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제3대 강국(미국, 대환, 중국) 중 가장 으뜸인 미국을 지도하고 방향제시를 하여 실질상의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겠습니다.

- ◎ 장손 민족의 역할과 사명 - 한나라당의 지도이념 참조
- ◎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적 소명의식 - 12페이지 책자형 선거 공보물 참조
- ◎ 대한민국 국가발전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합시다 - 선거 모토 참조
- ◎ 한나라당에게 압승 필승 건승 - 선거 모토 참조
- ◎ 한나라당을 대한민국 제1당으로 등극시켜 주십시오!!! - 선거 모토 참조

## 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국민 여러분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정치 부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업그레이드되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참여정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전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복지와 행복 건강과 사랑을 위한 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서로 돕고 국민이 바로 서고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위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국민이 스스로 규율하며, 국민이 스스로 자각하며, 국민이 스스로 이루어나갈 때에 비로소 올바른 국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선진국민이 될 때에 그 국가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란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물 흐르듯이 순리에 맞게 우주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

한나라당이 경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제민의 약어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공존하며 공공재와 사적재,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 나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실천해보이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를 하되 가동은 주7일을 풀가동하여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㉘ 한나라당 (The Grand National Party)의 이념

**한나라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속에 성장한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국민의 자유와 평등, 통일과 평화, 사랑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가장 이름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정강 정책과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이 기존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좋은 정당이며, 기존의 해악을 일소하는 혁신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용적이고 이상적인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예컨대, 세계 시민을 중산층화 하는 정당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을 퇴치하고 무지를 타파하며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5연방 1체제 1공화국 체제로서 한.몽 연방공화국, 한.연해주 연방공화국, 한.북한 연방공화국,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 제1대 강국인 그랜드칸[GRAND KHAN, 대한국(大桓國)]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 한나라당은 당헌과 강령에서 주장하는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계승하여 선진민족성을 고취하고, 교양과 양식이 넘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국민성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 ◎ 한나라당은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통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고,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을 통하여 선진 민족성을 양양하며, 살기 좋고 잘사는 부강한 국민을 만들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는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한 많은 한민족에게 한을 풀어주고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 상생하고, 공생발전하고, 소원 성취시켜드리고, 홍익인간화 하고 국가발전 시켜드리겠습니다.
- ◎ 한나라당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과 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㉞ 한나라당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 필승 전승 선거 모토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새 인물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뽑아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애국애족하는 국회의원들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가장 살기 좋은 국가, 살맛나는 국가,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할 것이며, 깨달음의 세계와 대광명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HOPE! 희망!

한나라당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 필승 전승시켜 주십시오. 농민 서민의 애환, 고통, 숙원사업을 한나라당이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한나라당과 함께 이룩합시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한나라당의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 ◎ 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장인 제도 마스터 제도 도입, 최고 전문가에게 시상식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기술 장려와 과학의 발달, 예술의 발달, 국방기술의 발달,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분야도 세계 제1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 ◎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 ◎ 한국의 국민성을 계발하고 함양하고 개조해야 합니다. 형제 간에 우애가 있어야 합니다.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남한이 가장 적으로 아는 북한 그다음은 일본, 그 다음은 중국으로 치고 있는데 이는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한나라당 당헌과 강령에서 강조하는 5대 교육과 9자 정신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 1 등 국민이 됩니다.

◎ 교육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유평화 대학교 건설로 영성 혁명과 영성계발과 지적체 승상과 전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일류 국민을 만들고, 6대 교육 및 9자 정신과 22대 덕목으로 가능합니다.

◎ 경제 혁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풍요로운 사회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샌드위치 경제와 협상차 가격입니다. 샌드위치 경제란 동북아시아에서 선진경제 시스템의 미, 일과 후발주자인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경쟁에서의 샌드위치 경제이며, 경제의 중간 상태입니다. 즉 공산품가격과 농산물가격의 차이를 협상차 가격이라고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진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병렬화가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기업과 농촌의 빈부격차와 소득수준의 차이 및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 격차와, 도시민의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나라당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대기업의 임직원의 월급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 월급을 현실화하면 대졸 취업자 문제해결됩니다. 왜 근본에서 생각하지 않고서 예외와 그네들의 기득권 논리에 사로잡혀 좋은 세상을 왜 못 보시고 왜 못 건설하시는 것입니까?

대기업의 임원 1인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삭감하면 20여 명의 대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삭감한 금액으로 대학교 졸업자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농산품과 광산품과 임산물과 수산물의 가격 폭락과 쌀값 폭락문제 해결을 한나라당에게 맡겨 봐주십시오.

쌀값 폭락 문제의 해결은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일부 정당은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북 쌀 지원의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쌀값 폭락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내년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호주제 부활하여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고 두고 두고 뿌리 없는 자손을 만들 것입니까?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이어지고 문화 창달과 한민족의 우수성이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 ◎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 시작하십시오. 왜 자기네들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십니까? 다른 반대편의 사람들도 평등하게 최저생활 이상의 중산층 생활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농민 여러분, 서민 여러분 2만 달러에 걸 맞는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살림살이가 늘어났습니까?
- ◎ 지방 총각 지방처녀 농촌 총각 장가가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다민족 문화 정책으로서, 본래의 다문화 정책과 근본적으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 정책 2

국회와 정당 혁신, 경제 민주화, 일자리창출

## ㉞ 제1주제 :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나라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5번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환인천제와 환웅천황 단군왕검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나라 한민족의 정당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살아서도 한나라당! 죽어서도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어... 영원하라 !!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을 푸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 ○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행정부 국회 법원 국권부(참전계경부, 한풀이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 각종 언론기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을 국민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 푸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빕니다.
-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절반을 감축하겠습니다. 시의원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모두 없애거나, 존속시킬 경우 당초 지방자치 뜻대로 무보수로 하겠습니다. 각종 농협장 선거 등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선거를 없애고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 정하겠습니다. 교육감 국민 직접 선거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 국회의 회기 중 정기회를 연 2회 (3월 21일~5월 31일, 9월 20일~12월 31일) 로 하고, 국회를 365일 연중무휴 개최하여, 법안상정 심의 의결에 있어서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및 자질향상과 양식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헌법 기관이므로, 1인의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과 법률안 심의 회부, 법률안 상정권 및 예산 결산심사권 상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선거를, 개원하는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직선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제1당에서 내세우는 대표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무작위로 직선제로 변경하여, 자질이 되는 자를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 국회의원의 표결 시 무기명투표 및 교차투표 및 투표에 있어서 정당의 개입을 차단하고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와 정당의 혁신은 국민심판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투표 때 이루어지므로 투표 시 국회의원후보를 심판하고 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에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참여 경선정당,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 재보궐 선거 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는 공천권을 배제하며,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

#### ◎ 정당의 혁신 방안

- 군소정당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없는 군소 정당에도 정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정당대표자에 대해 국회의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한다.
-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정당의 최적의 효과를 유지한다.
- 헌법상 보장한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정당과 국회의 구조개혁이 잘 안 되고 정치가 삼류인 것은 거대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며, 제19대 국회의원들 전체가 정치 잘 못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느 특정 정당에서 과반 다수를 점하고 있으니,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당선만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원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 때에 국민의 심판인 선거를 통해서 어느 일당에 몰표를 주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양식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여,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 보궐 선거 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는 공천권을 배제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 참여 경선 정당,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당이 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에 국민 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㉟ 제 2 주제 : 한·미 FTA(한·EU, 한·중, 한·~~스탄, 한·러, 한·남아메리카, 한·호주, 한·아프리카 FTA) 쟁점과 해법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당입니다. 5연방 1체제 1국가란 한·몽 연방공화국 + 한·연해주 연방공화국 + 한·북한 연방공화국 + 한·동북3성 연방공화국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GRAND KHAN)을 건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 3대강국(대한민국, 미국, 중국)을 형성할 것이며, 세계 선진 일류 장손 민족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9대 덕목과 9자 정신과 5대 교육을 통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할 것이며, 세계제일류국민으로 등극할 것입니다.

### ○ 한·미 FTA, ( 한·EU, ~~~~ 한·아프리카 FTA )쟁점

- 한국은 소고기 개방과 지적소유권 개방 및 농산물 개방으로 개방으로 인한 불공정 무역이 현실화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불평, 불만이 고조되고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지만, 여전히 산업부문간, 계층 간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농민과 한우 농가의 반발과 자동차산업의 환영은 그 좋은 예라 할 것입니다.
- 일부에서 한·미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고도 잘못된 주장입니다. (한국은 무역 1조\$를 달성하여 세계 10위권 이내의 무역 강대국이 되었는데, 한·미FTA 폐기는 국제신용과 국제 계약 위반자로 낙인 찍혀 국제고아가 될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의 쟁점의 주요 사안은 당초 원안보다 한국에게 다소 불리하게 FTA가 최종 타결됨으로 인하여 한·미 간의 불평등 FTA 체결에 대하여 한국의 식자층인 지식인 진영이 격노하게 된 것입니다.
- 한·미 FTA는 무역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불평등 FTA체결이 문제인 것입니다. 폐기되어야 할 대상은 절대로 아니고 재협상 대상입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무역 3위에 등극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의 지혜와 슬기로 총 단결합시다.
-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국익을 우선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재체결하는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 한국의 취약요소를 보강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의 무역기반구축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기술 개발과 과학발전을 통하여 국부의 증대를 꾀한다.
-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 이전에, 한국이 무역확대와 수익 극대화 및 국부의 증대, 특히 증대 등을 통하여 한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실리를 추구한다.

◎ 한·미 FTA 해법

- 한·미 FTA의 쟁점을 해결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미 FTA를 재체결하는 것입니다.
- 한·미 FTA에서 한국의 취약요소를 보강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소하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의 무역기반구축과 근본적이고 원천적인 기술 개발과 과학 발전을 통하여 국부의 증대를 꾀한다.
- 일본이나 중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 이전에, 한국이 무역확대와 수익 극대화 및 국부의 증대, 특히 증대 등을 통하여 한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 한·미 FTA는 한국이 무역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세계무역 3위에 등극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총단결 합시다.

㉞ 제 3 주제 : 경제 민주화 방안

한나라당은 22대 덕목인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희망 ~)과 9자 정신인 (자조, 자립, 자결, 자위, 자주, 자유, 자율, 자각, 자성, 정신)과 6대 교육(가정, 학교, 사회, 국민, 국가, 세계, 교육) 통하여 국민성을 계발하고 더 높여서(업그레이드시켜) 세계 선진일류국민으로 재탄생 할 것입니다.

◎ 경제 민주화 방안

압축성장의 신화 속에 우리 경제의 아픔이 바로 경제 민주화 문제입니다,

- 1 %의 부자와 99 %의 일반시민 서민간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99%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법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농민 어민 노년층 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노동3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채용과 퇴사의 용이함과 유연성을 회복하고, 근로자와 사주 모두가 그 회사의 사원이요 주인이라는 자주의식으로, 공동모색을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 주체들이 조화로운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개인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와 병진화 및 병렬화를 통하여, 공생발전, 상생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기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본시각과 의무를 부여하여,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가 경제 정책 수립 집행 시 개인이나 시민 서민 및 중소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인의 공생 발전 및 병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비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제7광구에서 일본과 중국은 가스와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7광구에서 가스와 석유탐사를 하여 경제를 살리고 국민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 ㉞ 제 4 주제 :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비애를 벗어나 세계 3대강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일소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일소하고, 교육문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50% 인하와,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 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금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휘발류 값, 경유 값 등 기름 값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서민 생활 물가를 잡아, 안정시키겠습니다. 서민 농민 어민 및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정치발전 시스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당연성과 근본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구조, 시스템으로

정착. 발전시키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

- 대기업 임원의 임금과 보수를 적정선에서 통제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졸신규 취업자들의 구직난을 해소하여 일자리창출과 인간다운 생활 유도 및 기업 확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임원이 연봉 100억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봅시다. 이 임원의 연봉을 10억원으로 현실화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 90명을 채용하여 1인당 연봉 1억원으로 90명에게 90억원을 지불하고, 세계 각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하여 91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91명의 유능한 인재를 통하여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고 세계경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임원은 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구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풍요로운 삶과 복지다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 몽고와 연해주에 취업·교사·선교 이민을 선발하여 1인당 5억원의 생활 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정년 퇴직자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졸 신규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의 숭고함과 희열을 맛볼 수 있게 노동의 질과 수준을 개선해 나 가겠습니다.

◎ 고용 안정

-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정년 퇴직자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졸 신규 실업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의 숭고함과 희열을 맛 볼 수 있도록 노동질과 수준을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㉞ 맺 음 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 일류 장손민족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제1

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발전 및 세계일류 선진국가 건설과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 한나라당을 이번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제1당으로 전승 압승 필승 시켜 당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을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1당이 되도록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뭉칩시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희망 사랑 평등 자유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두 손 모아 빌고 비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만세!!!대한민국 만세!!!대한국민 만세!!!대단히 감사합니다.**

## ㉞ 한나라당 호소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나라당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2014년 갑오년 4월16일에 “세월호” 침몰로 인한 꽃다운 어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제주도 수학 여행길에 운명을 달리하신 영혼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비읍니다. 국민 여러분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과 분노와 정부의 무능에 한나라당 당원 일동과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슬퍼해 주고 울음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공감해주며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한나라당은 이웃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 주고 도와주고, ‘세월호’ 사건에 같이 슬퍼해주고 울음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이웃이 잘 되었을 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는 정다운 정당입니다.

작년 잔인한 계절 4월에 전개된 이 슬픔과 놀라움과 분노와 상처와 한을 저희 한나라당이 한을 풀어드리고 한을 승화시켜서 소원 성취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훌륭히 치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 가정의 달,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이하

여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4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을 풀고 한을 승화시키고 해원상생하고, 공생발전하며,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한나라는 우리 한민족의 시원국가인 환국으로부터 유래된 큰 나라, 하나의 유일한 나라, 밝은 나라, 하느님 나라, 한민족의 나라, 한민족은 한나라로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환인천제와 환웅천황 단군왕검의 사상과 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한나라 한민족의 정당한 나라당 입니다. 한나라당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찬란함과 복본과 모범과 근본성과 당연성과 정상적인 것 모두의 전형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에 한나라당을 다시 살려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라당을 살려야 하고 살릴 수밖에 없는 한나라당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한나라당을 재창당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살아서도 한나라당! 죽어서도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영원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이어 영원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과 시민과 한나라당 당원동지 여러분!!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열렬한 성원과 화합에 보답하고자 한나라당을 살려냈습니다. 한나라당을 다시 살려냈으니 이제 당원 동지 및 국민 여러분께서 한나라당을 맘껏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뜻에서 더욱 채찍질해주시고 기대와 믿음으로 밀어주십시오!!

우리의 대한민국 금수강산에 찬란한 꽃을 피우는 밝은 정치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십시오!!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을 푸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시민, 농민, 서민의 애환, 고통, 숙원사업을 이태희가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저희 한나라당이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제1당으로 등극하도록 저희 한나라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저희 한나라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정치가 현 상태대로 잘못 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들만의 호의호식과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일반국민의 애환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들만의 파벌 정치, 당파정치, 그룹정치(패거리 정치),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의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정치인들과 힘 있는 자들만의 권익추구와 향유 때문에 일반 국민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살기가 어렵고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문화를 한나라당이 나서서 끝장내고 박살을 내어서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정치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나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저희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애환과 고통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주권과 대통령 주권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주권재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의 뜻에 따라 순응하고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하늘의 뜻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의 뜻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근본에 충실한 민본주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근본이 올바르고 좋아야 그 결과가 좋고 시행착오가 적은 것입니다.

국민이 근본이 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정치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정치가 잘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국방 외교 행정 등 등 모든 분야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선진화 되고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축복 받은 대광명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잘못된 정치를 모두 박살내어 집어치우고, 국민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정치, 국민 여러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여 훌륭하고 살기 좋고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 한나라당과 함께 동참해봅시다.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일류 장손민족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제1 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 발전 및 세계일류 선진 국가 건설과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 공천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후보들과,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선전하고 있는 후보들은 한나라당에 모두 모여 한나라당을 2016. 4.13. 실시되는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 필승 건승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승리하고,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다 함께 뭉쳐 일어서서 총진군 합시다. 그리 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희망 사랑 평등 자유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 하면서, 두 손 모아 빌고 비는 바입니다.

## 정책 3

##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 4권 분립론

### ㉞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제 5차원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며, 소원 성취시켜드리겠습니다.

제4권 분립의 창시자인 한나라당 대표자의 국권부 (한풀이부, 참전 계경부, 홍익 인간부)를 신설하여 3개의 위원회와 6개의 청을 두어 국권부의 수장인 국령으로 하여금 한을 풀고, 한을 승화시키고, 해원 상생하고, 공생발전하고, 소원 성취시켜드리겠습니다.

3개의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여 드리고 홍익인간화 시키겠습니다.

○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고 소원성취 시키고 홍익인간화 시키기 위하여 국권부 (People's Rights & Nation's Rights)를 창설합니다.

국권부에는 수장인 국령을 두고 3개 위원회와 6개청을 신설하겠습니다. 2권 분립론의 창시자인 존 록크, 3권 분립론의 창시자인 몽테스키외, 4권 분립론의 창시자 한나라당 대표인 이태희가 4권 분립론을 제시하면서 국권부를 창설하고자 합니다.

○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을 신설하겠습니다.

○ 국권부는 한풀이부라 하기도 하고, 참전계경부라 하기도 하고, 홍익인간부라 하기도 합니다.

○ 국권부에는 3개 위원회인 국민 권익 위원회 (한풀이 위원회) 와 국가 인권 위원회(참전계경 위원회)와 국가 인격 위원회(국가품격위원회, 홍익인간위원회)를 두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국권부의 2개청인 한풀이청과 한푸세청을 관할하고 이론적대와 감사 감독을 하게 됩니다. 국민 권익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국민의 ‘한’을 풀어 줄 수 있도록 ‘한’의 원인과 전개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그 연구를 하여 ‘한’을 풀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권부의 2개청인 공생 발전청과 해원 상생청을 관할하고결론적 토대와 감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국가 인권 위원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격 위원회를 상호 조정하고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력 하게하는 기능을 갖게 하겠습니다.

국가 인격 위원회에서는 국권부의 2개청인 소원 성취청과 홍익 인간청을 관할하고 이론적 토대와 감사감독을 하게 됩니다. 국가인격위원회에서는 국가의 품격과 국가의 인격을 유지

하며, 국가의 품격과 인격을 상승시키고, 홍익인간화 합니다.

- ◎ 국권부에는 6개청인 한풀이청, 한 푸세청, 해원 상생청, 공생 발전청, 소원 성취청, 홍익 인간청을 두게 됩니다.

한풀이청에서는 한 많은 사람들의 한을 접수합니다. 한푸세청에서는 한풀이청에 접수된 국민의 한을 풀어드립니다.

해원 상생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 상생하여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공생 발전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공생 발전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소원 성취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상생하고 공생 발전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홍익 인간청에서는 한을 승화시켜서 해원상생하고 공생 발전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하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고 홍익인간화 시켜 드리겠습니다.

- ◎ 해원 상생의 길을 터놓고 공생발전하며, 홍익인간 재세이화 사상으로 한 겨레 한 민족을 세계일류 장손 민족으로 등극시키고 발돋움 시킬 것입니다.
- ◎ 한을 풀고 한을 승화시키고 해원 상생하고 공생발전하며 소원성취, 홍익인간, 행복 추구, 성공 시대, 국민의 지위 향상, 국가의 품위와 국가 인격인 국격의 향상, 지상낙원 건설을 이룩할 것입니다.

## ㉘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국민 시민 서민의 아픔과 고통, 애환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정의를 이룩하겠습니다.

- ◎ 경제제민의 약어로서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공존하며 공공재와 사적재, 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신바람 나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을 실천해 보이겠습니다.
- ◎ 주5일제 근무를 하되, 가동은 주7일을 풀가동하여 역동성이 넘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 ◎ 대기업의 임원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 경제 정의를 이룩하겠습니다.
- ◎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 경제 균형과 균형배분을 실현하겠습니다.
- ◎ 실업자를 구제하여 실업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 빈익빈 부익부를 고쳐 부의 균형적인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 노동 3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노동쟁의 조정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도록 하며, 기업의 사회 봉사 정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입니다.
- ◎ 기업의 독과점을 폐지하며,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유도 할 것입니다.
- ◎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협상차 가격’ 입니다. 즉 공산품가격과 농산물가격의 차이를 ‘협상차 가격’이라고 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병진이 이루어져 있지 못하고 병렬화가 이뤄져 있지 못하고, 기업과 농촌의 빈부격차와 소득수준의 차이 및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대표들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 ◎ 그리고, 한국경제의 가장 문제점은 샌드위치 경제입니다. 밑으로는 후발 주자인 중국경제, 위로는 선진미국, 일본경제 구조 하에서 존재하는 것이 한국 경제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 경제에서 살아나갈 방향과 전략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 ◎ 기업의 임직원의 월급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합니다. 대기업 임원 월급을 현실화하면 대졸 취업자 문제 해결됩니다. 왜 근본에서 생각하지 않고서 예외와 그 네들의 기득권 논리에 사로 잡혀 좋은 세상을 왜 못 보시고 왜 못 하시는 것입니까? 대기업의 임원 1인의 월급을 현실화하여 삭감하면 20여 명의 대학교 졸업자 신규 채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삭감한 금액으로 대학교 졸업자 취업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 ◎ 쌀값 폭락문제 해결과 채소값 폭락문제 등 농산물 가격폭락 문제 해결을 한나라당 대표에게 맡겨 봐주십시오.  
 쌀 값 가격 하락 문제는 이중 곡가제를 실시하면 깨끗이 해결됩니다. 다른 여타 농산물 가격의 폭락과 폭등 문제는 폭락이나 폭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만일 폭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가격을 보전해 주고, 폭등할 때에도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여 정부가 가격의 균형을 유지하여주어야 합니다.  
 모 당 후보의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대북 쌀 지원의 문제는 인도적 문제로 쌀값 폭락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내년에 흉년이 들 때에 대비해야 합니다.
- ◎ 부동산 경제 활성화와 국민들의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금융비용의 필요 경비 산입과, 의제 취득일을 2005년12월 31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를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시에 2005년 12월 31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여 국민들의 양도 소득세를 경감하여 주어야 합니다.

## ㉞ 한나라당 정강정책 제 2조와 한나라당 당헌 제2조의 사항을 실천하여세계 일류 선진 민족으로 등극시켜드릴 것입니다.

세계선진 일류 국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세상, 지상의 낙원을 창조할 것입니다.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건설할 것입니다.

- ◎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하여 국호는 대한민국 (GRAND KHAN)을 건설하여 세계 제1 강대국을 형성할 것입니다.
- ◎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5연방 1체제 1공화국 체제로서 한.몽 연방공화국, 한.연해주 연방 공화국, 한.북한 연방공화국, 한.만주 연방공화국을 남한이 주도하는 세계 제1대 강국인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㉞ 경제 민주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그 방법으로 독과점을 폐지하겠습니다.

### ◎ 경제 민주화 방안

압축성장의 신화 속에 우리 경제의 아픔이 바로 경제 민주화 문제입니다.

- 1 %의 부자와 99%의 일반 시민 서민간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99%의 서민을 위한 정책을 입법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농민, 어민, 노년층, 병자 등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노동3법인 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채용과 퇴사의 용이함과 유연성을 회복하고, 근로자와 사주 모두가 그 회사의 사원이요, 주인이라는 자주의식으로, 공동모색을 통하여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경제 주체들이 조화로운 상생의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개인과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와 병진화 및 병렬화를 통하여, 공생발전 상생발전을 이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기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근본시각과 의무를 부여하여, 대기업의 각성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 국가가 경제 정책 수립 집행 시 개인이나 시민 서민 및 중소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개인의 공생 발전 및 병진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 소비적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 경제정책을 시행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제7광구에서 일본과 중국은 가스와 석유를 채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제7광구에서 가스와 석유탐사를 하여 경제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부흥시키겠습니다.

## ㉘ 일자리 창출과 고용 문제

### ○ 일자리 창출

- 대기업 임원의 임금과 보수를 적정선에서 통제하여 현실화함으로써, 대졸신규 취업자들의 구직난을 해소하여 일자리창출과 인간다운 생활유도 및 기업 확장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임원이 연봉 100억 원을 받고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봅시다. 이 임원의 연봉을 10억원으로 현실화하였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 90명을 채용하여 1인당 연봉 1억원으로 90명에 계 90억원을 지불하고, 세계 각국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게 하여 91명 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삼성전자는 91명의 유능한 인재를 통하여 매출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세계 경영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그 임원은 인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살맛나는 세상을 구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풍요로운 삶과 복지다운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 몽고와 연해주에 취업. 교사, 선교 이민을 선발하여 1인당 5억원의 생활정착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정년 퇴직자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졸 신규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해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의 숭고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노동의 질과 수준을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 고용 안정

- 비정규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청년 퇴직자에 대한 노후 일자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졸 신규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해 고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노동의 숭고함과 희열을 맛볼 수 있도록 노동의 질과 수준을 개선 발전시키겠습니다.

㉘ 제5의 산업혁명과 제5의 에너지 혁명, 제5의 자본주의(재원주의), 제5의 새시대. 새 지구. 새 우주. 새나라 건설,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에너지 혁명, 수소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첨단무기 개발과 세계 제5차원의 국 방력과 제5차원의 기술, 제5차원의 세계를 정립하고, 창조론과 진화론을 재정립하고, 재창조하고 재정립하고 재실천하고 재도약하고 재발전시키겠습니다.

## 정책 4

6대 교육, 22대 이념, 5국통일 대한민국

㉘ 한나라당의 6대 교육과 9자 정신을 통하여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당연성을 회복하는 사회,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모두 되돌려놓는 사회, 근본성에 충실한 사회를 창조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9자 정신인 (자조 자립 자결 자위 자주 자유 자율 자각 자성 정신)과 6대 교육 (가정교육, 학교 교육, 사회 교육, 국민 교육, 국가 교육, 세계인류 교육)을 통하여 국민성을 계발하고 더 높여서(업그레이드시켜) 세계 선진 일류 국민으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은 그랜드 칸[GRAND KHAN, 대환국(大桓國)]을 통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하고, 6대 교육과 9자 정신을 통하여 선진 민족성을 양양하며, 살기 좋고 잘 사는 부강한 국민을 만들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가는 정당입니다.

○ 한나라당은 대표자가 주장하는 6대 교육과 9자 정신을 계승하여 선진민족성을 고취하고, 국민성을 함양하고 교양과 양식이 넘치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국민성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이 중진국의 비애를 벗어나 세계 3대 강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일소하고, 각종 사회적 병폐를 척결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를 일소하고, 교육문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대학(원) 등록금 50 % 인하와, 고등학교 때까지 무상 교육을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세금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휘발유 값, 경유 값 등 기름 값을 대폭 내리겠습니다. 서민 생활 물가를 잡아, 안정시키겠습니다. 서민 농민 어민 및 사회적 약자의 설움과 고통과 애환을 속 시원히 해결하겠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서 정치발전 시스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관행 헌법 법률 관습법 조리 판례 등 모든 면에서 당연성과 근본성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구조, 시스템으로 정착, 발전시키겠습니다.

㉟ 한나라당의 22개 덕목인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정심 희망 기여 봉사 정의 진리 헌신 나눔 수증 창조 생명 복본 대통합 깨달음 대광명)이라는 가치를 통하여 사람의 삶의 목표인 소원을 성취하시기바랍니다.

22대 덕목을 실천하여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으로 대변혁하여 대전환을 이룩하고, 대통합을 이룩하고,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이룩하겠습니다.

## 정책 5

## 민주 정치 실현

## ㉸ 먼저 정치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잘 되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행정 등 모든 분야가 업그 레이드 되어 상승작용을 일으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승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전 국민의 참여 하에 참여정치가 구현되어야 할 것이고, 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전 국민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 국민의 복지와 행복 건강과 사랑을 위한 전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져야만 이 진정한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서로 돕고 국민이 바로 서고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이 스스로를 위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유를 누리며 국민이 스스로 규율하며 국민이 스스로 자각하며 국민이 스스로 이루어나갈 때에 비로소 올바른 국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선진국민이 될 때에 그 국가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란 바르게 다스린다는 의미로 정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물 흐르듯이 순리에 맞게 우주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 국회와 정당의 혁신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국회의 혁신 방안

- 헌법 개정을 통하여 대통령 행정부 국회 법원 등 정부기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 하겠습니다.
- 각종 언론기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들을 국민의 뜻에 따라 재구성하겠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은 저희 한나라당에 오셔서 한을 푸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빕니다.
- 국회 선진화법을 폐기하여 국회의 권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정수를 150명으로 절반을 감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중에서 보수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숫자를 2명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즉, 국회의원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수를 2인 이내로 줄여서 예산을 절약 할 것입니다.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장하신다면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군의원 선거를 하되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군의원은 명예직으로 무보수로 당초 지방자치의 뜻대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시도교육감 선거를 모두 없애겠습니다. 각종 농협장 선거 등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선거를 없애고 국민 전체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 국회의 회기 중 정기회를 연 2회(3월 20일~5월 31일, 9월 20일~12월31일)로 하고, 국회를 365일 연중무휴 개최하여, 법안상정 심의 의결에 있어서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 국회의원의 신분 보장 및 자질향상과 양식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 회의원은 헌법 기관이므로, 1인의 국회의원이 법률안 제출과 법률안 심의 회부, 법률안 상정권 및 예산 결산심사권 상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선거를, 개원하는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이 직선 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제1당에서 내세우는 대표가 국회의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무작위로 직선제로 변경하여, 자질이 되는 자를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한다.
- 국회의원의 표결시 무기명투표 및 교차투표 및 투표에 있어서 정당의 개 입을 차단하고 양심과 법률에 의하여 자유로이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회와 정당의 혁신은 국민 심판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심판은 투표 때 이루어지므로 투표시 국회의원후보를 심판하고정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못하는 경우에 국민소환제를 실시 하겠습니다.
-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 ◎ 정당의 혁신 방안

- 군소정당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에도 정당 보조금을 지급한다.
- 정당대표자에 대하여는 국회의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을 부여 한다.
- 중앙당의 비대화를 막고 돈이 적게 드는 구조로 전환한다.
- 중앙당과 지구당의 역할분담을 통해 정당의 최적의 효과를 유지한다.
- 헌법상 보장한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책임 의무를 다한다.
- 정당과 국회의 구조 개혁이 잘 안 되고 정치가 3류인 것은 거대 집권여당과 거대야당 국회의원들의 공동 책임이며, 제 19대 국회의원들 전체가 정치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 국회의원들이나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어느 특정 정당에서 과반다수를 점하고 있으니까,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고 당선만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국회의원들과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선거 때에 국민의 심판인 선거를 통해서 어느 일에 몰표를 주지 말고, 국민 스스로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양식 있는 국회의원과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를 뽑아야 하고, 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심판하여, 따끔한 맛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국민 참여 경선 정당, 정당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 재.보궐 선거시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는 공천권과 후보자 피선거권을 배제한다.

㉞ **현재의 대한민국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과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를 대변혁시켜서 대전환을 이루고 대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문화도 향상시키고, 제6회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유능하고 주민자치를 실천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역을 사랑하는 선량들이 당선되어 지방자치의 질을 한층 높여서 지방과 지역과 주민이 잘 되어야 국가와 국민이 잘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고 살맛나는 고장이 되어야 살기 좋고 살맛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살기 좋고 살맛나는 지역이 되어야 살기 좋고 살맛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이 잘 되어야 나라 전체 국민의 삶의 질과 가치관과 생활양식과 국민성 함양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되어야 지방이 잘 되는 것이고, 지역이 잘 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지역과 주민이 일치가 되어야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그 주민이 뛰어날 수 있듯이, 국가와 국민이 일치가 되어야 그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그 국민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혁신을 꾀하고,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야 할 것이고, 국가도 혁신을 꾀하고, 국가가 지역을 위하여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㉞ **한나라당은 마고성시대와 마고성시대의 중엽 말엽의 황궁씨 청궁씨 백소씨 흑소씨 시대와 안파견 환인 천제 시대의 정치와 천성을 회복시킬 것이며, 본성을 회복할 것이며, 복락원으로 복본할 것입니다.**

마고성 시대의 낙원으로 되돌아가서 복본하고 천성을 회복하고 영성을 계발하고 깨달음과 관용 아량과 명상과 뇌 음악 명상으로 복락원으로 들어갈 것이며, 지상 낙원을 건설할 것입니다. 우리들 한민족은 황궁씨의 장손민족의 후예들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백소씨가 따 먹고, 마고성에서 쫓겨나서, 복본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소씨가 마고성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마고성의 낙원시대는 끝이 나고, 실락원의 상태에 빠져들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직계 선조이시고, 조상이신 황궁씨는 백소씨의 잘못을 뒤집어쓰고 장손으로서의 책임감을 통감하고서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조차 힘든 북방으로 가서 그 고통을 감내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황궁씨의 소원하는 바를 황손인 저희가 마고성 시대의 낙원인 황궁씨의 초창기의 천성과 낙원으로 회복하고 복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안파견 환인천제 시대의 천성과 낙원으로 회복시키고 복락 할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서로 돕고, 서로 위해 주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정신적 욕구의 충족과 물질적 욕구의 충족과,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와, 행복과 한나라당의 22개 덕목을 실천하고 누릴 것입니다.

인간의 수명도 350년으로 (점차로 120세 ~~~ 150세, ~~~ 200세, ~~~ 250세, ~~~ 300세, ~~~ 350세~~~~로) 점차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안파견 환인 시대로 복본할 것입니다.

**㉸ 전문가가 숭상되는 사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장인 제도 마스터 제도 도입, 최고 전문가에게 시상식과 포상금을 지급하여 기술 장려와 과학의 발달, 예술의 발달, 국방기술의 발달,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분야도 세계 제1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나라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미국 영국 일본에 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 한국의 국민성을 함양해야 합니다.**

국민성은 국민 간에 우애와 신의와 믿음과 협력과 자조정신 자립정신 자결정신 자위정신 자주정신 자유 자율 자성정신 자각정신 자승 정신이 있어야 하고 나눔 봉사 기여 헌신 깨달음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사이에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자율과 생명존중사상 및 상호 협동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양식이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건전하고 튼튼한 사회, 살기 좋고 살맛나는 사회, 풍요로운 사회, 양보하는 사회, 최적의 소유, 광명 천지인 합일 사회, 재세이화, 홍익인간 사회, 본성 회복, 양심이 작동하는 사회, 도덕성이 확립된 사회, 새롭고 좋은 사회구조 확립, 새롭고 좋은 문화가 형성되어져야 하며, 풍요로운 새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 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제간에는 경쟁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이고, 영원한 친구입니다. 남한이 가장 적으로 아는 북한, 그 다음은 일본, 그 다음은 중국으로 치고 있는데, 이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강조하는 6대 교육과 9자 정신과 22대 덕목으로 치유하고 깨우치고 실천하고 창조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 제 1 등 국민이 됩니다.

## ㉞ 일제 만행의 36년간의 산물인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배가 아픈 사회는 망조가 든 사회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 호주제 부활하여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가장 잘못된 정책이고 두고두고 뿌리 없는 자손들 만들 것입니까?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이어지고 문화 창달과 한민족의 우수성과 삼강오륜과 윤리 도덕이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 모든 부조리와 폐단은 과감히 척결하고, 비정상적인 것의 정상화, 당연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근본성에서 모든 것을 조망했을 때에, 근본으로의 회귀 하에 근본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모든 문제를 근본에서 시작하십시오. 왜 자기네들의 이익만 지키려고 하십니까? 다른 반대편의 사람들도 평등하게 최저생활 이상의 중산층 생활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 이 마당에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농민여러분, 서민 여러분 살림살이가 늘어났습니까?

◎ 사촌이 논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사회. 국민성. 민족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웃이 잘 되었을 때 박수를 쳐주고 격려해주고, 이웃이 슬플 때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도와주고, '세월호' 사건에 같이 슬퍼해주고 울음을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공감해주고, 국민 스스로 국가와 민족과 우리 이웃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9자 정신을 발휘하여, 살기 좋고 살맛나는 사회,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 농촌 총각 장가가는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다민족 문화 정책으로써, 본래의 다문화 정책과 근본적으로 괴리되어 있습니다.

**㉞ 교육부를 독립시키고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지성교육과 덕성교육과 체력단련과 연마와 그 상위 목표인 영성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아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할 것입니다.

인성 교육 강화와 생명 존중 사상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학교 폭력과 학교 범죄를 없애고, 각종 폐단을 깡그리 뿌리 뽑겠습니다. 영성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화경인 삼일신고를 통하여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의 분야를 물질 교육과정신 교육과 마음 교육과신체단련 교육과 영성 교육을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교육의 기본을 세우고, 근본성을 확립하고, 당연성과 당위성을 회복하고, 교육을 교화경인 삼일신고를 근본으로 삼아, 교육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6대 교육을 고상하게 질을 높여 실천하겠습니다. 9자 정신을 고품격으로 연마하겠습니다. 22대 덕목을 배우고 꿈꾸고 이상으로 삼아 실천하고 희망으로 삼겠습니다.

가정교육 윤리규범과, 학생교육 장전과, 시민교육 장전과, 국민교육 헌장을 재정립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없애고 교육감 선거제도를 폐지하고, 교육 자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외국에 유학할 필요가 없도록 외국대학교 국내 분교를 8도에 하나씩 설치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용의 묘미를 살려서 어여쁜 백성들이 이를 갈고 닦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절대적으로 보장될 것이고 부여될 것입니다. 교육의 자유 정의 진리에 빛나는 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㉞ 과학 기술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을 계발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기술부를 독립된 부로 신설하겠습니다.

◎ 생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 세계선진 일류를 구가하겠습니다. 생리학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재개와 명예회복과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인재들이 의과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세계일류가 안 나오면 이상한 현실이기에, 의과대학에서 세계일류가 나오도록 의학과 분야에서 세계 제일을 이룩하겠습니다.

◎ 물리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화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특히 수소와 헬륨 이용한 생활이기와 제5차원 세상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 지구 과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㉞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새로 쓰겠습니다.

역사청을 신설하여 역사를 재 편찬, 재 감수, 재기록, 재정립하겠습니다. 올해(2016년)가 환국 9214년의 역사, 배달국기 5913년의 역사, 단기 4349년의 역사, 불기 2560년의 역사, 예수님 탄생 2020년의 역사, 서기 2016년의 역사를 찾아서 재기록, 재감수, 재편찬, 재정립 하여 올바르게 정립하겠습니다.

◎ BC. 7198년 ~BC. 3897년: 안파견 환인의 환국(한나라, 환나라) 건국 (파밀고원과 몽고의 발기리 호수에 이르는 지역: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 제1대 안파견 환인 천제부터 제2대 혁서 환인 천제, 제3대 고시리 환인 천제, 제4대 주우양 환인천제, 제5대 석제임 환인 천제, 제6대 구을리 환인 천제, 제7대 지위리 환인 천제까지 3301년간 통치함.

◎ BC.3897년 ~ BC.2333년거발한 환웅의 배달국 건국 (태백산 신단수 에 신시) : 제1대 거발환 환웅 천황부터 제2대, 제3대... 제5대 태우의 환웅 천황~~~, 제14대 자오지 환웅 천황~~~~, 제18대 거불단 환웅 천황까지 통치하였고, 배달국은 1565년간 통치 하셨습니다.

◎ BC. 2333년 ~ BC. 108 년 준왕: 단군 왕검의 원조선 건국 (아사달: 하얼뽀 근처) 기자 조선, 위만 조선: 조선은 단군 왕검 황제께서 2226년간 통치하셨습니다.

◎ 진한 변한 마한의 역사를 새로 정립하겠습니다.

◎ 부여 북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백제 신라 가야의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 통일 신라 시대와 대진국(발해)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재정립하겠습니다.

◎ 고려의 역사와 거란족 말갈족 동이족 저족 흉노족 스키타이문화를 재조명하고 역사를 재정립하겠습니다.

◎ 조선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명 청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역사적 재조명을 실시하고 그 교훈을 되새기겠습니다.

◎ 일제 36년 동안 온갖 민족성과 국민성이 말살되고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에 갈기갈기 찢어진 한민족의 역사성과 민족성과 국민성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일제 36년 동안(1910년 한일합방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69년 동안,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후 41년 동안) 일제 도당들의 온갖 나쁜 쪽으로 빼돌려진 국민성 조작과 민족말살 정책으로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온갖 못된 짓을 한 일제 식민사관과 황국사관에서 하루 빨리 청산하고, 올바른 국민성과 민족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으로 국민성과 민족성이 잘못된 이유를 파악하고, 그 근본을 치유하고, 그 근본을 찾아, 올바른 처방으로, 당초의 한민족 고유의 민족성과 국민성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민족 고유의 국민성과 민족성을 되찾아서 안파견 환인 천제 시대의 천성과 인간성으로 복본하여야 할 것입니다.

◎ 1945년 8월 15일 조국 광복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1947년 9월 9일 북한 괴뢰정권의 탄생과 신 남북한 시대 탄생.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처참한 남침 전쟁은 조국광복의 기쁨과 신탁 통치와 6.25 남침 동란은 씻을 수 없는 민족끼리의 전쟁으로 생명이 희생되어 물질적 재산적 인명 살상적인 피해가 엄청났으며, 극도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이 대한민국이 시작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 조국 광복

1948년 8월 15일 : 이승만 대통령의 제1 공화국 수립

1950년 6월 25일 : 김일성 남침으로 인한 6.25 동란의 동족상잔,

1960년 4월 19일 : 4.19 의거 혁명에 의한 장면 정권의 제2공화국

1961년 5월 16일 : 5.16 혁명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탄생과 조국 근대화로 민족중흥을 이루었다.

1972년 10월 17일 : 10월 유신으로 인한 제4 공화국 탄생,

1980년 2월 : 전두환 정권의 제5 공화국 탄생,

1987년 6월 : 노태우 정권의 제6 공화국 탄생

1988년 9월 : 대한민국에서 제24회 올림픽 개최

1994년 2월 : 김영삼 정권의 제 7공화국 탄생

- 1998년 2월 : 김대중 정권의 제 8공화국 탄생
- 2002년 5월 : 월드컵 개최 및 월드컵 4강
- 2003년 2월 : 노무현 정권의 제9공화국 탄생
- 2008년 2월 : 이명박 정권의 제10공화국 탄생
- 2013년 2월 : 박근혜 정권의 제11공화국 탄생

오늘에 이르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㉞ 가락(가락) 천황의 가림토정음 38자에서 한글의 완전성 이룩하겠습니다.

가림토 정음 38자에서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발췌하고 반포하였는 바, 훈민정음 28자와 나머지 가림토 문자 10자를 또 다시 연구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 복원하여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정음청을 설치하여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발음기관과 발성기관과 발음기호와 문자를 일치시켜 가림토 정음 38자를 완전히 해독하고 완전히 복원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림토 정음38자의 완전 실용화로 한글의 완전성을 이룩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이룩하겠습니다.

㉞ 한나라당은 한나라당 (The Grand National Party)의 이념과 정강 정책과 당 강령, 당헌, 당규 등이 기존 정당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매우 좋은 정당이며,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소원성취 시켜 드리는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기존의 해약과 폐단을 일소하는 혁신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굉장히 좋은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제5차원의 세계로 인도하며, 소원 성취시켜드리겠습니다.
- ◎ 대한민국 국민 시민 서민의 아픔과 고통 애환과 숙원 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 ◎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 속에 2012년 3월 5일에 창당하고, 2013년 4월 15일 새한나라당을 창당하고, 2014년 2월 6일 한나라당으로 재창당한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자유 평등 통일 평화 사랑 건강 행복 등 22대 덕목을 통하여 풍요로운 세상, 대통합의 세상, 깨달음의 세상, 대광명의 세상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6대 교육으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새 세상을 창조할 것입니다.
- ◎ 한나라당은 9자 정신을 통하여 깨달음의 세상, 대통합의 세상을 추구할 것입니다.
- ◎ 한나라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안파견 환인 천제의 나라인 환국 (한나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그 이름이 좋고 가장 아름답고 그 내용이 가장 알차고 좋은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인류의 원초적인 목표와 이상인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용적이면서도 이상적이고 근본을 중시하는 매우 좋은 정당입니다.
- ◎ 한나라당은 세계 인류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예컨대, 세계 시민을 중산층화하는 정당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아와 질병을 퇴치하고 무지를 타파하며 세계 시민으로써 중산층까지 견인하는 정당이며, 새로운 문화의 창출에 이바지하는 정당입니다.
- ◎ 우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다 같이 뭉쳐서 양식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풍요로운 세상,

깨달음의 세계, 대통합의 세계, 대광명의 세계, 새롭고 희망차고 좋은 세상을 창조합시다!!!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과 세계 선진 일류 장손 민족으로 발돋움하여 세계 제1강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선진화와 국가 발전 및 세계일류 선진국가 건설과 살기 좋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선구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모두 모여 한나라당을 이번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한나라당원들과 국민 여러분들이 한나라당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한나라 당원들과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뭉칩시다.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과 협조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한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과 희망 사랑 평등 자유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두 손 모아 빌고 비는 바입니다.

**한나라당 만세!!!대한민국 만세!!!대한국민 만세!!!**

**대단히 감사합니다.**

㉞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큰 나라당+하나의 통일된 나라당+환하고 밝은 나라당+한님 하느님 나라당+한민족당+한겨레당 = 한나라당)이란 무엇을 의미 합니까 !!!???!!!

◎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란 통일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하십니까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 통일을 선사하겠습니다.

- 한나라당은 5연방 1체제 1국가 건설을 통하여 한.몽 연방공화국, 한.연해주 연방공화국, 한.북한 연방공화국, 한.동북3성 연방공화국을 통하여 5국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이를 하여 대환(大桓 :그랜드칸 : GRAND KHAAN ) 이라 칭한다.

- 남북통일은 한.몽 연방공화국, 한.연해주 연방공화국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된 후에 자동적으로 하느님의 섭리와 우주대자연의 섭리에 의하여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 내에 지역 간 갈등, 향토 간 갈등, 이웃 간 갈등, 같은 무리들 간의 갈등, 나 뿐만을 내세우는 나쁜 사람들 간의 갈등, 계층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빈.부의 갈등,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 사회적 강자 내의 갈등, 사회적 약자 내의 갈등, 행정부간의 갈등, 사법부간의 갈등, 국회 내 여야당 간의 갈등, 검찰과 경찰의 갈등, 의사와 약사의 갈등, 어떤 조직 내에서의 주도권 쟁탈전과의 갈등 등등을 치유하고 아우르고 깨닫고 통합하고 통일하여 대 통합의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내에 지역 간 이념 갈등, 향토 간 이념 갈등, 이웃 간 이념 갈등, 같은 무리들 간의 이념갈등, 나 뿐만을 내세우는 나쁜 사람들 간의 이념 갈등, 계층 간 이념 갈등, 세대 간 이념 갈등, 남남 이념 갈등, 남북 이념 갈등, 빈.부의 이념 갈등,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 사회적 강자 내의 갈등, 사회적 약자 내의 갈등, 행정부간의 이념 갈등, 사법부간의 이념 갈등, 국회 내 여야당 간의 이념 갈등, 검찰과 경찰의 이념 갈등, 의사와 약사의 이념 갈등, 어떤 조직 내에서의 주도권 쟁탈전과의 이념 갈등, 중복 세

력들과 진보좌파 간의 이념갈등, 보수와 수구 꼴통과의 갈등, 종교 (신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등의 종교 간 갈등은 신교로서 해결 ) 간의 이념 갈등, 남녀 간의 이념 갈등 등등을 치유하고 아우르고 깨닫고 통합하여, 깨달음의 세계 통합의 세계 통일의 세계 대통합 세상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 여러분께(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란 행복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하십니까 !!!??!!!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 행복을 선사하겠습니다.

- 사회적 약자의 슬픔과 애환과 고통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슬픔과 애환과 고통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잘못 제정된 노동법 폐해야 합니다.

→ 잘못 제정된 모든 법률을 폐하고 다시 제정하여야 합니다.

→ 노동 3법을(근로기준법, 노동쟁의 조정법,) 전면 재조정 개편하고 법률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재 제정하여야 합니다.

· 청년 실업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 독거 노인 치매 노인 암 환자 각종 질병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 65세부터 70세 노인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전문(가)학교를 설립 개교 하여 노인들 문제와 삶의 문제와 질병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인 생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세대 간 갈등과 이념 분쟁을 해소하고 화합과 조화 행복의 문을 열 겠습니다.

· 결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소년 소녀 가장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해야 합니다.

· 힘없는 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가난한 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이념을 가진 자들(종북 좌파 세력)의 애환과 고통과 잘못을치유하고 새 세상을 살아가게 해 드리겠습니다.

· 빛 진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는 신용 9등급 10등급 계층의 애환과 고통 해 결하고, 신용이 나쁘다고 이자율이 높게 책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돈 없어서 돈 빌리는데,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이자율이 낮는데, 돈 없고 신용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서민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 드리고, 소원성취 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 해원상생을 선사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사회에 횡행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폐습을 타파하고 비정상적인 것들을 과감히 척결하고 바로잡아서 정상적인 것들로 모두 바뀌어야 하며, 모든 사물과 모든 기관과 모든 제도와 관습 규칙 법 등등을 정상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 공생발전을 선사하겠습니다.
- 비정상적인 제도와 법 관습 레짐(regime) 체제 system 법률(헌법, 모든 법률, 관습법 판례 조리) 대통령령 행정부령 조례 규칙 등등을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바꾸고 복원시키고 복본 시키고 창조해 내고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 대한민국 내 횡행하는 잘못된 사상들을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겠습니다.
  - 대한민국 내 횡행하는 잘못된 이념들을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겠습니다.
  - 대한민국 내 횡행하는 잘못된 교육들을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겠습니다.
  - 대한민국 내 횡행하는 잘못된 사실들을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놓겠습니다.
  - 대한민국 내 횡행하는 잘못된 국민성을 개조하고 변개하고 개혁하고 계승하고 복본 시켜서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 전문가가 승상되는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 모난 돌이 정 맞지 않도록 잘난 사람과 훌륭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분들이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와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 사촌이 눈을 샀을 때, 배가 아픈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 사촌이 눈을 샀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민족성과 국민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 내에 횡행하는 잘못된 민족성을 개조하고 변개하고 개혁하고 계승하고 복본 시켜서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 백의 민족, 배달의 민족의 원래의 뜻을 살리고, 왜곡된 의미로 변개하거나 잘못 유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파견 환인 천제와 자오지 천황과 한나라당 대표 이태희 총재의 업적과 정신과 열과 훌륭함과 전략과 전술과 천성을 높이 사서 우리 대한민족을 더불어 잘살고 다 함께

살맛 나는 세상을 창조해 나갑시다.

- 대한민국 내에 횡행하는 잘못된 것들(을) 모두를 바꾸고 천지 이치에 순응 병진하는 체제와 우주대자연의 섭리와 율려에 순응병진 발전하는체제로 개조하고 변개하고 개혁하고 계승하고 복본 시켜서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 대한민국 내에 횡행하는 모든 잘못된 인간 만사에 대하여 모두를 바꾸고 천지 이치에 순응 병진하는 체제와 우주대자연의 섭리와 율려에 순응 병진 발전하는 체제로 개조하고 변개하고 개혁하고 계승하고 복 본 시켜서 모두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란 낙원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 낙원을 선사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께 한나라당이란 기여(이바지)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께 여러분들에게 국민모두에게 한나라당이 이바지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봉사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들에게 국민모두에게 한나라당이 봉사하겠습니다.

다음 정부는 봉사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 정부의 표본을 한나라당이 제시하겠습니다. 서비스 정부 봉사 정부 여태까지 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것을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한 봉사정부가 되도록 한나라당이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봉사 정부 !!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복본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국민 모두에게 한나라당이 복본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선거혁명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한국정치를 책임지고 다수당으로 선거혁명을 이룩하고 선거에서 필승 압승 하고 선거에서 건승하고 국민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거 혁명의 문을 열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원해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고 표를 몰아주시기를 양망하옵니다.

-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과 투표로서 심판하여 주시고 압승 필승 건승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선거혁명을 이룩할 테니 국민 여러분에게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과 투표로서 압승 필승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란 정치혁명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19대 국회를 혁파하고 식물국회를 청산하고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한 노동법 테러방지법 및 국회 지역구 조정 및 국회의원 전국구 조정 및 국회의원 선거법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등을 모두 바꾸고, 우선 국회의원부터 모두 바꾸고, 국회의원 비서관의 업무 영역을 모두 바꾸고, 국회직 근무 공무원의 모든 사상과 업무와 영역을 바꾸고, 행정직 공무원들의 모든 사상과 업무와 영역을 바꾸고, 법원직 공무원들의 모든 사상과 업무와 영역을 바꾸고, 여타 공무원 모두의 모든 사상과 업무와 영역을 바꾸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외 정치인 모두가 모든 사상과 업무와 영역을 바꾸어서 정치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정치가 잘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국방 문교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업그레이드되어 상승작용을 일으켜 보다 높은 경지의 국가 시스템이 구축되고, 보다 높은 경지의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가치추구권 등등 이보다 높은 차원의 세상을 달성할 것입니다. 이어서 이에 정치선진화와 정치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대변화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민 여러분의 삶과 생활방식 행복추구 가치추구 존엄성 추구 자아실현 욕구 자기 발전의 욕구와 노력 등의 대변화를 정상적이고 정의 방향으로 대변화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대전환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하십니까 !!!??!!!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의 정상화를 위한 변화와 대변화를 겪고 전환을 거쳐서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대도약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하십니까 !!!??!!!!

- 선진국의 문턱에서 50. 50 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 1인당국민 소득 \$30,000 이상 : 무역액 (수출 수입액 1조\$를 초과한 국가) 에 가입한 세계 7번째 국가로서 한민족이 영토와 국민과 과학기술과 문화 경제 정치 세계 3대 강국으로 진입하고 세계선진일류 국가 건설을 통하여 대도약의 첨병역할을 한민족 한나라 한나라당이 이를 앞서 실천하고 대도약을 이룩하고 인도하겠습니다.

- 제5의 에너지혁명과 제5의 산업혁명으로 대도약을 이룩하겠습니다. 수소와 헬륨을 통한 제5의 에너지 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를 이용하여 수소의 셀 0활화를 이룩하겠습니다. 수소의 에너지화와 수소 배터리, 수소 자동차, 수소 비행기, 수 수소 항공모함, 수소 선박, 수소의 생체화 등에 인간생활의 이로움 제공과 수소를 이용한 과학기술 발전을 이룩하겠습니다.

- 이어서 헬륨을 이용한 과학기술 개발을 진척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에너지 혁명과 산업혁명을 뒤이어서 헬륨을 이용한 제5의 에너지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 제5의 산업혁명으로 대도약을 이룩하겠습니다. 제5의 에너지혁명과 제5의 산업혁명으로 수소와 헬륨을 이용한 과학기술발전과 에너지 혁명과 산업혁명을 이룩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대발전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하십니까 !!!??!!!!

한민족이 주체가 되고 한나라가 주체가 되어 세계 대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장손일류민족 국가로 등극하시어 세계시민들 모두가 평화와 희망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인류 전체가 행복 하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저 아프리카 국민들까지 세계시민의 중산층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빈곤 타파 무지타파 질병 퇴치 행복 추구 가치 추구 홍익인간화 하며 세계시민 모두가 잘 사는 지구 세계를 한민족 한나라가 앞장서고 한나라당이 이를 인도하겠습니다.

◎ 국민 여러분에게 한나라당이란 대통합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합니까!!!??!!!!

국민 대통합의 물꼬를 한나라당이 트고 한나라당이 인도하겠습니다. 통일의 문을 열고

대통일을 이루고 통합의 틀을 마련하고 대통합의 사상과 이념과 시스템(system)과 레짐(regime)을 완성하고 대통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 ◎ 국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에게) 한나라당이란 깨달음의 문을 여는 한나라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어떠하십니까 !!!??!!!
  - 깨달음.된 사람의 의미를 아십니까?
  - 깨달은 사람을 된 사람이라고 하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을 못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 된 사람 난 사람 든 사람의 의미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 당위성과 당연성과 근본성 추구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 성통공완 재세이화 홍익인간 해원 상생 공생발전 하시기 바랍니다.
  - 영성체 교육과 영성 교육과 영성추구 영성의 상론화 영성의 영원성 영성!!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역사의 숨소리를 듣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순행시키고 켜야 합니다.
  -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관조 참선 선 추구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느끼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여 자신의 영성과 결합 융합 조화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시고 수행을 통하여 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깨끗이 하시고 도사 도인 선사 대선사 선인의 경지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 사람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 추구하고 가치 추구하고 자아실현 욕구와 선의 추구 목표 추구 내세에서의 승천 천당 극락세계 도달 낙원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연마를 통한 영성 교육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덕체연마는 교육의 수단이고, 교육의 목표는 영성 연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㉞ 한나라당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 속에 우물(오아시스)이 있어서이고,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사람 가슴 속에 사랑이 있어서이다. 언약은 강물처럼 흐르고, 만남은 꽃처럼 피어나리.

봄은 대지를 녹이고 사람을 녹이고 꽃으로 다가온다. 봄은 인간의 옷을 가볍게 하고 여유로움을 가져온다. 봄은 사랑 만남 약속 결혼을 예약한다.

**국가의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의 화합과 대통합을 위하여!!!**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여!!!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국민의 희망과 성공을 위하여!!!**

**자기 건설 = 자립 정신 自成 精神**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못 누린 사람들은 한나라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민족의 친정 집이고 본가이며, 큰형님 집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민족의 큰집입니다. 한나라당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한나라당을 살려냈습니다. !!!

한나라당은 큰 나라당이고 밝은 나라당이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당이고, 한님 하느님 나라당이며, 한민족의 한나라당인 것입니다.

**㉞ !!! 훌륭한 정치지도자를 모십니다 !!!****한나라당 제20대 국회의원 후보 공모**

한나라당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한나라당을 살려냈습니다. !!!

한나라당은 큰 나라당이고 밝은 나라당이고, 하나의 통일된 나라당이고, 한님 하느님 나라당이고, 한민족의 나라당이고, 한민족은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입니다.!!!

아울러서 한나라당은 5국통일(5연방1체제 1국가 건설)과 한민족의 번영과 영광과 행복을 이룩하고 세계일류국가 건설과 세계일류장손민족국가 건설을 위한 당이며, 세계 인류 전체의 행복과 자유와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당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과 못 누린 사람들과 한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나라당에 모였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민족의 친정집이고 본가이며, 큰형님 집입니다.

한나라당은 한민족의 큰집입니다} 한나라당은 한 많은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드리고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소원성취 시켜드릴 정당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들과 서민들 사회적 약자의 슬픔과 애환과 고통과 숙원사업을 속 시원히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해결해드릴 정당입니다.)

“여타 (기득권) 정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천에서 억울하게 배제(탈락, 제외) 되신 분”은 한나라당에 오셔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되셔서,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T: 723-8100, T: 723-8900, FAX: 720-0197

C/P. 010-3915-3815 , HP. 011-210-1655

www.hannara.org / www. hannara.cc

www. 한나라당.kr / www. Hannara.tv

www. leetaehee.co.kr

## ㉟ 한나라당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영원할 것입니다!!!

- ◎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새로운 일꾼들, 역량 있는 일꾼들, 애국심과 애향심을 겸비한 능력 있는 새로운 후보자를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할 인재로 경향각지에서 널리 영입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 한나라당 공천비용은 무료이며, 선거에서 필승하시기 바랍니다.
- ◎ 한나라당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한나라당을 살려냈습니다.
- ◎ 한나라당은 영원할 것입니다!!
- ◎ 대한민국 국민 시민 만세!! 한나라당 당원 동지 후보자 만세!!
- ◎ 한나라당은 한 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한을 승화시켜 소원성취 시켜드리겠습니다.
- ◎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갈 정당이며, 후보자 여러분들께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필승 압승하셔서 대한민국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 한나라당은 한민족의 번영과 현실 타개를 위한, 주도적 세력을 규합하여 17개 광역시.도에 246개 당협 협의체를 결성하면서, 애국심과 애향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계일류 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유능하고 새로운 인재를 모시고자 246개 당협 협의체 위원장으로 귀하를 모시고자 경향각지에서 널리 영입하고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 ◎ 한나라당은 현 양당구도의 정치형태를 타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원탁협의체로 이끌어 내야 하는 한나라당의 위상을 올곧게 수립하기 위하여 서민조직으로 구축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열렬하신 성원과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한나라당은 평등-불평등, 유산자-무산자, 가진 자 - 못 가진 자, 능력자 - 무능력자의 균형을 정비하기 위한 시민사회 전문화 체계를 구축하여 당의 결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 국가경쟁력을 지켜야 할 민족적 최후 방어의 보루이신 국민과 시민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결집해야 합니다.
- ◎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살맛 나는 세계선진일류장손국가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 ◎ 한나라당은 국민 여러분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대한국민 개개인의 삶의 존엄성과 인류의 가치를 신장시켜 드리겠습니다.
- ◎ 한나라당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석 위에 올려주시고, 지도편달과 채찍과 지지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정당으로 만들어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영원할 것입니다!!!

## 한나라당

2016. 4. 13.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영원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제 공약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영원할 것입니다!

1년간 배당금 1000만원 국민 배당금제

결혼 하는 남자 5000만원과 여자 5000만원씩 합계 1억원 결혼자금 지급 (1회만 지급)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스티커 생일떡 생일케이크,

벌금 처리 경제인에게 벌금으로 무겁게 처리.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존경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 지상낙원 건설

국민 부채를 탕감해 줍니다. (국민 빚만 1600조원 )

대통령 되어도 재밌는 대통령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소통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신문고 제도는 대통령이 직접 해결 해 준다.

믿는 사람들은 믿어 소통의 중요성 점검.

대통령 공약 100%이상 신뢰하고 실천

예산 절약하여 2조원대의 대학생 등록금을 다 줄 수 있어요.

대학등록금을 절반 이하로 인하실현

지방자치제 폐지와 금융실명제 폐지

세계통일 2030년...대한민국 대통령 되려는 이유는 세계 통일을 위함이다.

세계 통일 할 자는 한나라당과 이태희 밖에 없다.

2030년에 세계통일

- ◎ 죄수 방면, 경제인에게는 벌금을 과중하게 부과.
- ◎ 살인죄와 강력범만 구속하고 경제범은 경제에 맞게 벌금 부과
- ◎ 신용불량자 모두 기록 폐지
- ◎ 살인죄와 강력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기록 삭제
- ◎ 관치경제와 김영삼의 금융 실명제를 없애기로 한다.  
국부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 금융 실명제를 없앤다.
- ◎ 호주제 폐지를 없애고 호주제 부활한다.
- ◎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남자 5000만원 여자 5000만원 결혼자금 1억원 지급
- ◎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출생자금 3000만원을 지급.
- ◎ 자녀 고등학교 입학시 500만원 지급, 대학 입학시 1000만원 지급.
- ◎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남녀): 1인당 연금 월70만원 지급.
- ◎ 처녀 총각이 결혼하여 몽고나 연해주에 가서 정착하면 결혼자금 1억원과 정착금 3억원과 성공 예약금 1억원을 합쳐서 5억원 지급.
- ◎ 생일날 10만원씩 생일선물 지급(생일케이크 쌀떡).
- ◎ 국민 배당금을 1년에 1인당 3000만원 지급.
- ◎ 직장 근무자 월급 350만원 지급, 복지비 월150만원 지급
- ◎ 차량 속도 위반 과태료 폐지 등 각종 병폐 민폐 과태료 제도폐지 및 국민에게 혈세를 뺏아 내는 과태료 제도 폐지.
- ◎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폐를 끼치는 모든 제도와 법률과 레짐을 개선 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 모음집**

---

**발행일** 2016년 5월

**발행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tel : 02-523-6483

**인 쇄** 파인커뮤니케이션

---

〈비매품〉

